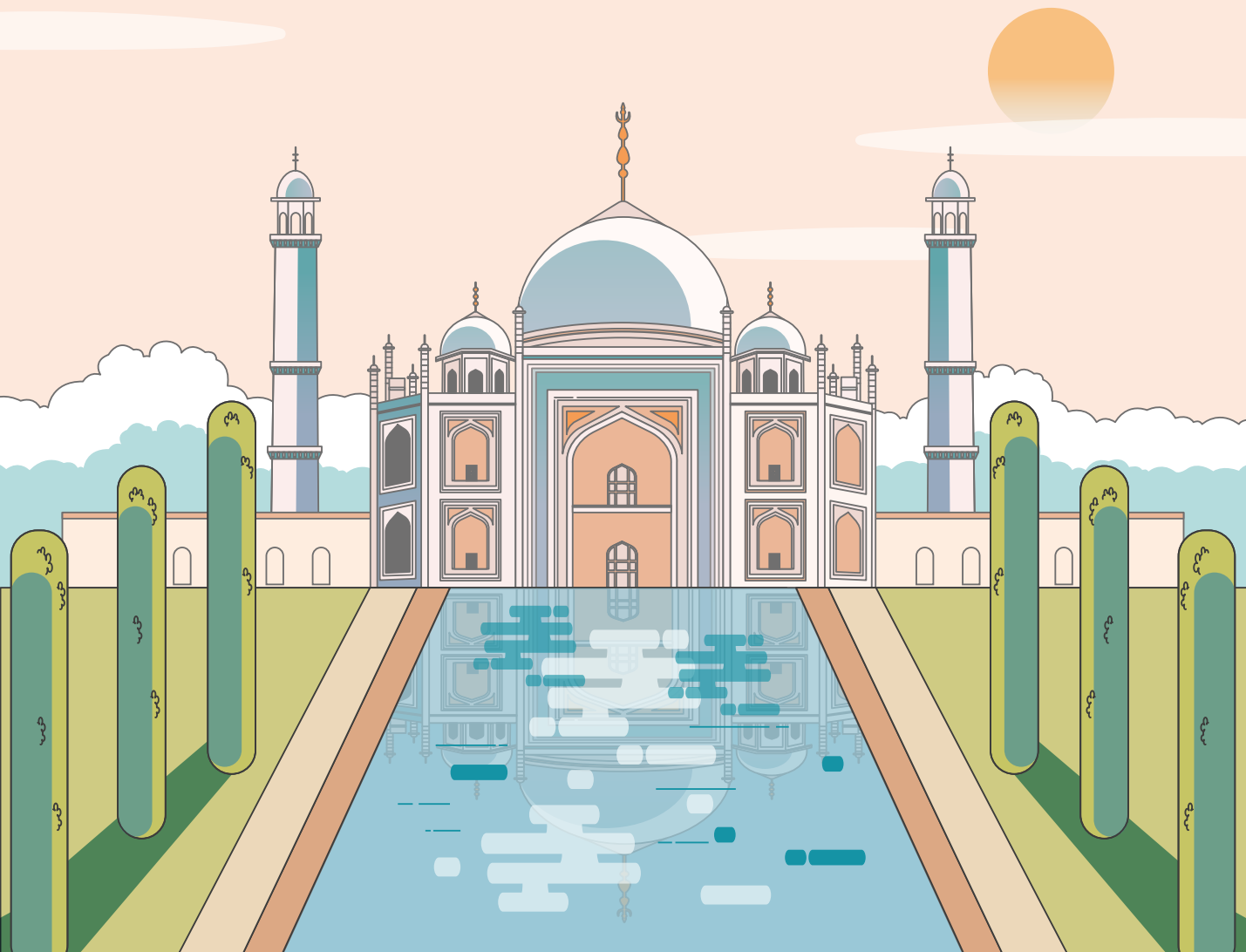


# 2025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ITA**





## 발간사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인도는 이미 세계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 인도는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6%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 3위의 스타트업 허브이자, 평균 연령이 약 28세인 풍부한 젊은 인력을 바탕으로한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습니다. 불과 10년 전 세계 10위권 수준이던 인도의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5위로 올라섰고, 근시일 내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 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 더욱 중요해진 현재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2023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로 교착이 예상되던 상황에서도 정상선언문 채택을 이끌어냈으며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를 주도하여 서구와 자유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개도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인도는 세계 각 국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매력적인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오랜 기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2010년 체결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층 더 촉진시켰으며, 1973년 대비 현재 무역규모가 약 2,000 배 증가하면서, 2023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12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서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강화 취지를 담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하기도 하였습니다.

## 2025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

1990년대 초 인도의 개혁개방 초기 한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진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인도 시장에 자리잡게 되었고, 지금은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에 발맞추어 현지 생산과 고용 창출을 통해 인도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기 인도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제조 대기업 위주였다면 점진적으로 금융, IT, 식품, 섬유 등 진출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고, 진출 형태 또한 스타트업, 인도와의 합작기업설립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5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경제적 진출이 예상됩니다.

물론 성공적인 우리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 이면에는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기업들이 공히 허를 내두르는 인도 특유의 관료주의, 비관세장벽, 독특한 사회문화적 어려움 등 적지않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회사설립, 노무, 법무, 세무, 금융, 통관, 인증, CSR, 지재권 등 인도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록 가이드 책 한 권으로 모든 사안들을 담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이 책이 전반적인 지침서로서 인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 시장이 녹록한 시장이 아님은 사실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준비하고 한국 기업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무장한다면 무한한 기회와 땅 인도에서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내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인도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 관계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업 여러분의 도전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책이 그 여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이성호





## 인사말씀

글로벌 경제에서 인도의 부상이 돋보입니다.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자,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고, 5~6년 내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특히, 미·중 탈동조화, 팬데믹 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중국이 담당해오던 ‘세계의 공장’ 역할을 이어받을 최적의 후보국으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인도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 철수했던 글로벌 기업조차 인도로 복귀를 서두르는 모습은 이러한 추세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모디 총리가 주창하는 ‘인도의 시간(India’s moment)’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기회의 땅 인도로 향하면서, 미래의 성장점을 찾아나선 우리 기업들의 진출 관련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55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 중인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한층 빠르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인도 대사관,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인도에 진출을 결심한 우리 기업들이 지체 없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2년 출간한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개정판을 공동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인도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현지 규제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는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사업초기 구상부터 운영, 종료까지 단계별로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찾는 지침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인도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투자 단계별로 반드시 필요한 최신 규제와 행정 절차 정보를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발간에 참여했습니다. 이 책자가 인도에서 성공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개정판 발간에 힘써주신 집필진과 대사관, 무역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OTRA는 뉴델리, 암다바드, 뭄바이, 벵갈루루, 첸나이, 콜카타 등 인도 내 6개 무역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 빈준화

## 2025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

인도는 한국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세계 제12위 교역 대상국이며, 현재 55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약중입니다.

최근 인도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불안정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7% 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됩니다.

지난 몇 년간 미-중 통상 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로 주목받은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우수한 제조업 성장 기반, 인구 14억의 거대 소비시장, 정치·경제적 안정성, 산업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또한 인도는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확고한 중심으로 자리 잡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장점들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은 IPO, 현지 기업 합자, 스타트업 창업 등의 방법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인도한국대사관 그리고 코트라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2025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는 회사 설립에서부터 세무, 회계, 노무, 관세, 인증, 지적권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책자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는데 힘 써주신 집필진과 대사관과 코트라 관련 실무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국무역협회도 민간 차원에서 양국 교역에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무역업계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장 이영호



## 집필진

분야	이름	소속
진출 검토, 회사 설립	김응기 대표	비티엔
투자 인센티브	박범준 차장	Invest India
세무, 회계	문지호 회계사	KPMG
금융	최봉성 팀장	신한은행
노무, 법무	장재원 변호사	버드트리
관세 및 통관	오한흠 관세사	KOTRA CEPA 해외활용지원센터
인증제도	윤승현 관세사	Ernst & Young India
물류	전성용 팀장	CJ 다슬
지식재산권	허인 센터장	서남아중동IP센터
CSR 및 ESG 가이드, [부록]JV 성공 및 실패 사례	유지혜 변호사	버드트리
구조조정	권용우 회계사	Ernst & Young India
[부록] 무역사기, 산업별협회정보	신기리시 대리 최지연 인턴	KOTRA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기획 및 총괄	이정선 운영팀장	KOTRA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 책자 내용에 대한 책임은 분야별 저자에게 있습니다.

# Contents

## 1 진출 검토

1-1. 투자 관련 제도 및 투자방식 .....	010p
1-2. 비용 리스크 관리 .....	022p
1-3. 투자 인센티브 .....	027p

## 2 회사 설립

2-1. 외국인투자 절차 .....	051p
2-2. 회사유형별 설립 절차 .....	058p
2-3. 설립 이후 주요절차 .....	069p
2-4. 회사설립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 .....	075p

## 3 회사 운영

3-1. 세무 .....	078p
3-1-1. 조세체계 .....	078p
3-1-2. 소득세 .....	080p
3-1-3. 상품서비스세(GST) .....	100p
3-1-4.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e, TP) .....	112p
3-1-5. 한-인도 조세조약 .....	118p
3-1-6. 조세불복(Tax appeal procedure) .....	126p
3-1-7. 주요 세무이슈 .....	129p
3-2. 회계 .....	132p
3-2-1. 회계법령 .....	132p
3-2-2. 회계 표준 .....	134p
3-2-3. 유의사항 .....	139p
3-3. 금융 .....	145p
3-3-1. 인도의 은행 .....	145p
3-3-2. 법인의 계좌 거래 .....	148p
3-3-3. 외환 거래 .....	155p
3-3-4. 자금 조달 .....	167p
3-3-5. FAQ .....	172p



### **3-4. 노무 ..... 175p**

3-4-1. 노동법제 개편 .....	175p
3-4-2. 채용계약 .....	179p
3-4-3. 임금 및 보험 .....	181p
3-4-4. 근무시간/휴식/휴가 .....	185p
3-4-5. 취업규칙/징계/배상 .....	189p
3-4-6. 노동조합 .....	190p
3-4-7. 채용계약 해지 및 해고 .....	192p

### **3-5. 법무 ..... 193p**

3-5-1. 법률 체계 .....	193p
3-5-2. 회사 관련 법제 개요 .....	195p
3-5-3. 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	201p
3-5-4. 소송 요건 .....	203p
3-5-5. 소송 기간, 절차 및 비용 .....	207p
3-5-6. 소송 외 대체 분쟁해결 방안 .....	211p

### **3-6. 관세 및 통관 ..... 216p**

3-6-1. 무역관리 제도 .....	216p
3-6-2. 관세 실무 .....	217p
3-6-3. 통관 실무 .....	221p
3-6-4. 한-인도 CEPA 활용방안 .....	224p
3-6-5. 무역구제 .....	226p
3-6-6. FAQ .....	229p

### **3-7. 인증제도 ..... 231p**

3-7-1. BIS 인증 .....	231p
3-7-2. CDSCO 인증 .....	235p
3-7-3. FSSAI 인증 .....	239p

### **3-8. 물류 ..... 242p**

3-8-1. 물류시장 .....	242p
3-8-2. 물류환경 .....	244p
3-8-3. 운송 .....	248p
3-8-4. 창고 보관 .....	252p
3-8-5. 해상 수입 .....	257p
3-8-6. 물류 컨설팅 서비스 .....	265p

<b>3-9. 지식재산권</b>	<b>267p</b>
3-9-1. 개관	267p
3-9-2. 상표	274p
3-9-3. 특허	282p
3-9-4. 디자인	290p
3-9-5. 저작권	295p
3-9-6. 유의사항	301p
<b>3-10. CSR 및 ESG 경영</b>	<b>304p</b>
3-10-1. CSR 관련 준수사항	304p
3-10-2. CSR 프로그램 운영관리	308p
3-10-3. ESG 경영	315p

## 4 구조조정

4-1. 사업양도	318p
4-2. 주식의 양도	320p
4-3. 회사의 청산	321p
4-4. 휴면회사	327p

## 부록

A-1.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330p
A-2. 합작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	346p
A-3. 산업별 협회정보	350p



# 01 진출 검토

1-1. 제도 및 투자방식

1-2. 비용

1-3. 투자 인센티브

# 01 진출 검토



## 1-1 투자 관련 제도 및 투자방식

### 1-1-1. 외국인직접투자 정책(FDI Policy)

나의 인도 진출, 혹은 창업은 인도에서 환영을 받고 법과 규정에서 보호를 받는 투자인가? 인도 진출 검토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확인해야 할 것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사업 목적 등이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FDI Policy) 최신 규정에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외국인(외국 법인)에게 직접투자로 개방된 것이 아니거나 100% 지분 소유가 허가된 것이 아니라면 진출하려는 전략의 기본 방향 또한 이에 맞게 검토되어야 한다.

분야(Industry category)뿐만 아니라 진출하려는 사업체 형태 역시 정책이 규정한 사업체 형태별 허용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누가 보아도 궁극적으로 본사나 진출 오피스에 수익을 내고자 하면서도 손쉽게 생각하여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우선 세우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인도 당국으로부터 제재 혹은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는 화(禍)의 뿌리가 되는 행위이다.

인도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인도 내 직접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통상산업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내 산업진흥국(DPIIT)에서 정책 규정(Consolidated FDI Policy Circular)으로 발표하고 매년 2월경 또는 수시로 개정 내용을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DPII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도(Republic of India)는 28개 주(state)로 구성된 연방정부 형태이다. 각 주는 독립된 정부를 직접 선거를 통하여 독립된 주 의회와 정부를 가지고 있다.

인도 FDI 정책은 2020년 발표된 버전(Consolidated FDI Policy Circular of 2020)이 대대적으로 내용이 개정된 최근 것이기는 하지만 그 세부 각론이나 보충 내용에 있어서 수시로 개정되거나 보충되어 고시되고 있으니 근거로 삼고자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정책 규정이 적용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계속되어 통용되는 것인지를 거듭 확인하고 인용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것에서는 타인의 글이나 구두 설명에서만 찾기보다는 법 규정 그 자체를 두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행하게도 인도의 모든 대외용 공문서는 영어와 힌디어로 작성되어 이에 접근하는 데에서는 영어로 가능하니 중국, 러시아 혹은 베트남과 다르게 비즈니스에서 언어장벽이 없다. 이는 인도 비즈니스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이다. 타인을 통하여 정보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근원인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공시 내용을 영문으로 된 원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FDI 정책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자격, 진출 회사의 형태, 각 산업별 허용범위 등이다. 예를 들면, 인도 민간항공산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FDI Policy 2020의 'Sector Specific Conditions on FDI' 중 서비스 영역에서 'Civil Aviation'을 찾으면 기본 내용을 알 수 있다.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사업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허용되는 부분에서도 관련 진출 법인의 주식지분에서\* 100%까지 허용되는지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지분 상한선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인도 진출의 형태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주식회사 법인이다. 주식회사는 상장을 전제로 한 Public Limited가 있고 비상장 주식회사인 Private Limited가 있다.

투자에 대한 승인도 자동승인(automatic route)인지 사전 투자 심의(permission route)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국방에 관련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제조업의 경우는 100% 지분 취득이 가능하고 또한 별도의 투자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 자동승인 절차이다. 다만 대규모 투자인 경우 투자법인 설립 이후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등의 별도 절차가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여부를 투자결정 이전에 공식적으로 검토 받기 위해서 자동승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자 심의를 자진하여 거치는 경우도 있다.\*



\* 최근에는 FIFP(Foreign Investment Facilitation Portal)에서 신청과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한 주의하여야 할 점은 FDI 규정에서 사업분야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개별 영업허가 등에서는 정책적 조건 그리고 관습적 제약이 더해질 수도 있고 지리적 입지 내에서도(\*1) 업종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한국과 인도 정부 사이에 협약을 맺어 설치된 인도 정부기관 “INVEST INDIA” 내 “Korea Desk”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2)

(\*1) 지리적 입지라고 함은 주(state) 단위로 선호하는 산업과 기피하는 산업이 다르다. 기피하는 산업의 경우는 여러 제한을 붙여 산업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

(\*2) <https://www.investindia.gov.in/>

## 1-1-2. 회사법(The Company Act 2013)

인도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유별난 것이 많다. 소가 송배를 받는 것은 그 중 하나이지만 다른 나라에는 드문 ‘회사법(會社法)’이란 독특한 법 체제가 있다.

인도에 있는 독특한 회사법을 이야기하면 한국의 법에는 “회사법”이라고 민법, 상법 그리고 형법처럼 별개의 분야로 나누어 있지 않기에 이를 생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 없는 법이 인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법(商法) 중에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인도의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도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회사법에 대한 사전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영 하는 중에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규칙에 대해서 직접 이해하지 않은 채 주변 조언에 의지하여 결정된 회사의 주요 내용이 사후에 걸림돌이 되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된 사례가 주변에 없지 않다. 들은 주요 쟁점은 직접 회사법 조문에서 확인하는 최소의 수고가 설립이후 있을 수 있는 곤란을 방지할 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도 큰 지지가 된다.

회사법\*은 회사의 형태, 회사 설립 절차, 이사 임명, 이사회 운영 등 기업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평가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식민지 점령국이었던 영국의 영향으로 법조문의 나라로 불리는 인도에선 법에서 정하지 않는 임의적인 공권력이 외국인투자기업을 법에 의하지 않은 채 다루지 않는다. 이에 진출 기업은 인도의 관련 법과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업운영에 제대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것이다. 회사법 역시 전문 288페이지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기본 내용을 이해한 가운데 일상에서 법조문을 곁에 두고 사안마다 확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회사법 전문(全文)은 가히 인도진출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만하다.

\* 인도 회사법은 1956년 첫 공표되었고 이후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거쳐 The Company Act 2013년이 발표되었다.

인도엔 회사법이 독립된 법안으로 있다는 특징과 함께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라는 연방정부 부처가 있다\*. 기업부 웹사이트에서 인도 내 설립된 모든 회사의 기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자본금의 규모와 납입된 현황, 임원의 이름, 회계감사보고일 그리고 피소 여부 등이 기업부(企業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등기소 상업등기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일종의 기업 등기부 등본과도 같은데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기업부 : [www.mca.gov.in](http://www.mca.gov.in)

FDI 규정에 외국인이 인도에서 영위할 수 있는 회사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지만 인도 회사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부 설명은 본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의 2장 회사 ‘유형별 설립절차’에 있다.



### 1-1-3. 한·인도 상호조약\*

\* 한국정부가 인도정부와 맺은 각종 조약에 대한 전문 내용은, <https://treatyweb.mofa.go.kr/usr/treaty/selectTreatyNationList.do> 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외교부 조약정보 시스템 중에서]

2023년은 한국은 인도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 되는 해였다. 1973년 수교를 맺고 이후 50년 동안 양국은 외교, 국방에서는 물론 경제 교류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과 인도 양국 사이에 통상 관련한 조약 중 가장 핵심으로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들 수 있다. 이 협정에서 다루어진 주된 내용은 상품과 서비스의 양국 교역에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면제 혹은 인하 협정이다. 다만 이 협정이 체결된 지가 이미 십 수 년이 지났고 양국 모두 타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보다 상당히 앞서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내용에서 요즘의 글로벌 무역 환경과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허(讓許) 폭과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지경이다. 개선의 필요는 양국 정부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쟁점의 내용이 달라서 2024년 7월에 11차 개선헌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양국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이라고도 불리는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인도 내에서 발생되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은 이후 한국에서는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양국 정부는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도 협정을 맺고 있다. 많은 이들이 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인도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는 원초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이는 인도의 외국인 관리에 대한 제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기업 이윤에 대해 정해진 대로 소득세(income tax)를 납부하고 이후 규정에 의한 주주의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후 해외 거주 주주에게 배당액을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 개정된 법안으로 2016년 9월 12일 발효

조세협정에는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진출이 아니라 한국 본사에 종속된 관계로 인도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에 따른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출 형태와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변외 내용으로, 본사에 종속된 업무 외 타 기업과의 업무 확대를 계획한 진출목적이라면 진출 기업의 이름을 굳이 본사 이름과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책정하거나 주주와 이사진 구성에 본사와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식의 결정으로 이전가격 과세 이슈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전문은 외교부 양자 조약 관련 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협정 내용이 있다. 그건,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에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 인도는 한국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체결 국가 중 하나이다.

참고로 한국과 인도 정부사이에 맺은 각종 조약과 약정 그리고 공동 발표 공시에 대한 전문은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약정보시스템(2024년 9월 기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수교이후 양국 조약(협정) 중 일부를 예시로 하여 최근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 인도 상호 조약(협정) 요약〉

조약번호	조약 명칭	발효일
고시 971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Program I 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23.12.11
고시 964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22.11.30
조약 2356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2017.06.14
조약 2306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2016.09.12
조약 2093	수형자 이송 조약	2012.06.18
조약 2088	사증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정	2012.03.25
조약 2060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연금 Pension)	2011.11.01
조약 1982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CEPA)	2010.01.01
조약 1777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2006.04.27
조약 1735	범죄인인도조약	2005.06.08
조약 1191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	1993.10.10
조약 1081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1992.03.16

자료원 :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에서 발췌



#### 1-1-4. 수출입제도와 관련 인증제도

인도에 직접 진출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부분 한국 본사와 연계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제품 혹은 원부자재를 인도로 수입하는 경우처럼 사업체 운영 목적으로 관련 법인을 설립한 직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가 여러 가지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IEC(Importer Exporter Code)이다. 한국은 무역업 허가제가 1993년에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무역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하나 인도의 경우는 다르다. 인도에서는 직접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선 IEC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다행인 것은 IEC 취득 요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서 관련 절차를 밟으면 신청 이후 취득은 일주일 내외로 가능하다. 더구나 인도정부가 DIGITAL INDIA 정책을 펼친 이후 공공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이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https://www.dgft.gov.in/CP/>: 직접 이 정부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나 용어나 제출 서류 등에 경험이 많은 대행회사를 통하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현지업무는 경험이 있는 서비스 회사를 outsourcing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모든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수출입 라이선스(IEC)를 취득한 이후에도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제약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카테고리에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사전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식품 수입에는 수입자의 FSSAI\* 라이선스가 요구되고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수입은 CDSCO(인도 중앙정부 약품 표준국)에 수입하려는 제품과 수입업체가 지정 등록되어야 가능하다. 철강을 비롯한 상당수 품목의 수입하는 경우엔 각 제품이 인도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표준청)에 등록되어야 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통관 수속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건부 통관과 수입에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 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한국의 식약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정부가 경제정책으로 'Make in India' 등 자국 내에서의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의 경우 점차 비관세 무역장벽(NTB: Non-Tariff Barrier)을 늘리는 등으로 수입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수입 원자재 등에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인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제도 파악과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 1-1-5. 한국에서의 해외직접투자신고(외국환관리법)

글로벌 시대에 해외 직접투자가 주변에 흔한 일처럼 여길 수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회사를 세우거나 기존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어서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심지어 해당 관계 규정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아서 해외투자 과정 중 적지 않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회사 내 업무나 외국환 은행 관련 창구에서의 업무를 협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심지어 해당 해외투자 업무의 신고관계와 투자이후 사후 관리에서의 누락이나 오류는 이후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회사에 주주로서 자본금을 보내는 등으로 해외에 직접투자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또한 외국환 은행의 업무창구 업무담당자로부터 누락 없이 제대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지도 확실하지 않은 까닭에 매우 유의하여 해당 업무과정을 챙겨야 한다.

한국 외국환 관리법은 해외 직접투자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를 신고하고 허가를 취득하여야 정당한 송금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소액 투자의 경우 해외투자 송금이 아닌 일반 송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사후 회사의 자본금 증자나 주식 양도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의 위배가 드러나는 잘못된 선택이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 송금은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 모기업의 주거래 은행지점이나 개인의 주거래 은행 지점을 통해 한국은행에 신고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때 매우 유의할 것은 한번 해외투자 송금으로 어느 특정 은행의 특정 지점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면 이후 어느 경우에서의 해외 투자 송금은 반드시 해당 은행 해당 지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동일한 해외 법인이 아니고 다른 법인 혹은 다른 국가에서의 투자진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 은행 동일 지점에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외국환관리법의 내용이다. 따라서 처음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 기업 주주나 개인 주주의 경우 향후 계획까지 감안하여 해당 창구를 선정하는 데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은 물론 타 주주 지분 등의 변동 유무를 매년 혹은 변동 사유 발생 시 이를 해당 은행 해당 지점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별지 제 9-1 호 서식]			
<b>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b>			처리기간
신고인 (보고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업 종	서비스 무역업	
해외직 접투자 내용	투 자 국 명	인도	소 재 지
	투 자 방 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권취득, <input type="checkbox"/> 대부투자	자 금 조 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기자금, <input type="checkbox"/> 기 타		
	*투 자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무역업	주 요 재 품
			식품, 농산물
	투 자 금 액	INR 999,000	*출 자 금 액
			INR 990,000
	투 자 비 율		결 산 율
투 자 목 적	수출촉진		
현 지 법 인 (영 우)	(총자본금 : INR0000000000)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보고)합니다.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착신조건: 첨부된 유의사항을 지킬 것		신 고 번 호	
위와 같이 신고(보고)되었음을 확인함		신 고 금 액	
		유효 기 간	
년 월 일			
폐신고(보고)기관 : 외국환은행 신한은행장(인)			
(취급지점 : )			
<p>&lt;첨부서류&gt; 1. 사업계획서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포함)</p> <p>2.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p> <p>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서</p> <p>4. 해외투자목적물이 해외주식인 경우, 당해 해외주식의 가격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9차)(5 자리) 및 업종명을 기재.</p> <p>* 출자금액란에는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p>			

해외에 법인이 설립되고 이에 따라 자본금이 송금된 이후 사후관리로 신고 기일에 맞추어 설립된 인도법인의 설립증명서와 재무제표 그리고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지분 변동은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자본금 송금이 외국환거래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송금 수단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KYC(Know Yourself Certificate) 미비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자본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투자신고 승인에 따라 자본금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 사후조치로는 자본금을 송금 받은 인도 내 외국환은행 지점을 통하여 인도 법인 계좌로 송금된 자본금이 인도 중앙은행에 접수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인도중앙은행에 자본금 신고를 증빙하는 문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아래의 그림은 자본금의 신고가 중앙은행 자동시스템에 접수되었음을 알려주는 RBI이메일 회신 내용이 담긴 문건이다. 자본금 도착보고를 지연할 경우 이에 과태료가 발생한다.

<인도중앙은행 자본금 도착 신고 자동 회신>



DIXIT CA <dixitca@>

---

**Notification From Bank**

**autoreply-firms@rbi.org.in** <autoreply-firms@rbi.org.in>  
 To: INFO@sdcconsultings.com

Thu, Feb 11, 2021 at 9:40 AM

Dear Sir/Madam,

Welcome to FIRMS – Foreign Investment Reporting and Management System:- RBI system for reporting of foreign investment In India.

Your Reporting form FCGPR0: } is APPROVED with below comments

Remarks If Any: Name of the applicant: /ON, J AND }ERS, LEE IG. Name of the investee company: INDIA PRIVATE LIMITED. Date of issue of shares: 03 Feb 2021 Total amount of consideration in Rs: 220

## 1-1-6. 투자 방식

직접 투자진출에는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현지 법 체제에 따라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이른바 그린 필드(Green Field) 전략과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현존하는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브라운 필드(Brown Field) 전략이 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투자하는 주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선택의 문제이지 진출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잣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는 그린 필드 진출 지역이 아니고 브라운 필드 진출 전략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인도의 사정 때문에 투자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항간에는 인도에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잘 허용되지 않기에 신규 법인설립이 어려우니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들이 있다. 거듭 지적하는 것이지만 인도에서의 규정과 제한은 입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조언의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영어로 작성된 해당 법이나 규정의 전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라운 필드 방식으로 기존 법인의 지분 인수나 그린 필드 진출에서 인도인 혹은 인도기업과의 합작 투자로 진행될 경우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은 경영 리스크이다. 진출 기업의 투자 목적이 한국에서의 앞선 경험을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취적으로 자율적 경영을 펼치고 싶다면 의사 결정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지분(76%)을 보유해야 한다. 이 개념은 과반수로서 의사가 결정되는 한국과 다른 점이다.\* 이는 인도의 회사법이 소액 투자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25% 혹은 그 이상 하지만 5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서도 경영 주체 대주주 파트너에게 의사결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참여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 주주총회 의결권은 한국에서는 다수결 절대원칙이지만 인도에서는 76%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소액 주주의 거부권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즉 대주주의 권한을 한국처럼 누리려면 76% 이상 지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25% 지분을 가진 파트너에게는 증자 등 중요 경영 안전에 대해 거부권이 있다.

제조업의 합작투자에서 일반적으로 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한국측이 담당하고 영업과 관련된 회사 운영은 현지 네트워크 기반이 있는 인도 측이 담당하는 조건으로 합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구조적으로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서도 회계 및 세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서의 속 사정에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인도의 거의 모든 상거래가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관련한 세무 절차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도 현지에서 상주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관련 업무에 모니터링 혹은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

참고로 본다면, 한국기업의 경우는 직접 그리고 단독 진출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인도 기업과 제휴를 통하여 합작하거나 업무 파트너 관계로 진출하는 간접 진출이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한 장단점은 공식적으로 아직 비교 분석된 바가 없어 어느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일본의 인도 진출 기업의 숫자가 한국의 인도진출에 비하여 사업장 숫자로만 비교해보면 최소 5배 이상인 사실에서 일본 기업이 지향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 기업에는 인도기업과의 합작 혹은 파트너 관계에서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름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23년 7월에 JETRO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 기준 시점에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 사업장 수는 4,901개에 달하여 인도 곳곳에 포진하여 있다고 한다.

직접 그리고 단독 진출이나 합작 혹은 파트너를 통한 간접 진출이나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비추어 인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경영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지 타기업의 예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신규 투자 진출 외에도 최근에는 인도에 이미 진출한 한국의 투자 진출기업을 상대로 협업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자 한국과 인도에서 증자를 통한 지분 참여로 진출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도 진출 기업에 대한 증자 또는 기존 주식 인수를 통한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 양수도가 주주의 소재지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한국인과 인도인(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가 인도의 외환거래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인도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이 있는 관계로 관련 신고와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세금발생은 한국에서의 규정은 물론 인도 규정에도 맞도록 절차와 문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비거주자(Non-Resident: NR)와 인도 거주자(Indian Resident: IR)로 나누는데 NR은 NRI와 OCB(overseas Corporate Bodies)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 사항은 법인이 소재한 인도에서는 물론 양도자(양도 기업) 혹은 양수자(양수 기업)가 한국 국적(등록)인 경우는 국세청 신고는 물론 한국의 외국환거래 은행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발생된다.

### 1-1-7. 선택 가능한 기업의 유형

직접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외국기업’ 신분을 그대로 지닌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등이 있고 회사법에 따라 등록되면서 ‘인도기업’ 신분을 받게 된 공개회사(Public Company),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등이 있다. 공개회사란 말 그대로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혹은 상장을 계획한) 회사이고 비공개 회사는 초기 인도 직접 투자 진출하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택하는 것으로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외에도 1인기업(OPC: One Person Company)과 소기업(Small Company)이 있지만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해서 취득할 수 있는 회사 형태가 아니다. 간혹 인도인(기업)이 이러한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합작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는 외국인(기업)의 참여가 일부라고 하여도 불가능하다.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어야만 합작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상대방 회사의 법적 상태가 어떤 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에 등록된 기업현황표를 열람하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 설립 가능한 회사의 유형 >

정체성: 외국 회사 (Foreign Company)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Office)	
정체성: 인도 회사 (Indian/ Domestic Company)	주식회사(Limited)	공개회사(Public Company)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외국 회사(Foreign Company)’와 ‘인도 회사(Domestic Company)’의 차이는 인도 내에서 인도 회사법에 의해서 외국의 모기업과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등록되었느냐 아니냐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외국인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에 의해서 인도 내에서 인도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인도 회사’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인에 의해서, 혹은 인도인과 합작으로 만들어진 회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 외국인의 지분이 51%가 넘는 경우에는 복합 브랜드 소매업(retail)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투자조건을 갖추고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FDI Policy에서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Income Tax) 세율에서 ‘외국 회사’와 ‘인도 회사’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누어진다. 법인세 인하 정책 등으로 구체적인 세율은 수시로 변화겠지만 지사(Branch Office)나 프로젝트 오피스 같은 ‘외국회사’가 인도 내에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경우 인도에 등록된 법인 ‘인도 회사’의 소득세(법인 소득세) 세율보다 약 10% 정도 더 많이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도에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장 운영이라면 당연히 ‘인도 회사’로 등록하는 것이 옳다.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의 선택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다. 공사 기간이 정해진 인프라 건설이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SI) 등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회계 정산한 후 해당 오피스 업무를 종료하는 내용의 진출에서는 프로젝트 오피스 설치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프로젝트 수행 이외 기타 목적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둘 것인가? 혹은 지사를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서 이에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의 판단은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 연락사무소와 지사에 대한 인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진출 목적을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연락사무소와 지사 사이에서 선택의 기준은 객관적으로는 매우 명료하다. 한국에 있는 본사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어떤 형식의 영업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연락사무소를 택하여서는 안된다. 잠재적 고객이나 현재 진행 중인 고객을 만나서 직접이거나 간접으로 제품(서비스) 정보와 가격을 제시하고 이로 인하여 점차 한국 본사와 계약관계에 이르게 하는 중계 역할을 하는 것도 분명한 영업 행위이다.

이를 무시하고 단지 연락사무소는 세금 납부가 없다는 것에 혹하여 연락사무소 운영을 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최근에도 한국의 모 식품회사가 누가 보아도 인도에 오피스를 내고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자사 제품의 인도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1인 주재원을 파견하면서 그 형태를 지사가 아니고 연락사무소로 세우려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세금 납부의 의무에서 벗어나 할가분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인도 당국의 감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결국은 세금 추징을 당할 소지가 크다. 세금 추징당할 정도의 자산이 인도에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계좌 동결, 여권 압수나 추방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향후 인도 사업에 절대적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영업을 하고자 하는 포괄적 목적으로 연락사무소와 지사 중 택일하여야 한다면 지사(Branch)를 택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사 설립이 신청하는 모든 회사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청 당시 진출 모기업이 적자 재무제표 상황이면 거의 지사 설립 인가가 나오지 않는다. 영업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인수와 설비투자로 인한 일시적 적자 등으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납득시킬 수 있다고 하여도 지사 설립 승인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최근의 사례에서도 인도 정부(RBI: 인도 중앙은행)의 방침으로 적자 기업의 지사 설립 인가가 나오지 않았다.\*

\* RBI에 접수되기 이전에 주거래 은행에서 적자 기업의 지사 설립 신청 자체를 거부한다.

## 1-2 비용 리스크 관리

인도진출을 해외 진출 제1의 목적인 저비용 구조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이 해외 투자 진출에서 저임금(低賃金)의 운영비용은 물론 토지 구입 등에서도 저비용 구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인도에 대해서도 당연 그런 기대를 하고 수익 계산을 점치고 있다. 더구나 인도의 일반적인 이미지, ‘가난’한 후진국가라는 선입견이 있어 이런 나라에서는 모든 비용이 당연히 저렴할 것이라고 여기는 선입견이 있다. 그런데 실재는 이와 다르다.

토지 비용만 하여도 한국의 산업 단지 비용과 비교하면 토지가격과 활용도 그리고 주변 인프라와 함께 고려하여 보는 가능성이 결코 좋지 않다. 인도 진출이 산간벽지 오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력이 갖추어지고 전력과 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된 산업 지구와 소비 시장의 입지로서 적합한 곳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의 산업용지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토지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비쌀 수 있다. 토지비용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생각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 14억 5천 만 명에 달하는 인구대국 인도이지만, 그 인구 가운데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지닌 교육된 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에서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건비가 기대만큼 낮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여전히 한국에 비해서는 당연히 훨씬 낮고 이와 비교되는 베트남의 인건비에 비해서도 평균적으로 낮다. 다만 비용절감의 기대치를 높게 잡은 상태로 투자진출의 수익을 계산하여서는 안된다. 인도 진출을 단순히 저임 노동력과 값싼 토지 비용을 기대한 저비용 구조에 근거한 투자처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사실 검토와 향후 변동 전망을 검토하는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쉽게 파악되지 않는 세금 제도에서 오는 예기치 않은 비용 발생과 자금의 현지 조달에서 오는 금융비용 증가의 측면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CEPA) 하에서 특정 품목에서 관세가 0%라는 사실을 단순히 모든 관세가 없다는 전제에서 비용 계산을 하였다면 이견 대단한 오류이다. CEPA에서의 관세 0%는 기본관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외 추가되는 GST, 교육세, 상계관세 등 기타 관세는 여전히 존재한다. 어쩌면 기본 관세보다 이 부분이 더 크다.

### 1-2-1. 법인세 등 조세 리스크

인도의 법인 소득세는 매출 구간 별로 다른데 22%에서 25% 그리고 대기업인 경우 30%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15%까지 낮추어주는 제조업 법인세 인화 특별 정책이 실시 중이다. 이런 세액 범위는 한국 법인세\*보다 높고 기타 제 비용 등으로 인해 체감적으로도 훨씬 높다고 여길 수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인도의 법인세(법인소득세)가 과거 35%였던 시절에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 세율 외에도 중요한 것은 공제 되는 부분이 한국보다 적거나 그리고 불분명하기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 한국 법인세는 평균 20~22% 수준이다. 대기업인 경우는 25%이다.

세금 제도에서 비슷한 세제 항목에서 그 개념이 한국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여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부가세(VAT) 개념과 가장 유사한 형태가 GST\*이다. 동 세금 관련하여서는 본 비즈니스 가이드 3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나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율이 0%에서 28%로 복잡하다는 것과 환급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매 분기마다 매입과 매출 부가세를 정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많을 경우는 그 차액만큼 납부하고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많을 경우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세 차액을 현금 환급을 받는다.

\* GST: Goods & Service Tax 물품서비스세로 불리는데 일종의 부가가치세(부가세)로 간접세이다.

이와 비교하여, 인도에서는 매월 GST filing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 경우 당연히 현금 납부를 하지만 반대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에도 한국처럼 현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종의 'Credit'으로 남아서 다음 GST Filing에서 이를 납부할 현금대신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GST 현금 환급이 일반적이지 않다.

원천징수(TDS)\*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계약 소득, 임대료, 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등 적지 않은 거래에서 구매자가 일정 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가 일반적인데, 오래 전 거래를 근거로 하여 세액 납부 증명을 세무 당국으로부터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원천징수 하고 이를 세무당국에 납부한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중 지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 TDS(Tax Deduction at Source, 원천징수제도): 구매자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서비스 공급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공제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인도에선 매우 빈번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구매자가 서비스 공급자의 미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된다.

조세 리스크 관리는 관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세번 분류(\*1)에서 한국에서의 세번 분류와 인도의 분류가 달라서 CEPA적용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엔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 원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당 품목의 양국 세관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자재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 인도 BIS인증이 의무화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2) 이 사항이 미비하면 생각하지 못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1) 세번: 세번 번호(HSK), HS Code분류 체계

(\*2) BIS인증이 의무화된 제품은 현재 약 170여 개가 넘는데 철강과 전자제품 등 다양한 범위이다.

따라서, 기업의 진출 목적에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 수입과 조달에서 생산활동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열거하면서 각각마다 적용되는 세금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발생하는 세금과 현금 자산의 흐름 그리고 비용의 발생 등을 원가 관리에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진출 효과의 유무와 크기를 추정 계산하며 이를 사후 확인하며 관리하도록 한다.

## 1-2-2. 인적자원과 인건비 리스크

14억 5천여만 명 인구의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로 매년 노동가용 인구 배출이 증가하는 유일한 나라이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한 숙련된 인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 2024년 기준 추정 인구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에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숙련된 인력이 요구되나 인도는 아직 충분한 저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인력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문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예상 외 임금 상승의 상황을 불러온다. 이는 산업 집약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규 제조업이 진출하여 좀 더 좋은 고용조건을 제시하여 주변 인력을 흡수하는 경우는 유용한 기술인력의 연쇄적 이동을 불러오기도 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제조공장이 있는 타밀나두(Tamil Nadu) 주 첸나이(Chennai) 지역에서 보다 고부가 가치의 제조업인 스마트 폰 제조 기업인 폭스콘(Foxconn)이 수만 명의 근로자를 수용하게 되면서 주변 인력의 연쇄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있다.

인력의 연쇄이동만이 문제가 아니다. 기존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어진다. 2024년 9월에 발생한 Chennai 삼성공장에서의 노조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기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변 노동 시장의 상황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 인도는 복수노조가 합법적이다.

현대화된 유통업이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인도 내부에서나 해외에서 이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유통업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도 유통 모 대기업 화장품 구매 책임자의 경우 연봉이 한화로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 동종업계 동일 경력과 비교하여 보면 믿기 어려운 일이나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쓸만한 인력이 부족하고 또 구하여도 능력과 임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인력을 기초로 하는 분야에의 진출 시에는 HR지원에 관계 구축과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 많은 인도에서 공장 자동화에 많은 투자가 있는 것은 제품의 고품질 생산촉구에도 관계되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엄연하다.

인력 수급과 인건비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인건비 조사는 일반적인 조사 통계를 인용하기보다는 진출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행하여야 한다. 산업 T1지역과 T2지역에서의 인건비 편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대도시에서 활동해야 할 업종이 아니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의 진출도 고려할 만하다.

이 까닭에 노동집약적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으로 인도로 진출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인적 요소가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일 수록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고용 유지에 대한 전략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의 주된 목적이 가공 수출기지로서 인도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도 내수시장을 전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면 여전히 진출하는 것에 의미가 적지 않다.

전반적 인도 인건비 수준은 한국과 비교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다만 인구가 1억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베트남 등과 비교하여서도 인구 대국인 인도의 인건비가 크게 낮지 않은 수준이고 또한 임금 상승 압박이 적지 않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진출 전략에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생산 시설에 대한 자동화 시설 투자로 인력의존도를 최소로 하는 등의 개별 기업에 적합한 대응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미 포화에 이르러 산업 부지의 가격이 개발 초기 대비 최소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한 산업지구 Tier 1으로의 진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개발이 시작되었거나 계획된 Tier 2, 3으로의 선제적 진출도 고려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 1-2-3. 임차료 등 간접 비용 리스크

인도에서 공장용 부지의 구매비용이나 임차 비용은 표면 단가로만 비교할 수 없다. 불리는 가격의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공급 주체와 단지 조성 배경 그리고 분양 혹은 매수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가격 비교가 된다. 한국에서는 산업공단의 토지 분양은 말 그대로 분양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전제가 넘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산업단지의 경우는 모든 경우가 완전 소유권 양도 분양이 아니라 장기 임대 분양이고 민간 개발사업자에 의한 공단의 토지 분양에서도 비록 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실상은 15년, 30년 혹은 90년 등의 장기 임대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인도 산업용지 구입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분양은 물론 민간 개발자의 경우라 하여도 영구 소유권(Free Hold) 이전 매매인지 또는 99년 장기 사용권(Lease Hold) 매입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sup>(\*1)</sup> 특히 민간 기업에 의해서 조성된 산업공단에서의 부지 매입도 현재 소유주가 산업단지 개발공사(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로부터 장기 임차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의 매입이나 임차에서 해당 공단의 분양(장기사용 분양) 조건<sup>(\*2)</sup>이 제3자 양도(매매)가 가능한 지 또는 제3자 임대 행위가 가능한 지를 살펴야 제시하는 가격이 합리적인 지 아님 과도하게 비싼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sup>\*1</sup>) 토지에 대한 독점 사용권은 30년, 99년 등으로 사전에 정하여 분양하고 있다. 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 권리를 갖는다.

(<sup>\*2</sup>) 인도 전체에 통용되는 하나의 조건이 없어 주(state)별로 다르고 같은 주 안에서도 사업 기관별로 다르니 하나의 예를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경우마다 매번 공시된 조건을 살펴야 한다.

해당 부지가 지니고 있는 인프라 조건도 비용계산에서 빠져서는 안된다. 한국의 경우 공단 개발주체가 해당 단지과 부지로 연결되는 전력과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 등 제반 인프라를 모두 제공하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인도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원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 정부 혹은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에<sup>\*</sup> 의해서 개발되는 산업단지의 경우는 단지에 이르는 전력과 도로 등의 기본 인프라는 조성이 되지만 단지 내에 갖추어야 할 인프라는 미비한 채로 분양하고 있다. 즉 단지 내에서 부지에 이르는 전력은 개별 비용으로 갖추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부지에 공장 등 건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정리가 사용자 부담이라는 점이다. 조건에 따라 도로면보다 낮은 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나 우수 등의 범람을 막기 위해 부지 경계선을 따라 축대를 쌓아야 하는 등의 토목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 모든 것을 분양 받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기에 토지 구입(사용) 비용에 비하여 과다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sup>\*</sup> 인도의 주(state)는 주 단위 산업단지 개발 공사(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를 두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즉, 계약 이후 부지가 갖추어야 할 제 조건에 대한 구비 여부 그리고 미비할 경우엔 이를 갖추는데 소요될 비용 부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 다양한 인도라고 하면 인종과 언어 그리고 생활문화가 다양한 줄은 알았지만 이처럼 토지 거래 방식 하나만 두고 보아도 경우의 수가 양 손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다양하니 단순히 제공 미터 당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부지 비용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

부지를 마련하고 그 위에 공장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공장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비용 산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Bare Shell' 방식 임대와 'Warm Shell' 방식의 임대가 공존해 있기 때문이다.<sup>\*</sup> 임대료가 싸다고 여겨 계약을 한 후 막상 입주하려고 하면 임대할 공간에 아무런 마감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책임여부와 사후 시공 비용을 두고 분쟁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이를 두고 인도인의 사기라고 흥분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임대인의 사기가 아니다. 임차하는 한국기업이 임대물건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과 인도 부동산 'Bare Shell' 임대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일반화된 이른바 'Full Furnished' 방식의 임대도 인도에 있다. 이른바 'Plug & Play'라고도 하는 임대 방식인데 이는 이란 사무실 임대만 아니라 공장 건물 임대에도

통용되고 있다.

\* Bare Shell: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 있지만 내부 바닥이나 천정에 도장 공사와 필요한 전등을 설치하는 전기 공사 등의 마감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대 후 임차인이 스스로 하여야 하는 방식.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Warm Shell이다. Warm Shell보다 충분한 내부 인테리어를 갖추고 임대하는 방식을 Furnished 또는 Plug & Play라고 말한다.

공공 전력 비용은 싸다고 여길 수 있으나 품질이 문제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공급이 하루 24 시간 일주일 7일 내내 끊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잠깐의 전력 단전도 공장 시설과 운영에 치명적인 경우에는 단전 없이 공급되는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독자적인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혹은 발전기 등 별도의 공급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비용이 든다. 따라서 임차료 외에 전력 공급의 질과 같은 주변 인프라 사정이 토지 가격결정 요소에 감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접 비용에서 특히 중소기업으로서 매출 대비 전체 비용 중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한국인 임직원의 체재 비용이 있다.(\*1) 진출과 동시에 사업 이윤을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여건이 확보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익 실현 이전에 현지 진출하는 한국인 주재원의 인적 구성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2) 가족 동반인 경우는 현지인보다 5배, 10배 그 이상의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택이나 학비가 부담스러운 외국인 국제학교 그리고 현지 생활에 필수적인 차량 임차료와 운전기사 고용 등등에서 비용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런 까닭에 최근에는 진출 기업이 한국에서 파견하는 주재원의 수자를 최소화하고 부득이 한 경우 인도 내 거주 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현지 채용이 늘고 있다. 나아가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한국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인도 현지인 고용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는 비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아울러 현지 경험 유무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기인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측면도 없지 않다.

(\*1) 급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부담, 주거 및 차량 운행 비용, 동반 자녀 학비, 왕복 항공료 등 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출 대비 그리고 이익 대비하여 결코 비중이 적지 않다.

(\*2) 엄밀한 의미에서 인도에는 한국인 해외교포라는 의미의 거주자는 없다. 인도 국적 취득이거나 인도인과의 배우자로서 거주자 아닌 경우 사업주 비자나 고용 비자도 영주권이란 의미의 거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매우 길어도 5년 혹은 대부분 2~3년 내외 비자 유효기간을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일 뿐이다.





## 1-3 투자 인센티브

인도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각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업별 인센티브와 각 주별로 투자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주별 인센티브가 있다. 산업별, 주별 인센티브는 다른 재원에서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산업별 인센티브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 Incentive)가 대표적이며, 전자부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Modified Programme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 Fab Ecosystem', 전자부품 대상 SPECS 인센티브도 눈여겨 볼만 한다. PLI의 경우 별도의 신청기간과 심사절차를 걸쳐 수혜기업(Winner)을 선정한다. 2024년 9월 기준, 신청 가능한 PLI는 에어컨 및 LED 조명 분야 1건이 있으며, 곧 새로운 PLI 인센티브가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PLI와 관련된 정보와 인도 주요 주별 인센티브는 2022년에 KOTRA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챕터에서는 인도 중앙정부가 산업별 인센티브 주요 방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주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한다.

다만, 인도 중앙정부와 주 정부 인센티브 그 구조와 세부내용이 복잡하기에 인도 국가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India를 통해 각 산업별, 주별 최신 인센티브 정보를 파악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투자금액, 지역 등 세부적인 정보를 공유하면 인도 주 정부 간 인센티브 비교 분석 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 Invest India에는 한국 기업 전담 데스크인 Korea Plus 대표 메일인 koreaplus@investindia.org.in을 통해 접촉하면 된다.

<인도 정부 PLI 및 주별 인센티브 안내서 다운로드 (2022년 KOTRA 발간)>



인도 정부 PLI 정책 안내서



인도 주요 주별 인센티브 안내서

### 1-3-1. 업종별 인센티브

#### 1-3-1-1. 화학

화학제품 생산 관련 인프라 집적을 위하여 석유·화학·유화 전용 투자지역(Petroleum, Chemical & Petrochemical Investment Regions)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PCPIR 지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시 사업이행 자금의 최대 2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며, 오폐수 무배출 공동 폐수처리장이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비상대응 시스템 등 스마트 환경 시스템에 대해 추가적으로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최대 2천만 루피). 현재 구자라트(Dahej, Bharuch), 오디샤(Paradeep), 타밀나두(Cudalore-Nagapattinam), 안드라 프라데시(Visakhapatnam-Kakinada) 등 4개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인도 화학부 PCPIR 정책 (<http://chemicals.nic.in/sites/default/files/PCPIRPolicy.pdf>) The Economic Times

연론보도 (2020.12.7 / New PCPIR policy moots central funding for infrastructure)

36개소의 중앙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소(Central Institute of Petrochemicals Engineering & Technology)를 설립하여 폴리머 및 플라스틱 분야의 첨단 연구개발, 기술지원,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https://www.cipet.gov.in/centres/cipet-haldia/facilities.php>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 투자촉진을 위해 신규 생산기업 및 비료를 포함한 농화학 업종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도 도입될 예정이다.

### 1-3-1-2. 자동차부품

자동차 부품에는 첨단 자동차 부품(AAT)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인도 정부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2022/23년에서 2026/27년까지 총 5년간 총 2,593억 루피(약 30억 달러)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 <https://heavyindustries.gov.in/pli-scheme-automobile-and-auto-component-industry>

이외에도 차세대 화학셀(Advanced Chemical Cell) 배터리에 대한 PLI에는 1,810억 루피(약 21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 <https://heavyindustries.gov.in/pli-scheme-national-programme-advanced-chemistry-cell-acc-battery-storage>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별도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도입된다. 2019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3년간 1,000억 루피를 지출하는 FAME(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Electric Vehicles)-II가 시행 중이다. 총 예산 지원 중 약 86%의 기금이 수요 인센티브에 할당되어 국가에서 2,3,4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 단계는 7,000대의 전기 버스, 50만 대의 전기 3륜차, 55,000대의 전기 4륜 승용차(Strong Hybrid 포함), 100만 대의 전기 2륜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기차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인도 중공업부(MHI)에서 FAME-III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 1-3-1-3. 전기전자/IT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계획(SPECS, Scheme for Promotion of manufacturing of Electronic Components and Semiconductors)에 따라 전자제품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제품은 자본 투자액(토지금액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총 4억4천만 달러 규모 예산\*을 배정하였다. SPECS는 지난 2024년 3월까지로 신청이 종료되었으며,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SEPCS 2.0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존 SPECS 제도를 통해 SPECS 2.0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SPECS 수혜 분야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 <https://www.meity.gov.in/esdm/SPECS>

SPECS 인센티브는 전자부품 및 반도체 분야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각 품목별로 정해진 최소 투자금액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SPECS는 특별경제구역(SEZ) 내의 투자는 자본 투자액의 20%까지, SEZ 외 지역의 투자는 25%까지 환급을 제공한다. 자본 지출은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공장, 기계, 장비, 관련 유틸리티 및 기술 지출을 포함하며, 확장 투자의 경우 기존 자본투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1-3-1-4. 섬유 산업 (Textile Sector)

인도 섬유부는 2023년 7월 영원무역이 입주한 텔랑가나 주 KTMP를 포함하여 7개의 산업단지(가 PM MITRA(Pradhan Mantri Mega Integrated Textile Region and Apparel)로 선정하였다.\*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소유한 SPV(Special Purpose Vehicle)가 각 산업단지별로 설립되어 프로젝트 실행을 감독하고, 각 산업단지 별로 최대 500억 루피의 인프라 개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PM MITRA 단지별로 최대 300억 루피의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지원(CIS)도 제공될 예정이다.

\* <https://pib.gov.in/PressReleaselframePage.aspx?PRID=1908052>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지원(CIS)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 섬유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만 해당 (중복수혜 불가)
- (2) 인센티브 지원: 지정 산업단지별 총 매출액의 최대 3%
- (3) 투자금액별 인센티브 상한액
  - ① 투자 금액이 300억 루피 이상인 투자 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10억 루피
  - ② 투자 금액이 100억 ~ 300억 루피인 투자 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5억 루피
  - ③ 기타 투자 및 임차 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1억 루피

### 1-3-1-5. 식품 가공

식품가공 분야에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를 승인했다. PLI 제도의 시행은 2026-27년까지 약 3조 루피 규모의 식품 가공 능력 확장과 약 25만 명의 직·간접적인 추가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PLI는 기장 기반 제품, 가공 과일 및 채소, 해산물, 모짜렐라 치즈를 포함한 조리/식용(RTC/RTE) 4가지 주요 식품 품목 및 중소기업 생산 품목으로 방목계란, 가공류 고기, 계란을 포함한 혁신적/유기능 제품이 대상 품목이었다.

또한, 콜드 체인 및 부가가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포장 설비, 사전냉각 장치 등 저장 인프라 조성 비용의 35%, 냉동 보관/초저온 냉동고 등 부가가치 인프라 설립과 방사선 식품조사(照射) 시설 건립시에는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https://pib.gov.in/PressReleaselframePage.aspx?PRID=2003085>

### 1-3-1-6. 철강업

철강산업에서 인도 정부는 철강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해 국내생산 기업에 대해 최대 414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무담보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0월 이후 설립된 기업에 대해 23년 3월까지 생산 개시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는 2019년 10월 이전 설립 기업은 법인소득세율 22%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이제 만기로 종료되었고 아직 이를 대체할 세제 혜택 프로그램은 발표된 바가 없지만 이후로도 이와 유사하거나 발전된 형태의 철강 제조업 지원 인센티브가 발표될 여지는 있다.

\* <https://taxguru.in/income-tax/reduced-corporate-tax-rate-new-section-115baa-115bab.html>

철강제품의 국내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35년까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개선, 산업화 및 해안 커뮤니티 개발에 8,1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1) 인도내 지역 공간간 연결 강화를 위한 UDAN 프로젝트도 발표되었다. 항공편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100여개의 신공항을 설립할 예정이고, 이미 UDAN 프로젝트에 따라 13개 주에 지역별로 각 6개 이상의 신공항이 설립되었다.(\*2)

(\*1) <http://sagarmala.gov.in/>

(\*2) <https://www.aai.aero/en/rcs-udan>

### 1-3-1-7. 여행업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보유한 인도이지만 호텔 숙소와 교통망 등 관광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는 조사대상 119개 국가 가운데 39위에 속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적다.\*

\* the Travel and Tourism Development Index (TTDI) 2024 report publish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해외 관광객으로부터 수입: 코로나 19 이후 회복세〉



자료원: Ministry of Tourism, India



인도 정부는 인도의 관광업 촉진 및 개발을 목표로 데마형 관광개발 지원책(Swadesh Darshan Scheme)이 도입하였다. 어플 개발, 도로변 편의시설, 응급 처치 시설, 관광 안내소 설립 비용 등 관광관련 서비스에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나, 관광 명소와 연계되는 도로환경 개선, 야외극장 설립, 자연산책로 조성 등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http://swadeshdarshan.gov.in/>

또한 주정부로부터 토지 보조금, 인지세 감면, 전기세 면제, 낙후지역 개발 보조금, 초대형 프로젝트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래 예시는 Mumbai가 있는 Maharashtra 주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 〈Maharashtra 주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분류〉

Types of Units	Zone Classification	Fixed Capital Investment in INR Crore	Direct Employment Generation	Time Period For Investment (In Months)
Mega Project Unit	A	100	300	60
	B	50	150	48
	C	25	75	48
	STZ/STD	15	45	36
Ultra Mega Project Unit	Entire State	500	750	84

자료원: Maharashtra 주 관광산업부 공시

#### 〈프로젝트 규모별 인센티브 종류〉

	A	B	C	STZ/STD
Eligibility Period In Years	5	5	7	7
Vat Reimbursement	50% of VAT on local sales less Input Tax Credit or zero whichever is higher	75% of VAT on local sales less Input Tax Credit or zero whichever is higher	100% of VAT on local sales less Input Tax Credit or zero whichever is higher	100% of VAT on local sales less Input Tax Credit or zero whichever is higher
Luxury Tax Exemption	50%	75%	100%	100%
Entertainment Tax Exemption	50%	75%	100%	100%
Electricity Duty Exemption	50%	75%	100%	100%
Stamp Duty and Registration Charges Exemption	50%	75%	100%	100%

자료원: Maharashtra 주 정부 관광산업부 공시

### 1-3-1-8. 반도체 (Semiconductor)

인도 정부는 2021년 12월에 Semicon India Programme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육성을 본격화하였다. 인센티브 대상에는 반도체 생산, R&D, 제품 디자인, 제품 개발 등이 모두 포함되며,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2022년 1월부터 기업의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2차 신청은 2023년 3월에 개시되었다. 주요 인센티브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그린필드 투자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도 10~25%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도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현지생산 장기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Indian Semiconductor Mission(ISM)(\*1)이라는 조직을 2021년 12월에 설립하였으며, ISM은 Semicon India Programme에 따라 접수된 투자신청서의 기술 및 재무 평가, 신청자와의 협상, 규정된 지침에 따라 인도 정부에 적격 투자제안을 추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Semicon India Programme은 현재 3개 세부 카테고리(\*2)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 수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1) <https://pib.gov.in/PressReleaseDetail.aspx?PRID=1781723>

(\*2) <https://www.meity.gov.in/esdm/Semiconductors-and-Display-Fab-Ecosystem>

(1) 반도체 Fab 지원: 공장 설립 비용의 50%를 재정 지원

(2) 디스플레이 Fab 지원: 공장 설립 비용의 50%를 재정 지원

(3) 화합물 반도체/실리콘 포토닉스/센서/디스크리트 반도체 Fab 및 반도체 조립·테스트·마케팅·패키징/후공정서비스 지원: 자본 지출의 50%를 재정 지원

자본 지출의 50%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은 신청서가 승인된 후 제도, 지침, 승인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자본 지출의 최소 금액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특히, Semicon India 인센티브는 다른 인센티브가 투자 집행 이후 사후 환급 방식인것과 달리 투자자의 투자 집행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pari-passu)으로 지급한다.

### 1-3-1-9. 신재생 에너지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효율 태양광 모듈에 대한 PLI는 1차로 4,500억 루피(5억 5천만 달러), 2차로 19,500억 루피(23억 7천만 달러)가 배정 되었으며 2차분까지 PLI가 집행 되면 인도 내에서 연간 65GW의 제조 능력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 그린 수소 미션 정책으로 19,744억 루피(24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2030년까지 연간 5 MMT의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 제도는 2023년 9월 7일로 신청이 마감되었다.

### 1-3-1-10.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운영현황

#### (1) 생산연계인센티브 개요

인도 정부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는 'Make in India' 및 자주 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의 구현 및 인도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생산기지 및 공급망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이다. 동 제도는 인도 내 통상 5개년 동안 점진적으로 투자와 생산을 늘리면 이에 따른 매출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도 내 설비투자,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국산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인도 정부는 PLI를 운영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등 수입 규제를 통해 더욱 더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선정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 (2) 적용분야

현재 14개 분야에 대해서 PLI를 적용하고 있다. 2024-2025예산안(2024.7월)에서 신발, 완구류를 PLI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4년 9월 기준 세부 기준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분야	규모(\$)	분야	규모(\$)
전자기기·모바일	46억	식품	13억
자동차·자동차부품	32억	섬유·의복	12억
태양광	28억	의약품 원료	8억
배터리	22억	백색가전	7억
IT하드웨어	20억	특수강	7억
의약품	19억	의료기기	4억
통신	14억	드론	0.1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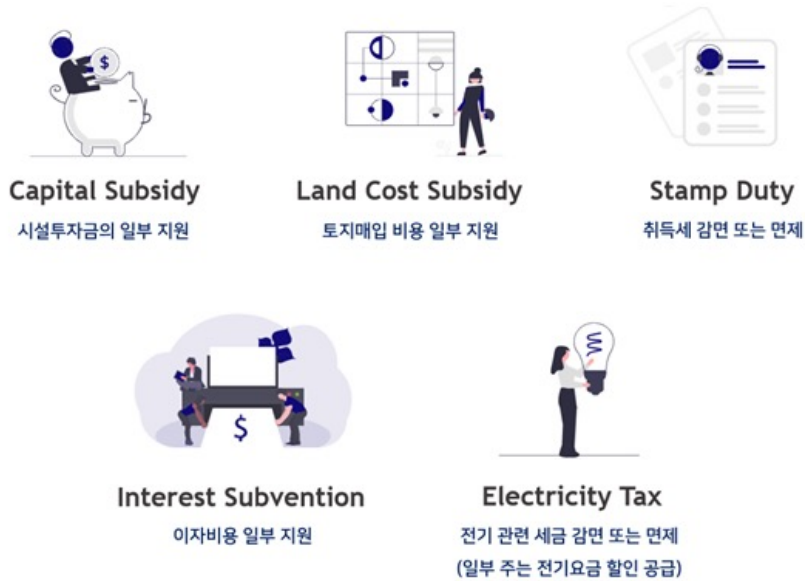
## (3) PLI 관련 참고사항

- ① (복잡한 신청과정) PLI는 품목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등록 → 중앙부처와 면담을 통한 신청 품목 논의 → 신청서 제출 → PLI 수혜기업으로 선정 절차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정부와의 협상 또는 서류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회사와 함께 생산하는 경우 공동 신청자로 등재가 필요하다.
- ② (정부와의 협상) 생산 품목 및 국산화 조건 등에 정부와 논의하게 되는데 PLI는 전체적인 품목군에 대해서만 공고되고, 세부품목은 이후에 규격이 발표되게 생산 품목이 이후 발표되는 내용에 포함되도록 협상이 필요하다. 또한, 까다로운 DVA(Domestic Value Addition) 조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1-3-2. 지역별 인센티브

인도의 주별 인센티브는 투자 지역(낙후된 투자할 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하며 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은 최소 투자금액이 많이 높거나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도 많음), 투자 금액, 고용 창출 규모, 육성 산업별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차등 지급된다. 각 주마다 이를 칭하는 용어는 상이하나, 투자 규모가 큰 Mega, Ultra Mega Project의 정해진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와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인센티브 금액, 비율, 적용 기간 등 협상이 가능하다.

주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내역도 주마다 다르나, 주별로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대부분의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항목은 아래와 같다.



이 챕터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주요 7개 주(하리아나, 우타르 프라데시, 타밀 나두, 마하라슈트라, 텔랑가나, 카르나타카, 안드라 프라데시)를 중심으로 각 주의 모든 인센티브 정책을 나열 할 수 없기에, 각 주의 대표적인 인센티브나 구조를 안내하고자 한다. 각 주별로 총선 이후 새로운 산업 육성 정책 및 인센티브를 발표할 예정여서 최신 인센티브 정보는 Invest India 및 각 주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각 주별 정권 교체, 예산 상황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바란다.

#### 1-3-2-1. 하리아나 주 (Haryana, HR)

다국적 기업의 인도법인이 주로 소재하고 있고 Natioanal Capital Region(NCR)에서 한국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구르가온을 대표로 하는 하리아나 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별, 기업규모별, 구역별, 타겟 업종별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 HARYANA ENTERPRISES AND EMPLOYMENT POLICY, 2020





〈인센티브 대상 유형별 구분〉

대상	기준
초대형 프로젝트 (Ultra-Mega Project)	고정자본 투자액이 지역별로 각각 최소 600억 루피(A급지), 450억 루피(B급지), 300억 루피(C급지), 150억 루피(D급지) 이상인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Mega Project)	고정자본 투자액이 지역별로 각각 20억 루피(B급지), 10억 루피(C급지), 7.5억 루피(D급지) 이상인 대형 투자 프로젝트
대기업 (Large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5억 루피 이상 투자시 (매출액 25억 루피 이상)
중기업 (Medium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5억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25억 루피 미만)
소기업 (Small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1억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5억 루피 미만)
영세기업 (Micro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1천만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5천만 루피 미만)
스타트업	하리아나 주정부에서 규정한 스타트업 해당 업종으로서 Start-up Haryana 등록 기업
낙후지역 개발 프로젝트	B, C, D 급지의 미개발 지역에 최소 10개의 기업이 클러스터를 기획한 후 경제 활동 및 지역 고용을 발전에 기여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생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화, 고용 창출 서비스, 사업 연계 및 부품 제조업, 계열성이 있는 재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필수 재화
서비스 기업	건물 및 장비에 1억 루피 이상 투자한 의료업, 관광업, 교육업, IT업, 대량 택배 서비스업, R&D센터, 시험 연구소, 엔지니어링 및 설계 서비스, 건설 및 공업 관련 장비 대여/리스업, 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 환경 서비스 및 영상문화단지 (영화관 제외)
데이터 센터	기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정보 저장 관리 시스템 (예: 화재 진압 시스템, 공기조화기 시스템 등).
공유 사무 시설	IT 및 네트워크 장비 운용 관련 복수의 기업에 의해 공유되는 사무공간 (건물, 냉방, 전력, 네트워크 대역폭 및 보안 시스템 등 제공. 사용자는 서버 및 데이터 관리, 저장장비 등 제공)

<하리아나주 구역별 급지 구분>

급지	지역
A	파리디바드, 구르가온, 파니파트, 소니파트, 로타크, 자자르, 레와리, 팔왈
B	암발라, 비와니, 히사르, 카르날, 메왓, 판츠콜라, 파니파트, 팔왈, 레와리, 로타크, 소니파트, 아무나 나가르
C	암발라, 비와니, 파테하바드, 히사르, 자자르, 진드, 카이탈, 카르날, 쿠루크스테라, 메왓, 마힌더가르, 팔왈, 파니파트, 레와리, 로타크, 시르사, 소니파트, 아무나 나가르
D	비와니, 파티바드, 히사르, 자자르, 진드, 카이탈, 메왓, 마헨덜가르, 판츠콜라, 레와리, 시르사, 소니파트, 아무나 나가르

자료원 : <http://www.haryanaindustries.com/4-BLOCK-WISE-CATEGORIZATION.html>

초대형 프로젝트(Ultra-Mega Project)에 대해서는 주정부에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 ① (통합간접세 감면) 투자 규모에 따라 통합간접세(SGST)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며, 투자하는 구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통합간접세 감면 내역>

급지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중소/영세기업	중점산업 분야
D	5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25% 한도)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25% 한도)	10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50% 한도)	10년간 100% 감면 (FCI의 150% 한도)
C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의 100% 한도)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의 100% 한도)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25% 한도)	8년간 75% 감면 (FCI의 125% 한도)
B	5년간 30%, 이후 3년간 15% 감면 (FCI의 100% 한도)	5년간 30%, 이후 3년간 15% 감면 (FCI의 100% 한도)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의 100% 한도)	7년간 50% 감면 (FCI의 100% 한도)
비고	-	-	B, C, D급지에 투자하는 영세 여성/SC/ST 기업은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 데이터 저장장치 농업/식품 가공업

자료원 : Haryana enterprises promotion policy, 2020

주: (\*1) ESDM(전자시스템 개발 및 생산) 분야는 B, C, D급지 투자시 10년간 100% 감면, A급지 투자시 5년간 100% 감면한다.(고정자본 투자액(FCI)의 100% 상한)

(\*2) 스타트업은 지역구분 없이 7년간 100% 면제해준다(고정자본 투자액의 150% 상한)



- ② (고용창출 보조금) B, C, D급지에서 고용창출시 7년간 1인당 연간 3만 루피(여성/SC기업의 경우 36,000 루피) 보조금 지급한다.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저장장치, ESDM)의 경우 7년간 1인당 연간 36,000루피(여성/SC기업은 48,000루피) 지급하며, 농업/식품 가공업에 대해서는 경우 10년간 보조금을 지급

- ③ (인지세 환급) D급지 투자시 100%, C급지 투자시 75%, B급지 투자시 60%를 환급한다.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생산 개시 조건)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스트리지, 농업/식품가공업)의 경우 C, D급지 투자시 100%, B급지 투자시 80% 환급하며 ESDM 업종의 경우 B, C, D 급지 모두 100% 환급

- ④ (전기세 감면) D급지 10년간, C급지 7년간, B급지는 5년간 100% 감면

\* 중소기업은 D급지 12년, C급지 10년, B급지 7년간 면제

\* 중점산업 분야는 D급지 20년, C급지 15년, B급지 10년간 면제되며, ESDM 업종은 지역구분 없이 조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면제

- ⑤ (외부개발부담금 감면) D급지 100%, C급지 75%, B급지 60% 감면

\* 전자(ESDM) 업종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면제

- ⑥ (이자비용 보조) 중소기업에 대해 C, D급지는 5년간, B급지는 3년간 5%(연간 최대 2백만 루피)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 여성/SC/ST기업에 대해서는 B, C D급지 투자시 6%(연간 최대 2백만 루피) 지원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저장장치, ESDM) 업종은 C, D급지 7년간, B급지 5년간 6%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농업/식품가공분야의 경우 C, D급지 7년간, B급지 5년간 7%의 이자비용을 지원

- ⑦ (스타트업 지원) 5년간 이자비용의 8%(연간 최대 2백만 루피) 지원, 1년간 리스/렌탈 비용의 30%(여성기업의 경우 45%) 최대 50만 루피 지원, 기업당 최대 1백만 루피 시드머니 지원(A급지 100대 스타트업, B급지 200대 스타트업, C급지 300대 스타트업, D급지 400대 스타트업), 국내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가비용 지원, 멘토링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스토리지 비용 3년간 100% 지원(최대 10만 루피) 등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 1-3-2-2. 우타르 프라데시 주\* (Uttar Pradesh, UP)

\* UP Industrial Investment & Employment Promotion Policy 2022

노이다, 그레이터 노이다를 대표로 하는 우타르 프라데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주 중 하나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투자유치 및 산업육성 정책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인센티브는 'UP Industrial Investment & Employment Promotion Policy 2022'와 'UP FDI, Fortune Global 500 & Fortune India 500 Companies Investment Promotion Policy 2023'를 꼽을 수 있다.

다른 주의 인센티브 항목과 유사한 UP Industrial Investment & Employment Promotion Policy 2022는 세부조건이 매우 다양하여 각 투자 건에 따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UP FDI, Fortune Global 500 & Fortune India 500 Companies Investment Promotion Policy 2023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1) UP FDI, Fortune Global 500 & Fortune India 500 기업 투자 촉진 정책 2023

UP주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중 일정 규모가 이상 되는 프로젝트 및 글로벌 & 인도포춘 500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 ① 대상 자격: 100억 루피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자본 투자가 있는 프로젝트 또는 신청일까지 게시된 Fortune Global 500 및 Fortune India 500 회사의 100억 루피 이상의 자본 투자 프로젝트 (단, 담배, 알코올, 철 및 철강, 시멘트, 음료, 물류 투자 프로젝트 제외)
- ② 주요 인센티브: 주요 인센티브는 다음 표와 같다.

항목	내용
선지급 토지보조금	산업단지개발 공단에서 Paschimanchal, Madhyanchal 지역은 25%의 Bundelkhand, Purvanchal 지역은 20% 토지 보조금 지급
자본투자 보조금	토지 비용을 제외한 자본 투자액(EC)에 대해 에 제공되며 7개년 간 연간 100억 루피 한도로 지급 → Gautam Buddha Nagar and Ghaziabad 지역: 각 자본 투자의 25% → Paschimchal(Gautam Buddha Nagar, Ghaziabad 제외), Madhyanchal 지역: 30% → Bundelkhand, Purvancha 지역: 35%
SGST 관련 인센티브	자본재에 대한 순 SGST 환불 또는 SGST 환불 → 옵션1: 순 SGST 환급: 최대 적격 자본 투자금(토지 비용 제외)까지 순 SGST 환급. 적격 자본 투자(EC)의 연간 10% 한도로 10년 간 제공 → 자본재에 대한 SGST 환불: 자본재에 대해 ITC(Input Tax Credit)를 활용할 수 없고 환급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 UP-GST Act-2017에 따라 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 기간 내에 자본재에 부과된 SGST를 환급.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 간 균등 금액 환급
인지세 및 등록비	인지세 및 등록비 환급 또는 면제
전력부담금 면제	전력부담금 5년간 100% 면제
교육훈련 보조금	5년 동안 1인당 월 ₹5,000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명의 교육 비용을 환급



폐수처리시설 보조금	공장 구내에 폐수 처리 공장(ETP)을 설치하기 위한 자본 보조금으로 설치 비용의 50% 또는 ₹2.5 crore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 폐수 처리 공장 운영 개시 시 일시불로 지급
기숙사 등 산업단지 내 주택 개발 보조	단위 구내에서 반경 10km 이내의 근로자 주택/기숙사 및 관련 집단 시설 개발 비용의 10% 또는 ₹10 crore 중 낮은 금액을 7년에 걸쳐 매년 균등한 금액으로 제공
물류 보조금	기존 해외 또는 인도 타 지역 소재 공장을 UP주로 이전하는 경우, 제조 장비 운송비를 ₹2 crore 한도로 최대 50%까지 보조. 상업 운영 개시 후 일시불로 제공
특허 등록비 환급	국내 특허 취득 시 최대 10만 루피, 국제 특허 취득 시 최대 20만 루피의 75% 까지 일시불로 지급
R&D 지원 인센티브	R&D 센터 및 Centre of Excellence (CoE) 설립 보조금 → 독립형 R&D 센터: 최대 ₹10 Crore까지 R&D 센터를 설립 비용의 25%를 환급 (최소 Rs 20 Cr의 투자). 보조금은 프로젝트 승인 시 50%, 승인 후 25%, 5년 내에 약속된 결과 달성 시 25%를 분할하여 제공 → Centre of Excellence (CoE): 최대 ₹10 Crore까지 프로젝트 비용의 50% 환급

### 1-3-2-3. 타밀나두 주\*(Tamil Nadu, TN)

\* Tamil Nadu Industrial Policy 2021

첸나이 인근에 공장이 있는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를 중심으로 우리 제조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주로,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 유망 분야, 산업단지, R&D프로젝트, 물류인프라, FDI, 중소기업 프로젝트 등 규모 및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투자규모별 구분>

프로젝트 분류	투자 규모		투자기간
	최소	최대	
중소규모(Sub-Large)	5억 루피	30억 루피	4년
대규모(Large)	30억 루피	50억 루피	4년
메가(Mega)	50 억 루피	500억 루피	4년
울트라 메가(Ultra-Mega)	500억 루피	-	7년

\* 모든 제조업 프로젝트는 최소 50명 이상 고용 창출시 인센티브 대상으로 인정한다.

#### <투자대상 지역 구분>

구분	지역
A	Chengalpattu, Chennai, Kancheepuram and Tiruvallur
B	Coimbatore, Erode, Karur, Krishnagiri, Namakkal, The Nilgiris , Ranipet, Salem, Tiruchirappalli, Tirupattur, Tiruppur, and Vellore
C	Ariyalur, Cuddalore, Dharmapuri, Dindigul, Kallakurichi, Kanniyakumari, Madurai, Mayiladuthurai, Nagapattinam, Perambalur, Pudukkottai, Ramanathapuram, Sivagangai, Tenkasi, Thanjavur, Theni, Thiruvavar, Thoothukudi, Tirunelveli, Tiruvannamalai, Villupuram and Virudhunagar



<대규모(Large)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

구분	내 용
대상	(울트라메가) A, B, C 지역 (대규모, 메가) B, C 지역
투자 보조금	1. 통합간접세 15년간 100% 감면 2. (고정형 자본보조금) 투자액의 최대 25% (최대 15년 내 이행) - 대규모: B지역 10%, C지역 12% (10년 이내) - 메가: A지역 10%, B지역 12%, C지역 15% (12년 이내) - 울트라메가: A지역 20%, B지역 22%, C지역 25% (15년 내) 3. (유연한 자본보조금) 최대 35%(A) / 37%(B) / 40% (C지역) 4. (매출액기반 보조금) 대규모고용시 매출액의 최대 2%를 지급 (메가/울트라메가 프로젝트에 한정) - 2천~4천명 고용시: 1.5%(A지역), 1.75%(B지역), 1.8%(C지역) - 4천명 초과 고용시: 1.75%(A지역), 1.8%(B지역), 2%(C지역) * 2, 3, 4번 인센티브 중 택 1
고용훈련 보조금	6개월간 종업원 1인당 월 4천 루피 고용훈련비용 지급 * 여성(트랜스젠더 포함), 장애인, SC/ST 출신은 월 6천 루피
부지 분양비용 지원	SIPCOT 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비용의 10% 보조(A, B지역), C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이자비용 보조	-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6년간 5% 지원 (연간 4천만루피 한도)
기본 인센티브	1. 전기세: 5년간 면제 2. 인지세 감면: A, B지역 50%, C지역 100% 감면 3. 환경친화 인프라 구축 비용의 25% 지원 (1천만루피 상한) 4. QC(ISO, ISI, BIS, FPO, BEE, AGMARK, ECOMARK) 취득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250만 루피) 5. 지재권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3백만 루피)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유망산업 분야(Sunrise sectors)\*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용
대상	(A지역) 메가 및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B, C지역) 대규모, 메가 및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투자 보조금	유연한 자본보조금에 추가적으로 자본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부지 분양비용 지원	SIPCOT 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 비용의 10% 보조(A, B지역), C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최대 2천만 루피)
인지세 감면	SIPCOT으로부터 취득한 부지에 대해 100% 면제
QC 취득 지원	취득 비용의 50%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지재권비용 지원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재권 비용의 50%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이자비용 지원	6년간 5% 이자비용 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 : 최대 2백만 루피 - 메가 프로젝트 : 최대 1천만 루피 -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 최대 4천만 루피
기본 인센티브	1. 전기세 : 5년간 면제 2. 환경친화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1천만루피 상한)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 항공방위산업, 농업/식품가공업(식용유 제외), 신재생에너지 부품 제조, 전기전자 개발/제조, 의료 전자장비/장치 및 설비, 전기자동차/전기차용 셀배터리 및 친환경차(수소차 등), 바이오, 의약/복제약/약효식품, 석유화학/특수화학, 신발/가죽제품/폴리우레탄섬유, 기술섬유(의료섬유포함), 기타 정부지정 유망산업 분야

<중소규모(Sub-Large)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분	내용
대상	50명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투자 프로젝트 (고정자산 투자액 5억~30억 루피).
자본 보조금	4년 이내에 투자이행 완료시 1천만 루피 보조금 지급 C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고정자산 투자액의 5%를 투자이행 완료시 지원(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
전기세 감면	신규/증액 제조업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전기세 면제
인지세 면제	토지/건물 구입/임차 관련 인지세의 50% 감면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지원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 1-3-2-4. 마하라슈트라주 (Maharashtra, MH)

मुंबाई가 주도인 마하라슈트라 주는 자동차, 화학 등 인도 산업의 중심이 되는 주이다. 마하라슈트라 주는 대기업의 경우 청구된 통합간접세(GST)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며, 7년간 100% 전기세 면제 및 인지세 100%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단지에 입주한 대기업은 인지세를 100% 면제해주며 민간공단에 입주시 75%를 감면해준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대기업 투자 인정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 상한〉

지역	최소 설비투자액 (1천만 루피)	최소 직접고용(명)	지원 상한 (FCI 대비)	지원 기간(년)
A(मुंबाई, पुणे 등) 및 B지역(दादर, नासिक 등)	750	1,000	25%	7
C (비만디, 마라마티 등)	500	750	40%	7
D (아우랑바드, 나그푸르 등)	250	500	60%	7
D+ (바르시, 카갈 등)	150	400	70%	7

자료원 : Government of Maharashtra, package scheme of incentives - 2019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간접세를 100%까지 특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며, 이자비용을 5%까지 지원하고 있다. C, D, D+ 지역에 설립하는 중소기업은 7년간 전기세를 면제받는다. 기술고도화 관련 비용도 최대 5%(최대 250만 루피)까지 지원하며, QC 취득 비용의 75%(최대 10만 루피),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비용의 25%(최대 50만 루피), 특허 출원비용의 75%(국내 특허 최대 100만 루피, 해외특허 최대 200만 루피), 수질감사 비용의 75%(최대 10만 루피), 에너지감사 비용의 75%(최대 20만 루피), 에너지절약 장비 도입 비용의 50%(최대 50만 루피)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 <https://maitri.mahaonline.gov.in/PDF/Package%20Scheme%20of%20Incentives%20-%202019.pdf>

인도 정부의 중소/영세기업발전법에 중소/영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설비투자 규모 500억 루피 미만인 기업을 중소/영세기업으로 분류하며, 인센티브 지원액은 고정자본 투자액(FCI)에 따라 총 인센티브 지원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 내에서 매년 균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별 중소/영세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상한〉

지역	지원 상한 (FCI 대비)	지원 기간(년)
A (मुंबाई, पुणे 등)	-	
B (दादर, नासिक 등)	30%	7
C (비만디, 마라마티 등)	40%	7
D (아우랑바드, 나그푸르 등)	50%	10
D+ (바르시, 카갈 등)	60%	10

### 1-3-2-5. 텔랑가나주\*(Telangana, TN)

\* INDUSTRIAL INVESTMENT PROMOTION POLICY 2010-2015 <https://industries.telangana.gov.in/Incentivesnew.aspx>

#### (1) 소기업/영세기업

산업용 부지 취득시 인지세/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토지/건물 등 임차 및 모기지/담보대출과 관련된 인지세도 100% 면제. 산업단지 입주시 입지비용을 25% 할인해주고(최대 1백만 루피), 토지이용도변경 비용의 25%를 환급. (최대 1백만 루피) 사업개시일 이후 5년 동안 전기세를 유닛 당 1 루피 감면해주고, 고정자산 투자액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최대 2백만 루피)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5년간 자본이자 비용의 연 이율 3%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9% 감면해주며, 신설 영세법인의 경우 기계장비 도입 비용의 10%를 지원 (총 투자보조금에서 지원분 만큼 공제) 현지인력 채용시 기술향상/교육훈련 비용을 50%(1명당 최대 2천 루피) 지원하고, QC/특허권 등록 비용의 50%(최대 20만 루피), 특정 정화시설 설치비용의 25%를 지원한다.

#### (2) 중기업/대기업

산업용 부지 취득시 인지세/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토지/건물 등 임차 및 모기지/담보대출과 관련된 인지세도 100% 면제해준다. 산업단지 입주시 입지비용을 25% 할인해주고(최대 1백만 루피), 토지이용도변경 비용의 25%를 환급해준다.(최대 1백만 루피, 중기업만 해당) 사업개시일 이후 5년 동안 전기세를 유닛 당 1루피 감면해주고,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7년간 75% 감면해준다.(중기업만 해당, 최대 고정자산투자액의 100%) 현지인력 채용시 기술향상/교육훈련 비용을 50%(1명당 최대 2천 루피) 지원하고, QC/특허권 등록 비용의 50%(최대 20만 루피, 중기업만 해당), 특정 정화시설 설치비용의 25%를 지원하며(최대 50만 루피), 산업단지로부터 10km 거리 이내에 설립되는 단독 제조시설에 대한 도로/전선/용수 등 인프라구축 비용을 50% 지원한다. (최대 1천만 루피, 고정자산 투자액의 최대 15%)

#### (3) 여성기업

고정자산 투자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고(최대 1백만 루피, 소기업/영세기업만 해당), 기타 소기업/영세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도 모두 지원

#### (4) 메가프로젝트

20억 루피 이상 투자 및 1천명 이상 고용하는 메가프로젝트 투자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여 지원

#### (5) 기설립 중소/영세기업

QC 취득 비용의 50%를 지원 (최대 20만 루피)

#### (6) 섬유산업

방직 사업(조면업 제외)에 대해 5년간 연 4%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직조/뜨개질/염색/의류 생산 등 섬유사업(조면업 제외)에 대해 5년간 6%의 이자비용을 지원



### 1-3-2-6. 카르나타카 주\* (Karnataka, KA)

\* <https://investkarnataka.co.in/wp-content/uploads/2020/11/Booklet-final-.pdf>

벵갈루루를 주도로 하는 카르나타카는 글로벌 기업의 R&D센터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Industrial Policy 2020-2025' 정책을 통해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은 Zone 1, 가장 발전된 지역은 Zone 3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인센티브 제공 항목은 타 주와 대동소이하다.

이 중 가장 매력적인 인센티브는 대형 투자금액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인센티브로, 매출의 1.75%~2.25%를 투자 금액과 지역에 따라 6~10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자(ESDM)산업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 1-3-2-7. 안드라 프라데시주\* (Andhra Pradesh, AP)

\* [https://www.apindustries.gov.in/VCIC/Data/PolicyDocuments/Andhra\\_Pradesh\\_Industrial\\_Development\\_Policy\\_2015\\_20.pdf](https://www.apindustries.gov.in/VCIC/Data/PolicyDocuments/Andhra_Pradesh_Industrial_Development_Policy_2015_20.pdf)

#### (1) 대기업

토지 매입/임대/담보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양도세를 100% 환급한다.(최초 1회만 환급 가능하며, 동일 토지의 후속거래는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50%를 환급해주고 의류, 식품가공, 바이오, 자동차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적용해줄 수 있다. 특정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시 비용의 10%(최대 350만 루피)를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 친환경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출물 모니터링 시스템, 취수시설 등 도입 관련 설비 투자액의 2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최대 5억 루피)

#### (2) 중소/영세기업

토지 매입/임대/담보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양도세를 100% 환급한다.(최초 1회만 환급 가능하며, 동일 토지의 후속거래는 환급 불가) 영세/소기업은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5년 간 100% 환급해주고, 중견기업은 7년간 75% 환급해준다.(의류, 식품가공, 바이오, 자동차산업 등 특정 산업은 더 높은 환급률 적용 가능) 특정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시 비용의 10%(최대 350만 루피)를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 친환경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출물 모니터링 시스템, 취수시설 등 도입 관련 설비 투자액의 2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최대 5억 루피)

### 1-3-2-8. 편자브주\*

\* Punjab Bureau of Investment Promotion (Invest Punjab)

편자브 주는 인도 북서부 지역으로 앵커기업\* 통합간접세를 15년간 100% 감면(투자액의 200% 상한)하고, 토지용도 변경 비용(CLU)/외부개발부담금(EDC) 100% 면제, 고용창출에는 5년간 1인당 연간 36,000루피(여성/SC/BC/OBC 기업은 48,000루피) 보조금 지급, 15년간 전기세 100% 감면, 식품가공기업의 경우 농산물 최저지원가격(MSP)의 2% 추가지불 의무 면제 등의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다만, 이는 2022년 조사 시점에서의 정책인 관계로 이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후 변동 부분에 대해서 재 확인하여야 한다.

\* 의료, 전기전자, 식품가공, 신발/약세사리, IT업종 중 5억 루피 이상 투자 또는 500명 이상 고용, 이외 업종은 20억 루피 이상 투자 또는 1천명 이상 고용

- (1) 중소기업 인센티브: 7년간 통합간접세를 100% 감면하고(투자액 100% 상한), 7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10년간 재산세 50% 감면, 3년간 이자비용 5% 지원(접경지역 또는 Kandi 지역에 투자하거나 SC/여성기업에 한해, 연간 1억루피 상한), 불량을 제로화(ZED) 실현을 위한 비용의 50% 환급(5천만 루피 상한), 재무/기술/인프라/마케팅/수출 관련 지원 등을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한다.
  - (2) 대기업: 7년간 통합간접세를 75% 감면하고(투자액 100% 상한), 10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10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을 지원한다.
  - (3) 중점산업 분야\*: 10년간 통합간접세를 100% 감면하고(투자액의 125% 상한), 10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토지용도 변경 비용(CLU)/외부개발부담금(EDC) 100% 면제, 10년간 재산세 100% 면제해주며, 이외의 모든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의료장비, 4차산업혁명 기반 제조업, 섬유/어패럴 및 기술섬유, 신발/약세사리, 전기전자, 항공방위, 농업/식품가공업, 바이오/의약, 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자전거 및 부품, 합금강, IT, 생명공학, 기술개발센터/인큐베이션센터/엑셀러레이터, 헬스케어, 관광/숙박, 미디어/오락, 항공방위 MRO, 물류
- (4) 스타트업: 5년간 연 8% 이자비용을 지원하고(연간 5천만 루피 상한), 1년간 리스/렌탈 비용의 25% 환급(3천만 루피 상한), 최대 3천만 루피 시드머니 지원, 10억루피 규모 자본펀드(Corpus Fund)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5) 인큐베이터: 최대 1천만 루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5년간 연간 최대 3천만 루피까지 반복비용을 지원하며, 멘토링 비용(5년간 연 3천만 루피 상한), 스타트업 대회 참가비(행사당 최대 5천만 루피) 등도 지원한다.
  - (6) 접경지역: 토지용도변경 비용 및 외부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해주고, 최초 투자에는 주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 비용, 수수료를 75% 감면해주며, 통합간접세 감면 상한의 40%를 추가로 환급해준다.
  - (7) 얼리버드(early bird): 신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을 개시한 최초 10개 기업(중소기업 5개사, 대기업 5개사)에 대해 12년간 통합간접세 100% 환급해준다. (투자액의 125%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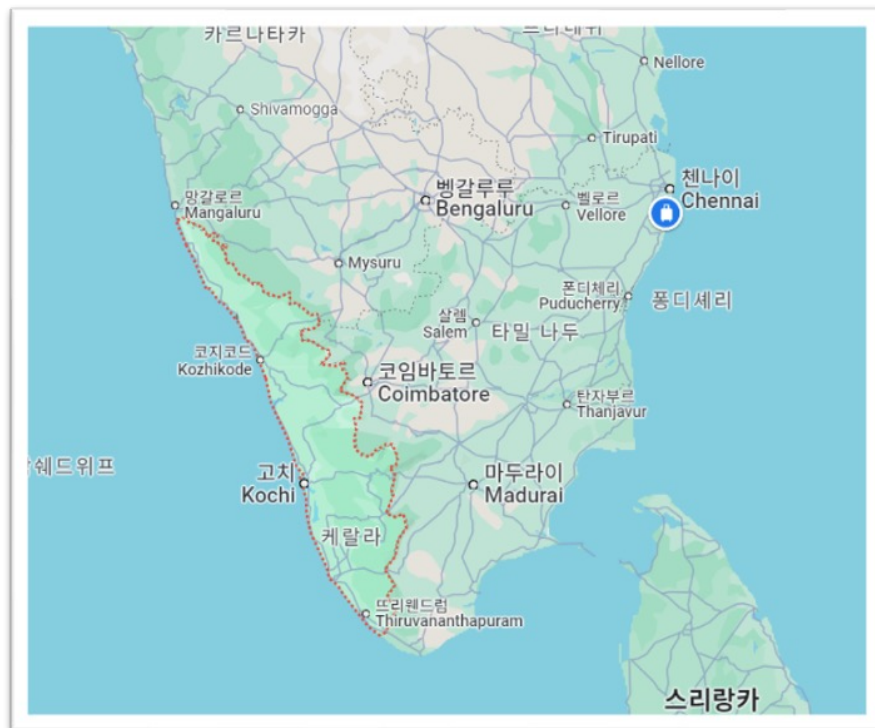
## 1-3-2-9. 케랄라(Kerala)주\*

\* <https://kerala.gov.in/documents/10180/9aef66b2-78c9-416b-bf11-6615329aab80>

- (1) 케랄라주(일부지역 제외) 내 설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정자산 투자액의 15%(최대 2백만 루피)를 지원(여성/SC/ST/청년기업가인 경우 20%(최대 3백만 루피))하고, 중점산업\* 투자에는 추가적으로 투자액의 10%(최대 1백만 루피)를 지원한다.

\* 고무산업, 농업/식품가공업, 기성복, 신재생에너지 장비/장치 제조, 바이오, 100% 수출전용기업, 바이오분해 플라스틱제조,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업, 바이오비료 제조업

- (2) 특정지역(Idukki, Wayanad, Kasaragode, Pathanamthitta)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10%(최대 1백만 루피)의 투자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며,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도 10%(최대 1백만 루피)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 1-3-2-10. 웨스트벵갈주

- (1) 대기업을 위해 투자 보조금, 이자 보조금, 산업 진흥 보조금, 고용 창출 보조금, 석탄 가스 보조금, 토지 전환 수수료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도 다르다.
- (2) Zone C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자본 투자금액의 15%를 투자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고 D에 위치한 기업은 30% 그리고 E에 위치한 기업은 40%를 받을 수 있다. B, C, D, E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이자 부채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최대 매년 175 Lakhs). 또한 B, C, D, E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인지세를 75%까지 면제한다. B, C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전기세를 5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고 D, E에 위치한 기업은 5년간 100% 이후 5년간 75% 면제받을 수 있다.
- (3) Zone A, B에 위치한 영세기업은 5년 간 이자 부채의 55%를 지원하고 C, D, E에 위치한 기업은 이자 부채의 70%를 지원한다. 인지세는 Zone A 25% 면제, B는 50% 면제, C는 75% 면제 그리고 D는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전기세는 Zone A, B는 5년간 50%를 면제받고 C, D, E에 위치한 기업은 75%를 면제받는다.
- (4)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SGST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Zone B, C에 위치한 기업은 30%를 환급 받을 수 있고 D, E에 위치한 기업은 50%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누적 환급액이 고정 자본의 75%를 넘을 수 없음. 또한 표준 품질 인증에 발생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USD 6,800) 특허 등록 비용의 50%를 환급한다 (최대 USD 6,800).\*

\* Government of West Bengal department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xtiles

#### < 웨스트벵갈주 지역 구분 >

지역	도시
A	콜카타, 북 파르가나스, 남 파르나가스, 하우라
B	후글리, 북 파르나가스 & 남 파르나가스 (자치도시지역 제외), 우라 (자치도시지역 제외) 실리구리, 파스침, 푸르바, 부르드완, 나이다의 자치도시지역
C	부르드완, 푸르바, 나이다, 다르질링 (자치도시지역 제외) 마이다, 잘파이구리, 푸르시디바드
D	피르뭇, 푸를리아, 방쿠라, 우타르 디나즈푸르, 닥신 디나즈푸르파스침 (자치도시지역 제외)

자료원: Government of WB Department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xtiles



## 02 회사 설립

2-1. 외국인투자 절차

2-2. 회사유형별 설립절차

2-3. 설립 이후 주요 절차

2-4. 회사설립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

## 02 회사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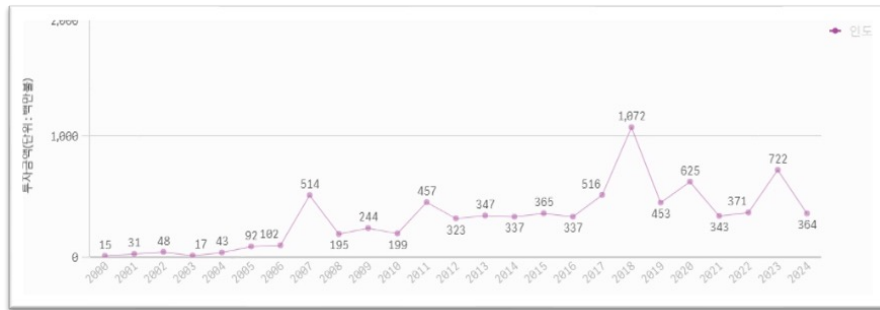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시대에 개방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있는 인도에선 외국인(기업)도 인도 회사법에 따라 인도 내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와 경영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법인)를 설립할 수 있고 또 그 수익을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주의 나라로 보낼 수 있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현재의 인도는 단연코 민주주의 정치체계에서 보장하는 시장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고 대외적으로도 거의 완전하게 개방된 글로벌 경제 일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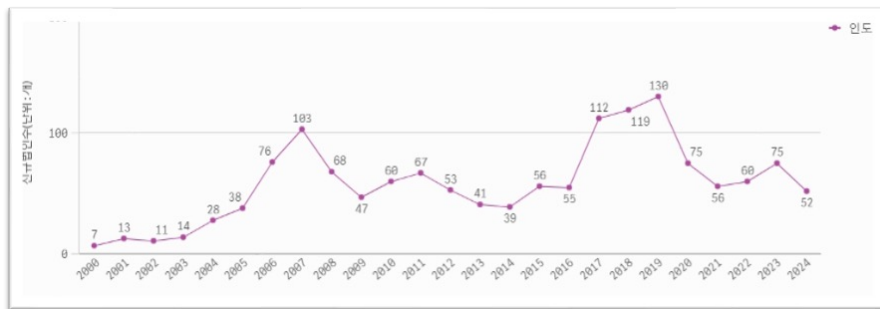
개방된 인도에서 장성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선 인도 관련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비즈니스 주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주체로서 먼저 손꼽히는 것이 회사(법인)이다. 본 비즈니스 가이드 제 2장(회사설립)에서는 어떻게 하여 인도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지 회사에 대한 기본 이해를 주고자 한다.\*

\* 한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통계는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인도에 직접투자한 금액 추이(단위: 백만 달러) >



< 200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인도에 직접 투자로 세워진 법인 숫자 >\*



\*주: 상기 두개의 통계 자료는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자료에서 옮겨온 것으로 2000년 이후 대 인도 직접 투자는 대단한 증가세나 쏠림 현상은 없지만 매년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통계에는 연락사무소, 지사 그리고 LLP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2-1 외국인투자 절차

인도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검토는 검토 항목이 적지 않으니 반드시 시간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라며 이제 신속한 현지 진출을 위한 회사 설립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왜냐면 검토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룬 요건이 언제든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전 검토 시점과 결정 그리고 진출 시행은 단속 없이 연속성으로 가지고 이어져야 한다.

현지 진출의 실질적인 시작은 법인과 같은 법적 주체의 종류를 결정하고 해당 현지 규정에 따라 이를 세우는 일이다. 2장 1절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진행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2-1-1. 입지 선정

‘인도에 진출하자!’라고 정해지면 그 것으로 인도 행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인도 어느 도시 어느 공항으로 갈 지가 정해져야 비로서 인도행을 예약할 수 있다.

해외기업이 한국에 진출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 98%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지만, 인도의 경우는 국제선 항공기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30개 공항이 있는 인도는 28개주 8개 연방직할지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주는 지향하는 산업과 경제활동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지리로도 대륙 인도에선 한 도시 거점에서 다른 중심지까지의 거리 역시 매우 멀다. 차로 한 두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항공이동을 해야 할 정도이다. 지역이 넓고 그만큼 각각의 지역이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 The 8 Union territories in India include Delhi, Jammu & Kashmir, Ladakh, Dadra and Nagar Haveli and Daman and Diu, Puducherry, Chandigarh. Union Territory is a special administrative sector in the Republic of India.

그러기에 인도 진출은 인도로 간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히 인도 어디로 갈 것인 지를 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입지 선정(location)이라고 한다. 입지 선정에는 진출 목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가운데 검토할 사항으로 인도에선 통관과 물류에서 비용 발생이 크기 때문에 진출 기업의 업무 과정에 원부자재 수입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 시장과의 거리, 협력 대상 주변 산업 유무, 진출 업종에 대한 주정부 정책의 우호적 분위기 및 지원 여부 그리고 진출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항목으로 평가한 입지 후보 중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곳부터 실제 진출이 가능한 지 확인을 하도록 한다.

일단 지인이 있는 곳에서 설립하고 이후 판단에 따라 다른 주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 법인 본점 주소를 주에서 주로 이동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무려 10여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과정 과정의 승인 여부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일에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선발해 놓은 임직원의 경우 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근무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인도의 경우는 심각하다. 가족과 분리하여 근무한다는 것이 아주 지역에 따라 현지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등 인도 여건에 비추어 매우 어렵기에 인적 조직을 아예 새롭게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

\* 인도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공식적으로 18가지가 있는데 이는 지역 언어로 분류된다. 같은 인도인이라고 하여도 지역이 다르면 상대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경우 언어적으로는 서로 외국인이다. 그런 까닭에 공용어인 영어로 소통이 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한국기업의 인도진출에 있어서는 대기업 동반진출이 많은 관계로 사실상 입지 선정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진출이라면 타밀나두(Tamil Nadu)주 내에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현대자동차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는 기준에서 정해질 것이다. 노이다(Noida)에 있는 삼성과 LG에 관계된 동반진출이라면 입지로는 노이다,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혹은 더 멀리 떨어진다고 하여도 인근 위성도시 파리다바드(Faridabad)와 가지아바드(Ghaziabad)가 전략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인도 내 국제선 출·도착이 이루어지고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



자료원: Wikimedia.org

진출 지역이 정해지면 공장부지 혹은 사무실과 같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계약 당사자 법적 신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곤란을 겪는다. 이에 가계약 상태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명의 전환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회사 설립 이전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설립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인도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본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설립된 이후 인도 현지 세금 규정에 맞게 납세자 번호 등록과 부가세 번호를 발급받아 이후 지출하는 비용을 인도 법인의 계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입지가 정해지면 신속히 회사설립 절차를 마치는 것이 여러 행정 절차에 유리하다. 그러기 위해선 2장 4절(회사 설립 관련 사전 체크 리스트)에서 언급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조건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 내부적 각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전에 해두어야 과정 중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이따금 인도에서 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일에 대해서 30일 내외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단계별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경우에 한정된 예외적 경우이다.



### 2-1-2. 회사 유형 결정

외국인(기업)이 인도 현지에 진출하여 비즈니스의 주체로 취할 수 있는 형태로는 인도 회사법(The Company Act 2013)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 (1)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2) 지사 (Branch Office)
- (3) 프로젝트 사무소 (Project Office)
- (4)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이들 중 어느 형태를 취할 것이냐는 선택은 진출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의 기간 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의 선택 여부는 매우 단순하다. 주로 건설공사나 IT 인프라 설치 등 중기 단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진출 그 사업으로만 관리하고자 한다면 다른 회사 형태를 고민할 필요 없다. 다만 프로젝트 수행이라도 이를 계기로 인도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할 전망이라면 프로젝트 수행과 청산이라는 절차를 반복하고 세금 조차도 다른 등록 법인에 비하여 거의 10% 정도 더 내게 되는 프로젝트 오피스를 고집하기 보다는 일반 등록 법인(회사)을 설립하여 첫 과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일반 기업으로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제반 영업까지도 준비하며 이를 확대할 수 있다.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치하지 않고도 과제 수행을 할 수 방법은 없을까? 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도 현지 기업과 업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진출하여 수행하려던 프로젝트를 현지 파트너 기업이 수행하고 해당 업무의 지원을 한국 본사에서 하는 방법이다. 인도에는 해외기업을 대신하여 이러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현지 파트너와 한국 본사는 B2B거래로 현지 파트너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한다. 이런 우회 방식으로 프로젝트 오피스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해당 프로젝트를 완결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제품과 서비스에서의 대외비에 속할 비밀(보안)사항이 파트너 기업을 통하여 외부에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직 자본금 송금 그리고 주주와 이사 구성을 하여야 하고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 투자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지는 인도 현지 법인을 설립은 망설여지는 가운데, 좀 단순한 형태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와 지사(支社)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연락 사무소엔 법인세 등 세금 납부가 없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연락사무소 업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진출목적하면서 연락 사무소를 세우려는 미련은 진즉이 떨쳐 내야 한다. 미련을 두어서는 후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락 사무소는 말 그대로 연락 업무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연락 전달 수령 업무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본사를 대신하는 영업 행위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합법적 선택이 아니다. 더구나 인도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반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가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연락 사무소 활동 기간 전체를 두고 임의로 산정한 누락 소득세와 과징금을 추징하려고 인도에 있는 금융 및 기타 자산에 대해 압류를 가하고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서 주재하는 한국인 직원의 신체 구속까지 시도할 수도 있다. 위반 고지와 세금 추징 고지는 결국 본사로 압박을 가해 어쩔 수 없어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고 사안이 마무리된 경우가 한국기업들 가운데 발생하곤 하였다. 연락이 아닌 영업 행위를 하면서도 연락 사무소 운영으로 피해가다가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가 개별 기업으로선 밝히기 낫 부끄러운 일이라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드물지 않다.

이 단계가 지나면 다시 고민은 지사(支社)로 할 지 아니면 현지 등록 법인(法人)을 설립할 지에 대한 선택이다. 지사 운영을 하다가 이후 법인을 설립한다는 단계적 선택도 논리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만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지를 살피고 선택 여부를 고민하여도 할 일이다. 인도 규정에 의하면 해외기업의 인도 지사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른 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원점으로 돌아온다.

본사의 최근 연도 재무제표가 적자이면 인도에서 지사 설립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도 내 지사 설립 제한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사가 신청 직전 회계연도 2년 결산 보고서에 적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적자이면 적자가 영업 수익의 부족으로 인한 적자가 아니라 시설 투자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여도 인도 중앙은행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접수 받은 인도 현지은행 창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신생 Start up의 경우 투자 받은 자본금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회사가 존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럴 경우 인도에 지사 설립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본사 적자 결산보고서가 있는 경우 인도에 지사 설립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본사가 적자 기업이 아닌 경우 인도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설립과 동시에 사업 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사와 등록 법인 사이의 법인 소득세 10% 정도 차이를 고려하고 또한 단기 진출이 아니고 중기 장기로 인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진출 초기에 지사가 아니라 등록 법인 설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도에 진출하여 제조나 소매 판매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등록 법인을 택하여야 한다. 지사는 제조와 소매업을 할 수 없다.

등록 법인을 선택한 경우에도 100% 지분을 한국이 갖는 '단독 진출'과 인도 현지 기업(인도인)과 합작하는 합작 법인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인도 파트너가 마케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 합작 법인을 선택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경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서 절대적 지위를 구사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주식 자본에서 76%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0.01%라도 과반수 이상이면 모든 회사 운영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인도에서는 특정 주요한 사항에서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의결 거부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 합작 법인을 할 경우, 의사결정과정과 권한 그리고 이윤 배당과 인사권한 등을 명료하게 문서로 규정한 합작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합작이든지 단독 직접투자이든지 인도 회사법에 따른 회사 등록의 형태를 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pvt)를 택하는 데, 합작 법인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파트너십(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를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다만 이 경우는 파트너 중 1인은 반드시 인도 시민권자(Indian citizen)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LLP 운영 중 자금 조달 방법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조업이나 큰 규모의 서비스업을 하기엔 부족한 형태이다. 진출 기업이 무역업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을 지향한다면 택할 수 있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진출하고자 하는 유형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내용이 정해진다. 이를 도중에 변경하면 이전 진행된 절차는 소용이 없고 다시 준비하여야 하나 진출 유형 결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직접 진출을 추진한 기업을 지켜보면, 회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일에 전문가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라 평소 알던 인도인 지인이나 전문가 외 다른 이들에게서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주먹구구로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용과 시간의 낭비는 물론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과 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은 인터넷 정보를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더라도 근거가 되는 법 조문 혹은 규정 공시를 직접 확인하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행하게도 인도의 법조문과 정부 공시(公示)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이 비 영어권인 타 국가에 비해 용이하다.



### 2-1-3. 회사 구조 결정 (주주 혹은 파트너 및 이사)

연락 사무소나 지사 설립에는 현지 대표 1인의 선정으로 설립 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에는 2인 이상 주주 구성이 필수적이며 이사 또한 2인 이상이 요구된다.\*

\* 인도 주식회사(비상장의 경우) 이사는 최소 2인, 최대 15명이다.

직접 진출 전략으로 등록 법인 설립을 선택하였으면, 이제는 법인의 주주 구성과 이사 구성 그리고 이사 중 누구를 대표(Managing Director)로 할 것인지를 내부 결정하여야 한다. 한국 본사의 100% 단독 투자 인도 법인 설립인 경우 일반적으로 본사 법인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상징적 의미의 1주 주식 혹은 1%를 대표이사 개인이나 배우자 또는 기타 임직원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주주 1인이 반드시 인도인이여야 한다는 시중 떠도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주가 인도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국적에 상관없으며\* 소재지가 인도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소재지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 다만 최근 인도와 국경분쟁이 있는 중국이나 파키스탄 국적인 경우는 허용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사 자격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파키스탄 국적이 아닌 경우 국적과 거주 지역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다만, 개정된 인도 회사법에는 설립 직전 연도에 인도에 최소 182일 이상 거주한 이(인도인 또는 거주 등록한 외국인)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인도 내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당사자가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외국인이 인도에 182일 이상 체류하려고 하면 관할 지역 관청(FRRO)에 외국인 등록(RP)을 하여야 한다.

182일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이 있는 이사(Resident Director)가 2인의 이사 중 최소 한 명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 이제 인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겐 쉽게 갖출 수 없는 조건이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선 부득이 이사 중 한 사람을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인이거나 거주 등록을 한 한국인 1인을 이사로 임시 차용하게 된다. 이 경우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시로 이사로 차용하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엄연하게 이사이기에 이사로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에 주의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주재원이 182일 거주 조건을 충족하여 해당 주재원이 거주 이사로 등재할 수 있는데 이때에 차용한 이사를 사임시키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용 당시에 자의에 의한 사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 절차에 따른 관련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한다.

아래의 표는 회사 설립 형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공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의 인적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 법인 설립에서 친분이 있는 인도인을 거주 이사로 등재하고 나중 이를 교체하려는 계획을 갖지만 현실에선 이 인도인 이사를 사임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품 요구로 곤란을 겪은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비공개회사의 최소 인적 구조〉

구분	최소 인원	최대 인원	특이사항
이사(Director)	2인	15인	주주 총회를 통해 이사 최대 정원 15인을 초과할 수 있음.
주주(Share Holder)	2인	200인	주주의 국적 제한은 없다. 즉 주주 중 인도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국 국적 주주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함.

#### 2-1-4. 자본금 결정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2015년 회사법이 부분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2루피(약 32원)의 자본금으로도 인도에서 주식회사 법인을 세울 수 있다.\*

\* 왜 1루피가 아니고 2루피인가? 그건 주주는 최소 2인이어야 하므로 액면가액 1루피 주식을 각 1주씩 갖는다면 최소 2루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과 실제로 납부된 자본금을 말하는 납입자본금(Paid Capital)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주식회사 자본금과 다르다. 수권자본금이란 납입할 수 있는 법인의 자본금 최대 한도를 표시한 것으로 이 한도 내에서 수시로 자본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 수권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증액 변경이 가능하다.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에서 특정 회사에 대한 정보 열람을 하면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알 수 있다.

설립 초기에 수권 자본금을 향후를 위해 최대로 올려 놓고 필요한 만큼 납부하여 납입자본금을 만들 수는 있으나 수권자본금 금액에 대해 적지 않은 인지세가 부과됨으로 무작정 금액을 높이는 것에는 신중한 결정이 따른다. 법인 등록 과정에서의 인지세는 수권자본금 금액 구간에 따라 그리고 지역(state)에 따라 다르다. 자본금 규모를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해선 이익 실현 이전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지 아니면 자본금은 명목상으로 하고 필요 비용은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법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 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인도의 화폐 단위는 기본이 Rupee(Rs)로 기호로는 (₹)로 사용하고, 단위는 루피보다 작은 단위로는 페사(paise)가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1루피는 100페사이다. 십 만 루피를 1 Lakh라 하고, 천 만 루피를 '1 Crore'라고 한다.



### 2-1-5. 설립 대행사 선정

인도 출장을 가서 인도 내에서의 회사(법인) 설립을 “직접”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는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설립에 따른 사전 허가, 자동 승인 등의 내용에 따라 인도 내 법률회사(Law Firm), 회계사(CA) 또는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서도 설립된다. 혹은 규정에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으니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고 위에 언급한 대행 기관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회사의 규모와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자격과 경험을 갖춘 대행회사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 때에 단순히 설립 대행비용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설립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진출 회사의 성격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택하여야 설립 이후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직접 투자하는 기업(기업인)이 한국에 있을 경우 이를 언어 장애 없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국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다소 상이한 양국의 서류 문화에 상충되지 않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행창구가 필요하다.

대행 비용은 최소 수 천 달러 수준에서 10,000 달러 이상인 로펌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사업개시 예정일에 임박하여 진출이 결정되어 빨리빨리 진행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20일 이내 완료한다는 일부 대행사의 ‘복선 있는’ 약속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된다. 이런 약속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청부터 허가까지 소요되는 날자만을 더한 것으로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맡기고 어쩔 수 없이 2~3개월을 기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투자자로서, 이사로서 그리고 대주주인 한국 측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작성과 번역,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 등을 거치는 데에는 한국 관계 기업 내에 전담자가 지정되어 전적으로 나서도 이를 완료하는 데에 거의 40일~60일이 소요된다. 회사 내 모든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 이사들 저마다 일정인 있어 한 시간에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인감 직인과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챙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 아포스티유 대행 업체가 많으나 대행료가 적지 않다. 거주지가 서울 수도권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이 절차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적지 않게 절감할 수 있다. 단, 오전 접수 그리고 오후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방문하여야 한다.

또 유념해야 할 것 하나는 종종 회사 설립을 위해 회사 관계자가 인도에서 체류하며 진행한다고 하지만 모든 신청 서류가 실제로 한국에서 발급받고 작성되고 인도에서 추가되는 서류는 대부분 e-Filing으로 이루어지기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굳이 담당자가 인도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법인 설립 이후 은행 계좌개설을 위해 법인의 이사 혹은 대표자가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해야 할 경우에 맞추어 인도에 입국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이다. 대행 기관을 통해 수수료 견적을 받을 때에는 과정 중 발생하는 제반 인지세, 서류 번역과 공증 수수료 그리고 DHL과 같은 해외특송 비용 등 절차상 지출되는 제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 별도 지불인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즉, 인도 법인 설립은 이를 책임지고 수행 해줄 대행업체와 본사에서 서류 준비에 대한 꼼꼼한 지원이 있어야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다.

## 2-2 회사유형별 설립 절차

### 2-2-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용어 그 자체 그대로 연락사무소는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사무소이다. 한국 본사와 인도 현지와의 연락 업무를 위해 거점으로 세우는 형태이다. 연락사무소 지위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시장조사 그리고 본사와 거래처 간의 기술 지원 등 소통의 역할이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연락사무소는 직간접적으로 인도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조건이어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 판매는 물론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재고관리 등도 금지되어 있다.\*

\* 이를 어기고 암암리에 본사와 영업과 매출에 관한 업무를 하였을 경우 그 흔적을 찾아 소급하여 막대한 세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실제로 한국기업의 연락사무소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세금 추징을 위해 관련 인원에게 출국금지명령이 동시에 내려짐. 이는 법원판례로도 입증된 사례이므로 피할 방법이 없기에 애초부터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혹시나 어쩌다 라는 안일함이 큰 곤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국 본사가 전년도 기준 순자산이 미화 5만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것과 흑자 재정을 보여주는 직전 3개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 3개년도 연속으로 재무제표에 흑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즉 어느 한 해라도 적자였으면 본사 외 다른 관계 회사의 지급 보증(Letter of Comport)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지만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단 표에서는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항목을 예시한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본 비즈니스 가이드 작성 시점에서의 내용이기때문에 실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고 선정한 대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재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양식 준비 (양식 제공은 인도, 작성은 한국)
2	준비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한국)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4	현지 은행의 1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로 서류 송부
5	RBI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이 발급됨**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Liaison Office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8	이후 은행계좌개설과 PAN발급 등 후속 조치

\* 한국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지점이 있으면 대부분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의 인도 지점이 설치된 도시는 New Delhi, Gurgaon, Mumbai, Pune, Chennai, Hyderabad, Ahmedabad 등인데 Gurgaon에 가장 많이 있다.

\*\* 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이 외 필요 서류로는 연락사무소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연락사무소 대표로 부임할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즉 연락사무소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장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3 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된다.

## 2-2-2.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프로젝트 오피스는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인프라 건설 공사 등 특정 목적을 일정기간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사업체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오피스의 사업활동 범위는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

프로젝트 오피스의 설치이후 운영 기간은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이다. 당초 신청된 기간 중 종료되지 않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하여서 프로젝트오피스는 인도 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 외국 기관이나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수출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 등 행위를 할 수는 있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일반 법인보다 매우 높아서 거의 40%에 달한다. 이를 납부한 후 나머지 이익금은 당연 한국 본사로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서는 인도 현지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 소득세율을 감안해야 하나 납부 후 한국으로 송금된 실제 이익금에 대해선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또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인도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조치이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지사와 연락사무소와 함께 인도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인도중앙은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Project Office 설립 절차 >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준비
2	준비된 서류의 아포스티유 발급*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4	현지은행의 1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로 서류 송부
5	RBI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이 발급됨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Project Office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주: 국내에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발급대행기관을 주로 사용한다. 아포스티유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 영사 확인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여전히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 내 발급처는 단 한 곳으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방문 접수):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 A 15층에 있음.



이 외 필요 서류로는 Project Office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 사무소 대표로 부임할 본인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연락사무소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사무소장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3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되는데 이러한 준비 서류 목록은 앞서 연락 사무소 설립과 같다.

#### < Project Office 등록증 사례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Registrar of companies, Delhi  
 4th Floor, IFCI Tower 61, New Delhi, Delhi, India, 110019

**Certificate for Establishment of Place of Business in India**

Foreign Company Registration Number: F06 Year : 2018

I hereby certify that Form No. FC-1 dated 13-06-2018 (DD-MM-YYYY) filed under section 380 of the Companies Act, 2013 notifying establishment of place of business in India with effect from 25-05-2018 by M/s "CORPORATION a Company originally incorporated in South Korea has been registered.

Given under my hand at New Delhi this Eighteenth day of June Two thousand eighteen.

  
**KAMAL HARJANI**  
 Registrar of Companies  
 RoC - Delhi

Mailing Address as per record available in Registrar of Companies office:

CORPORATION

S... .., Thaneerkulam Villag, Sido Industrial Estate,  
 Kakalur, Tiruvallur, Tamil Nadu, India, 602003

### 2-2-3. 지사(Branch Office)

지사(branch office)는 인도에서 제조업이나 소매업을 할 수 없다.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한 해외 사무소를 지사로 부른다. 이 사무소는 상품의 수출입\*, 관련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시장조사, 본사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의 수행, 본사를 대표하여 인도 내 기업과의 기술과 금융 협력 업무, 본사를 대리하여 판매 및 매입 대리점 역할, 본사 수출제품에 대한 유무상 After Service를 할 수 있다. 열거된 내용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IEC(Import & Export Code)를 발급받아야 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지사는 인도 내에서 제조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이렇게 취득된 부동산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지사가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 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허용돼 그 이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역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지사는 운영경비를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인도 내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본사로도 송금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인도와 맺은 조세 협약에 따라 이중 과세 방지에 대한 조치로 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 Branch Office 설립 자격조건 >

1	최근 수년 간의 본사 재무제표를 요구받는데, 직전 2개년도에 적자가 있으면 지사설립 신청조차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큼.
2	재무제표 상 전년도 순자산이 최소 미화 10만 달러 이상
3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설립이 허가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신청한 회사의 상위 지주회사나 특수 관계 자회사의 지급 책임 확인서(Letter of Comport)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위 1,2항의 서류를 요구를 받을 수 있음.



### < Branch Office 설립 절차 >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양식 준비 (양식 제공은 인도, 작성은 한국)
2	준비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한국)*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4	현지 은행의 1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로 서류 송부
5	RBI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이 발급됨***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Branch Office 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8	이후 은행계좌개설과 PAN발급 등 후속 조치

주: (\*1)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방문 접수):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 A 15층에 발급기관이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지점이 있으면 대부분 이를 이용하고 있다.

(\*2) 한국계 은행의 인도 지점이 설치된 도시는 New Delhi, Gurgaon, Mumbai, Pune, Chennai, Hyderabad, Ahmedabad 등인데 Gurgaon에 가장 많이 있다.

(\*3) 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이 외 필요 서류로는 지사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지사 대표로 부임할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지사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지사 대표의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5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되는데 이러한 준비 서류 목록은 앞서 연락사무소 설립과 같다. 현재 인도 내에 설립된 한국기업의 지사(支社)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중은행 지점이다.

<아포스티유 신청서 양식>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아포스티유( apostill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 일부 공문서로 한정함]

### 아포스티유(Apostille) /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 Request for Apostille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구호'를 하되, 아래 '공용란'은 신청인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양쪽)

신청문서정보 Document Information	제출 대상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 ] 아포스티유 / [ ] 본부영사확인서 Apostille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문서의 명칭 Document Label		
	문서발급기관 Office of Origin		
	기관장 성명 Head of Office		

구분 Case Type	[ ] 본인 Individual	[ ] 대리인 Agent	[ ] 회사 Company	[ ] 기타 Others
-----------------	----------------------	------------------	-------------------	------------------

신청인 또는 위원인 Applicant or Principal	성명/상호명 Name/Company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Date of Birth/Business Registration Number	
	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Mobile/E-mail	

대리인 Agent	성명/상호명 Name/Company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Date of Birth/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신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Applicant	[ ] 가족 또는 지인 Family or Acquaintance [ ] 대행사 Agency ( ) [ ] 기타 Others ( )
	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Mobile/E-mail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YYYY/MM/DD)

신청인: (서명)  
Applicant: (signature)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 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공문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대리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

공용란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 여부	[ ] 발급 [ ] 불허		
발급일		발급번호	

이를 접수 받고 이를 발급해주는 곳은 한국에는 서울에 한 곳이다.



#### 2-2-4. 현지법인

인도에서 인도 회사법에 의해 등록 법인을 수립하면 세법에선 이전 '인도 회사'이다.

현지엔 등록법인을 설립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하여 상장을 전제로 한 공개회사(Public Company)을 택하는 경우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를 90% 택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유한책임파트너십(LLP)를 선택하는 추세다. 여기서는 비공개회사를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비공개 법인을 설립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설립 조건을 검토하여 사전 결정을 해주어야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다.

\* 현대자동차가 2024년 10월에 인도 증시에 상장하였다. 상장을 위해선 public limited 로 회사 성격을 변경해야 한다.

법인 설립을 하는 데에는 미리 결정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법인 설립 신고 주소, 이사진 구성, 주주 구성, 회사 이름 결정, 자본금 규모 결정을 한 상태에서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름 주소, 이사 그리고 주주의 구성에 대해서는 2장 1절 3항(회사의 구조 결정)과 2장 1절 4항(자본금)에서 설명한 바를 참고할 수 있다. 회사의 이름은 인도 기업부 웹사이트 'Check Company Name'를\* 통해서 직접 중복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법인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반려되고 유사한 발음이 될 경우에도 반려 가능성이 크다. 같은 본사 소속일 경우에 유사한 이름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먼저 등록된 회사의 동의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 회사 이름을 정하기 위해선 최대 6개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최소 3개 정도의 회사이름을 우선순위와 함께 사전에 검토하여야 과정 중 이로 인한 절차 지연이 없다. 비공개법인을 설립하면 이름 끝에 Private Limited 혹은 PVT LTD라는 약어가 붙게 된다.

\* [www.mca.gov.in](http://www.mca.gov.in) 중(中) <http://www.mca.gov.in/mcafoportal/showCheckCompanyName.do>에서 확인 가능하다.

##### <법인 회사 설립 절차>

순서	내용
1	전자서명인증서(DSC,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등록
3	법인 이름 사전 등록(RIN, Reserve Unique Name)
4	SRN(Service Request Number) 발행
5	법인 설립 신청 서류 제출
6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국내 주거래 은행), 설립 이후에는 사후관리 신고 주의*
7	자본금 인지세 납입
8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주: 개인이나 회사는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최초 한 시중은행에서 시작하면 이후로는 동일 은행, 동일 지점에서 계속 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절차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사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서(DSC)는 한국 공동인증서와 유사한 것으로 인도 정보통신부 산하 CCA(Controller of Certifying Authorities)에서 인정한 6개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www.safescrypt.com](http://www.safescrypt.com), [www.nic.in](http://www.nic.in), [www.idrbtca.org.in](http://www.idrbtca.org.in), [www.tcs-ca.tcs.co.in](http://www.tcs-ca.tcs.co.in), [www.ncodesolutions.com](http://www.ncodesolutions.com), [www.e-Mudhra.com](http://www.e-Mudhra.com) 등이 선정기관이다. 발급할 때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하는데 특정 문장을 낭독하게 하고 비디오 녹화를 하여 인증하게 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DSC 신청서, 이사의

거주지 증명(영문주민등록등본), 이사의 여권 사본, 이사의 여권용 사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정상적이라면 4~7일 정도 필요하다.

\* 이러한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굳이 인도로 출장 가야 할 필요는 없다.

DSC는 등록이 완료되면 USB에 저장되어 발급되는데 이는 법인설립 서류를 제출할 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인 설립 이후 받아야 할 제반 인허가 및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이사의 서명이나 확인이 필요한 때마다 사용되는 것으로 잘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USB를 누가 보관할 것이냐를 두고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각각 보관할 수도 있지만 이사 중 누가 인도 법인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기에 보안이 확실할 수 있는 보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 이름 사전 등록은 인도정부가 법인 설립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RUN: Reserve Unique Name'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과거처럼 많은 서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법인 이름을 사전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번 신청에서 2개의 법인 이름 후보를 제시할 수 있는데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법인 이름이 승인되면 SRN이\* 주어지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20일 이내에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면 법인 이름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SRN: Service Request Number

법인 이름을 임의로 지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반려된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Samsung Wedding Service는 불가능하다. 인도에 진출한 삼성 기업이 '삼성'을 브랜드로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욕설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Board, Commission, Authority, Undertaking, National, Union, Central, Federal, Republic, President, Nation, Governor, State, India, Bharat, Minister, Financial, Forest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설립 신청서 제출을 간소화하려는 인도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 이 가이드 이후에도 지금의 설명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한 노력으로 법인 이름 신청서, 법인 주소 신고서, 이사(Director) 등록번호(DIN)신청서, 법인 등록 신청서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을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한 시스템이 SPICe이다.\* 뿐만 아니라 PAN(소득세 번호)과 TAN(원천공제세번호)을 법인 설립 이후 별도로 해야 했지만 이제 SPICe 제출시 함께 할 수 있어서 시간 소요가 대폭 축소되었다. SPICe 제출시 다음 표에서 열거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 SPICe: Simplified Proforma for Incorporating Company Electronically

#### <SPICe 제출 서류>

1	이사 및 주주*의 거주지 증명서와 신분증
2	DIR-2 (이사 등기 동의서)
3	이사 및 주주의 확약서 (Affidavit & Declaration)
4	MOA와 AOA (인도 법인 정관)
5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존을 증명할 전기세 또는 관리비 납부 영수증**
6	기타

주: (\*1) 주주가 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결의서, 사업자 등록증, 정관 그리고 법인 대리인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설립단계에서 아직 입주하지 않아 미비할 경우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된다.





MOA(Memorandum of Association)는 법인의 사업목적, 활동 범주, 구조 등 법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문서이고 AOA(Articles of Association)은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인 내부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문건이다. 이들 서류 각각 마지막 페이지에는 Subscriber Sheet라고 주주 정보와 지분 관계를 기재한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이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청서에 작성된 수권 자본금 (Authorized Capita)에 따라 인지세가 계산되는데 이를 납부하여야 SPICe신청서가 제출된다. 자본금에 따른 인지세는 인도 기업부 웹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하여 준비할 수 있다. SPICe제출 후 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of Incorporation)과 DIN, PAN그리고 TAN이 발급된다. 인도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법인명과 주소, CIN(사업자등록번호), PAN 그리고 TAN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법인 설립 절차와 소요시간 예시〉

순서	절차	담당기관	소요 기간
1	전자 서명 발급	MCA 지정 창구	5일
2	이사등록번호(DIN)	MCA	10일
3	법인 이름 신청	ROC	10 일
4	정관 작성 및 등기 (MOA & AOA)	인도 법원	7일
5	법인설립신청서류 제출	ROC	3일
6	자본금인지세 납부	ROC지정은행	2일
7	법인설립증명서 취득	ROC	10일

이러한 프로세스로만 본다면, 모든 서류가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20일 전후이다. 그러나 이는 과정 중 설명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의 소요 시간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충실히 한다면 총 60~90일 정도 걸리는 것을 전제로 진출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진행 과정이 전산화 되어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인도 정부 사이트가 점검 혹은 에러로 인한 보수가 기간 중 있으면 이를 대체하는 수단이 없어 일주일이지나도 얼마든지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인도 사업 절차에는 정확하게 맞물려가는 기간 계산을 염두에 두고 전개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 시간 지연에 대한 충분한 여유를 각 단계별로 세워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인도 사업 운영 방식이다.

<사업자 등록증 사례>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Central Registration Centr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Pursuant to sub-section (2) of section 7 of the Companies Act, 2013 (18 of 2013) and rule 18 of the Companies (Incorporation) Rules, 2014]


I hereby certify that **PRIVATE LIMITED** is incorporated on this Thirteenth day of February Two thousand nineteen under the Companies Act, 2013 (18 of 2013) and that the company is limited by shares.

The Corporate Identity Number of the company is **U2029**

The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of the company is **AAE** **IF\***

The Tax Deduction and Collection Account Number (TAN) of the company is **CH** **IA\***

Given under my hand at Manesar this Thirteenth day of February Two thousand nineteen .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ALOK TANDON**  
Deputy Registrar Of Companies  
For and on behalf of the Jurisdictional Registrar of Companies  
Registrar of Companies  
Central Registration Centre

Disclaimer: This certificate only evidences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on the basis of documents and declarations of the applicant(s). This certificate is neither a license nor permission to conduct business or solicit deposits or funds from public. Permission of sector regulator is necessary wherever required. Registration status and other details of the company can be verified on [www.mca.gov.in](http://www.mca.gov.in)

---

Mailing Address as per record available in Registrar of Companies office:

..... **PRIVATE LIMITED**  
LEVEL 2, AGNITO TECH PARK, MANESAR INDUSTRIAL AREA,  
..... t, CHENNAI, Chennai, Tamil Nadu, India, 600096



\* as issued by the Income Tax Department



## 2-3 설립 이후 주요 절차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회사를 운영함에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와 인허가 및 등록을 마쳐야 사후 문제가 없다. 공통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는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 공문 양식(Letterhead Form)을 마련한다. 법인 사인 스탬프도 필요하다. 회사 현판을 설치하여야 이후 증빙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감사를 회사 규모에 적합하게 임명하고 자본금이 5천 만 루피 이상일 경우는 회사 총무비서(Company Secretary)를 관련 협회에 등록된 인원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인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주요 절차를 본 2장3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2-3-1. 1회 이사회 개최

회사(법인) 설립 이후, 30일 이내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장 선출,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확인을 하고 법인계좌 개설도 승인하도록 한다. 법인 감사도 임명하여야 하는데 외부 회계사무인(CA: Chartered Account)이 감사를 겸한다. 물론 이러한 이사회는 물리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류상 갖춘다는 의미가 더 크다.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할 사유가 법인 운영 중 적지 않다. 이 경우 이사회를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정식으로 개최하려고 한다면 이사회 개최 정족수 그리고 의결 정족수를 감안하여 2인 이사 체제보다는 3인 이사 체제가 더 효과적이다.

### 2-3-2. 법인 계좌 개설

인도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한국에서 하듯이 생각하면 전혀 오산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적지 않은 서류와 불친절을 생각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엄청난 특권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이전 이런 고민은 많이 해결되었다. 인도에 한국계 은행이 상당수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갓 진출한 한국기업의 처지를 나름 이해해주는 한국계 은행에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

법인 계좌 개설에서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다. 한국계 은행이라도 법인 사무실의 존재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출 초기에 법인 사무실을 실제로 개설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타인의 사무실이나 설립 대행사의 주소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엔 사무실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자금세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에 취하는 은행의 자구수단이다. 은행의 사무실 실사에 대한 이해가 공유될 수 있는 것은 한국 본사의 평판이 중요하기에 가급적이면 본사 주거래 은행의 인도 지점을 계좌 개설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곤 한다. 서류 준비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니 개설 은행을 정하고 해당 창구에 이를 문의하도록 한다.

참고로 2024년 현재 인도에 20여 개 지점으로 진출한 한국계 시중은행이 있어 처음 자본금 계좌 신청에는 이들 은행 지점을 이용하는 것이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이 Mumbai에 2017년에 지점을 개설한 이후 현재 Gurgaon, Ahmedabad, Chennai 그리고 Pune에 지점을 열었다.\* 신한은행 역시 인도 내 6개 도시에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하나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국민과 농협 등이 1~2개 지점을 개설하였다.

\* 2024년 9월에 아메다바드와 푸네에서 지점을 열었다.

<2024년 9월 12일, 우리은행 Pune지점 개설 기념식>



### 2-3-3. 자본금 송금 및 해외투자 신고

인도 주식회사 설립엔 자본금 최소 규정이 없다. 이는 외국인(기업) 직접 투자에도 적용되어 이론적으로는 2루피(한화 약 32원)의 자본금으로 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은행 계좌가 준비되면 주주들은 정해진 자본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한다.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6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설정된 수권자본금 모두를 송금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 해외로 자본금을 송금할 때부터 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비로서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 후에는 1장 1절 4항에서 언급한 대로 사후신고까지 차질 없이 마쳐야 한다. 자본금 송금에서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승인이 나지만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본금 송금할 시점에 세금을 체납한 기업이나 개인 등 신용관리 대상자는 부적격 투자자로 분류되어 해외직접투자 송금을 할 수 없다.

\* 은행에 제출하는 투자자의 주민등록 등본과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3일 이내 발급 서류여야 한다.

### 2-3-4. 자본금 신고(인도 RBI에 신고)\*

\*RBI: Reserve Bank of India로 인도 중앙은행이고 국고 은행이다. 한국의 한국은행과 동일하다.

법인 계좌로 자본금이 도착하면 전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신고를 하게 된다. 자본금 1차 신고 기한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60일이다. 기한은 넘기면 비록 소액이지만 과태료가 발생한다. 1차 신고는 자본금 수취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은행에서 착오나 누락 없이 신고가 되도록 확인하고 그 결과를 챙겨야 한다. 2차 신고는 자본금 도착 후 정관 내용대로 주식을 발행한 후 2차 신고를 하는데 주식 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 한다. 2차 신고는 회사에서 직접 FC-GPR이라는 온라인 신청서로 RBI에 제출하게 된다.



### 2-3-5. 상품서비스세(GST) 등록

모든 거래에 필수적인 GST(Goods and Service Tax) 등록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인도 은행 계좌가 필수적이다. 신청은 GST웹사이트([www.gst.gov.in](http://www.gst.gov.in))에서 가능하다. 실제로는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한다. GST 등록은 사업장이 소재한 주(state)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사가 뉴델리에 있고 지사가 첸나이에 있다면 뉴델리와 첸나이에 각각 GST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같은 주소의 사업장일지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하고 있다면 각각 나누어서 GST등록을 해야 한다. 참고로 연 매출 40 Lakhs (한화 약 6천 4백 만 원)천 만원 이하의 마이크로 기업은 GST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직접 투자진출 기업인 경우는 이런 초소형 비즈니스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으니 모든 진출 법인은 GST의무가 있다고 여겨야 한다.

< private limited의 GST >

**Government of India**  
**Form GST REG-06**  
*[See Rule 10(1)]*

**Registration Certificate**

Registration Number : 07AAHCK1631P1Z9

1.	Legal Name	KINEXIN CONVENTION MANAGEMENT PRIVATE			
2.	Trade Name, if any	KINEXIN CONVENTION MANAGEMENT PRIVATE			
3.	Constitution of Business	Private Limited Company			
4.	Address of Principal Place of Business	LEVEL 1-2, CRESCENT BUILDING, LADO SARAI, MEHRAULI, South Delhi, Delhi, 110030			
5.	Date of Liability				
6.	Period of Validity	From	31/07/2018	To	NA
7.	Type of Registration	Regular			
8.	Particulars of Approving Authority				
Signature 유효한지 알 수 없음 Digitally signed by KINEXIN CONVENTION MANAGEMENT PRIVATE LIMITED AND SERVICES TAX NETWORK 1 Date: 2018.07.31 09:16:18 IST					
Name					
Designation					
Jurisdictional Office					
9.	Date of issue of Certificate	31/07/2018			
Note: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is required to be prominently displayed at all places of business in the State.					

This is a system generated digitally signed Registration Certificate issued based on the deemed approval of application on 31/07/2018 .

## 2-3-6. 사업개시 신고

법인 설립 이후 180일 이내에 자본금이 인도 법인 계좌로 입금, 도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도 기업부(MIC)에 사업이 개시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INC-20A라 불리는 사업개시 신고서와 자본금 도착을 보여주는 은행 계좌 내역서이다. 이 신고에는 자본금 액수에 따라 소액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는 비록 몇 천 원에 불과한 소액인데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는 적지 않다. 법인에게 50,000루피(한화 8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청구되며 등기 이사 각각에는 하루 지연에 무려 1,000루피 그리고 최대 100,000루피라는 과태료가 떨어진다.\* 이 외에 법인이 납부해야 될 인지세도 별금 성격으로 지연 일수에 따라 2배에서 12배까지 증액된다.

\* 이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000 루피이다. 10일 이상 지연되어도 과태료 최고액은 100,000만 루피이다.

Nominal Share Capital	Applicable Fees in (Rs)
Up to 30 days	2 times of normal fees
Above 30 but not exceeding 60 days	4 times of normal fees
Above 60 days but not exceeding 90 days	6 times of normal fees
Above 90 days but not exceeding 180 days	10 times of normal fees
Above 180 days	12 times of normal fees

위 표는 회사의 자본금 도착과 함께 180일 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데 이를 넘기게 되면 자본금 규모에 따라 내야 하는 인지세에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180일 이상 지연하였다면 내야 할 인지세의 12배를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자본금이 천만 루피(한화 약 1억 6천만원)의 신고를 180일 이상 지연하였다면 과태료는 원래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 600루피의 12배인 7,200루피가 과태료로 발생하게 된다.

회사(법인)을 설립하고 난 이후 첫 자본금을 송금하고 나면 이에 즉시로 사업개시 신고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본금이 나누어져서 입금되어도 전부가 입금되길 기다릴 필요는 없다. 첫 자본금 입금을 근거로 신고를 진행하도록 한다.



### 2-3-7. 수출입 코드(IEC) 발급

수출입 코드(IEC: import export code)는 인도에서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라이선스이다. 전문적으로 대외 무역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한국에서나 베트남 등지에서 원부자재 공급이 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사용의 물품 수입을 위해서 수출입 코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이는 DGFT(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라는 중앙정부 부서에서 발급하는데 신청 또한 웹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IEC신청서, 법인 PAN 카드 그리고 법인 계좌 정보와 Cancelled 표시한 수표(은행 발행 수표 책)사본이다. 이를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유효하다.

\* 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www.dgft.gov.in](http://www.dgft.gov.in)

< 취소(Cancelled) 체크 예시 >



주: 법인 설립이후 인도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수령하게 되는 은행 Cheque book에서 한 장을 사용하여 'Cancelled' 체크(수표)로 만들어 이를 법인실체를 증명하는 증거로 제출한다.

수출입코드(IEC)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니 절대적으로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외화가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 은행 창구에서 회사의 IEC를 요구한다. 반대로 해외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려고 할 때에도 이를 요구를 받는다.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 통관 수속을 하게 될 때에도 이 정보가 필요하다. 반대로 인도에서 화물을 해외로 보내려고 할 때에도 IEC가 요구되니 이는 업무 상 필수조건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 2-3-8. 기타

이 외에도 근로자 사회보장 제도로 근로자 연금(EPF)과 근로자 주정부 보험(ESI) 등 인도 등록 회사에 직원 채용 등으로 고용인이 발생하면서 해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인도엔 이러한 필수 행정 사무가 유별나게 많은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직원을 1인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시작되고 인원이 늘게 되면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인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복지관련 행정 신고가 발생한다.

## 2-3-9. 한국 내에서 해외투자 사후 관리 (외화 증권 취득보고)

투자자들의 국적이 한국이고 투자금의 송금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자금 송금 승인절차를 거쳐서 해외직접 투자 주거래 지점을 등록하여 해외에 직접 투자로 자본금 등을 송금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송금한 해당 지점을 통하여 해외투자 사후관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고발과 조치로 형사 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는 다음에 예시한 외화증권 취득보고서와 함께 회사설립 내용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등과 같은 공공기관 발행 증빙서류 그리고 해외투자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내용을 나타내는 증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현지 법령이나 여건 상 증권 발행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자 확인서 등 출자 내용을 증빙하는 문건을 첨부하여 사후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 <외화증권취득 보고서 양식>

[지침서식 제 9-10 호]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신고일자: 2024년 9월 12일, 신고번호: )

■ 외화증권    □ 외화채권

---

1. 투자자 현황 (원투자명: 김용기    등록번호: 010-5433-5762)

성명 또는 성명	김용기	연락처	571218-1008015
소재지(주소)	서울 중구 안국로 175 111 동 2001호		
투자자 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		
신고일자		신고번호	

---

2. 현지법인 현황

법인명	BIN-INSDO INDIA PVT LTD			
소재지(주소)	LG-4, Parka Central Market I.P Extension, Patpar Ganj, Delhi 110092			
법인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해외자본개입사업		인가자본금	INR 3,30,00,000
투자형태유지	<input type="checkbox"/> 단독투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투자 <input type="checkbox"/> 합작투자(한국측 투자비율: %)			
설립일	2014.11.26	영양계시(연장)일	연산일 이내 연장	

주1 "외화증권"이란 해외 증권시장에 등록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전자투자"의 해외 증권투자자 확인제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

3. 외화증권 취득 내용

증권취득일(자본금출자일)	2024.09.12	증권종류	보통주
액면가액합계	INR3,00,000	취득가액합계	INR3,00,000
증권발행여부	<input type="checkbox"/> 증권발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권미발행		

---

4. 외화증권 취득 내용

증권취득일		대부금액	
이자율		대부기간	
증권회수방법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회수 <input type="checkbox"/> 분할회수( )		

【첨부서류】

- 투자금액(대여자금) 납입(채권)후 6월 이내에 제출할 것

1. 외화증권취득의 경우

가. 현지법인 설립인 경우


- 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서류
- 증권 사본(※증권발행이 없는 경우 출자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자증명서 등))

나. 개인기업 영위인 경우

- 사업영위사실을 입증(당해 원외출자 이행사실 포함)할 수 있는 공증서류

2. 외화채권 취득인 경우(대부투자)

- 대부 상대방의 대부금 영수증영서 또는 약속어음







## 2-4 회사설립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

앞서 각 장과 절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검토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출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이 세워질 수 있으며 회사 내부에서도 전사적으로 인도진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회사설립 사전 체크리스트〉

항목	Check Point
인도시장 경쟁력	자사의 제품(서비스)의 인도 시장 조건 하에서 경쟁력 여부를 분석하여 진출의 타당성 검토한 후 진출 여부와 진출 형태(단독, 합작, 기술이전 등)를 결정하여야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손실을 피할 수 있음.
입지(Location)	진출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목적지를 확인하여 입지여건 분석, 산업 허가, 인력 상황, 임금수준, Incentive여부, 주변지원산업, 물류, 성장성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회사 구조	회사 이름 (무조건적으로 본사 이름을 사용하는 것 외 법인의 경우 주주 등 지배관계를 고려하여 본사와 인도 법인 간 이전가격 등 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회사이름을 정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 기업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사와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와 납부 계획
	투자 주체 한국 본사 내부 여건 (재무제표 현황 등)
	주재 인원 선정과 인도 파견 사전 교육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 관계 설정 (지분관계 이외 경영 독립성 여부, Localization 범위)

**2025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 03 회사 운영

3-1. 세무

3-2. 회계

3-3. 금융

3-4. 노무

3-5. 법무

3-6. 관세 및 통관

3-7. 인증제도

3-8. 물류

3-9. 지식재산권

3-10. CSR 및 ESG 경영

## 03 회사운영



### 3-1 세무

#### 3-1-1. 조세체제

##### 3-1-1-1. 세목의 구성

인도의 조세는 부과권한의 행사 주체에 따라 연방정부세(Central Tax)와 주정부세(State Tax)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체가 부과하는 주요 세목은 다음과 같다.

##### <인도의 주요 세목 구성>

연방정부세	직접세	소득세 (Income Tax)
	간접세	관세 (Customs duty)
		연방 상품·서비스세 (Central Good & Service tax, 'CGST')
		통합 상품·서비스세 (Integrated Good & Service tax, 'IGST')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
주정부세	직접세	인지세 (Stamp duty)
		재산세 (Property Tax)
	간접세	지출세 (Expenditure Tax)
		주 상품·서비스세 (State Good & Service Tax, 'SGST')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인도는 2017년 여러 간접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한 GST제도를 도입하였다. GST제도 도입 이전 인도의 간접세는 주 정부 별로 각각 다른 세목과 세율의 제정으로 인해 주 간 재화 이동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되는 등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GST제도의 도입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과하던 간접세는 GST로 통합되어 단일의 세율로 부과하게 되었으며 적용된 GST세율은 50:50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세수에 귀속되고 주간 거래에는 중앙정부가 IGST를 부과한 후 각 주에 배분한다.

다만, 일부 재화와 상품은 아직까지 GST제도로 통합되지 않고 기존의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류 (Alcohol for human consumption)와 석유제품 (Petroleum products)이 이에 해당하는데 동 재화의 생산시설 반출에는 기존의 간접세인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거 상속재산의 7.5% ~ 40%의 세율로 과세되었으나 1985년 폐지되었으며 현재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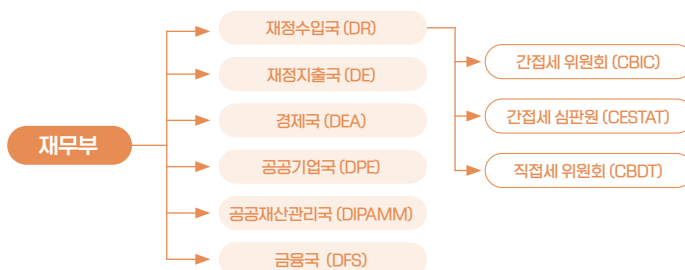
증여세법은 1998년 폐지되었으나 자산의 무상이전은 수증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족 간의 증여와 가족 이외의 자로부터 5만루피 이하의 증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3-1-1-2. 인도 과세당국의 구조

인도의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는 재정지출국(Department of Expenditure), 경제국(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공공기업국(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s), 공재산관리국(Department of Investment and Public Asset Management), 금융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Department의 장은 차관이다.

재무부의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의 직접세 분야는 직접세위원회(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가, 간접세 분야는 간접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의 장을 'Chairperson'으로 위원들은 'Member'라고 한다

〈재무부와 과세당국(간접세위원회, 직접세위원회)의 관계〉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에는 간접세심판원 (CESTAT, Custom, Excise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 또한 산하조직으로 포함되어 있다. 델리에 본부를 그리고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루루, 아메다바드에 재판소(Bench)를 두고 있다. 반면에 직접세심판원 (ITAT, Income Tax of Appellate Tribunal)은 법무부 (Ministry of Law and Justice) 산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 전역 27개 도시에 재판소(Bench)를 두고 있다.

## 3-1-2. 소득세

### 3-1-2-1. 인도의 소득세 특징

한국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인도의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모두 다루면서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는 차이가 있는데 매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연방예산과 함께 매년 제출되는 Finance Bill에 포함되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세에는 부가금 (Surcharge)과 목적세인 건강·교육세 (Health and Education Cess)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 3-1-2-2.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1)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 (Person)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다음의 7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개인 (individual), 힌두 비분리 가족 (Hindu undivided family)\*, 기업 (company), 유사 파트너십 (firm), 조합 (association of persons or a body of individuals), 지방당국 (local authority), 기타 법률상의 납세자 (Every artificial juridical person)

\* 힌두사회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상 파트너십은 제 3자간에 계약관계로 존재하는 것임에 비하여 이는 혈통상으로 묶인 것임. 우리나라의 종중과 유사한 개념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주요국의 조세제도 인도편)

#### (2) 거주자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범위

조세의 부담범위는 거주자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인도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크게 거주자 (Resident in India)와 비거주자 (Non-resident in India)로 구분된다. 이에 더하여 거주자인 개인과 힌두 비분리 가족은 정규거주자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In India)와 비정규거주자 (Resi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 in India)로 세분화된다.

거주자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거주자 별 납세의무 범위〉

구분	정규거주자	비정규거주자	비거주자
인도국내소득 (Indian Income)	과세	과세	과세
해외소득 (Foreign Income)	과세	1) 인도에서 설립되었거나 2) 인도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 과세	과세제외



### (3) 개인 (Individual)의 거주자 판정

개인이 1) 과세연도 (Previous year)동안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182일 이상이거나 2) 과세연도 중 인도에 60일 이상을 체류하고 그 직전 4개년 동안 인도에 365일 이상을 체류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된다.

상기 2가지 요건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자로 판정된 개인이 아래의 추가 요건 두가지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규거주자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in India)로 판정한다.

- ① 과거 10년 중 2년 이상을 인도에 체류한 경우
- ② 과거 7년 중 730일 이상을 인도에 체류한 경우

### (4) 기업의 거주자 판정

인도 회사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인도기업은 항상 거주자로 판정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1) 총 매출액 50 Crore 를 초과하고 2)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장소 전체 또는 일부를 인도에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한다. 외국기업은 PoEM(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est를 통하여 매년 거주자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 (5) 조합 및 기타 법률상 납세의무자의 거주자 판정

조합 등의 경우 사업의 통제와 경영(Control and Management)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된다. 통제와 경영은 단순히 통제와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상태가 아닌 실제적인 통제를 의미한다.

### 3-1-2-3. 진출형태에 따른 과세 상 취급

인도 진출형태는 크게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지사 (Branch Office), 프로젝트사무소 (Project Office) 또는 현지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업활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현지 시장조사, 홍보활동 및 업무 상 의사소통 등의 제한적 활동만이 허용된다. 연락사무소가 허용된 활동범위내에서만 운영된다면 인도세법에 따른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사와 프로젝트사무소는 주로 수출입, 연구활동 및 건설 등 특정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되는데 두 형태 모두 인도 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발생된 수익은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35%)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인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은 인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에게 요구되는 세법 상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3-1-2-4. 소득세의 과세기간

인도의 과세기간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년을 기본단위로 한다. 다만, 회계기간의 시작일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인도의 회계기간은 일반적으로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데, 동 12개월의 기간을 회계연도 (Financial year)라고 한다.

#### (1) 사업연도 (Previous year)와 과세연도 (Assessment Year)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대상기간을 인도세법 목적 상 사업연도 (Previous year)라고 한다. 12개월의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익년의 12개월의 기간을 과세연도 (Assessment year)라고 한다

#### (2) 사업연도(Previous year)와 회계기간(Financial year)이 불일치할 경우 과세소득 계산

인도소득세법 목적 상, 모든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소득은 회계연도(Financial year, 4월 1일 ~ 익년 3월 31일)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연도를 모회사 기준(12월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을 시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23.04.01 ~ 2024.03.31의 사업연도(Previous year 2023-24) 동안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소득은 2024.04.01 ~ 2025.03.31의 과세연도(Assessment year 2024-25)에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을 회계기간(Financial year)으로 정하여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인도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Financial year가 3월말이 아닌 경우 과세소득 계산 >

회계기간	회계이익		
	1월 ~ 3월	4월 ~ 12월	합계
2023.01.01~2023.12.31	20,000	60,000	80,000
2024.01.01~2024.12.31	54,000	56,000	110,000
2025.01.01~2025.12.31	38,000	32,000	70,000

#### < 기간 별 과세대상 소득 >

사업연도	과세연도	과세대상 소득
2023-24	2024-25	114,000 (60,000 + 54,000)
2024-25	2025-26	94,000(56,000 + 38,000)

#### (3)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

신설법인 또는 신규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첫번째 사업연도는 사업개시일 또는 소득이 발생한 날에 시작하여 바로 직후에 도래하는 3월 31일로 종료되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법인과 신규사업자의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는 4월 1일 시작하여 3월 31로 종료되며 항상 12개월의 기간으로 구성된다.





### 3-1-2-5.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PAN은 인도과세당국이 납세자별로 발급하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10자리 고유번호를 말한다. PAN은 세무신고 뿐 아니라 은행계좌의 개설, 부동산 거래 등 인도 내 경제활동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다.

PAN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고율의 TDS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이후에도 연차 소득세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PAN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PAN 발급을 위해서는 인도국민의 경우 서식 49A와 (외국인의 경우 49AA) 신분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한다. 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주소증명의 영문번역, 공증 뿐 아니라 대리인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의 영문공증 등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 3-1-2-6. 소득세의 계산구조

소득세는 각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에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소득세에는 부가금인 Surcharge와 목적세 Cess가 추가로 부과된다.

#### < 소득세의 계산 흐름 >



### 3-1-2-7. 과세대상 소득

#### (1)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아래의 5가지로 분류한다.

- ① 근로소득 (Salaries)
- ② 부동산소득 (Income from house property)
- ③ 사업소득 (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r profession)
- ④ 양도소득 (Capital gains)
- ⑤ 기타소득 (Income from other source)

상기 5가지 분류에 따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총 소득금액 (GROSS TOTAL INCOME) 이라고 한다. 5 가지 소득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 (2) 배당에 대한 과세

2003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선언된 배당에 대해서는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게 배당분배세 (Dividend Distribution Tax)를 과세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이후 선언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분배세를 과세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 받은 주주의 기타소득 (income from other sources)의 일부로서 과세한다.

#### (3) 과세제외 소득

소득세법 제10조, 10A, 10AA, 10B, 10BA, 11, 12, 13 및 13A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다루고 있다. 소득세법 제10조는 농업소득, 힌두 비 분리 가족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등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10A, 10AA, 10B, 10BA, 11, 12, 13 및 13A는 자유무역지역 내 신규투자 및 자선재단 및 정치자금 등 특정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과세혜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3-1-2-8. 사업소득금액 계산

제조, 판매 등의 사업활동 및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을 통해 창출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소득금액은 통상 회계장부 상 순이익에 사업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등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 <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 >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XXX
가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수익	XXX
차감: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수익,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비용	(XXX)
사업소득금액	XXX



### (1)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자본적 지출,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외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① 원천징수 하지 않은 지출

이자비용, 로열티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시 TDS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 TDS대상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TDS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지출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받은 상대방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TDS를 이행하지 않은 지출액 100%를 공제하지 않는다. 반면, 대가를 지급받은 상대방이 거주자인 경우 지출액의 30%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TDS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연도 경과 후 원천징수를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연도에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② 균등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은 지출

균등부과금(Equalisation Levy)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정서비스의 대가 임에도 균등부과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기한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가는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이후 연도에 균등부과금을 징수·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다.

#### ③ 종업원 소득세의 대납

종업원에게 비화폐성 급여 (주택제공 등)를 제공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해당 소득세 대납액은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 ④ 특수관계인에게 초과지불한 대가

친인척, 임원, 조합의 파트너 및 주요 이해관계자(출자지분 또는 이익의 20%이상을 배분 받을 권리를 보유한 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상 필요, 공정가치 또는 지출에 따른 효익을 초과하여 지불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는다.

#### ⑤ 특정지불수단에 의한 지급

Account payee cheque/draft 또는 Rule 6ABBA에서 정한 전자결제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동일인에게 1일 1만루피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비용으로 공제(1만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지급액 전액 불공제)하지 않는다. 만약 과거 소득세 계산 시 아직 결제하지 않은 부채를 비용으로 공제받은 후, 차후 연도에 동 부채를 1만 루피를 초과하는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를 수익으로 과세한다.

#### ⑥ 법률이 정하지 않은 연금기여금 등

법률이 정하지 않은 단체, 연금 등에 대한 기여금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종업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총당금 설정액은 Fourth Schedule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2) 공제가 허용되는 지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지출한 비용은 원칙 상 공제를 허용한다. 비용으로 공제되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건물에 대한 임차료, 수선비 등

건물에 대한 임차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지방세 및 보험료는 비용항목으로 공제가능 하다. 이전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익연동 등 변동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임차료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공제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 ②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 관련 수선비, 보험료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에 대한 수익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와 보험료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감가상각비

사업연도 동안 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한다. 당초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의 자산과 시운전 중인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상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이 아닌 자산 군 별로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방법과 상각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후잔액법 (Written down value method)과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를 인정하고 있다. 발전 및 송전설비를 제외한 자산은 상각후잔액법을 적용한다. 반면, 발전 및 송전설비의 경우 상각후잔액법과 정액법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상각후잔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자산군 별 상각후잔액 (기초 장부가액 + 신규자산 취득금액 처분대가 등)에 법률이 정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산군의 상각후잔액이 '0'인 경우, 실제 자산이 존재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한편, 자산군의 상각후잔액이 '0'이상이더라도 자산의 처분 등으로 실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처분으로 수령한 대가와 남아 있는 상각후잔액의 차이를 단기자산 양도차익 또는 손실로 과세한다.
- 신설합병, 분할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승계한 경우 합병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합병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승계 이전과 승계 이후의 일수로 안분하여 이를 각각 승계 받은 자와 승계한 자의 감가상각비로 배분한다.
- 신규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다른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용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의 50%만을 비용으로 공제한다. 이러한 50% 공제 제한 규정은 신규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에만 적용한다. 만약 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해에 사용을 시작하여 180일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전액을 공제한다.
-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상각율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미 공제된 감가상각비는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 차기로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기한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하며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기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이월결손금공제 후에도 잔여 소득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공제 가능하다.

#### ④ 과학연구지출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과학연구에 대한 지출은 공제를 허용한다. 사업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지출한 과학연구지출의 경우 사업이 개시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익적 지출 뿐 아니라 자본적 지출 성격의 과학연구지출도(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제외한다) 공제대상에 포함하며 연구목적에 아직 사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출한 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한다(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과학연구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공제를 적용 받았으나 과학연구목적 사용 전 자산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과 처분금액 중 낮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처분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과학연구지출을 공제가 가능한 사업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과학연구에 대한 지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한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지출액을 공제기한 제한 없이 이월하여 공제한다.

생명공학기업 (bio-technology) 또는 주류, 담배 및 화장품 등 Eleventh schedule에 열거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조 기업이 정부승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과학연구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지출 제외)의 150%를 비용으로 공제한다.

한편, 정부승인 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연구 또는 연구비용을 기부한 경우에는 사업연관성과관계없이 지출금액의 100% 또는 150%를 공제한다.

#### ⑤ 창업비

인도내국법인 또는 인도거주자가 사업개시 및 확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정한도내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공제가능한 창업비는 사업타당성,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시장조사 등 사업개시를 위한 분석보고서 작성, 계약서 작성 지원 등 법률서비스, 기업법에 따른 등록비 및 자본발행과 차입 등 자금조달비용을 포함한다. 참고로, 외환관리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인도에 신설법인을 설립시 발생한 비용은 한도 내에서 인도법인의 자본금으로 대체도 가능하다.

창업비는 프로젝트 비용(고정자산 등의 투자금액)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된 자본(지분투자액과, 무담보 사채 및 장기차입금 포함)의 5%와 프로젝트 비용의 5%를 창업비 공제 한도로 선택할



수 있다. 창업비는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정액상각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 ⑥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자금은 실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5년간 균등 상각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첫번째 비용공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는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에 따른다.

#### ⑦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인 관계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비거주자인 관계기업이 보증을 제공한 차입금 포함) 이자비용은 EBITDA의 30%를 한도로 비용 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자비용은 8년간 이월하여 공제한다.

한편, 자산취득 목적 차입금 이자의 경우, 차입시점부터 자산을 당초 목적에 사용하게 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므로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⑧ 대손금

영업과 관련된 회수불가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한다. 실제 장부에서 제거한 채권금액의 공제만을 허용하므로, 회수불가능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으로 기 과세된 일반적인 영업채권의 대손금이 공제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설비, 기계장치 등의 양도로 발생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⑨ 대손충당금

금융기관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대손충당금 비용공제 한도〉

구분	비용공제 한도
해외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Non-banking finance companies)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금액의 5%
공공금융기관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금액의 5%
인도은행 (Indian banks)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금액의 5%와 도시 외 지역 지점의 단기대여금의 10% 합계

### 3-1-2-9. 결손금 통산

총 소득금액은 5가지 분류 (Head of Income)에 따른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일부 소득분류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은 이를 당해연도의 동일한 소득분류 내에서 통산하거나 다른 소득과 통산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결손금통산의 적용방법 및 순서에 대해 살펴본다.

#### (1) 결손금 통산 순서

- ① 동일 소득분류 내 결손금통산한 소득원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소득분류내의 다른 원천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한다.
- ② 소득구분 간 결손금통산동일 소득분류내 결손통산 후 에도 잔여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소득구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한다.
- ③ 소득구분 간 통산 후 남은 손실은 향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 (2) 동일 소득분류 내 결손금통산

동일한 소득분류 내 한 소득원천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다른 소득원천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우선 서로 상계하기 전에는 다른 소득구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이 존재한다.

- 투자사업 (Speculation business) 손실은 오직 다른 투자사업 원천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 소득세법 35AD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제를 적용 받는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 다른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
- 장기자산 양도손실은 오직 다른 장기자산의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다. 단기자산 양도손실은 장기자산과 단기자산 양도차익 모두와 상계할 수 있다
- 경주용 말의 소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오직 동일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상계할 수 있다.
- 복권 등의 당첨소득은 다른 원천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에 활용될 수 없다.

#### (3) 소득구분 간 결손금통산

동일한 소득분류 내 결손금통산 후 에도 남아있는 결손금 잔액은 다른 소득구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한다. 다른 소득구분 내 상계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 결손금의 일부만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계가능한 결손금 전액을 모두 상계하여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투자사업손실은 다른 분류의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소득세법 35AD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제를 적용 받는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은 다른 분류의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양도소득 결손금은 다른 분류의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경주용 말의 소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부동산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타 소득분류 간의 통산은 최대 2 lakh를 한도로 허용된다.

각 소득구분 간 결손금통산 시 어느 소득분류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선 상계할 것인지에 대한 통산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결손금을 우선 상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 (4) 결손금 이월 공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일한 소득내 통산과 다른 소득구분 간 통산을 통하여 결손금을 전액 상계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을 이월하여 차기 이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손금 이월 공제가 허용되는 결손금은 아래와 같다.

- ①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8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4년간 오직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 가능하다. 소득세법 35AD의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 규정에 따른 특정 사업소득과 공제기한 제한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 ②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8년간 이월하여 부동산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 ③ 양도소득: 장기자산 양도손실은 8년간 이월하여 오직 장기자산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면, 단기자산 양도손실은 단기자산과 장기자산 구분없이 8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기타소득: 경주용 말의 소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4년간 이월하여 동일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5) 합병 시 결손금 승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 전 발생한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이월 공제할 수 있다.

-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 합병 또는 은행, 공공기관의 합병
- ② 합병당사회사들이 결손이 발생한 사업을 3년이상 영위한 경우
- ③ 합병 당사회사들이 합병일 2년전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의 4분의 3 이상을 합병일 현재 계속하여 보유
- ④ 합병신설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4분의 3 이상을 합병 후 5년간 유지
- ⑤ 합병신설법인이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5년간 계속하여 운영
- ⑥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간 합병의 경우 생산능력의 50% 이상의 조업도를 합병일 4년전 부터 합병 후 5년간 유지 - 승계한 사업의 조업도 등 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Certificate를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1-2-10. 소득세의 세율

인도 소득세법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정하고 있다. 법인의 세율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는 부가금 (Surcharge)과 건강·교육세 (Health and Education Cess, 법인의 분류, 매출 및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4% 단일세율 부과)가 추가로 과세된다. 2024-25 회계연도 (Financial Year)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소득세 세율

<법인의 소득세율>

구분	매출액 범위	세율
내국법인	400 Crore 이하	25%
	400 Crore 초과	30%
외국법인	단일세율	35%
유사파트너십	단일세율	30%

<부가금(Surcharge)>

구분	소득범위		
	1 Crore 이하	1 Crore - 10 Crore	10 Crore 초과
내국법인	0%	7%	12%
외국법인	0%	2%	5%
유사파트너십	0%	12%	12%

주: (\*)단, 내국법인이 특례세율 조항인 115BAA 및 115BAB를 선택한 경우 소득범위의 구분없이 소득세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 (2) 개인소득세 세율

FY23-24 연방예산안에서 개인소득세율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발표하였으며, 이전 납세자는 변경 전 세율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새로운 체계로 반영된다.)

〈개인소득세 세율〉

소득범위	소득세율	Surcharge	Cess
Rs. 3,00,000 이하	0%	0%	0%
Rs. 3,00,000 - Rs. 7,00,000	5%	0%	4%
Rs. 7,00,000 - Rs. 10,00,000	10%	0%	4%
Rs. 10,00,000 - Rs. 12,00,000	15%	0%	4%
Rs. 12,00,000 - Rs. 15,00,000	20%	0%	4%
Rs. 15,00,000 - Rs. 50,00,000	30%	0%	4%
Rs. 50,00,000 - Rs. 1,00,00,000	30%	10%	4%
Rs. 1,00,00,000 - Rs. 2,00,00,000	30%	15%	4%
Rs. 2,00,00,000 초과	30%	25%	4%

### 3-1-2-11. 최저한세(Minimum Alternate Tax (MAT))

소득세법은 사회, 경제 및 조세정책 목적 상 납세자에게 여러 인센티브, 공제, 감면 등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혜택을 적용 받는 납세자는 동일한 소득을 창출한 다른 납세자에 비해 낮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많은 조세혜택을 적용 받는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한세 (Minimum Alternate Tax, MAT)는 이러한 세제상 우대조치로 과세형평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상 다양한 조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후 설명한 특례세율(15BAA)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인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 (1) 최저한세의 적용

최저한세는 회계이익 (Book profit)에 15%를 곱하여 계산된다. 소득세법 상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는 적용가능한 조세혜택에 불구하고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최저한세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세액은 15년간 이월하여 일반적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최저한세 적용 예시 >

일반적인 납부세액과 최저한세 중 높은 최저한세를 적용	구분	일반적인 납부세액	최저한세
	당기순이익	100	100
납부세액: $\text{Max}[A, B] = 21$	세무조정사항	(50)	-
A. 일반적인 납부세액: 15	MAT목적 조정사항	-	40
B. 최저한세: 21	과세표준	50	140
	세율	30%	15%
	소득세	15	21

(2) 회계이익의 계산

최저한세 계산 목적 상 회계이익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세법이 정한 조정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주요 조정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자산조정 (참고: 주인도 대사관, 2016 인도세법의 이해)

-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 준비금 (Reserve), 확정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비해 마련한 준비금, 자회사의 손실에 대비한 총당부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배당금, 소득세법 상 면세소득과 관련된 비용, 자산의 가치 감소에 대비한 총당금

② 차감조정 (참고: 주인도 대사관, 2016 인도세법의 이해)

- 준비금의 인출, 유보금, 소득세법 상 면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감가상각 미상각 잔액, 발전·송전회사의 인수에 따른 이익, 인프라 Facility를 개발·유지·운영하는 기업의 인수에 따른 이익, 부실기업의 이익, 소득세법 제 80HHC조, 소득세법 제80조에 규정된 공제

3-1-2-12. 한계경감(marginal relief)

한계 경감은 소득의 부가세에 대한 소득세의 누적 효과를 줄이고 소득의 증가분보다 세액 증가분이 큰 경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출된 세액에 정률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인도 소득세법 특성상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은 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로부터 누적되는 고율의 부가세 때문에 증가하는 소득보다 증가하는 총세액이 더 커져 가치분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등에 등 부가세가 부과되는 모든 납세자에 이러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2022년 신흥국의 세정연구 인도)

< 한계경감 (법인) >

소득	한계경감
1 Crore 초과	· 1Cr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금의 합계는 1Cr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 Crore 초과	· 10 Cr를 초과하는 소득 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금의 합계는 10 Cr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3-1-2-13. 제조법인 등의 특례세율 적용

모든 내국법인은 기본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한번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일부 소득공제 등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1)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 특례세율(115BAA)

##### ① 적용요건

상장여부, 주주의 구성 및 연 매출액 규모 등에 제한 없이 모든 내국법인은 동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서식(Form No. 10-IC)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적용세율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한 법인의 소득은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부가금 10%와 건강·교육세 4% 고려 시 유효세율 25.17%).

##### ③ 고려사항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법인은 신규 취득 설비 등의 추가 감가상각비 공제(제32(1)조), 신규투자지출 비용 공제(제32AD조) 및 기타 소득세법 상 일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특례세율 선택 시 적용이 배제되는 상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하여 전기로부터 이월된 결손금과 미상각잔액은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이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법인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 신설 제조법인(115BAB)

2019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되어 2024년 3월 31일 이전 생산을 개시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설 제조업법인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부가금 10%와 건강·교육세 4% 고려 시 유효세율 17.16%). FY24-25 연방예산안에서 해당 사항이 연장되지 않아 일몰종료 되었다.

##### ① 고려사항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신설 제조법인은 신규 취득 설비 등 추가 감가상각비 공제(제32(1)조), 신규투자지출 비용 공제(제32AD조) 및 기타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특례세율 선택 시 적용이 배제되는 상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하여 전기로부터 이월된 결손금과 미상각잔액은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이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신설 제조법인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신설 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 유사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이상의 초과이익을 신설 제조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해당 거래에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을 재계산 할 수 있다.

3-1-2-14. 소득세의 신고

(1) 소득세 신고 대상자

개인, 조합 및 기타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기업과 유사파트너십의 경우 소득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2) 소득세 신고서식

소득세는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원천구분 등에 따른 다음의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식〉

신고서식	납세자 유형
ITR-1	근로소득, 연금 및 이외 기타의 소득이 있는 개인
ITR-2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 및 HUF
ITR-3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및 HUF
ITR-4	소득세법 44AD조 등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추정소득 금액을 신고하는 납세자
ITR-5	ITR-7 제출대상을 제외한 유사파트너십, 조합 및 이외 기타납세의무자
ITR-6	자선 또는 종교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을 적용하는 납세자, 전자신고만 가능
ITR-7	소득세법 139(4A)조 등에 따른 재단, 협회, 기관 등

(3) 신고기한

〈소득세 신고기한〉

구분	신고기한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받는 기업 (Form No. 3CEB 제출대상)	11월 30일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기업	10월 31일
기업을 제외한 개인 등:	
세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0월 31일
세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Firm의 파트너	10월 31일
이외의 경우	7월 31일



#### (4)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

기한내 소득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신고불성실 시 가산세 등

- 연차신고서를 지연제출 한 경우 5천 루피의 late fee가 부과된다. 다만, 과세소득금액이 5 lakh 루피 이하인 경우 late fee는 1천 루피를 초과할 수 없다.
- 지연납부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월 1%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 과소신고의 경우 세액의 50%(세금회피 목적의 과소신고의 경우 2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6) 수정신고(ITR-U)

제출된 신고서에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과세연도 (Assessment year)종료일 2년 이내에 수정신고서(ITR-U)를 제출할 수 있다. AY 2024-25(FY23-24)의 경우 수정신고서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따라 이자 및 지연가산세 이외의 추가 가산세 25%(1년이내), 50%(2년이내)를 납부하여야 한다.

### 3-1-2-15. 중간예납(Paying Advance Tax Instalments)

#### (1) 중간예납의무자

연 소득에 대해 1만 루피 이상의 소득세 납부(TDS 및 TCS공제 후 세액)를 예상하는 납세의무자는 분기별로 중간예납을 할 의무가 있다.

####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중간예납 기한

중간예납의무자는 매 분기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각 분기말 현재 예상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추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분기별로 추정납부세액 중 각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각 분기별 중간예납 기한과 납부세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중간예납 기한 및 중간예납 비율〉

분기	중간예납 기한	일반납세자	간이과세자
1분기	6월 15일	15%	0%
2분기	9월 15일	45%	0%
3분기	12월 15일	75%	0%
4분기	3월 15일	100%	100%

#### (3) 과소납부 시 지연이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중간예납비율(15%,45%,75%)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분기까지 월 1%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며, 4분기의 경우에는 최종 결정된 소득세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소득세 납입일까지 월 1%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 3-1-2-16. 세무감사 (Tax Audit)

연 매출액이 1 Crore 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세무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0 lakh). 연간 거래액 중 현금거래의 비중이 5%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10 Crore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무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세무감사보고서는 과세연도 10월말까지 제출되어야 한다(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9월말까지 제출). 세무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액의 0.5%와 1.5 lakh 중 낮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3-1-2-17. 원천공제제도 (Tax Deduction at Source, TDS)

#### (1) TDS제도 개요

원천공제 제도(Tax Deduction at Source)는 소득세법이 정한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에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공제의무자가 TDS를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TDS뿐 아니라 관련 가산세를 원천공제의무자가 부담한다. 또한, 관련 지급액은 원천공제의무자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TDS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원천공제 된 세금을 제외한 순액만을 지급받게 되지만(1 Crore 루피 초과 예금인출액의 TDS 등 제외) 징수된 세금은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동 세액은 이후 지급받은 자의 사업연도 납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2) TDS대상 지급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증권 등의 이자, 임차료, 수수료 및 중개료, 복권 등의 당첨소득, 계약에 따른 대가, 전문·기술용역에 대한 대가 및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지불 등이 TDS적용을 받는다. TDS를 적용 받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TDS 대상 및 세율>

구분	적용대상 및 세율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지급을 지급하는 경우</li> <li>■ 세율 -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li> </ul>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li> <li>■ 세율 - 10%</li> </ul>
증권 이외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에게 유가증권 이외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단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 또는 HUF의 경우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DS의무를 부담</li> <li>■ 세율 - 10%</li> </ul>
계약에 따른 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에게 광고/방송/상품 또는 여객운송, 케이터링, 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li> <li>■ 건 당 지급액이 3만 루피 이하 또는 회계연도 중 지급액의 합계가 10만 루피 이하인 경우 TDS가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세율 - 개인, HUF에게 지급 시 3.75 1%, 이외의 경우 1.5 2%</li> </ul>
수수료 및 중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거래의 중개 또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대가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단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 또는 HUF인 경우에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DS의무를 부담</li> <li>■ 세율 - 2%</li> </ul>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단, 임대료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 또는 HUF의 경우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DS의무를 부담</li> <li>■ 세율 - 공장 및 기계의 임대 1.5 2%, 토지 및 건물의 경우 7.5 10%</li> </ul>
전문적·기술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에게 로열티 및 전문적·기술적서비스(법률, 의료, 엔지니어링, 회계, 경영 및 기술자문) 및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li> <li>■ 회사의 임원에게 회의비, 기타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경우 제외)</li> <li>■ 세율 - 기술적서비스의 경우 2%, 이외의 경우 10%</li> </ul>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 및 인도내에서 과세대상인 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li> <li>■ 세율 - 소득의 구분 및 금액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이자, 배당, 로열티 등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가능)</li> </ul>

지급을 받는 자는 원천공제 시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PAN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PAN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TDS일반세율과 20%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장기 Bond이자 등 일부 제외)

#### (3) TDS Certificate

원천공제 의무자는 TDS신고 후 15일 이내에 지급을 받는 자에게 TDS Certificate (원천징수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기한 내 Certificate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1일 당 100루피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4) TDS 신고 및 납부기한

원천공제 의무자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다.

<TDS 신고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 및 납부 기한	미이행 가산세 등
월별 TDS납부	지급을 한 달의 익월 7일 (3월 지급분의 경우 익월 30일)	1) 징수 및 납부불성실 이자: 미이행기간 매월 1%(1.5%)의 이자부과 2) 불공제 비용: 지급을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지급액의 30%를 공제대상 비용에서 제외(비거주자의 경우 100%) 3) 가산세: 징수하지 않은 TDS와 동액의 가산세 부과 가능
분기별 TDS신고	분기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	1) 지연신고: 일당 200루피의 late fee부과 (TDS세액 한도) 2) 가산세: 1만루피 가산세 부과 가능(최대 10만 루피)

3-1-2-18. 원천징수제도 (Tax collected at source, TCS)

TCS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자가 판매시점에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TCS는 구매자의 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 TCS 적용대상

① 주류, 목재, 광물, 및 폐기물 등

주류, 목재, 광물 및 폐기물 등은 품목별로 판매액의 1% ~ 5% TCS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정부기관 또는 연간 매출액이 1 Crore 를 초과하는 사업자(법인이 아닌 경우 50 lakh)는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시기에 TCS를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구매자가 해당 품목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해당 재화를 제조, 가공 및 전력생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TCS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차장, 도로 및 채굴권 등 대여

주차장, 도로 및 채굴권 등을 임대하는 경우 2% TCS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임차인이 공공기관(Public sector)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자동차 판매

대당 가격이 10 lakh 루피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금액의 1%의 TCS를 구매자(구매자가 정부기관인 경우 제외)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TCS를 적용하며 자동차 제조사가 딜러 및 유통업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TCS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LRS제도를 통한 해외송금 및 해외여행 패키지, 국제신용카드 사용액

LRS (Liberalised Remittance Scheme, LRS)제도를 통해 연간 7 lakh 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7 lakh 를 초과하는 금액의 5%(Non PAN/Aadhaar의 경우 10%, 교육비 목적 금융기관 대출관련 송금의 경우 0.5%)의 TCS를 징수한다. 2023년 7월부터 국제신용카드로 결제하는 7 lakh이상의 외화거래에는 20%의 TCS가 적용된다.

⑤ 50 lakh 초과 상품 판매

매출액이 10 Crore 를 초과하는 납세자가 동일인에게 연간 50 lakh 를 초과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매출은 제외한다)은 판매액의 0.1%의 TCS를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

TCS징수기준인 50 lakh는 GST요소까지 포함한 판매대가를 말하며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판매금액을 포함한다. 한편 상품의 수출과 다른 규정에 따라 TDS와 TCS가 적용된 거래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TCS납부 기한

판매자는 TCS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한 TCS를 납부해야 한다. TCS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TCS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 1%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 (3) TCS Certificate 및 신고기한

TCS를 징수한 자는 매 분기 TCS신고와 Certificate을 발행하여야 한다. 분기별 TCS신고와 Certificate 발행기한은 다음과 같다.

〈TCS 신고 및 Certificate발행 기한〉

분기	신고기한	Certificate 발행기한
1분기 - 6월 30일	7월 15일	7월 30일
2분기 - 9월 30일	10월 15일	10월 30일
3분기 - 12월 31일	1월 15일	1월 30일
4분기 - 3월 31일	5월 15일	5월 30일

### 3-1-3. 상품서비스세(GST)

#### 3-1-3-1. GST 개요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가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한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GST는 인도의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한다. GST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격에 세금을 포함시켜 거래 징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한편 GST는 주마다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간접세를 하나로 단일화한 간접세제도로써 2017년 7월 도입되었다.

GST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CGST, SGST, IGST로 구분할 수 있다. 주(state) 내 공급은 CGST(Central GST) 및 SGST(State GST)의 적용을 받고, 납세자가 한 주의 사업체에서 다른 주의 사업체로 물품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state 간 공급에는 IGST(Integrated GST)가 적용된다. 또한 물품의 수입은 기존의 관세와 IGST의 적용받으며 서비스의 수입은 IGST만을 적용받는다.

#### < GST로 흡수된 간접세 항목 >

중앙정부 부과 세목	주 정부 부과 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ntral excise duty (*1)</li> <li>■ Duties of excise</li> <li>■ Additional duties of excise</li> <li>■ Additional duties of customs</li> <li>■ Special additional duty of customs</li> <li>■ Service tax</li> <li>■ Central surcharges and cess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e VAT/Sales tax (*1)</li> <li>■ Luxury tax</li> <li>■ Octroi and entry tax</li> <li>■ Entertainment and amusement tax</li> <li>■ Taxes on advertisement</li> <li>■ Purchase tax</li> <li>■ Taxes on lotteries, betting and gambling</li> <li>■ State surcharges</li> </ul>

주: (\*1) 주류, 석유제품 등은 아직 GST제도로 수렴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간접세인 Excise duty 및 VAT의 적용을 받음.

#### 3-1-3-2. GST 과세대상

GST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Supply of goods and services)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공급은 판매, 교환, 사용 권리의 대여 등 사업상 대가의 수령을 수반하는 모든 형태의 공급을 포함한다.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주류, 석유, 천연가스, 항공유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은 기존의 존재하였던 특별소비세를 적용받는다.

추가적으로 무상공급과 공급자의 사업과 무관한 공급은 원칙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수령이 없더라도 과세대상 공급으로 간주한다.

-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사업용 자산의 처분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관계자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직원에게 제공한 연간 5만 루피 이하의 무상공급은 제외)
- 복수의 GSTIN을 보유한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GSTIN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 위탁판매, 구매대행 거래에서 본인과 대리인간 재화의 공급



- 국외 특수관계자로 부터의 서비스의 수입
- 사업을 폐지한 경우 보유중인 사업용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

### 3-1-3-3. GST 등록

GST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식별과 GST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첫 단계이다. GST등록을 통해 납세의무자는 고유식별번호(GSTIN)를 발급받고 중앙정부와 주 정부를 대신하여 GST의 거래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이전 단계에서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GST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며 과세대상 공급을 하는 자는 GST의 납세의무자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연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GST등록은 공급활동을 수행하는 각 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실체가 여러 주에 걸쳐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점이 소재한 주별로 GST등록이 요구된다.

#### (1) GST등록의무 기준 금액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GST법 22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20 lakh 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인도 북동부의 특정 주(Special category states)의 경우 GST등록 기준점으로 20lakh 보다 낮은 10 lakh 를 적용한다. 헌법 279A조는 이러한 특정 주를 정하고 있는데 Arunachal Pradesh, Assam, Jammu and Kashmir,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Sikkim, Tripura, Himachal Pradesh and Uttarakhand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상기 특정 주 중 일부가 연간 20 lakh 의 등록기준점 적용을 선택하면서 관련 GST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아래의 주가 연간 매출액이 10 lakh 에 미달하는 경우 GST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 GST의무등록 기준 >

연간 매출액	구분
10 lakh 미만	Manipur, Mizoram, Nagaland , Tripura
20 lakh미만	상기 이외 모든 주

연간 매출액이 20 lakh(또는 10 lakh)에 미달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등록신청으로 인정된다. 한번 GST등록을 한 이후에는 연 매출액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GST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재화만을 공급하는 자의 GST 등록

재화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40lakh 에 미달하는 경우, GST법상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의 중간 공급을 하는 사업자, 대리납부의무자 등 Section 24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GST등록을 해야 하는 자.
- 아이스크림, Pan masala 및 담배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 특정 주내(Arunachal Pradesh,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Puducherry,

Sikkim, Telangana, Tripura, Uttarakhand)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 자발적으로 GST등록을 한 자

### (3) GST의무등록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GST법 24조에 따라 연 매출액이 GST등록의무 기준(20 lakh / 10 lakh)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요구된다.

- 재화의 주간(inter-state) 공급을 하는 사업자  
(서비스, Job work 및 수공업품의 주간공급 제외)
-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임시과세사업자 (Casual taxable person)
-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대리납부의무자
- 전자상거래 운영자(Electronic commerce operators)
- 비거주과세자(Non-resident taxable persons)
- GST 51 조에 따른 TSD 의무자
- 과세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공급하는 사업자
- 다른사업장에 매입세액 이전하는 사업자(Input service distributor, ISD)
- 전자상거래 운영자를 통해 공급하는 사업자
- GST법 52조에 따라 TCS의무를 부담하는 전자상거래 운영자
- 인도외 지역의 공급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인도내 수요자에게 온라인정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 (4) GST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GST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GST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 자신 또는 가족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을 받는 자가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화 및 서비스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 3-1-3-4. GST 등록 신청기한 및 필요정보

### (1) 일반적인 경우

GST등록신청서 (Form GST REG-01)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여러 주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주마다 별도의 등록신청이 필요하다. GST등록에는 아래의 정보와 문서가 필요하다.

- PAN,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승인권자의 Aadhaar number, 서명권자의 사진, 법인등록증, 사업장 주소지 증명 - 임대차계약서, 각종 고지서 등, 통장사본, 취소 수표 등 은행계좌 증명서류, 이사회 의사록 (서명권자 지정)

### (2) 비거주과세자의 경우

비거주과세자(Non-resident taxable person, NRTP)란 인도내 고정된 사업장 없이 비정기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비거주과세자의 GST등록신청서는 인도 내 사업개시



5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비거주과세자의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Form GST REG-09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 등이 필요하다.

#### ① 서명권자 지정

비거주과세자의 등록신청서는 유효한 PAN을 보유한 인도거주자의 서명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전 인도 휴대전화번호와 PAN을 보유한 인도거주자 한 명을 서명권자 (Authorized Signatory)로 지정해야 한다.

#### ② GST등록 유효기간

비거주과세자의 GST등록은 90일간 유효하다. 비거주과세자는 신청을 통해 GST유효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내 사업활동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NRPT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③ 선납세액 납부

비거주과세자는 등록신청서 제출 전 선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납세금은 등록유효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납부 한 선납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초과할 경우 등록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3-1-3-5. 매입세액 공제

GST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닌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포함된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이후 단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면 세금위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누적과세효과가 나타난다. 각 공급단계의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 ITC)를 통해 이전 거래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으로써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GST를 납부하게 된다.

####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GST법 상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 ① 세금계산서 수령

세금계산서 (Tax Invoice), Debit note, 계산서 (Bill of entry) 등 적격 증빙을 갖춘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수령

매입세액은 매입한 재화의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수취한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선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및 서비스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공제받을 수 없다.

##### ③ 신고서 제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고서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매입대금 지급

공급받은 자는 매입대금과 GST를 인보이스 발행일자로 부터 180일 이내 공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동 기한내 지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이자는 공급받은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된다.

##### ⑤ 거래상대방의 매출액 신고

공급받은 자가 공제를 신청한 매입세액 중 공급자가 신고한 invoice 내역과 일치하는 하는 항목만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는 공급받은 자의 GSTR-2A서식으로 자동적으로 복사된다. 공급자의 신고내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공급받은 자는 본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자가 신고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한다.

## (2) 불공제매입세액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13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와 관련된 매입세액  
(재화 및 여객의 운송 등 과세목적 차량 등의 경우 제외)
- 식품, 음료, 마용 목적의 치료, 헬스케어 서비스, 차량 등의 리스  
(사업자가 동일한 품목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제 허용)
- 클럽, 피트니스센터 등의 회원권
-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가 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제외한 부동산의 리노베이션, 개량, 수선을 위한 건설도급계약과 관련된 매입세액.  
단, 건설도급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의 경우 공제를 허용한다.
-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제외한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 비거주과세자의 매입세액. 단, 비거주과세자가 수입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한다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 개인목적 사용, 고객에 대한 선물, 무상샘플

## (3) 매입세액공제 적용 순서

인도의 GST는 하나의 거래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절반씩 세금을 징수하는 Dual GST제도로 운영된다. 주(state)내 공급에는 CGST와 SGST가 각각 세율의 50%씩 징수되며, 주 간(inter-state) 공급에는 IGST과 부과된다. 연방정부와 개별 주 정부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CGST와 SGST간 공제 및 각 주의 SGST상호 간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IGST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CGST 및 SGST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매입세액의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공제 적용 순서(참고: V.S. Datey, 2021, TAXMANN's GST Ready Reckoner)>

매입세액	공제순서	비고
IGST	IGST → CGST 또는 SGST (납세자 선택 가능)	납세자는 매입IGST를 매출CGST와 SGST 각각에 일부 금액을 나누어 공제가능
CGST	CGST → IGST	매입 CGST와 SGST는 매입IGST를 전액 활용 후에만 공제가능
SGST	SGST → IGST	

## (4) 매입세액공제 적용 기한

다음의 두 날 중 이른 날이 지난 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해당 인보이스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후 도래하는 9월의 GST신고기한
- 해당 매입세액이 귀속되어야 하는 연차 GST신고기한



### 3-1-3-6. GST 세율

소금, 우유, 가공하지 않은 곡물 및 채소 등은 GST가 면세된다. 수출 또는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과세한다. GST면세항목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영세율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기 GST면세와 영세율 적용대상 이외에는 품목별로 다양한 세율이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 5%, 12%, 18%, 28% 세율이 존재하며 설탕, 오일, 대중교통서비스 등 생필품에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에어컨, 담배 등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GST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현황에 따라 품목별 GST의 세율을 변경 및 공지 하고 있다.

GST의 주요 품목별 요율은 다음과 같다.

〈주요 품목별 GST 요율〉

GST비율	품목
0%	우유, 계란, 두부, 교육서비스 등 필수품
5%	석탄, 식용유, 차, 가정용LPG, 기초약품
12%	버터, 컴퓨터, 주스, 포장코코넛
18%	헤어오일, 치약, 세면용품
28%	고급자동차, 오토바이, 소비재(에어컨,냉장고), 담배, 탄산음료

## 3-1-3-7. GST 신고

GST신고는 전자신고로 이루어진다. 공급자가 업로드한 인보이스 정보는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공제로 연계되어 상호대사를 통해 불일치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 지게 된다.

GST법상 납세의무자는 월별, 분기별 및 연단위로 아래의 서식을 사용하여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고서식 및 신고기한

주요 GST신고서식 및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주요 GST신고서식〉

신고서식	신고주기	신고사항	신고대상자	신고기한
GSTR-1	매월/분기 (*1)	매출내역 신고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납세의무자	익월 11일 (분기별 신고자: 분기종료 후 13일 이내)
GSTR-3B	매월/분기 (*1)	종합신고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납세의무자	익월 20일 (분기별 신고자: 분기종료 후 22일 이내(*2))
GSTR-4	매년	연차 간이과세신고	간이과세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4월말
GST CMP-08	매 분기	분기 간이과세신고	간이과세자	분기종료 후 18일 이내
GSTR-5	과세기간 종료 시	비거주과세자 종합신고	비거주과세자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등록 유효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중 이른 날
GSTR-6	매월	ISD 월별 신고	ISD	익월 13일
GSTR-7	매월	TDS공제신고	TDS의무자	익월 10일
GSTR-8	매월	전자상거래 운영자 월 단위 신고	전자상거래 운영자	익월 10일
GSTR-9	매년	연차신고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납세의무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12월말
GSTR-9A	매년	연차 간이과세신고	간이과세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4월말
GSTR-9C	매년	GSTR-9와 조정명세	매출액이 5Cr를 넘는 과세대상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12월 말일
GSTR-10	매년	등록취소	등록취소 및 등록포기한 과세자	취소 및 취소명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GSTR-11	매년	물품구매	세금납부의무 없는 대사관등 UIN발급대상	물품구매 익월 28일

주: (\*1) 직전 년도 매출액 5Cr 이하인 사업자는 분기별 신고(QRMP)를 선택 가능

(\*2) Himachal Pradesh, Punjab, Uttarakhand, Haryana, Rajasthan, Uttar Pradesh, Bihar, Sikkim, Arunachal Pradesh, Nagaland, Manipur, Mizoram, Tripura, Meghalaya, Assam, West Bengal, Jharkhand, Odisha, the Union Territories of Jammu and Kashmir, Ladakh, Chandigarh, Delhi의 경우 분기 종료 후 24일





### 3-1-3-8. 지연신고 시 가산금 등(Penalty)

#### (1) 지연신고가산금 (Penalty for Delay)

##### ① 연차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연차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0루피를 한도로 지연제출 일 당 200루피의 지연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② 연차신고 이외 신고서의 지연제출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연차신고서 이외의 신고서(GSTR-1, GSTR-3B, GSTR-4, GSTR-5 및 GSTR-6)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만 루피를 한도로 지연신고일 당 50루피의 지연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무실적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신고일 당 20루피의 지연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참고: Notification No. 4 to 7/2018 - Central Tax)

#### (2) 납부지연이자(Interest)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GST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미달납부세액 등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일수와 18%를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지연 이자를 부과한다.

#### (3) 미신고가산금 (Not filing GST Form)

납세의무자가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 또는 10,000루피를 부과한다.

### 3-1-3-9. 간이과세제도(Composition Scheme)

간이과세제도 (Composition Scheme)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가 간소화된 납세의무 이행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간이과세 적용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GST로 납부하게 된다.

#### (1) 간이과세 적용 대상

직전 회계연도의 연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기준금액	구분
연 매출 75 lakh 루피	Arunachal Pradesh,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Sikkim, Tripura, Uttarakhand
연 매출 150 lakh 루피	상기 특정 주를 제외한 모든 주

## (2) 간이과세 적용 배제

아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판 마살라, 탄산수 및 담배 제조업자
- 음식점을 제외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 중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5 lakh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임시과세자 및 비거주과세자
- 주간 공급(inter-state outward supply)을 하는 사업자
-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 (3) 간이과세자의 GST납부세액 계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매출액에 다음의 업종별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업종별 간이과세 세율>

구분	적용세율
제조업 (아이스크림, 담배 등 간이과세 적용 배제품목의 제조는 제외)	1% (CGST 0.5%+SGST 0.5%)
음식점업(주류 미제공)	5% (CGST 2.5%+SGST 2.5%)
이외	6% (CGST 3%+SGST 3%)

## (4) Alternative 간이과세

일반적인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소규모 서비스공급업자(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적용하는 경우 포함)가 적용할 수 있는 Alternative 간이과세제도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50 lakh 루피 이하인 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 GST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 주간 공급을 하는 사업자
-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팬 맛살라, 탄산수 및 담배제조업자
- 임시과세자 및 비거주과세자

Alternative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며 매출액에 6%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을 납부한다. 다만, 50 lakh 루피 까지의 매출액에는 6%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품목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3-1-3-10. 대리납부제도(Reverse Charge)

일반적으로 GST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및 GST법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GST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대리납부 (Reverse Charge)라고 한다.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연 매출액 규모(20 lakh)와 관계없이 등록이 요구된다.

#### ① 대리납부 의무 대상 재화의 공급

##### <대리납부 적용 대상 재화의 공급>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캐슈넛 -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것	농부	등록납세자
담배 잎, 면화	농부	등록납세자
실크원사	실크원사를 제작하는 자	등록납세자
복권판매	주정부, 연방직할지 또는 지방정부	복권판매업자 및 판매대리인
중고차, 압류한 물품 및 폐품	중앙정부, 주정부, 연방직할지 및 지방정부	등록납세자
우선부문 대출 증명 (Priority sector lending certificates)	등록납세자	등록납세자

<대리납부 적용 대상 서비스의 공급>

대상상품	공급자	공급받는 자
운송업자가 (Goods Transport agency) 제공하는 서비스	Goods Transport Agency	Factories act에 등록된 공장, 모든 등록납세자 및 임시과세자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개업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록납세자
중재재판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재재판소	등록납세자
회사 또는 파트너십에게 제공하는 스폰서십 서비스 (스포츠경기, 문화행사 등에 후원회사 로고 등의 노출)	스폰서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	회사 및 파트너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단, 다음은 제외한다 1) 부동산 대여 2) 우편, 택배, 보험서비스 3) 항공기, 선박, 공항, 항만서비스 및 여객운송서비스	중앙정부, 주정부, 연방직할지 및 지방정부	등록납세자
부동산 개발 권리, 30년 이상 장기리스	모든 사람	부동산업자 (Promoter)
회사의 이사가 회사 및 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의 이사 등	과세지역에 소재한 회사
보험판매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보험판매인	과세지역에 소재한 보험회사
채권추심대리인의 서비스	추심대리인 (Recovery agent)	은행, 금융기관 및 NBFC 등
작곡가, 사진가, 작가 및 예술가 등이 저작권 제공	작곡가, 사진가 예술가 등	출판사, 음원회사 등
은행감독기구(Overseeing Committee)가 RBI에 제공한 서비스	The member of overseeing committee	Reserve Bank of India
금융상품 판매대리인이 제공한 서비스	개인사업자인 금융상품 판매대리인	과세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NBFC
Business facilitator가 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	Business facilitator	과세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보안서비스	법인을 제외한 보안서비스제공자	등록납세자
여객운송용 차량 렌트 서비스	법인을 제외한 렌트 사업자	과세지역내 법인
유가증권 대차거래	대여자	차입자
과세지역 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과세지역 외 사업자	과세지역내 사업자



### 3-1-3-11. Input Service Distributor

Input Service Distributor (ISD)는 동일한 PAN을 보유한 납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매입세액을 이전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여러 주에 걸쳐 GSTIN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본점 또는 특정 지점이 여러 사업장을 대신하여 통합구매를 하는 경우 ISD를 이용하여 해당 매입재화 등이 실제 소비되는 다른 사업장으로 매입세액을 이전할 수 있다.

ISD로 사용하려는 사업장이 이미 GSTIN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GSTIN과 별도로 ISD등록이 필요하다.

#### (1) 매입세액 이전 방법

ISD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이전한다. 매입세액의 이전은 해당 매입이 귀속되는 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되는 매입세액이 여러 지점에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 (2) ISD신고

ISD는 매월 ISD의 매입세액공제액과 이전한 매입세액을 GSTR-6에 기재하여 익월 1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지연신고의 경우 일당 50루피의 late fee가 부과된다.

### 3-1-4.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e, TP)

#### 3-1-4-1. 이전가격세제 의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관계기업간의 재화 및 서비스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외특수관계기업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가격과 다르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독립된 당사자에서 이루어졌을 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국가간 과세소득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는 국외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 독립된 기업간 거래의 조건을 벗어 났을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가정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도세법 상 이전가격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3-1-4-2. 적용대상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래 뿐 아니라 과세소득을 차감시키는 이자, 기타 경비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제거래로 간주되는 특정 내국거래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 3-1-4-3. 특수관계기업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특수관계기업으로 규정한다.

인도 소득세법 92A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중 어느 한 시점에 아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갖는 기업들은 특수관계기업으로 본다.

- ①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자본의 26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② 다른 기업의 장부 상 총 자산의 51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대여금을 제공한 경우
- ③ 다른 기업의 총 차입금 중 10%이상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경우
- ④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 또는 한 명 이상의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기업이 가진 경우
- ⑤ 어느 두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동일인이 갖고 있는 경우
- ⑥ 한 회사의 제품의 제조, 사업수행이 다른 회사가 가진 노하우, 특허권, 라이선스 등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우
- ⑦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90퍼센트 이상이 특정 다른 회사에 의하여 공급되고 제품의 판매가격 및 공급조건이 그 다른 회사의 공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
- ⑧ 동일인 또는 그의 친인척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 3-1-4-4.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 (1) 정상가격의 의의

인도소득세법은 정상가격을 관계기업간의 관계가 아닌 독립된 당사자간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기업간의 거래조건은 통상적인 시장의 경쟁상황 뿐 아니라 거래참여자 간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계기업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 (2) 정상가격 산정 방법

인도 소득세법 92C조는 정상가격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6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이 중 거래의 성격 및 종류, 거래상대방, 수행기능 등 관련된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는 해당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 ② 재판매가격법("RPM")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자산의 정상가격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 실현될 수 있는 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 ③ 원가가산법("CPM")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는 제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통상적인 이익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 ④ 이익분할법("PSM")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거래참여자가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을 각 참여자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인도 소득세규정 10B조는 이익분할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a. 거래당사자들이 제공하는 특수한 무형자산이 거래에 관련된 경우
- b. 거래당사자들간의 활동이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거래순이익률법("TNM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 ⑥ 기타합리적인방법("Other Method")

상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이다.

## (3) 정상가격 결정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가 하나 이상의 수치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다. 정상가격 분석결과가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 정상가격은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 ① CUP, RPM, CPM 또는 TNMM적용결과 6개이상의 가격 범위가 나타난 경우

실제 국외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 데이터의 상위 35%와 하위 65%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간주한다. 실제 국외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 데이터의 35% 65%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전체 데이터의 중앙값(Median)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② 이외의 경우

이익분할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Other method) 또는 이외의 산출방법의 결과가 6개 미만의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 전체데이터 값의 산술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국외특수 관계자와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실제거래가격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실제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인정한다.

### 3-1-4-5. 이전가격 문서화

#### (1) BEPS프로젝트 - Action Plan 13

다국제기업의 BEPS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을 위해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BEP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BEPS프로젝트의 세부과제 중 ‘Action Plan 13 - 이전가격문서화’는 과세당국이 기존의 각 국가별 법률에 기초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만으로는 이전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정비에 다음의 3단계 접근법을 따른다.

#### < Action Plan 13-3 Tiers >

구분	보고사항
Country by Country Report (국가별보고서)	각 조세관할 지역별 소득 및 세금 등의 배분내역, 조세관할 지역 별 전체기업 목록
Master File (통합기업보고서)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사업설명, 무형자산 및 다국적기업간 금융 거래 등
Local File (개별기업보고서)	현지법인의 기본정보, 특수관계거래 내역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보 등

#### (2) 인도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 ① Form 3CEB (Accountant's Report)

과세대상기간 중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가 있는 모든 납세자는 관련 국제거래 등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문서화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독립된 회계사의 의견을 Form 3CEB의 양식에 따라 소득세신고기한 1개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이전가격 문서와 달리, 국제거래 등의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대상기간 중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가 있는 모든 납세자는 3CEB 제출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1루피의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기한내 3CEB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지점, 고정사업장 포함)도 3CEB적용대상 거래가 있다면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 ② TP Study Report (Local file)

과세대상 기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합계가 1천만 루피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Local file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인도 세법은 Local file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Local file은 독립된 회계사의 Form 3CEB양식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Form 3CEB의 제출기한 이전 작성되어야 한다.

##### ③ Master file

Master file은 Part A와 Part B 2개의 Part로 구성되며 Part A는 전체 법인의 회사명, 주소 PAN 등 기본정보가 기재되며 Part B는 전체법인의 사업내용, 이전가격 정책 등의 기재가 요구된다.

Master file은 제출대상을 각 Part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Part A는 국제거래금액 크기 등과 관계없이 다국적그룹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작성의무가 있는 반면, Part B는 하기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출대상이 된다.

i.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50억 루피를 초과하면서

ii. 국제거래의 합계가 5억루피를 초과하거나 무형자산의 국제거래가 1억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 ④ Country by Country Report

Country by Country Report (CbCR)는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640억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모회사 또는 보고대상으로 지정한 회사가 모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제출한다.

CbCR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주로 모회사가 제출의무를 부담하며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자동으로 국가간 교환이 이루어진다.

## 3-1-4-6. 이전가격 문서화 미이행시 가산세 등

이전가격 문서화 요구사항 미이행 시 가산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가산세 규정〉

구분	가산세
독립된 회계사의 이전가격 보고서(Form 3CEB) 미제출	1 lakh
적절한 TP Study문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제출요구 기간내 미제출한 경우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금액의 2%
Master file 미제출	5 lakh

## 3-1-4-7.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 (1) 일반사항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는 납세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해 과세당국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인도는 APA제도를 통하여 FY23-24 회계연도 기간 중 총 125건의 APA를 체결하였다. 125건을 분류하면 86건의 일방적 APA와 39건의 쌍방적 APA로 구성된다. 이전 기간인 FY22-23 회계연도에서 95개의 체결 건수에서 30% 증가하였으며 2012년 도입 이후 24년 3월말까지 총 641건(일방적APA-506건, 쌍방적 APA-135건)이 체결되었다.

## 〈연도별 APA 신청 현황〉

회계연도	일방적APA	쌍방적APA	합계
FY 2013-14	97	37	134
FY 2013-14	175	39	214
FY 2014-15	169	30	199
FY 2015-16	113	24	137
FY 2016-17	80	25	105
FY 2017-18	121	52	173
FY 2018-19	124	47	171
FY 2019-20	76	50	126

FY 2020-21	100	33	133
FY 2021-22	39	35	74
FY 2022-23	116	77	193
합계	1,210	449	1,659

주: FY23-24의 신청현황은 미발표

〈연도별 APA체결 현황〉

회계연도	일방적APA	쌍방적APA	합계
FY 2013-14	5	-	5
FY 2014-15	3	1	4
FY 2015-16	53	2	55
FY 2016-17	80	8	88
FY 2017-18	58	9	67
FY 2018-19	41	11	52
FY 2019-20	50	7	57
FY 2020-21	18	13	31
FY 2021-22	49	13	62
FY 2022-23	63	32	95
FY 2023-24	86	39	125
합계	506	135	641

FY22-23기간동안 체결된 일방적APA를 바탕으로 총 267건의 거래를 검토한 결과 사전 승인된 정상가격산정방법 중 TNMM이 152건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 승인된 정상가격산정방법 \_FY 2022-23〉

회계연도	일방적APA
TNMM	152
Other Method	95
CUP Method	19
RP Method	19
합계	267

FY22-23기간 동안 체결된 쌍방적APA 32건의 거래를 검토한 결과 소요기간의 평균은 62.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참고: APA-Report-Final-2023.pdf (incometaxindia.gov.in))



〈정상가격산정 승인기간 \_FY 2022-23〉

번호	승인기간	건수
1	1년 이내	-
2	2년 이내	2
3	3년 이내	5
4	4년 이내	6
5	5년 이내	8
6	6년 이내	2
7	7년 이내	3
8	8년 이내	4
9	9년 이내	1
10	10년 이내	1
	합계	32

## (2) APA신청 및 신청수수료

국제거래를 수행하였거나 향후 국제거래를 예상하는 납세자 모두 APA를 신청할 수 있다. APA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Form 3CED와 함께 APA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제거래 금액에 따른 다음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0억 루피 이하 - 1백만 루피
- 10억 루피 초과 20억 루피 이하 - 1.5백만 루피
- 20억 루피 초과 - 2백만 루피

APA승인이전에는 언제든지 Form 3CEE제출로 APA신청을 철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 (3) APA신청대상기간

납세자는 최대 5년까지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소급(roll-back)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과거 4년 이내 기간까지의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사전승인대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 (4) 사전면담

납세자는 정식 APA신청 전 과세당국과의 사전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면담은 Form 3CEC 양식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납세자의 이전가격관련 이슈, 사전승인신청 범위 등을 다루게 된다. 사전면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납세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래의 범위와 타결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5) 연례보고서 제출

정상가격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자는 사전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의 준수여부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소득세신고기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세무공무원은 사전승인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감사보고서를 납세자의 연례보고서가 제출된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Director general of Income tax에 제출한다.

### 3-1-5. 한-인도 조세조약

#### 3-1-5-1. 국제 조세의 의의

기업의 경제활동은 글로벌화 되었지만 글로벌화된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문제를 단일하게 규율하는 국제기구 및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세권은 각 국가가 자신의 특유한 경제환경에 맞춰진 조세제도에 기초하여 행사한다. 하나의 국제거래에 대해 각 국가가 서로 다른 세법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제적 이중과세 또는 과세공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와 조세회피 및 탈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조세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체결된 조약에 따라 각 국가는 과세권의 일부를 양보하게 된다.

#### 3-1-5-2. 한-인도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 (1) 대상인

한-인도 조세조약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 인(人)에게 적용된다. 인(人)이란 개인, 회사, 인의 단체 및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과세단위로 취급되는 그 밖의 모든 실체를 포함한다.

##### (2) 대상 조세

한국과 인도의 조세조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다. 조세협약 대상조세를 아래와 같이 소득에 대한 조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간접세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인도의 경우 - 소득세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

■ 한국의 경우 -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됨  
[국조, 서면-2020-국제세원-3426, 2020.08.10]

#### 3-1-5-3. 거주자

거주자의 판정은 조세조약을 적용할 인적범위의 결정과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해결에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각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므로 한 사람이 조약체결 양 국가에서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1)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그 개인의 지위를 결정한다.

-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 ②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 ④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양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합의로 문제를 해결



## (2) 법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법인이 양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다만,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한다.

### 3-1-5-4.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은 과세권을 배분하는 주요 요인이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 체결 국 중 어느 국가가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지를 결정한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동 기업이 인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인 인도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인도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고정사업장의 의미

한-인도조세조약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으로 1) 사업장소, 2) 계속성 및 3) 사업활동관련성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 〈고정사업장 성립요건〉

사업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건물, 시설장치 등을 의미</li> <li>■ 토지, 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목적에 사용가능한 일정한 장소를 의미함</li> <li>■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업장소를 구성함</li> <li>■ 사업장소는 고정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장소는 일반적으로 특정장소와 관련이 있다.</li> </ul>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히 일시적이 아닌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갖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구성됨</li> <li>■ 많은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소가 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함</li> <li>■ 단기간 수행되는 활동이 반복되는 경우, 각 활동이 사업장소를 사용한 기간과 반복횟수를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을 판단</li> </ul>
사업활동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어야 함. 그 활동이 반드시 생산적인 성격일 필요는 없음</li> <li>■ 또한, 활동이 어떠한 중단없이 영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함.</li> </ul>

#### (2) 고정사업장의 예시

한-인도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완전한 리스트가 아닌 예시 사례이므로 실제 고정사업장 판단 시 상기한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후술할 예비적·보조적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 ①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대리점
- ② 다른 인을 위하여 저장 설비를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 ③ 농장, 플랜테이션 또는 농업·임업·플랜테이션 또는 관련 활동이 수행되는 그 밖의 장소
- ④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 자원의 채취장소
- ⑤ 건축현장이나 건설, 설치 또는 조립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

### (3) 건설공사, 피고용인 등을 통한 용역공급

다음의 건설공사 등이 18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한다. 고정사업장은 183일 초과 이후가 아닌 사업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본다.

- 건축현장이나 건설, 설치 및 조립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 다만,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그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러나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공사를 위하여) 그 국가 내에서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피고용인을 통한 용역공급에서 고정사업장 판단의 기준이 되는 183일 초과여부는 '어느 12개월 기간' 이내의 단일 기간 또는 이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단일한 전체를 형성하는 복수의 용역이 12개월 이내에 수행된 경우 해당 용역기간을 통산하여 지속기간을 판단한다.

### 3-1-5-5.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지만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수익을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비적 활동은 기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예상하여 수행되며 기업의 다른 활동에 앞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다른 국가의 건설현장에 종업원을 파견한 건설회사가 종업원의 건설현장투입에 앞서 특정장소에서 교훈훈련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예비적 활동에 해당한다.

반면, 보조적 활동은 기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산과 종업원의 상당부분을 필요로 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으로 볼 수 없다.

한-인도조세조약은 앞서 서술된 고정사업장의 정의 충족여부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아래의 예외규정을 갖고 있다.

- ①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②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③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④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⑤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⑥ ①호 부터 ⑤호까지 언급된 활동들의 어떤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 3-1-5-6. 간주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의 3가지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대리인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업을 위하여 수행되는 모든 대리인의 활동장소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리인만이 고정사업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대리인을 종속대리인이라 한다.

#### (1)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① 독립대리인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종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이고,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해당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는 이항의 의미내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 ② 주주로서 지배하는 자회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과세문제에 있어 자회사는 독립된 법적실체를 간주되므로, 단순히 다른 쪽 체약국의 자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주로서 가지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대리인의 판단에 고려사항이 아니다. 종속대리인 여부에 판단은 종속대리인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2)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종속대리인

한 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체약국에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종속대리인이 있다면, 그 기업은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독립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다른 기업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다만,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면, 그를 종속대리인으로 판단한다.

#### 〈종속대리인의 범위〉

계약체결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li> <li>■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 자신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확보하는 경우</li> </ul>
재고보유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을 대신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한쪽 체약국 내에 상시 보유하는 경우</li> </ul>
보험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영역 내에 소재하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재보험의 경우 제외)</li> </ul>

### 3-1-5-7. 과세권의 배분

한쪽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서 발생시킨 사업이윤은 그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 체약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국기업이 고정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체약국은 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발생시킨 이윤만을 과세할 수 있으므로 한 기업의 이윤 중 고정사업장에 배분될 이윤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독립기업원칙

한 쪽 계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계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계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따라서, 고정사업장과 특수관계기업 또는 동일 기업내 다른 부문간 거래 등에서 정상가격을 벗어난 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유사한 조건에서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별도 취급항목의 예외

고정사업장 기준에 따른 과세권 결정은 조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소득항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소득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부동산소득,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제10조 배당, 제11조 이자,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제13조 양도소득,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제16조 이사의 보수,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제18조 연금, 제19조 정부용역, 제20조 교수, 교사 및 연구원, 제21조 학생, 제22조 그 밖의 소득

## 3-1-5-8. 제한세율

한-인도조세조약은 배당, 이자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제한 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정한 것으로서 원천지국 세법에 따른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원천지국 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한세율 적용규정>

구분	제한세율	소득의 정의
배당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 부터 생기는 소득</li> <li>■ 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 부터 생기는 소득</li> </ul>
이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li> <li>■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li> </ul>
사용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등에 대한 대가</li> </ul>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li> </ul>

이자, 배당,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 계약국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등을 수행하고, 이자, 배당 등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한다.





### 3-1-5-9. 이중과세의 제거

#### (1) 한-인도조세조약 상 이중과세 방지제도

한국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인도조세조약은 다음과 같이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있다.

#### 〈한-인도조세조약 상 이중과세 제거〉

인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거주자의 소득에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 포함된 경우, 인도는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li> <li>■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인도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인도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도 인도는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li> </ul>
한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인도의 조세 또는 조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도의 조세는 그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li> <li>■ 그러나 그 공제액은 한국의 조세의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가운데 인도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li> </ul>

#### (2) 한국 법인세법 상 규정

한국 법인세법은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방법을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법인세법은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인도조세조약은 현재 간주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도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이 있더라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3-1-5-10. 상호합의 절차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란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신청은 조약의 규정에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래의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 〈상호합의 절차 관할당국〉

구분	관할당국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	------

상호 합의절차 진행 시 2년간(협의로 추가 3년 연장가능)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보증금/은행보증 제공 필요).

### 3-1-5-11. 혜택의 제한

2016년 9월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으로 조세조약 남용의 경우 조약혜택을 배제하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추가(제28조)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고자 고안된 한쪽 체약국 법 또는 규정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업무를 처리한 인에게는 이 협정의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 ③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이 협정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 가) 그 거주자가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또는
  - 나)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인용하는 것인 경우

### 3-1-5-12.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 (1) 개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 은 납세자의 행위, 거래 등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고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고 과세당국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 소득세법에 도입된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납세자의 특정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조세회피 행위 (Impermissible Avoidance Arra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IAA란 아래의 주된 기준에 해당하면서 특정 추가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청, 2015, 인도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① 주된 기준

- 거래 과정 또는 거래 약정 일부에서라도 조세 회피 의도가 존재
- 행위(Arrangement)에는 거래, 영업, 계약행위, 합의,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며 법적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에 의해 판단

#### ② 추가 기준

- 거래가 시장가격 또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세법규정을 오·남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상업적 실질이 없거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한 거래
-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



## (2) IAA로 간주될 경우 세무상 취급

- ① 행위 단계의 부인 또는 결함, 세법 목적상 행위 부인
- ② 행위 거래 당사자의 부인 또는 결함
- ③ 행위 당사자 간 수익과 비용의 재배분
- ④ 수행된 행위 구조 및 형식을 무시하고 거래 실질 판단
- ⑤ 자본/부채, 투자/수익 등의 재판단
- ⑥ 행위 거래 당사자의 거주지국 및 행위가 일어난 장소의 재판단

## (3) 절차규정

세무공무원이 GAAR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보고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GAAR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를 받은 지 6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 변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반대의견에 대해 세무서장이 동의하여 GAAR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담당세무공무원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한다. 납세자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승인위원회가 GAAR적용여부를 판단하여 6개월내에 결정한다.

## (4) GAAR적용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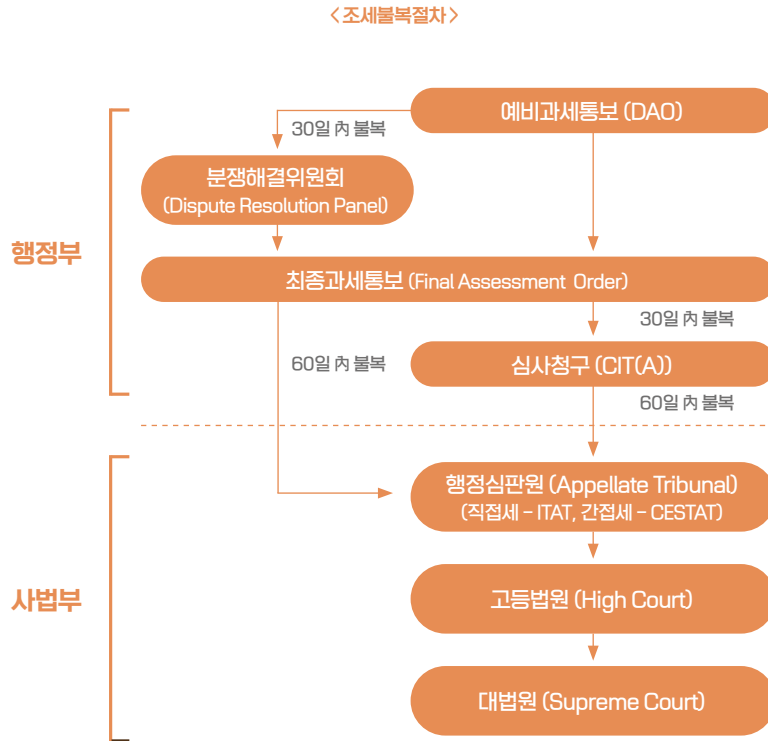
인도 직접세위원회(CBDT)는 2017년 1월 GAAR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FAQ형식으로 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SAAR)\*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어떠한 행위를 '조세회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 없이 개별사안에 적용되는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말한다.
- 특정 조세회피 행위가 조세조약 상 혜택제한 조항의 적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경우 GAAR조약이 적용되지 않음
- GAAR은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계없이 적용됨
- GAAR은 단지 특정실체가 조세피난처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음
- GAAR시행 전(2017년 4월 1일)에 금융상품 발행 시점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금융상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GAAR시행 전 투자가 이루어진 리스와 대부계약에는 GAAR 적용을 면제하지 않음
- 특정 행위가 사전심사제도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미 허용된 경우 GAAR은 적용되지 않음
- GAAR이 적용되는 경우 대응조정은 되지 않음
- GAAR 적용 기준인 조세혜택 3 Crore 루피는 해당 조세회피 행위 참여자들이 얻은 조세혜택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함
- 특정 행위가 한 과세연도에 허용가능한 거래로 판단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이 동일한 그 행위에는 GAAR이 적용되지 않음

### 3-1-6. 조세불복 (Tax appeal procedure)

#### 3-1-6-1. 조세불복 절차

인도의 조세불복절차는 과세관청인 (Commissioner, Appeals) 또는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Resolution Panel, DRP-이전가격등에 한함)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소 (Appellate Tribuna)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법원(Court)에 제기하는 조세소송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3-1-6-2. 심사청구(Commissioner Appeals)

##### ① 심사청구

과세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소득세의 경우 30일 이내, GST의 경우 3개월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전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신고서와 관련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GST관련된 불복의 경우 불복청구 전 과세 통지된 금액의 10%의 납부가 요구된다, 한도 40 Crores). 심사청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심사청구 수수료〉

구분	심사청구 수수료
소득세	불복청구 금액; 10만 루피 이하 - 250루피 10만 루피 초과 20만 루피 이하 - 500 루피 20만 루피 초과 - 1,000 루피
GST	청구금액 1 lakhs 당 1천 루피 (25,000 루피 한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청구서가 접수된 회계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GST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 ②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Resolution Panels, DRP)

「소득세법」 144C에 따른 분쟁해결위원회는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분쟁해결 기구이다. 납세자는 예비과세(Draft Order)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청구해야 한다. 분쟁해결위원회에서는 결정 세액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증액도 할 수 있다. 분쟁해결위원회는 청문을 완료하고 초안 명령이 납세자에게 전달된 달 말일로부터 9개월내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참고:인도의 세정연구 인도(22년))

#### ③ 사전답변국(AAR)

인도의 사전답변국은 재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인도 대법원 퇴임판사와

법무부에서 1명, 재무부에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답변을 구하는 질문은 2,500루피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허가된 양식의 신청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 판단을 구하는 질문은 과세당국의 심사 또는 법원의 재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어야 하고 세금 회피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사전답변국은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답변해야 하고 사전답변국의 답변은 구속력을 가진다

### 〈DRP Vs CIT(A)〉

구분	분쟁해결위원회(DRP) Dispute Resolution Panels	심사청구(CIT (A)) Commissioner of Income Tax (Appeals)
범위	이전가격(TP)등 국제조세와 관련된 세금	직접세, 간접세 모든 범위 포함
구성요건	3명의 멤버로 구성된 인원	1명의 멤버로 구성
불복기한	Draft Order를 받은후 30일 이내 신청	Final Order를 받은후 30일 이내 신청
회신 기한	Draft Order를 받은 후 9개월 이내 완료 과세당국의 DRP의견에 Final Order 발행	제한된 기간 없음
이후 절차	납세자의 경우 이의제기 가능(ITAT)	납세자, 과세당국 모두 이의제기 가능
납부금	DRP 절차 기간동안 납부 유예	AO의 Final Order받은 후 납부필요 (납부유예 신청 필요)

### 3-1-6-3. 심판청구 (Appeal Tribunal)

#### ① 소득세 심판청구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ITAT)

소득세의 심판청구는 관련된 과세결정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TAT에 신청할 수 있다 (불복청구금액에 따라 최대 1만루피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ITAT는 Ministry of Law의 산하기관으로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세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 ② 간접세 심판청구 (Customs, Excise and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 CESTAT)

간접세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려는 납세자는 그러한 처분결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Appellate Tribunal에 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Appellate Tribunal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3개월의 기한 내 청구를 하지 못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ppellate Tribunal은 최대 3개월의 기한내에서 기한 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관련된 세액이 5만루피 이하인 경우 Appellate Tribunal은 불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GST와 관련된 불복대상 처분이 공급장소와 관련된 경우 National/Regional benches of Appellate Tribunal이 심판청구를 담당하며 이외의 경우는 State/Area benches of Appellate Tribunal관할한다.

불복신청 전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은 모두 납부되어야 하며 불복대상인 세액의 10%(40 Crores한도, 심사청구 시 납부한 10%와 별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심판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시 청구인이 납부한 예치금은 예치금 납부시점부터 환급일 까지의 이자(6% 한도로 Notification을 통해 결정)와 함께 환급된다.

또한, 예치금 이외 심판청구 신청에는 관련 세액 10만 루피 당 1천 루피의 수수료(25천 루피 한도)의 납부가 요구된다.

Appellate Tribunal은 심판청구 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 3-1-6-4. 조세소송 (Appeal Court)

소득세 심판청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20일(GST의 경우 180일) 이내에 고등법원(High court)에 상고할 수 있다. 기한 내 불복을 신청하지 않은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 (GST의 경우 180일)을 초과한 신청도 인정될 수 있다. 고등법원은 납세자의 불복이 법률의 해석과 관련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고등법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최소 두 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심리가 되며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법원(Supreme Court)에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최소 제기 기준금액>

비고	직접세	간접세
ITAT(CESTAT)	60 lakh	60 lakh
High Court	2 Cr	2 Cr
Suprme Court	5 Cr	5 Cr

3-1-7. 주요 세무이슈 (Tax issues)

3-1-7-1. 주재원 세무이슈 (Expats GST Issues)

2022년 5월 미국에 본사를 둔 Northern Operating System Pvt Ltd.(이하 NOS)와 관련된 인도 대법원 판결에서 주재원 파견을 해외 본사가 인도 자회사에 일시적인 직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취급하여, 주재원의 월급과 수당에 18%의 GST를 부과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주재원들이 월급을 본사에서 USD로 받는다는 점, 본국의 사회보장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 주재원의 파견 및 복귀는 본사의 글로벌 정책을 따르며, 파견 기간 종료 후 본사로 복귀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참고: 대사관에서 알려드리는 인도 경제 소식지 2024-01호)

인도 과세당국은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많은 외국계 기업의 주재원에 대한 GST 과세통지를 발부 하였으며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외국계 기업은 개별적으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조세의 불확실성을 의식한 간접세위원회(CBIC)는 23년 12월 지침을 발표하여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고의적 사실은폐 또는 부정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한 Notice를 발행할 수 있다고 공표하였다.

< NOS Vs 한국기업 >

비교	NOS 사례	한국기업(*1)
급여지급 주체	■ 미국 본사	■ 인도 법인
급여상환 여부	■ 자회사가 미국본사에 상환	■ 본사에 상환하지 않음
Mark Up 부과	■ 종업원 비용에 대한 Mark up	■ 해당사항 없음
고용조건 결정	■ 미국본사	■ 한국본사/ 인도자회사
사회보장혜택	■ 본국의 사회보장 유지	■ 본국의 사회보장 유지

주: (\*)각 상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 GST 부과제척기간 >

회계연도	연차신고기간(연장후)	부과제척기간
FY17-18	■ 20년 1월 31일	■ 23년 12월 31일
FY18-19	■ 20년 12월 31일	■ 24년 4월 30일
FY19-20	■ 21년 3월 31일	■ 24년 8월 31일
FY20-21	■ 22년 2월 28일	■ 25년 2월 28일
FY21-22	■ 22년 12월 31일	■ 25년 12월 31일

24년 6월에 간접세위원회(CBIC)에서 발표된 Circular No,210/4/2024-GST에 따르면 “인도 국내법인이 Full ITC(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의 특수관계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송장(Invoice)에 기재한 서비스 금액을 시가로 간주하고 송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금액은 “0”으로 간주한다” 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모회사는 인도 자회사의 직원 파견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송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금액은 “0”으로 납부할 GST 가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24년 9월 CBIC는 Notification 17,18을 발표하면서 FY17-18, FY18-19, FY19-20 계류중인 GST 조세분쟁과 관련하여 25년 3월말까지 분쟁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GST관련 이자와 벌과금을 면제하는 Section 128A를 11월에 1일부터 적용한다고 통지하였다. 다만 이전에 기납부한 이자와 벌과금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 3-1-7-2. Vivad se Vishwas Scheme, 2024

직접세위원회(CBDT)는 2024-25년 연합 예산 발표에서 그 동안 누적되어 계류 중이었던 직접세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정리하고자 Vivad se Vishwas Scheme, 2024를 발표하였고,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는 2020년에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시행되어 VSV 2.0으로 불리기도 한다.

계류중인 소송의 대상은 직접세(Income tax)이며 심사청구(CIT(A),이전가격- DRP), 심판청구(ITAT), 고등법원(High court), 대법원(Supreme Court)에 계류중인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 합의 금액〉

구분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부	2024년 12월 31일 이후 납부
세금, 이자, 벌과금이 포함된 조세소송		
적격분쟁 (2024.07.22일 이전)	■ 분쟁금액의 100%	■ 분쟁금액의 110%
기타적격분쟁 (2020.01.31일 이전)	■ 분쟁금액의 110%	■ 분쟁금액의 120%
이자, 벌과금이 포함된 조세소송		
적격분쟁 (2024.07.22일 이전)	■ 이자/벌과금의 25%	■ 이자/벌과금의 30%
기타적격분쟁 (2020.01.31일 이전)	■ 이자/벌과금의 30%	■ 이자/벌과금의 35%

→ 납세자가 심사청구 또는 재판청구에서 유리한 명령을 받은 경우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이에 반하는 명령이 나오지 않은 경우 납부금액이 분쟁합의 금액의 50%로 감소한다.

조세소송이 MAT/AMT(최저한세) 공제(손실) 또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세액  
공제(손실)/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세액을 분쟁 대상금액에 포함하거나 감소된 MAT/AMT 공제 (손실)/  
감가상각액을 이월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VSV 2.0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조세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분쟁을 조속하게 해결하는데 있다. 한편 해당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양식은 다음과 같다.

〈VSV2.0의 주요 양식〉

Form	주요 내용
Form-1	■ 납세자(신고인)의 VSV 진행 신청
Form-2	■ 이의절차 철회를 위한 확인 인증서
Form-3	■ 신고인의 분쟁금액 납부 의사 표시
Form-4	■ 체납세금 및 최종 정산 명령서(조세당국)

## 3-2 회계

### 3-2-1. 회계법령

#### 3-2-1-1. 재무제표 작성 의무

모든 회사는 매 회계년도 말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고 회사법 Schedule III가 요구하는 양식과 공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 등을 포함한다.

#### 3-2-1-2.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 (Section 128 of Companies Act, 2013)

회사는 회계장부 및 이와 관련된 증빙을 등록된 회사의 공식 주소지에 최소 8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 이사회의 결정으로 등록 주소지 이외 다른 장소를 회계장부 등의 보관장소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정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기업등록국(ROC)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지점의 거래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해당 지점에 보관할 수 있으나 각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계기록의 요약정보를 정기적(3개월 이내 주기)으로 등록 주소지에 전송하여야 한다. 회계장부를 법에서 규정하는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INR 50,000 ~ 500,000의 벌금을 부과한다.

#### 3-2-1-3. 회계연도 (Financial year) (Section 2 of Companies Act, 2013)

재무보고 목적의 회계연도는 통상적으로 4월 1일 시작하여 3월 31일로 종료하는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회사의 첫번째 회계연도는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3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신설법인의 첫번째 회계연도는 12개월 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자회사로서 연결 목적 상 모회사의 보고기간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회계연도(Financial year)와 다른 결산기간의 적용을 NCLT(National Company Law Tribunal)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허용한다. 다만, 재무보고 목적 상 Financial year와 다른 결산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무신고 목적의 소득금액은 4월 1일 ~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3-2-1-4. 재무제표의 승인 (Section 134 of Companies Act, 2013)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지정한 대표서명권 자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2인이 이사회를 대신하여 재무제표에 서명을 한다.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주주총회(AGM) 21일 이전 모든 주주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권자 포함)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3월말 결산시 9월말)에 개최되어야 함.

#### 3-2-1-5. 기업등록국 재무제표 신고

회사는 주주총회 후 30일 이내 재무제표를 기업등록국(ROC)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E-Form AOC-4전자양식을 이용하여 MCA 21 Portal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주주총회가 법정 기한내(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회사 설립 후 첫 주주총회의 경우 9개월 이내)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 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함께 재무제표를 신고한다.



### 3-2-1-6. 인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인도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매 분기 및 연차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분기 보고의 경우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2-1-7. 재무제표 공시의무

상장회사는 기업등록국의 신고 뿐 아니라 별도로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회사에게는 재무제표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 3-2-1-8. 외부감사 대상

회사법 (Companies Act, 2013)은 회사의 규모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별도의 유한책임파트너십법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8)을 적용 받는 유한책임파트너십(LLP)은 연 매출액이 40 lakh 루피를 초과하거나 납입자본이 25 lakh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 3-2-1-9. 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5년 임기의 감사인을 선임한다. 한번 선임된 감사인의 임기는 5년이지만 매년 감사인 유지에 대한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인 유임이 부결된 경우 이사회가 다른 감사인을 선임한다.

신규 설립된 회사는 설립 후 30일 이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첫 번째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30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90일 이내 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은 회계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지명된 파트너의 의결로 감사인을 선임한다.

### 3-2-1-10. 감사인 의무교체 규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10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계속하여 선임한 경우 감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인 감사인의 경우 5년)

- 상장회사
- 납입자본금이 10 Crore 루피 이상인 비상장 공개주식회사(Unlisted Public Company)
- 납입자본금이 50 Crore 루피 이상인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Company)
- 50 Crore 루피 이상의 차입금을 보유한 회사

상기 의무교체 기간 동안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5년간 감사인으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 3-2-1-11.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Financial Controls) 감사

회사법은 감사인에게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여부 뿐 아니라 회사가 적절한 내부 회계 관리제도를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따라서, 회사는 재무제표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또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인기업
- 소기업
- 최근 감사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50 Crore 루피 미만인 비공개주식회사
- 차입금이 25 Crore 루피 이하인 비공개주식회사

### 3-2-2. 회계 표준

#### 3-2-2-1. 인도 회계기준의 구성

인도회계사회(ICA)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기준 수립을 위한 기구인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 Board)를 설치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인도에는 현재 다음의 두 개의 회계기준이 존재한다.

- Indi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GAAP): Companies (Accounting Standards) Rules, 2006에 의해 공표되었으며 Ind AS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동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India Accounting Standards (Ind AS): IFRS와 합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회계기준으로 현재까지 41 개의 기준서가 공표되어 있다. 도입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 3-2-2-2. 회계기준 준수 의무

회사법은 모든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기준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회계기준의 준수 의무를 129(1)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에는 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인정하는 서한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회계기준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준거기준이 된다. 감사결과 회계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가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3-2-2-3. 인도의 IFRS 적용

인도는 당초 G20에서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관련 법률과 기준서 제정 지연 등으로 2016년부터 IFRS에 근거하여 제정된 Ind AS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IFRS의 도입 형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를 그대로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수용하는 전면도입(Full adoption)과 자국의 회계기준을 IFRS와 합치되도록 재개정하는 방법(Converg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의 상장법인 등이 적용하고 있는 Ind AS는 IFRS를 기초로 ICAI가 제정한 기준서 이므로 인도의 IFRS도입 방법은 Convergence에 해당한다.

#### < Ind AS 도입 로드맵 >

적용시기	적용대상
2015년 4월 1일	■ 자발적 적용을 선택한 기업
2016년 4월 1일	■ 순자산 500 Cr 이상인 기업 상기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및 JV
2017년 4월 1일	■ 상장회사 및 인도 국내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예정된 회사(SME상장회사 제외) 순자산 250 Cr 이상인 비상장 회사 상기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및 JV
2018년 4월 1일	■ 순자산 500 Cr 루피 이상인 비은행금융기관(NBFCs) - 상장 및 비상장 NBFC포함 NBFCs 이외의 금융기관 <sup>1</sup> 상기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및 JV
2019년 4월 1일	■ 순자산 250 Cr 루피 이상인 비은행금융기관(NBFCs) - 상장 및 비상장 NBFC포함

<sup>1</sup> RBI와 IRDAI는 은행과 보험기관의 Ind AS 의무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notice를 공지하였다. 이로 인해 동 기관의 Ind AS적용시기는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3-2-2-4. Ind AS구성

인도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방법은 전면 도입이 아닌 일부 내용 및 형식을 인도의 특수한 회계환경에 맞춰 제정한 기준서로서 IFRS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Ind AS는 IFRS와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IFRS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맞춰 대응되는 기준서를 제·개정해오고 있으며 기준서의 일련번호는 IAS에 대응하는 기준서의 경우 IAS 1~99호까지의 번호를 부여하고 IFRS에 대응하는 기준서의 경우 101~199호까지의 번호를 사용한다.

〈Ind AS 기준서 구성〉

기준서 번호	기준서 명	대응되는 IFRS
Ind As 1	재무제표 표시 -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AS 1
Ind As 2	재고자산 - Inventories	IAS 2
Ind As 7	현금흐름표 - Cash Flow Statements	IAS 7
Ind 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Accounting policies,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IAS 8
Ind As 10	보고기간후사건 -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IAS 10
Ind As 12	법인세 - Income Taxes	IAS 12
Ind As 16	유형자산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AS 16
Ind As 19	종업원급여 - Employees Benefits	IAS 19
Ind 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Accounting for Gov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IAS 20
Ind As 21	환율변동효과 -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Foreign Exchange Rates	IAS 21
Ind As 23	차입원가 - Borrowing Costs	IAS 23
Ind As 24	특수관계자 공시 - Related Party Disclosures	IAS 24
Ind As 27	별도재무제표 -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AS 27
Ind 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IAS 28
Ind 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 Financial Reporting in Hyper Inflationary Economies	IAS 29
Ind As 32	금융상품: 표시 -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IAS 32
Ind As 33	주당이익 - Earnings Per Share	IAS 33
Ind As 34	중간재무보고 Interim Financial Reporting	IAS 34
Ind As 36	자산손상 - Impairment of Assets	IAS 36
Ind 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IAS 37
Ind As 38	무형자산 - Intangible Assets	IAS 38
Ind As 40	투자부동산 - Investment Property	IAS 40
Ind As 41	농림어업 - Agriculture	IAS 41
Ind As 101	Ind AS의 최초채택 - First time adoption of India Accounting Standards (Ind AS)	IFRS 1
Ind As 102	주식기준보상 - Share Based Payments	IFRS 2

Ind As 103	사업결합 - Business Combination	IFRS 3
Ind As 104	보험계약 - Insurance Contracts	IFRS 4
Ind As 10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IFRS 5
Ind As 10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IFRS 6
Ind As 107	금융상품: 공시 - Financial Instrument: disclosure	IFRS 7
Ind As 108	영업부문 - Operating Segment	IFRS 8
Ind As 109	금융상품 - Financial Instruments	IFRS 9
Ind As 110	연결재무제표 -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RS 10
Ind As 111	공동약정 - Joint Arrangement	IFRS 11
Ind As 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 Disclosure of interest in other entities	IFRS 12
Ind As 113	공정가치 측정 - Fair Value Measurement	IFRS 13
Ind As 114	규제이연계정 - Regulatory Deferral Accounts	IFRS 14
Ind As 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IFRS 15
Ind As 116	리스 - Leases	IFRS 16
Ind As 117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IFRS 17

### 3-2-2-5. Ind AS 의무적용 대상

Ind AS는 201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현재 Ind AS의 의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상장회사 및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
- ② 적전 회계연도 말의 순자산\*(Net worth)이 250 Crore 를 초과하는 비상장회사
  - \* 순자산(Net worth)는 Companies Act, 2013 2(57)에 정의되어 있다.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누적손실 - 이연비용'
- ③ 상장 비금융기관 및 순자산이 250 Crore를 초과하는 비금융기관
- ④ 상기 ①내지 ③의 모회사, 자회사 및 조인트벤처

Ind AS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IGAAP을 적용한다. 다만 상기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도 자발적으로 Ind AS를 적용할 수 있다.



## 3-2-2-6. IGAAP 기준서

IGAAP은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일부 기준서의 적용을 면제한다. 현재 유효한 27개의 IGAAP 기준서는 아래와 같다.

## 〈IGAAP 기준서 구성〉

기준서 번호	기준서 명	적용대상
AS-1	회계정책 공시 -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모든 기업
AS-2	재고자산 평가 - Valuation of Inventories	모든 기업
AS-3	현금흐름표 - Cash Flow Statement	OPC, 소규모 및 휴면회사 제외
AS-4	우발상황, 보고기간후사건 - Contingencies and Events Occurring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모든 기업
AS-5	당기순이익, 전기 오류수정 및 회계정책변경 - 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Prior Period Item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모든 기업
AS-7	건설계약 - Construction Contracts	모든 기업
AS-9	수익인식 - Revenue Recognition	모든 기업
AS-10	유형자산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모든 기업
AS-11	환율변동효과 -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모든 기업
AS-12	정부보조금 - Accounting for Govt. Grants	모든 기업
AS-13	투자자산 - Accounting for Investments	모든 기업
AS-14	합병 - Accounting for Amalgamations	모든 기업
AS-15	종업원급여 - Employees benefit	모든 기업
AS-16	차입원가 - Borrowing Costs	모든 기업
AS-17	부문별 보고 - Segment Reporting	중소기업 제외
AS-18	특수관계자 공시 - Related Party Disclosures	Level III 제외 모든 기업
AS-19	리스 - Leases	모든 기업
AS-20	주당이익 - Earning Per Shares	모든 기업
AS-21	연결재무제표 -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AS-22	법인세 - Accounting for Taxes on Income	모든 기업
AS-23	지분법 - Accounting for Investment in Associates i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AS-24	중단영업 - Discontinuing operations	Level III 제외 모든 기업
AS-25	중간재무보고 -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상장회사
AS-26	무형자산 - Intangible Assets	모든 기업
AS-27	조인트벤처 - Financial Reporting of Interests in Joint Ventures	(*)

AS-28	자산손상 - Impairment of Assets	모든 기업
AS-29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모든 기업

주: (\*) 회사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사

### 3-2-2-7. 중소기업의 정의(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SMC)

Companies (Accounting Standards) Rules, 2006은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SMC)으로 정의한다.

- (인도 및 해외) 비상장회사 및 상장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
-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
- 직전 회계기간의 총 매출액이 250 Crore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
- 직전 과세기간 중 차입금이 50 Crore루피를 초과하지 않은 회사(과세기간 종료일 뿐 아니라 전체 회계기간 중 어느 시점에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의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

### 3-2-2-8. 중소기업의 IGAAP 적용특례-확인완료

중소기업은 다음의 IGAAP기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IGAAP을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주석 등으로 공시해야 한다.

\* ICAI는 기업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로 iGAAP의 적용범위를 정한 기업 범주 별 회계기준서 적용 지침을 제정하였다(Criterial for Classification of Entities and Applicability of Accounting Standards). 그러나 이후 중앙정부가 기업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에 따른 IGAAP의 적용기준을 공표함에 따라 ICAI의 iGAAP적용대상 기준은 회사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등 에게만 적용한다.

- AS-17 Segment Reporting: SMCs의 경우 기준서 전체 적용 면제
- AS-3 Cash Flow Statement: 1 인기업(OPC), 소기업(Small Company) 및 휴면회사(Dormant Company)는 기준서 적용 면제
- AS-15 Employment benefit: 비누적 유급휴가의 인식과 측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여금의 현재가치평가 규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공시사항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AS-15 Earning Per Share: 희석주당순이익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AS-19 Leases: 리스총투자 등 기준서 공시요구사항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AS-28 Impairment of Assets: 사용가치를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추정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AS-29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충당부채 유형별 경제적 효익의 유출예상 시기 정도 등 일부 공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3-2-3. 유의사항

#### 3-2-3-1. Ind AS vs IFRS

인도는 IFRS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인도 고유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회계기준의 유지를 위해 IFRS의 전면도입이 아닌 Convergence방법으로 IFRS를 도입하였다. Convergence에는 IFRS기준의 일부 삭제와 IFRS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준의 삽입(Carve-in/Carve-out)이 수반되므로 Ind AS와 IFRS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차이가 존재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IAS 1 재무제표 표시

IFRS는 보고기간말 이전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대역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와 관련하여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이전에 대역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반면, Ind AS는 대역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장기차입약정 위반이 보고기간말 이전 발생하였으나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 대역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2) IAS 7 현금흐름표

IFRS에서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회사의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거나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Ind AS는 이러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이자지급은 재무활동으로 이자수입과 배당금수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IAS 10 보고기간후사건

IFRS는 보고기간말 이후 위반사항은 보고기간후 사건으로 수정을 요하지 않는다. 반면 IND AS의 경우에는 IAS1과 관련한 사항(장기부채 상환합의)의 경우에는 비록 보고기간후에 발생하였어도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IAS 12 법인세

IFRS는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일시적차이(피취득자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액 등)가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시 별도로 인식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실현된 경우, 이러한 취득 이연법인세 효익을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 감소로 회계처리 한다.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0'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Ind AS는 사업결합 후에 실현되는 취득 이연법인세 효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직접 인식한다.

##### (5) IAS 16 유형자산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생산되는 시제품의 판매에 대한 매각금액과 원가금액은 적용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IND AS의 경우에는 원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한다.

(6) IAS 21 환율변동효과

Ind AS는 최초채택기업이 전환일 이전에 과거회계기준(GAAP)에 따라 장기외화화폐성항목(Long term foreign currency monetary item)에서 생기는 외화환산차이를 관련 자산 및 부채의 기대 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Ind AS를 채택한 이후에도 동 회계처리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7) IAS 23 차입원가

IFRS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차입원가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외환차이 중 적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반면, Ind AS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불리한 외환차이는 기능통화 차입금의 이자비용과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의 차이를 한도로 차입원가에 포함한다.
-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유리한 외환차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인식한 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에서 조정한다.

(8)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IFRS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Close members of the family)으로 자녀 및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와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를 예시하고 있다. Ind AS는 여기에 더하여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를 개인의 가까운 가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9) IAS 27 별도재무제표

IFRS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원가법, 상각후원가, 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Ind AS는 지분법의 회계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10)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피투자자 재무제표가 투자기업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다면, 투자자는 이러한 회계차이를 조정한 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자와 피투자자간 회계정책의 일치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IAS28과 달리 Ind AS 28은 실무적으로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는('Unless Impractical to do so') 투자자와 피투자자간 회계정책의 차이를 인정한다.

한편,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의 회계처리에도 두 기준서간 차이가 존재하는데, IAS 28은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을 수익에 포함하는 반면 Ind AS 28은 자본잉여금(Capital Reserve)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11) IAS 32 금융상품: 표시

IAS 32는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자본요소와 부채요소 구분에 있어 발행자가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해 수취할 현금이 발행자의 기능통화 입장에서 변동하는 경우 이러한 전환권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분류된다.

반면, Ind AS 32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교환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이 어느 통화로든 금액이 확정 가능하다면 이러한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 (12) IAS 38 무형자산

Ind AS는 Ind AS전환일 이전 도로건설 사업시행자가 건설대가로 인식한 무형자산의 경우, 과거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산한 상각비의 인식을 허용한다. IFRS는 이러한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 (13) IAS 40 투자부동산

IFRS는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부동산을 측정할 것으로 요구한다(원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공시가 요구됨). 반면, Ind AS는 투자부동산의 측정 방법으로 오직 원가모형만의 사용만을 허용한다.

#### (14) IAS 101 최초채택

IAS101는 개시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의 간주원가로서 전환일의 공정가치 또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Ind AS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허용한다.

IFRS는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항목으로 인식하였으나 IFRS의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FRS 3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사업결합을 취득으로 분류하고 IAS 38 '무형자산'에 따른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항목은 영업권으로 분류한다. 반면, Ind AS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자본잉여금 잔액의 한도내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15) IFRS 3 사업결합

IFRS 3 사업결합 기준서는 해당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른 IFRS기준서에서도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 거래에 적용되는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준서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용할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Ind AS는 동일지배 사업결합거래에 적용할 회계처리 방법으로 아래의 지분통합법(pooling of interest method)을 규정하고 있다.

- 사업결합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 사업결합 전 재무제표에서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가 식별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자산과 부채의 인식으로 인한 어떠한 조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결합 참여기업 간 회계정책에 차이가 있는 경우 회계정책 차이 조정 후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개시일부터 사업결합거래가 있었던 것을 가정하여 비교 표시되는 재무정보를 수정한다.

(16)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는 위약금 (Penalties)을 거래가격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변동대가로서 명시하고 있다. 반면, Ind AS는 변동대가의 예시 항목에서 위약금을 삭제하고 위약금이 계약 상 거래가격의 결정에 내재된 (인도지연에 따른 판매가격 감액조건 등) 경우에만 변동대가에 포함하고 이외 다른 형태의 위약금은 거래가격 산정에 고려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17) IFRS 16 리스

IFRS는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nd AS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 적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측정규정은 Ind AS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IFRS는 이자지급액을 영업활동 또는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기업에 제공하며,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을 다른 이자지급액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와 일관되게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nd AS는 이자지급액을 재무활동 현금유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도 재무활동 현금유출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3-2-3-2. IGAAP vs IFRS

IGAAP과 IFRS와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IFRS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이를 변경한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반면, IGAAP은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효과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전기오류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IFRS는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GAAP은 오류수정효과의 당기손익보고를 허용한다.

(3) 수익의 인식

IFRS는 자산의 통제에 기반한 5단계 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IGAAP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계약에 장려금 (incentive) 등이 포함된 경우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변동대가로서 계약개시시점에 포함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 보고기간 이를 조정한다. IGAAP은 성과조건 등의 충족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정도로 계약이 진행되어 장려금 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때 이를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또한,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경우 IFRS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계약대가를 조정하지만 IGAAP은 이러한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4) 계약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IFRS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형태로 상각한다. IGAAP은 이러한 원가의 자산화를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시점의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 (5) 금융상품의 표시 및 관련 이자, 배당 등 회계처리

IFRS는 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금융상품의 분류결과에 따라 관련된 이자, 배당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IGAAP은 금융상품의 계약의 실질과 관계없이 금융상품의 법적형식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 따라서, 누적적 상환우선주의 상환원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된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한다.

#### (6)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IFRS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와 달리 IGAAP은 금융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유동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외에는 유동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투자자산은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비유동투자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일시적이지 않은 가치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를 차감)

#### (7) 금융자산의 손상

국제회계기준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등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IGAAP은 금융자산의 손상에 적용할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주로 과거 경험률, 채권연령분석 등을 통해 채권의 손상금액을 추정한다.

#### (8) 확정급여제도

IFRS는 보험수리적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IGAAP은 보험수리적 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IGAAP은 퇴직급여채무를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반면, IFRS는 우량회사채에 대한 거래 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할인한다.

#### (9) 리스

IGAAP은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만, 운용리스 이용자는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IFRS는 소액리스와 단기리스를 제외하고는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 (10) 주당이익

IFRS는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GAAP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중단영업에 대한 주당손익을 계산하고나 공시할 필요가 없다.

#### (11) 특별손익 항목

IFRS는 특별손익항목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고 빈번하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사건이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와 주석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IGAAP은 특별손익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러한 손익의 영향을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한다.

(12) 연결범위

IGAAP은 연결범위의 판단기준으로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보유 및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배기구에 대한 통제능력을 사용한다. IFRS는 연결범위 판단기준으로서 실질 지배력을 강조하며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등을 고려한다.

또한, IGAAP은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투자주식 등의 연결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연결면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13) 공동기업

국제회계기준은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반면, IGAAP은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비례연결을 적용한다.

(14)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국제회계기준은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IGAAP은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만을 허용하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5년 이내 기간에 상각하되 종속회사 취득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손상테스트만을 수행한다.

(15) 영업권 손상

IGAAP에서는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그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최소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여 수행한다. IFRS는 손상검사 목적으로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를 기업이 내부관리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수준으로 하되 IAS 8 '영업부문' 기준서의 문단 5에 따라 정의되는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은 단위로 정의한다.

IGAAP은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업권의 손상차손 환입을 허용한다. 반면, IFRS는 기존에 인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 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16) 총당부채의 측정

IFRS는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당부채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IGAAP은 해체, 원상복구 등 의무이행에 예상되는 지출이 관련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가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17) 투자부동산

IFRS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서가 존재한다. IGAAP에는 투자부동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유형자산 기준서를 준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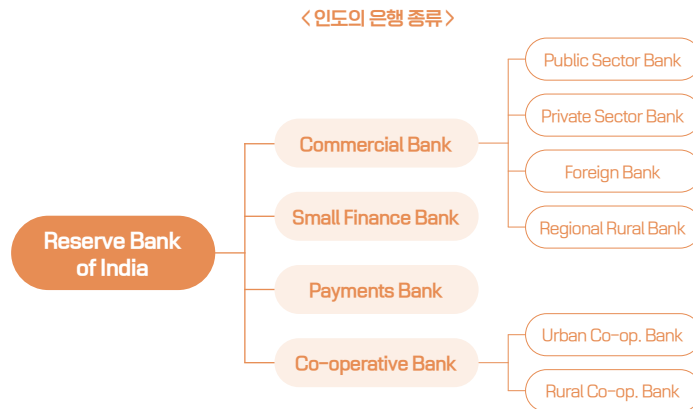


### 3-3 금융

#### 3-3-1. 인도의 은행

인도의 은행은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은행(RBI) 외에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소금융은행(Small Finance Bank), 지급은행(Payment Bank),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 등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은행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해당되며 상업은행은 다시 공영은행(Public Sector Bank), 민간은행(Private Sector Bank), 외국계은행(Foreign Bank), 지방은행(Regional Rural Bank)으로 구분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Payments Bank, Small Finance Bank도 Commercial Bank의 한 종류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료원: 신한은행, 인도 중앙은행(www.rbi.org.in)

##### (1) 공영은행 (Public Sector Bank)

공영은행은 정부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은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Government Bank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인도를 대표하는 은행인 State Bank of India(SBI), Punjab National Bank(PNB)가 대표적인 공영은행이다. 인도의 금융 건전성 관련하여 인도 은행들의 NPA\*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부실자산을 의미하는 NPA의 비율은 공영은행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인도 정부에서는 금융 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2019년 이후 부실화된 은행들을 정리하고 있다. 공영은행의 보다 안정적인 성과를 위하여 정부 주도로 공영은행 간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영은행의 숫자는 27개에서 12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 Non-Performing Asset, 경제학에서는 무수의 자산을 의미하고 금융에서는 이자나 원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되어 대출의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분류된 자산을 의미한다.

##### (2) 민간은행 (Private Sector Bank)

민간은행은 민간 자본이 소유한 은행으로 HDFC Bank, ICICI Bank, Axis Bank, Kotak Mahindra Bank가 대표적이며 21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다. The Banker\*에서 발표한 TOP 1000 World Banks 2024에 따르면 민간은행인 HDFC Bank가 41위, 공영은행인 State Bank of India가 44위, 민간은행인 ICICI Bank가 82위로 100위권 안에 랭크되었으며 Axis Bank, Bank of Baroda, Kotak

Mahindra Bank가 그 뒤를 이어 1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계 500위권 안에 랭크된 인도 은행은 공영은행 9개, 민간은행 10개로 모두 19개이다.

\* The Financial Times에서 소유한 월간지로 매년 Global Top 1000 Bank를 발표한다.

인도 주요 은행과 한국 주요 은행의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은행 순위는 Tier 1 Capital 기준이다.

### 〈주요 은행 순위〉

Rank	Bank Name	Country	Rank	Bank Name	Country
41	HDFC Bank	India	169	Canara Bank	India
44	State Bank of India	India	217	Bank of India	India
58	KB Financial Group	South Korea	220	BNK Financial Group	South Korea
64	Shinhan Financial Group	South Korea	230	IndusInd Bank	India
74	Hana Financial Group	South Korea	247	Indian Bank	India
76	Korea Development Bank	South Korea	329	KakaoBank	South Korea
82	ICICI Bank	India	346	IDBI	India
90	Woori Financial Group	South Korea	347	DGB Financial Group	South Korea
92	Industrial Bank of Korea	South Korea	353	Yes Bank	India
100	NongHyup Financial Group	South Korea	386	IDFC FIRST Bank	India
107	Axis Bank	India	406	JB Financial Group	South Korea
140	Bank of Baroda	India	409	Federal Bank	India
143	Kotak Mahindra Bank	India	456	Central Bank of India	India
156	Punjab National Bank	India	491	Bandhan Bank	India
157	Union Bank of India	India	493	Indian Overseas Bank	India

자료원: The Banker 'Top 1000 World Banks 2024'





### (3) 외국계은행 (Foreign Bank)

외국계은행은 외국 자본이 소유한 은행을 말하며 인도에는 총 44개의 은행들이 진출해 있다. 인도에서는 100% 외국자본의 은행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현지 은행으로 설립될 경우 지점인 경우보다 세율이 낮아지고 지점을 자유롭게 개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충족해야 할 규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부담도 있어서 대부분의 외국계은행들은 현지법인(Wholly owned subsidiary)이 아닌 지점(Branch)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진출 형태가 지점(Branch)인 경우에는 지점의 개점과 폐점이 중앙은행(RBI) 사전 승인 사항으로 자유롭게 않아 몇몇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개 미만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으로는 신한은행이 1996년에 뭄바이 지점을 오픈하면서 처음 인도에 진출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2006년 뉴델리 지점, 2010년 푸나말리 지점, 2014년 푸네 지점을 개점하였고 2016년에는 아메다바드와 랑가레디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여 총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2년에 첸나이에 첫 지점을 개점하였고 2017년 구르가온, 2018년 뭄바이에 지점을 오픈하였다. 그리고 2024년 아메다바드와 푸네에 지점을 차례로 개설하여 현재 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뉴델리(2015년)에 1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노이다(2023년)에 1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첸나이, 2019년 구르가온에 진출하여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구르가온(2019년)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24년 10월 푸네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2024년 9월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인도에 진출하였고 수출입은행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한국계 은행 현황>

은행명	채널 형태	채널 수	지역(개설연도)
신한은행	지점	6개	뭄바이(1996년) / 뉴델리(2006년) / 푸나말리(2010년) / 푸네(2014년) / 아메다바드(2016년) / 랑가레디(2016년)
우리은행	지점	5개	첸나이(2012년) / 구르가온(2017년) / 뭄바이(2018년) / 아메다바드(2024년) / 푸네(2024년)
KEB하나	지점	2개	첸나이(2015년) / 구르가온(2019년)
국민은행	지점	3개	구르가온(2019년) / 푸네(2024년)
기업은행	지점	1개	뉴델리(2015년)
농협은행	지점	1개	노이다(2023년)

자료원: 신한은행

### (4) 지방은행 (Regional Rural Bank)

지방은행은 Andhra Pragathi Grameena Bank, Telangana Grameena Bank, Baroda Gujarat Gramin Bank 등 43개 은행이 등록되어 있다.

### (5) 기타

이 외에 Small finance Bank는 11개, Payments Bank는 6개의 은행이 등록되어 있다.

위 은행의 수는 모두 2024년 8월 31일 기준 RBI로부터 차입 및 예치가 가능한 자격을 득한 Scheduled Bank 기준 이다.

### 3-3-2. 법인의 계좌 거래

인도에서의 사업자(business entity) 형태는 개인사업자에서 파트너십, 사무소, 주식회사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된 진출 형태인 비공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Office), 프로젝트사무소(Project Office) 등 3가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계좌개설 및 계좌거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3-3-2-1. 예금의 종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는 예치 자금의 인출 제한에 따라 크게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과 저축성예금(Time Depos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예금주의 요청(on-demand)으로 인출이 가능한 예금 상품을 의미하며 예금주의 인출이 자유로운 만큼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거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축성예금은 일정 기간 자금을 예치하고 약정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예금 상품을 의미하며 사전에 예치 기간을 약정하므로 요구불예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인도에서는 요구불예금은 크게 Saving Account와 Current Account로, 저축성예금은 Fixed Deposit과 Recurring Deposit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Saving account는 거래 회수 및 금액 등 거래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반면 Current Account는 거래에 제한이 없고 이자도 발행하지 않는다. Saving Account는 근로소득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개인만 개설이 가능하고 Current Account는 개인사업자나 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개인 및 법인 모두 개설이 가능하다. Saving Account는 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르는 Overdraft 대출 한도 설정이 불가하지만 Current Account는 대출 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 (2) 저축성예금(Term Deposit)

Fixed Deposit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는 거치식 예금으로 예치 금액과 예치 기간에 따른 약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예금의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를 허용한다. Recurring Deposit은 일정 금액을 일정 주기로 납입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예치 기간에 따른 약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는 허용하지만 일부해지는 제한된다. Recurring Deposit은 납입 건별로 Fixed deposit을 신규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건별 납입액의 예치기간에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금액을 계산한다.



### 3-3-2-2. 법인의 계좌 개설

인도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LO), 지점사무소(BO), 프로젝트사무소(PO)의 경우에도 인도에서의 운영비를 모기업으로부터 수취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법인 계좌’는 자연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이 개설한 계좌를 표현한 것으로 계좌의 특정 종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1) 법인의 계좌 개설 필요 서류

법인이 개설 가능한 요구불예금인 Current Account의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은행에 따라라도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의 형태가 Private Limited Company인 경우로서 신한은행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① 계좌개설 신청서 (은행 양식)
- ② 이사회 의사록 원본 (Board Resolution, 계좌의 개설 및 서명권자 선임에 대한 결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④ 정관 사본 (Memorandum & Article of Association)
- ⑤ PAN 사본 (Permanent Account Number) 및 GST 확인서 (GST Registration Number)
- ⑥ 회사 주소 증빙 (Proof of Address of Company)
- ⑦ 서명권자의 사진 1 매
- ⑧ 서명권자 본인 확인 및 주소 증빙 서류 (KYC documents of authorized signatory)
- ⑨ 이사회 의사록 서명 이사(Director) 각각의 본인확인·주소증빙 서류 (KYC documents of directors)
- ⑩ 실질소유주의 본인 확인 및 주소 증빙 서류 (KYC documents of beneficial owner)

①에서 ⑥은 회사와 관련된 서류이고 ⑦에서 ⑩은 회사를 대표하는 서명권자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에 대한 서류이다. ②이사회 의사록은 법인 계좌의 개설에 대한 안건과 계좌의 서명권자 선임에 대한 안건의 결의가 그 내용이 되며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⑤GST 확인서는 법인 설립 후 첫 계좌 개설인 경우에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좌 개설 후 보완 제출하며 된다. ⑥주소 증빙의 경우 법인 설립과 함께 계좌 개설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③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인과 관련된 본인확인 및 주소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KYC 항목에서 별도로 설명하였다.

#### (2)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

법인의 계좌 거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거래 권한을 부여 받은 자연인의 서명으로 성립되며, 이러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을 서명권자 authorized signatory라고 한다. 서명권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이사회 의사록에 명시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명권자의 서명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서명권의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하였다.

#### (3) 실질 소유주(Beneficial Owner)

Beneficial owner는 회사의 실질 소유주를 의미한다. 중앙은행(RBI)은 KYC 규정\*에서 ‘고객이 법인인 경우에 Beneficial owner는 홀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또는 복수의 법인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배적인 소유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다른 수단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배적인 소유 지분(controlling ownership interest)은 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지배(control)는 주식 지분이나 경영권 또는 주주총회 결의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경영진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Beneficial owner는 복수의 타 법인을 통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도 법인의 주주 현황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한 개인을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인도 법인의 최대 주주, 최대 주주가 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 개인 주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법인과 거래에 있어서 Beneficial owner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도 도입하고 있다.

\* RBI Master Direction – Know Your Customer (KYC) Direction, 2016 (updated as on August 09, 2019)

#### (4) KYC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약어로 한국에서는 고객알기제도라고 한다. 고객알기제도(KYC)는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 ‘고객주의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 Na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인도에서는 금융회사가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거래에 있어서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 대리인(Power of Attorney holder)에 대해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받아 고객주의의무(CDD)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을 3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 2년, 5년, 10년에 한 번씩 KYC 서류를 다시 제출 받아 확인하는 Re-KYC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신분과 주소 정보를 포함한 OVD\*
- ② 최근 사진 1매
- ③ PAN
- ④ 금융회사의 KYC 규정에 따른 필요 추가 서류

\* OVD: Officially Valid Document. KYC 규정에서는 OVD의 종류로 passport, driving license, proof of possession of Aadhaar number, Voter's Identity Card, job card issue by NREGA, letter issued by National Population Register 등을 열거하고 있다. OVD는 여러 종류의 신분증 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 개인의 신분과 주소 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주소 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로 간주되는데, 제출된 OVD가 현재 주소로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전기/전화/가스 등 공과금 영수증,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을 주소 증빙(POA: Proof of Address)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현 주소로 갱신된 OVD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국적자가 제출한 OVD에 주소 상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정부 부서에서 발급한 서류와 주인도 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레터를 주소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위 OVD 중 제출 가능한 신분증은 Aadhaar 카드와 여권 정도가 있다. Aadhaar 카드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필요하였으나 이후 의무로서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여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에는 주소 기재란이 있기는 하지만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수기로 기재되는 것으로 신분증의 주소 정보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KYC 관련 규정에서는 외국 정부 부서에서 발급한 주소가 기재된 서류와 주인도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레터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은행들의 실무적 접근법이 달라 요구하는 주소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다.



### 3-3-2-3. 서명권의 행사 방식 (Mode of Operation)

은행과의 계좌 거래를 위해 고객은 은행에 서명을 등록하게 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을 행사하는 서명권자의 서명을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자는 1인일 수도 있고 2인 이상의 다수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명권의 행사 방식은 아래와 같다.

〈서명권 행사 방식의 종류〉

Mode of Operation	내용
Single	서명권자 1인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
Jointly	서명권자 모두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
Jointly or Survivor	서명권자 모두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며 서명권자 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남아 있는 서명권자 모두의 서명만으로 거래가 지속되는 방식
Either or Survivor	서명권자 2인 중 1인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며 서명권자 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남아 있는 서명권자의 서명만으로 거래가 지속되는 방식
Anyone (Severally) or Survivor	복수의 서명권자 중 1인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며 서명권자 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남아 있는 서명권자의 서명만으로 거래 지속되는 방식

자료원: 신한은행

위 서명권 행사 방식에서 Survivor를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은 주로 개인 계좌인 경우로 국한된다.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예금주의 사망 등 만일의 경우까지 감안하여 서명권 행사 방식을 정해 둘 필요가 있겠지만, 법인 계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법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서명권자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서명권 행사 방식은 주로 single, jointly, severally(Either/Anyone)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명권의 행사 방식은 은행과 고객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형태의 서명권 행사 방식도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서명권자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지정하고 각 그룹에서 1명씩 총 2명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인 계좌의 서명권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서명권자의 변경을 결의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서명권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새로 선임된 서명권자의 서명과 함께 신분증, 주소 증빙, 사진 등 신임 서명권자의 KYC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3-3-2-4. 지점사무소(BO), 연락사무소(LO), 프로젝트사무소(PO)의 계좌 거래

앞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된 진출 형태 중 비공개 주식회사(private limited)를 기준으로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연락사무소(LO), 지점사무소(BO), 프로젝트사무소(PO)의 설립, 계좌 거래의 제한사항, 사무소의 추가 설치 및 폐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계좌의 입금·지급 거래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연락사무소(LO), 지점사무소(BO), 프로젝트사무소(PO)의 경우에는 계좌 입금·지급 거래에 대해서 허용되는 거래 사유를 두어 제한하고 있다.

#### (1) BO/LO/PO의 설립

해외 비거주자가 인도에 BO/LO/PO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AD Category-I bank(\*1) (이하 AD은행)를 통해 Form FNC 및 Form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 서류(\*2)를 제출하여 중앙은행(RBI)으로 신청하며 BO/LO의 경우에는 Unique Identification Number(UIN)가 승인 레터와 함께 발급된다. 은행의 계좌 개설은 UIN을 득한 후 가능하다. BO는 승인 유효 기간이 따로 없으나 LO의 경우에는 승인 유효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매 3년마다 연장 승인을 득해야 한다. PO의 유효 기간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기간으로 한다.

(\*1) AD Category-I bank: RBI에서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에 따라 허가한 3가지 외환거래 사업자 범주 중 하나. AD는 Authorized Dealer를 의미하며 RBI는 AD Category-I Bank, AD Category-II, Full Fledged Money Changer(FFMC)로 구분하고 각 범주 별 취급 가능 업무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2) Form FNC에서는 공증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과거 5년(BO)/3년(LO) 감사보고서, 은행거래확인서 등을 제출 서류로 정하고 있다.

BO와 LO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충족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BO의 경우에는 직전 5년 연속으로 흑자이고 순자산이 USD 100,000 이상, LO의 경우에는 직전 3개년 연속으로 흑자이고 순자산이 USD 50,00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기업이 재무건전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의 조건 충족 여부에 대체할 수도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기업이 발행한 Letter of Comfort(LOC)를 제출하여 재무건전성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BO/LO/PO의 설립의 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 6개월 이내에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AD은행은 6개월 추가 연장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 (2) BO/LO/PO의 계좌 거래

LO는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계좌의 추가 개설은 RBI의 사전 승인사항이다. LO는 연락사무소로서의 활동 외 영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계좌의 입금·지급이 자유롭게 않으며 허용된 입금·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입금

- 사무소 운영비 목적의 해외 본사로부터의 해외 송금
- LO의 계좌에서 또는 해외 본사의 해외 송금을 통해 직접 납부되었던 보증금의 환급
- LO의 계좌에서 지급된 세금 등의 환급
- LO의 자산 매각 대금

##### ② 지급

- 사무소의 현지(local) 경비 목적

LO 계좌의 지급 사유는 오직 현지 경비 사용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LO의 경우에는 사무소를 청산하는 경우에만 해외 본사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BO는 영업 활동이 허용되므로 계좌의 입금·지급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관련 규정\*에서는 외국 본사로부터의 해외 송금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수취 대금을 입금할 수 있고 BO의 운영 경비와 이익금의 해외 송금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BO의 이익금 송금은 인도에서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RBI Master Direction - Establishment of Branch Office (BO)/ Liaison Office (LO)/ Project Office (PO) or any other place of business in India by foreign entities (updated as on March 29, 2019)

① 당해 년도 감사보고서

② 아래 내용들에 대한 회계사(CA: Chartered Account)의 확인서

- 송금 대상 이익금의 산출 근거
- 송금 대상 이익금이 허용된 활동을 통해 발생되었다는 확인
- 송금 대상 이익금이 BO의 자산 재평가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

PO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대리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결제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계약에서 외화 결제를 명시한 경우에는 외화 계좌의 개설이 허용된다. 외화 계좌는 미 달러화 계좌와 본국 통화 계좌의 개설이 허용된다. 지급은 프로젝트 관련 지출이 허용되고 입금은 프로젝트 발주처로부터의 입금과 해외 본사로부터의 입금만 가능하다. PO의 외화 계좌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PO는 아래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PO의 청산 이전에 이익금을 해외 본사로 송금할 수 있다.

- ① 소득세 등 인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남겨 두었다는 감사인(Auditor)/회계사(CA)의 확인서
- ② 해외 송금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수취하겠다는 PO의 각서

BO/LO/PO는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예금의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만기가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저축성 예금(term deposit)으로 예치할 수 있다.

(3) BO/LO/PO의 사무소 추가 설립

사무소의 추가 설립은 동부/서부/남부/북부 지역에 각 하나씩 허용되며 복수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대표하는 Nodal Office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사무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Form FNC를 새로 제출해야 하며 이전 신청 시 제출하였던 서류에서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사무소의 개수가 4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무소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

(4) BO/LO/PO의 폐쇄

BO/LO/PO 계좌는 사무소 폐쇄 신고 후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후 잔액은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BO/LO/PO의 폐쇄 신고는 아래의 서류를 AD 은행으로 제출하여 신청한다.

① BO/LO의 경우 사무소 설립 승인 레터 사본

② 감사인(Auditor)의 확인서:

- 송금 대상 금액의 산출 근거 및 대차대조표, 자산 처분 내역
- 직원들의 퇴직금 및 기타 수당 등 인도에서의 모든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는 확인
- 수출대금 등 아직 인도로 들어오지 않은 해외 발생 소득이 없다는 확인

③ 인도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고 송금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확인

④ BO/LO의 경우 Registrar of Companies(ROC)의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준수 보고서

⑤ AAC\* 제출에 누락이 없을 것

\* Annual Activity Certificate, BO/LO/PO는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AAC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통합된 AAC를 제출한다.

⑥ RBI/AD은행의 승인 심사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서류

### 3-3-2-5. 법인 계좌 개설 제한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2000년 이후로 은행이 법인 고객의 Current account 개설에 응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타행에 보유한 대출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 받도록 규제해 왔다. 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좌의 개설이 금지되며 대출 보유 은행으로부터 NOC(\*1)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좌 개설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새로운 circular(\*2)를 통해 대출을 보유한 법인이 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여신 보유 은행의 NOC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조건을 삭제하고 대출 보유 은행 이외의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고 2022년 4월 개정된 circular 을 발표하였다.

(\*1) RBI Circular DOR.No.BP.BC/7/21.04.048/2020-21 (August 6,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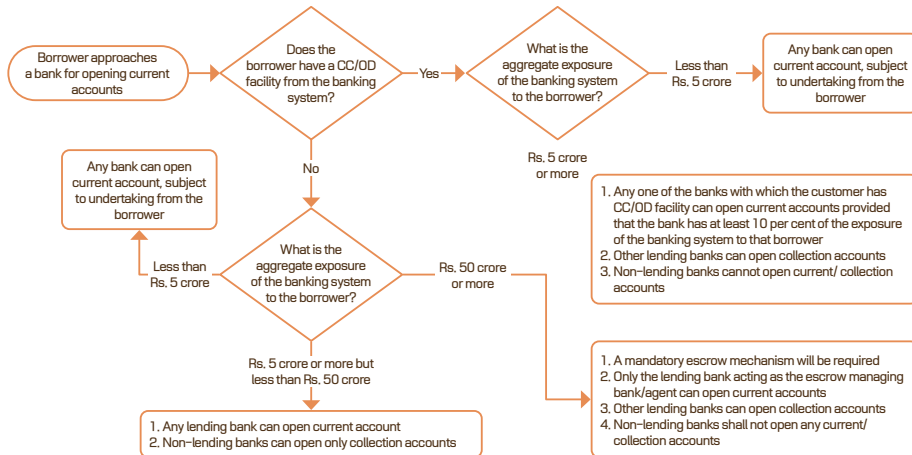
(\*2) RBI Circular DOR.No.BP.BC/7/21.04.048/2020-21 (August 6, 2020)

관련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대출이 5 Cr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은행에서 Current Account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이 보유한 대출이 5 Cr 이상일 때는 CC(\*1)나 OD(\*2) 보유 여부에 따라 개설 여부가 달라진다. 법인이 CC/OD가 있고 총 대출이 5 Cr 이상일 때는 총 대출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CC 나 OD 를 취급한 금융기관만 Current Account 개설이 가능하고 대출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은 Collection Account 만 개설 가능하다. 대출이 없는 은행은 Current Account 개설이 불가하다. 법인이 CC/OD가 없을 경우 대출 금액 5 Cr 이상 50 Cr 미만이면 대출이 있는 은행에서는 Current Account 개설이 가능하고 대출이 없는 은행에서는 Collection Account 의 개설만 허용된다. 대출이 50 Cr 이상이 경우 대출과 Escrow 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Current Account 개설이 가능하며 대출이 있는 은행은 Collection Account 개설만 가능하다. 대출이 없는 은행은 Collection Account 개설이 불가하다.

(\*1) Cash Credit, 기업의 운전자금 목적의 단기 대출 상품

(\*2) Overdraft facility, 계좌의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약정한 한도까지 인출이 허용되는 대출 상품임.  
한국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Current Account 개설 플로우 차트>



자료원: RBI (Circular DOR.CRE.REC.23/21.08.008/2022-23 (dated April 19, 2022))





### 3-3-3. 외환 거래

#### 3-3-3-1. 인도 법인의 자본금 송금 수취

인도의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 또는 개인 거주자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자본금을 송금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경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가 역외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다. 이 외에 한국은행 신고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필요 서류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한국 해외직접투자 신고 필요 서류〉

징구서류	비고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최초 신고 시
2)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서	거주자간의 기 해외 설립법인의 지분 양수도 시
5) 납세증명서	관할세무서발급 (유효기간이내)
6) 설명확인증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7) 주민등록등본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고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발급)
8) 합작투자계약서	단독투자가 아닌 합작투자의 경우
9) 지분양수도계약서	기 설립법인의 지분 양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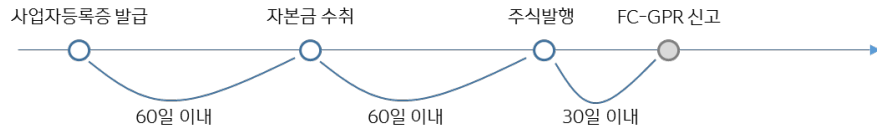
자료원: 신한은행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인도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자본금 납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은행(RBI)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FIRMS(Foreign Investment Report and Management System)(\*1)를 통해 Form FC-GPR(\*2)을 제출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주식 취득)를 신고해야 한다. 자본금 납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본금을 송금인(투자자)에게 다시 반환 송금하여야 한다.

(\*1) <http://firms.rbi.org.in>

(\*2) 인도 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C-GPR (Foreign Currency - Gross Provisional Return)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 발행된 회사의 주식이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에게 양도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FC-TRS(Foreign Currency Transfer of Shares) 신고를 해야 한다.

### <FC-GPR 신고기한>



자료원: 신한은행

인도 법인이 FIRMS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저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저 등록은 FRIMS에서 ID 신청, RBI로부터 비밀번호 발급, Entity Master 양식 제출의 절차로 진행된다. FC-GPR 양식 제출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송금 받은 은행으로부터 FIRC와 KYC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FIRC는 송금인, 수취인, 송금일, 송금통화, 송금금액 등 해외송금 수취 정보를 기재한 해외송금 수취 확인서(Foreign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이다. KYC 서류는 해외 송금인의 이름과 주소 등 KYC 정보를 기재한 서류이다. 송금 수취 은행은 수취인의 신청으로 송금 은행 앞으로 송금인에 대한 KYC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아 수취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 <FDI 신고 온라인 포털 FIRMS>



자료원: <http://firms.rbi.org.in>



FC-GPR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주식 미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반환 송금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FC-GPR 필요 서류>

업무구분	필요서류
FC-GPR 신고	1) Declaration Letter (RBI 양식) 2) Chartered Accountant Certificate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 및 주당 가치 확인) 3) Company Secretary Certificate (RBI 양식) 4) Board Resolution (if applicable as per RBI guidelines) 5) FIRC, KYC Certificate
주식 미발행 자본금 반환송금	1) Form 15CA / 15CB 2) Board Resolution (주식 미발행 사유 및 미발행 안건 결의) 3) Request Letter for remittance (은행 송금 신청서) 4) Form A2 (RBI 양식) 5) Letter from Investor (주식 미발행 및 자금 반환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

자료원: 신한은행

### 3-3-3-2. 수입 결제

수입 거래는 인도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관리하며 AD은행은 해당 수입 거래가 Foreign Exchange Management (Current Account Transactions) Rules, 2000,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중앙은행(RBI)의 Directions에 따라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중앙은행(RBI)의 Master Direction - Import of Goods and Service (updated as on October 28, 2020)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입 대금 결제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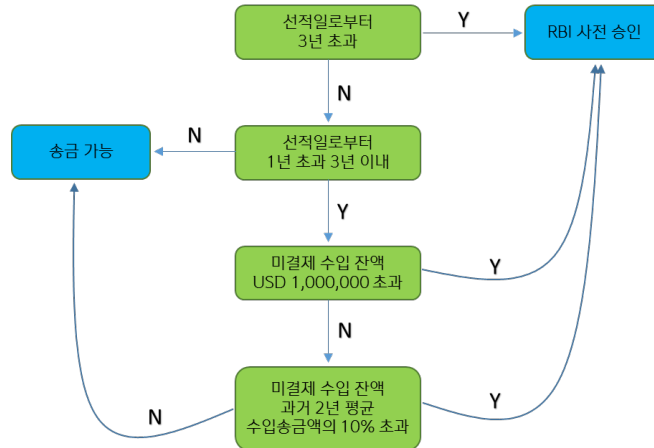
일반 수입의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하며 품질불량, 수량부족, 합의조건 미이행 등 수출입 관련 분쟁 또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AD은행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수입 결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수출입 계약에서 결제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연 이자의 지급은 선적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5월 22일부로 2020년 7월 31 일 이전에 선적된 수입 건에 대한 결제 기한은 기존 선적일로부터 6개월에서 선적일로부터 12개월로 완화되어 적용됨.

1년을 초과하여 수입 결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거래 관련하여 진행 중인 조사가 없고 수입자의 미결제 수입 잔액이 미화 1백만불 또는 직전 2년 평균 수입 결제액의 10%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수입 결제 송금을 위해서 AD은행을 통해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선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의 송금인 경우
- ②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수입 후 결제되지 않은 미결제 잔액이 미 달러화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미결제 수입 잔액이 과거 2년 동안의 평균 수입 결제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1년 초과 수입건의 송금 가능 여부 >



자료원: 신한은행

후불 약정(Deferred payment arrangement)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결제 기한이 최대 3년\*까지 허용되며 Trade credit으로 간주하여 중앙은행(RBI)의 Master Circular –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and Trade Credits의 적용을 받는다. Trade credit에는 대표적으로 Supplier's credit과 Buyer's credit이 있으며, 수출입 거래의 후불 약정을 위한 신용을 누가 제공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한다. 수입자가 금융기관이나 은행 신용장 등을 이용하여 수출자에게는 즉시 지급하고 수입자는 금융기관이나 은행으로 나중에 지급하는 형태가 Buyer's credit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수출상이 결제 조건에 후불 결제가 가능토록 신용을 주는 경우가 Supplier's credit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Master Direction – Import of Goods and Service (updated as on October 28, 2020)에서는 후불 약정 수입인 경우 최대 5년까지 허용되며 Trade Credit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한편 Trade Credit 관련 규정(Master Circular –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and Trade Credits)에서는 자본재(capital goods)인 경우 최대 3년, 비 자본재(non-capital goods)인 경우에는 운전주기(operating cycle) 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로 허용하고 있다.

## (2) 외화 현찰의 휴대 반입

외국 통화를 해외에서 인도로 반입하는 것은 외국 통화의 수입에 해당된다. 별도의 신고 없이 해외로부터 휴대 반입 가능한 외화 한도는 현찰과 여행자수표 등을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USD 10,000 또는 그 상당액 이내이며 현찰 기준으로는 USD 5,000 또는 그 상당액 이내이다. 이를 초과하여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항 세관에 Currency Declaration Form(CDF)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3자 수입 결제 (Third Party Payment)

제3자에게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 수입 결제는 3자 계약(tripartite agreement)이 체결되고 취소불능 구매주문(irrevocable purchase order)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취소불능 구매주문서와 invoice에 제3자가 명시되어 있는 등 제출된 증빙서류의 정황으로 제3자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자 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제3자 지급을 위해서는 invoice에 제3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Bill of Entry\*에도 제3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 Bill of Entry(BoE), 수입 물품의 통관 관련 서류로 수입 물품과 수입 결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입에 대한 증빙서류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수입통관필증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사전 송금 (Advance Remittance)

수입 물품(goods)의 통관 이전에 수입 대금을 송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를 사전 송금(advance remittance)이라고 한다. 사전 송금 금액이 USD 200,000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소재한 잘 알려진 글로벌 은행\*에서 발행한 standby 신용장/ 보증서 또는 글로벌 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복보증서(counter-guarantee)로 인도의 AD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가 요구된다.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이러한 은행 보증서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AD은행은 수입자의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수입의 진성거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대 USD 5,000,000 이내에서 이러한 신용장·보증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수입 대상이 서비스인 경우에는 USD 500,000 또는 그 상당액 이내에서 사전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 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소재한 잘 알려진 글로벌 은행에서 발행한 standby 신용장/보증서 또는 글로벌 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복보증서(counter-guarantee)로 인도의 AD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가 요구된다. 하지만 서비스 수입의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의 면제가 가능하지 않다.

\* 규정에서는 International bank of repute situated outside India라고 표현하고 있다.

#### (5) 수입 서류/환어음의 제시

수입 서류와 환어음은 수출자의 거래 은행으로부터 수입자의 거래 은행으로 직접 제출되어야 한다. 수입자가 직접 수신하여 은행에 제출한 환어음에 대해서는 송금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환어음이 USD 3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② 환어음이 외국 본사로부터 인도 자회사(wholly-owned Indian subsidiary)로 제시된 경우
- ③ Foreign Trade Policy에서 정의한 Status Holder Exporters, Special Economic Zone 소재의 법인, 100% 수출 법인 등이 환어음을 직접 수신하여 제시하는 경우
- ④ 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private limited)가 환어음을 직접 수신하여 제시하는 경우
- ⑤ AD은행은 수입자의 재무상태 및 거래 이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 서류가 수출자의 거래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 수출자로부터 AD은행(수입자의 거래 은행)으로 직접 제출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AD은행은 이러한 형태의 거래에 앞서 해외 수출자에 대한 해외 은행의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하지만 invoice 금액이 USD 300,000 이내인 경우 수입자의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진성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신용조사 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6) 수입 증빙

수입 결제 송금을 위해서는 AD은행으로 수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물품의 수입 전에 수입 대금을 송금하는 사전 송금 방식의 경우에는 향후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수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수입 결제 송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 증빙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수입 증빙으로서 Bill of Entry(BOE) 등 수입 관련 서류를 하드카피로 제출해야 했으나 2016년 12월 1일 이후로는 수출입 정보의 전산화로 하드카피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AD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제공받은 BOE 정보로 수입정보처리시스템(IDPMS)에서 관련 수입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 물품이 우편(post)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행한 Customs Assessment Certificate 또는 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한 Postal Appraisal Form이 수입 증빙이 될 수 있고, 택배(courier)의 방법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세관에 신고한 Courier Bill of Entry를 수입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 물품이 특별경제구역(SEZ), 자유무역지역(FTWZ)\*, 보세구역(Custom bonded warehouse)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Ex-Bond Bill of Entry 등이 제출 가능하다.

\* Free Trade Warehousing Zone: 인도 정부는 수출입 촉진을 위해 2005년에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2006년에 특별경제구역규정(Special Economic Zone Rules 2006)을 제정하였다. FTWZ는 SEZ의 한 형태로서 해당 지역이 국제 무역의 허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역 및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외(foreign

territory)로 간주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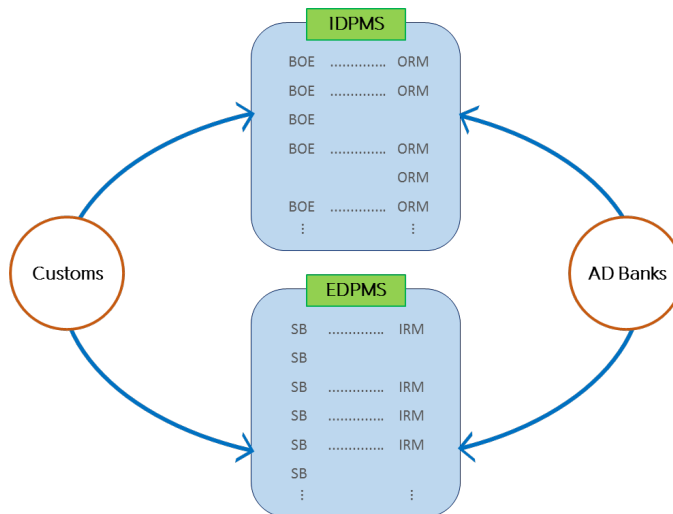
순 자산이 100크로 이상이고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인 경우 송금액 USD 1,000,000 또는 그 상당액 이내에서 BOE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 송금건에 대한 물품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CEO 또는 감사인(Auditor)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데이터의 수입, 이메일/팩스를 통한 설계/디자인의 수입 등 무형물의 수입(Non-physical Import)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 결제를 위해 소프트웨어/데이터/설계/디자인이 수입자에 의하여 수입되었다는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무형물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7) 수출입정보처리시스템 (IDPMS/EDPMS)

인도는 수출입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난 2016년 수입정보처리시스템(IDPMS: Im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과 수출정보처리시스템(EDPMS: Ex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하였다. 두 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출입 통관 정보와 수출입 송금 정보를 서로 매칭하여 수출입과 이에 수반되는 수출입 결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출입 통관 정보는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서 파악되어 수출입정보처리시스템으로 업로드 되고, 수출입 결제 송금 정보는 송금을 취급한 AD은행에서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업로드 한다. 수입 통관 정보는 Bill of Entry(BOE), 수출 통관 정보는 Shipping Bill(SB)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화되고 수입 결제 송금은 Outward Remittance Message(ORM), 수출 대금 영수는 Inward Remittance Message (IRM)라는 이름으로 데이터화된다.

#### <수출입정보처리시스템 개요>



자료원: 신한은행

사전송금 방식의 수입 결제인 경우에는 송금을 취급한 AD은행에서 ORM을 생성하여 업로드하고 향후 이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이 발행하게 되면 세관을 통해 BOE가 생성되어 수입정보시스템(IDPMS)에 업로드 된다. 수입자는 사전송금 처리 건에 대한 BOE 정보를 3개월 이내에 AD은행으로 제출해야 하며 AD은행은 수입정보시스템(IDPMS)에서 BOE 정보와 ORM 정보를 서로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 처리한다.



사후송금 방식의 수입 결제인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이 완료된 이후에 수입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이므로 IDPMS에 이미 BOE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수입 결제 송금을 취급하는 AD은행은 수입정보시스템(IDPMS)에서 ORM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기 등록된 BOE 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 처리한다.

수출인 경우에도 사전송금 방식과 사후송금 방식에 따라서 송금 정보인 IRM과 통관 정보인 SB 중 어떤 것이 먼저 수출정보처리시스템(EDPMS)에 등록되는지가 달라지며 기본적인 처리 프로세스는 위 수입정보시스템(IDPMS)의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BOE와 ORM, SB와 IRM은 서로 금액이 일치되어야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 어떤 운영상의 이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입자가 AD은행으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상각(write off)을 신청해야 한다. AD은행은 제출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invoice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상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8) 수입 결제 송금 신청 서류

수입 결제를 위해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사전송금 방식과 사후송금 방식, 그리고 수입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마다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AD은행으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신청 서류를 제시하였다.

##### ① 사후송금 방식

- Copy of IEC (one time)
- Cover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Commercial Invoice, Bill of Lading/ Airway Bill
- Bill of Entry details (BOE Number, date) or Copy of Bill of Entry
- Late payment letter (선적일로부터 1년 경과한 경우)

##### ② 사전송금 방식

- Copy of IEC (one time)
- Cover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Pro forma Invoice (mentioning Advance payment)
- Sales contract

##### ③ 디자인/드로잉 등 무형물의 수입

- Covering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Form A2
- Invoice & Agreement
- 15CA, 15CB
- Copy of tax challan (if tax applicable as certified by CA in 15CB)
- CA Cert stating Design & Drawing imported via email/ fax.
- Letter from customer certifying they have notified customs dept. about Design and Drawings.

#### (9) 중계무역 (Merchanting Trade)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의 형태 중에서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 중개무역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한다.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듯이 중개무역에서도 제3국 상인이 수출입의 주체가 아니다. 한편 중계무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태로 중계 화물이 자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을 제외한 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되며 자국에서 중계 화물을 제품화하여 수요국에 수출하게 되면 중계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중계무역은 중개무역에서와 달리 제3국의 상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중개무역과 구분된다.\*

\* Naver 지식백과 (두산백과)

우리나라에서는 중개무역을 merchandising trade, 중계무역을 intermediary trade로 영문 번역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그런데 인도에서의 Merchanting Trade는 우리나라의 중개무역이 아닌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erchanting Trade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물품이 보세구역을 제외한 국내(\*1)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 지급(Third party payment)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개무역 보다는 중계무역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증빙 서류와 거래의 진성 여부 등을 토대로 AD은행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어떤 가공이나 부가 가치 창출 등으로 인한 물품의 변형이 허용(\*2)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계가공무역 개념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중계무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1) 규정의 'Domestic Tariff Area'를 보세구역을 제외한 국내라고 번역하였다.

(\*2) 2020년 1월까지의 물품의 변형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Merchanting trade로 거래되는 물품은 Foreign Trade Policy(FTP)에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규제 측면에서는 Merchant trade를 수입부분(import leg)과 수출부분(export leg)으로 나누어 수입규제와 수출규제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부분과 수출부분은 모두 하나의 AD은행을 통해 결제되어야 하며, Merchant trade의 총 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고 수입대금 결제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영수와의 차이가 4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위 9개월 기한의 산정은 선적일/수출대금 영수/수입대금 결제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시작하여 선적일/수출대금 영수/수입대금 결제 중 가장 늦은 날까지로 한다.

\* 원문에서는 foreign exchange outlay가 4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수입부분의 수입대금 결제보다 수출 부분의 수출대금 영수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 대금 결제 시점까지 영수한 수출대금을 외화계좌(EFEC: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또는 루피(INR)로 환전하여 이자가 발생되는 루피 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치된 자금은 해당 수출과 대응되는 수입 결제 목적의 자금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결제 의무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환전하여 루피 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헤지(hedge)하는 것이 허용되며, 해당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 Account (EEFC Account): 역외로부터의 외화 취득을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3-3-3-3. 수출대금 회수에서 별도로 설명하였다.

수입부분의 수입대금은 사전송금 방식으로의 결제도 허용되지만 수출대금 영수 이전에 수입대금의 사전송금 결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USD 500,000 이내(\*1)에서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의 사전송금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잘 알려진 글로벌 은행(\*2)에서 발행한 신용장/보증서의 제출이 요구된다.

(\*1) 2020년 1월 USD 200,000 이내에서 USD 500,000 이내로 변경되었다.

(\*2) 규정의 'an international bank of repute'를 번역하였다.





### 3-3-3-3. 수출 대금 회수

수출 거래는 인도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관리하며 AD은행은 해당 수출 거래가 Foreign Exchange Management (Export of Goods and Service) Regulations, 2015,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중앙은행(RBI)의 Directions에 따라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중앙은행(RBI)의 Master Direction - Export of Goods and Service (updated as on January 8, 2021)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출 대금 결제 기한

모든 수출자는 수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 대금이 수출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유로 기한 내에 결제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이내에 수출 대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AD은행으로 제출하여 한번에 6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총 미 회수 수출 대금 잔액이 USD 1,000,000 이나 과거 3년 평균 수출 대금 보다 작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수출 건이 수입자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액이나 미 회수 수출 잔액에 상관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5월 22일부터 2020년 7월 31 일 이전 수출 건의 결제 기한은 기존 9 개월에서 선적일로부터 15개월로 완화되어 적용됨.

#### (2) 인도 루피(INR) 현찰의 휴대 수출

인도 루피(INR) 현찰을 해외로 휴대하여 출국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된다. 루피(INR) 현찰 휴대 반출은 인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25,000루피 까지만 허용되며 초과하여 휴대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RB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제3자 수출 결제 (Third Party Payment)

제3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영수하는 제3자 수출 결제는 3자 계약(tripartite agreement)이 체결되고 취소불능 구매주문(irrevocable purchase order)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취소불능 구매주문서와 invoice에 제3자가 명시되어 있는 등 제출된 증빙서류의 정황으로 제3자 결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3자 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수출자는 Export Declaration Form(EDF)에 제3자 수출 결제임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제3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할 책임이 있다.

#### (4) 사전 송금 (Advance Remittance)

수출 대금을 사전 송금 방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 대금 수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 선금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LIBOR+100bp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선적 서류는 수출 대금을 수취한 AD은행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수출 대금 수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선적을 모두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선적 미이행에 해당되는 자금을 반환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 Account (EEFC Account)

EEFC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화 소득이 있는 인도 거주자 개인 및 기업이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개설은 AD Category-1 은행(AD은행)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current account로의 개설만 허용된다. EEFC 계좌의 잔액은 대출/보증 등 여신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EEFC 계좌는 은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취한 외화의 입금이 허용된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대출, 투자 등으로 외화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입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입금된 외화는 다음달 말까지 모두 환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허용된 경상/자본거래로서의 해외송금, Packing

credit 상환 등 미래에 외화 결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AD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음달 말을 경과하여 보유할 수도 있다. 환전하여 루피로 인출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나 외화로 재환전 및 재입금은 제한된다. EFC 계좌에 보유한 외화에 대해서 환율변동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외화 매도선물환 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선물환의 종도청산(cancelation)은 제한되며 만기연장(roll-over)은 가능하다.

### 3-3-3-4. 기타 송금

#### (1) 로열티 송금 / 서비스 대가 송금

인도 회사는 외국 모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 모회사로 로열티를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 회사는 기술 협력을 위해 모회사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며, 동 로열티는 제조프로세스, 기술지식, 디자인, 도면, 상표 및 브랜드 등의 권리를 포함한다.\*

\* KOTRA, 인도 투자실무 가이드 (2019)

인도 회사는 외국 회사로부터 컨설팅 서비스, IT 서비스 등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 등을 송금할 수 있다. 송금액이 프로젝트 당 USD 1,000,000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로열티 송금 및 서비스 수입 결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① Covering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② Form A2
- ③ Invoice & Royalty Agreement
- ④ 15CA, 15CB
- ⑤ Copy of tax challan (if tax applicable as certified by CA in 15CB)



## (2) 과실송금 (Remittance of Profit/Surplus)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해서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과실(果實)송금이라고 한다. 투자에 따른 이익을 식물이나 나무에 열린 열매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Fruit remittance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투자자의 이익금을 송금하는 것이므로 remittance of profit/surplus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로서 이익금을 배당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배당금 송금, 주주가 보유 주식의 처분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각 대금의 송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과실송금, 즉 이익금의 송금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 〈과실 송금 가능 여부〉

구분	과실송금가능여부
Liaison Office	- 상업 활동이 제한되므로 본국으로의 이익금 송금 불가 - 사무소 청산(closure)의 경우에만 송금이 가능
Project Office	-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종료 시 이익금 송금 가능 - 아래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산 전 이익금 송금 가능 a. 납세의무 이행에 자금이 충분하다는 감사인(Auditor)/회계사(CA)의 확인서 b. 송금 후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PO의 확인서
Branch Office	-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 납부 후 송금 가능
Private Limited	- 배당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과 보유 주식을 인도 회사에 매도하는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이익금 송금하는 것이 가능 a. 배당: 법인소득세와 배당분배세 및 가산세를 납부한 후 송금 가능 b. 자사주 매입: 법인소득세와 자사주 매입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후 송금 가능

자료원: 신한은행

배당금 송금(remittance of dividend)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Covering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② Form RCD 1, RCD 2
- ③ Form A2
- ④ 15CA, 15CB
- ⑤ Certified copy of audited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statement
- ⑥ Certified copy of Resolution passed at Annual General Meeting declaring the dividend
- ⑦ Copy of tax challan (if tax is applicable)
- ⑧ FC-GPR Registration Number (approved in Firms or Letter from RBI having allotted FC-GPR Registration Number)

### (3) 급여 송금

인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하지는 않는\* 외국 국적의 인도 거주자는 세금과 연금(provident fund) 등을 차감한 공제 후 급여액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영주하지 않는 외국국적 거주자의 급여 송금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RBI Master Direction – Other Remittance Facilities (updated as on November 6, 2018)에서 ‘resident but not permanently resident’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기간 동안의 고용이나 대리인 지정 등의 사유로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① Covering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② Form A2
- ③ Net Salary Evidence (TDS Certificate issued by Employer, copy of salary slips etc.)

참고로 한국에서 해외 송금을 수취하는데 있어서 일일 USD 50,000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취 은행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지침서식 제4-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수확인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은행 공통 양식으로 Fax 또는 스캔 방식에 의한 E-mail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 (4) 법인 설립 전 비용에 대한 송금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법인 설립 이후 반환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본금 납입 후 해당 비용을 반환 송금하게 되는데, 해외 투자금(자본금)의 5%와 USD 100,000 중 큰 금액까지 반환 송금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 3-3-4. 자금 조달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자금 조달(fund raising)이라고 하며, 조달하는 방법은 조달 자금의 재원에 따라 자기자금(자기자본)과 타인자금(타인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의 오른쪽 대변을 구성하는 항목이 부채와 자본인데 타인자금으로 조달된 부분이 부채, 자기자금으로 조달된 부분이 자본에 해당된다.

자본은 주식이 발행된 주식 자본금과 영업활동으로 발생된 이익금이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채는 타인자금으로 조달되는 자금이므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회사채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차입하는 기간차입금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인도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방법\*과 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이 있으며 후자를 역외금융, 인도에서는 역외상업차입(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이라고 부른다. ECB는 외화를 수반하는 활동이므로 외국환관리법(FEMA)의 적용 대상으로 중앙은행(RBI)의 신고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금, 그 중에서도 은행을 통한 차입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역외금융과 대비하여 현지금융 또는 역내금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3-3-4-1. 현지금융 (루피 자금 조달)

##### (1) 여신의 종류

여신(Credit)은 은행이 자금을 직접적으로 대여하는 대출(loan)뿐만 아니라 자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지급보증서나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여신은 거래 방식에 따라 건별거래와 한도거래로 구분한다. 건별거래는 여신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발생하되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하며, 한도거래는 한도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상환한 금액의 재사용이 가능하여 여신의 인출 및 상환을 반복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건별여신은 취급방식에 따라 일시취급방식과 분할취급방식으로 분류하며, 상환방식에 따라서는 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으로 분류한다.

차주\*에 따라서는 기업자금대출과 가계자금대출로 구분된다. 기업자금대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기업자금 용도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을 말하며, 가계자금대출은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대출을 말한다.

\* 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는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한다. 운전자금대출은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하며 시설자금대출은 기업설비의 취득·신설·증설·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한다.

담보의 유무에 따라서는 담보여신과 신용여신으로 구분하고, 인도에서는 은행이 자금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Fund based facility와 Non-fund based facility로 구분한다. Non-fund based facility에 해당되는 여신의 종류로는 앞서 언급한 은행의 지급보증서가 대표적인데, 지급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에는 수출입 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을 비롯하여 입찰보증서, 선수금환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등이 있으며 보증채무의 이행 통화에 따라 외화 지급보증과 내국통화 지급보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신의 구체적인 상품들은 각 은행에서 해당 여신에 특정 조건들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같은 범주에서도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한은행에서 취급되는 기업자금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시를 제시하였다.

< 여신 상품 종류 >

분류	자금종류	상품명	주요내용
Fund base	운전자금	일반운전자금 (WCDL)	산출 운전자금 한도 이내
		단기운전자금 (Short Term Loan)	연기 및 상환기일 조정 불가
		당좌대출 (Over Draft)	한도대출
		운전자금 (Operation Loan)	취급 수수료 부과
		AR(Account Receivable) Loan	판매자 금융
		Inland Purchase B/D	구매자 금융 (내국신용장)
		Inland Sales B/D	판매자 금융 (내국신용장)
		Export B/D	수출자 금융
		Packing Credit INR	선적전.후 수출 금융
		Packing Credit Foreign Currency	선적전.후 수출 금융
	시설자금	시설자금 (Term Loan)	거치기간 설정/분할 상환
		역외금융 (ECB)	해외지점 취급
	개인금융	신용대출 (임직원 대출 포함)	개인 신용 대출
		주택담보대출	Mortgage Loan
		부동산담보대출	LAP, LRD
Non Fund base	보증서	Counter Guarantee (再보증)	한국 발행 보증서의 재발행
		지급보증서 (Guarantee)	타행에 대한 지급보증서
		선급금/이행보증서 (A/P, P Bond)	계약당사자 요청 보증서
	신용장	보증신용장 (Stand-By L/C)	보증 신용장
		수입신용장(Import L/C)	수입물품 구매 신용장

자료원: 신한은행



## (2) 여신 취급 프로세스

## 〈여신 취급 프로세스〉



자료원: 신한은행

여신의 프로세스는 기업의 자금 조달 니즈의 인지부터 시작된다. 기업은 어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파악하고 자기자본 투입 규모와 필요한 자금 조달의 규모, 조달 기간 등을 파악한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은행과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대출의 기간, 담보 제공 여부 및 상환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고 대출 협의를 시작한다.

은행은 여신 심사의 첫 단계로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신용평가란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계량 정보와 비계량 정보를 분석하여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계량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되는 안정성, 수익성, 부채상환능력, 활동성, 유동성 관련 재무비율 등을 의미하고, 비계량 정보는 산업환경, 경영구조, 구매안정성, 기술력, 경쟁구조, 자금조달 능력 등을 의미한다.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은 은행 등 평가 기관마다 자체적인 평가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평가 기관에 따라 산출되는 등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산출된 신용평가 등급과 제시된 담보 조건 등을 토대로 대출 가능 한도를 산출하는 등 여신 심사가 진행된다. 이때 담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인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적인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은 여신 심사 후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상환 방법, 적용 이자율, 담보 조건, 중도상환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에 대해서 기업과 협의하고 양 당사자가 최종적인 대출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대출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대출 계약이 성립된다.

## 3-3-4-2. 역외금융 (ECB)

역외상업차입(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은 인도 거주자가 인도 역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업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로 외국환관리법(FEMA, 1999)(\*1)과 중앙은행(RBI)의 관련 규정(\*2)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 규정에서는 최소 평균 만기, 자금 사용 목적, 이자율 상한 등과 같은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이전까지는 ECB를 track I, II, III로 구분하였으나 이후에는 Foreign Currency ECB와 INR ECB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ECB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section 6의 sub-section 3. Foreign Exchange Management (Borrowing and Lending) Regulation, 2018가 적용된다.

(\*2) Master Direction -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Trade Credits and Structured Obligations (updated as on August 08, 2019)

< ECB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취급가능 차입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회사(Entity) 및 Port Trust, SEZ 소재 기업, 인도 중소기업은행(SIDBI), 인도 수출입은행(EXIM Bank) 등
취급가능 대여자	대여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회원국의 거주자 해외 은행, 인도은행의 해외지점/자회사, 차입자의 본사/관계사(Foreign equity holder)* 등
최소평균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평균만기(MAMP) 3년 이상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함</li> <li>a) 제조업 영위 기업으로 회계연도 기준 50백만불 이내인 경우: 1년 이상</li> <li>b) 본사/관계사 ECB로서 운전자금, 일반 기업자금 또는 루피대출 상환 목적인 경우: 5년 이상</li> <li>c) 운전자금, 일반 기업자금인 경우: 10년 이상</li> <li>d) 시설자금 루피대출의 상환 목적인 경우: 7년 이상</li> <li>e) 시설자금 외 루피 대출의 상환 목적인 경우: 10년 이상</li> <li>위 b)~e)는 인도 은행의 해외지점/자회사를 통한 차입은 제한됨</li> </ul>
차입비용 상한	All-in-Cost*** 기준 기준금리(Benchmark) + 4.5% 이내 (Benchmark: 6M Libor, 6M EURIBOR 등 해당통화 6개월물, INR의 경우 해당만기 국채수익률)
자금용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부동산 거래(Real estate activities)#</li> <li>(단, 기존시설 확장/현대화/새로운 프로젝트 등을 위한 산업용 토지의 매매/장기임대의 경우 가능)</li> <li>b) 자금시장 투자</li> <li>c) 주식/지분 투자</li> </ul>
차입한도/ 비율	회계연도 기준 USD 750백만 이하 자동승인(Automatic route)이나대출 취급 전 LRN 발급 필요 본사 차입 외화 ECB인 경우 ECB 채무와 자본비율## 7:1 이내 (단, ECB 잔액 5백만불 이하 적용 제외)

주: (\*) 본사/ 관계사(Foreign equity holder)는 직접보유 지분 25% 이상, 간접보유 지분 51%, 또는 동일한 해외 모기업의 자회사를 의미한다.

(\*\*) 최소평균만기(Minimum Average Maturity Period)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고려한 현금흐름 가중평균 만기를 의미한다. 만기 이전에 원금의 일부 상환이 있는 경우에 평균만기는 대출만기보다 길어진다.

(\*\*\*) All-in-Cost란 이자 외에 취급수수료, 보증수수료 등 대출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 총 비용을 의미한다.

(#) 부동산 거래(Real estate activities)는 상업용/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소유/임대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매/임대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i) industrial park/ integrated township/ SEZ의 건설·개발, (ii) 현재 시설의 확장/현대화 또는 새로운 시설을 위한 산업용 토지의 매매/장기임대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ECB liability-equity ratio 산출 시, ECB liability는 INR ECB를 제외한 신청건 포함 모든 ECB의 잔액을 의미하고 equity는 최근 감사보고서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과 이익잉여금(free reserves)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자료원: 신한은행, 인도 중앙은행(www.rbi.or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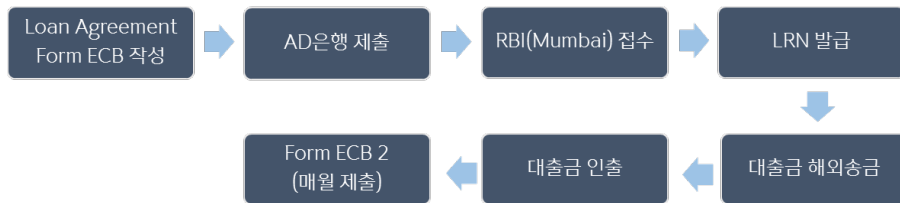
(1) ECB 취급 프로세스

ECB 규정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USD 750,000,000 또는 그 상당액까지는 자동승인대상(automatic rout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신청대상(approval route)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승인대상(automatic route)인 경우에도 Form ECB를 중앙은행(RBI)로 제출하고 대출등록번호(LRN: Loan Registr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상으로는 두 방식 모두 동일하다.





### < ECB 프로세스 >



자료원: 신한은행

ECB 차입자와 대여자는 합의된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상환 일정, 적용 이자율 및 이자 납입 주기 등 대출 조건을 명시하여 대출 약정서(Loan Agreement)를 작성한다. ECB 대여자가 한국 거주자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거래는 신고대상으로 거주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다.

인도의 ECB 차입자는 ECB 신청서라 할 수 있는 Form ECB를 작성하여 Loan agreement 사본과 함께 AD은행으로 제출하고, AD은행은 ECB의 상세 조건들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Form ECB를 중앙은행(RBI) 뭄바이 본점으로 제출하여 접수한다.

중앙은행(RBI)으로부터 대출등록번호(LRN)가 발급되면 해외의 ECB 대여자에게 대출 실행을 요청하여 대출금을 수취한다. 규정에서는 대출등록번호(LRN)가 발급된 이후에만 대출금의 인출(draw-down)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LRN 발급 전 대출 실행은 보고서 지연 제출과 함께 패널티 부과 대상이다.

ECB 자금이 바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외화로 지출 예정인 자금은 해외에 예치할 수도 있다. S&P 신용등급 AA(-)(무디스 기준 Aa3) 이상의 은행 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국채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루피로 지출 예정인 자금은 대출금 수취 즉시 루피로 환전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기예금(term deposit)으로 운용할 수 있다. 외화 지출 예정인 경우 국내 보유에 대해서는 규정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외화로 보유함으로써 불필요한 환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CB 차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7영업일 이내에 Form ECB 2를 AD은행으로 제출하여 전월의 ECB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CB의 조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된 Form ECB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제출하는 Form ECB 2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Form ECB 2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30일 이내에는 5,000루피, 30일 초과 시에는 연 50,000루피의 패널티가 부과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000루피가 부과된다.

#### (2) ECB의 대환 (refinancing of existing ECB) / 자본 전환 (Conversion into Equity)

ECB를 새로 취급하여 기존 ECB를 상환하는 것을 대환(refinancing)이라고 한다. ECB의 대환의 경우 신규 ECB가 규정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함은 물론, 신규 ECB의 all-in-cost 기준 취급 비용이 기존 ECB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고 신규 ECB의 평균 만기는 기존 ECB의 잔존 평균 만기보다 줄어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ECB는 대출 만기 이전이라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 ECB 차입자는 ECB 취급 시점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는데 있어 적극적인 기업이어야 하고 자본 전환에 따른 ECB 대여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야 한다. ECB의 자본 전환은 잔액의 일부 전환도 허용되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자본금 수취 경우와 마찬가지로 FC-GPR 신고 대상이다.

### 3-3-5. FAQ

#### Q1. 수입통관 관련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

##### (1) Solvency Certificate

수입자의 재무 안정성을 증빙하는 서류로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 Request letter, 최근 회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은행은 특정 금액을 명시하여 발급하게 되는데, 신한은행에서는 여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의 사용 가능 한도를 감안하여, 여신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 잔액 범위 또는 재무제표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발급하고 있다.

##### (2) AD Code Letter

AD은행은 우리나라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과 비슷한 개념이다. AD은행은 각 지점별로 고유의 식별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표시하여 발급하는 서류이다. 사실 AD는 Authorized Dealer라는 의미로 외국환 거래가 허용된 은행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실무적으로는 주거래 은행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AD Code Letter는 수출입 통관정보를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할 때 어느 은행 코드를 등록할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3) Signature Verification

인도에서는 은행 거래를 위해 은행에 해당 계좌의 서명권자를 신고하고 서명권자의 서명을 기반으로 거래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되는 서류의 서명권자가 법인의 정당한 권한을 보유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명이 은행에 신고된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은행으로부터 확인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양식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원본에 은행이 등록 서명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날인한다.

##### (4) GR Waiver

전시목적 물품/샘플 등 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수입의 경우 또는 수입된 물품의 반품(수리 또는 교환) 시 발급된다. 발급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샘플 수입인 경우 Request letter, invoice, packing list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Repair 수입인 경우 Request letter, 원 수입거래 서류(invoice, BL/AWB, BOE)와 추가 수입거래 관련 invoice, packing list등을 제출하여 신청한다.

#### Q2. 대출을 보유한 경우 Current Account의 개설 제한

인도 중앙은행(RBI)은 2020년 8월 6일 새로운 circular 와 22년 개정으로 통해 대출을 보유한 법인이 타행에 Current Account 를 개설하는 경우 여신 보유 은행의 NOC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조건을 삭제하고 대출 취급 은행 이외의 은행에서는 계좌 개설을 금지하였다.

- O/D, C/C 보유 & 총 대출 5 Cr 미만 → 모든 은행 개설 가능
- O/D, C/C 보유 & 총 대출 5 Cr 이상 → O/D, C/C 보유 은행만 개설 가능
- O/D, C/C 미보유 & 총 대출 5 Cr 미만 → 모든 은행 개설 가능 (주거래 계좌 지정 필요)
- O/D, C/C 미보유 & 총 대출 5 Cr 이상 50크로 미만 → 대출 보유 은행 개설 가능
- O/D, C/C 미보유 & 총 대출 50 Cr 이상 → 주거래 계좌(Escrow) 지정 은행 개설 가능

이 외에 세금 납부 목적으로 세금 납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 Q3. LEI (Legal Entity Identifier)

LEI는 Legal Entity Identifier의 약어로 금융거래의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20자리의 법인 식별 번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다 효과적인 금융거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국제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법인 식별번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그 출발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도 기업 규모와 거래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며, (2021년 3월 기준) 50크로 이상의 여신 거래인 경우, 파생상품 거래인 경우, 일반 외환거래(파생상품 외 외환의 매입/매도)로서 건당 거래 금액이 USD 1백만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인 경우, RBI 관할 자금시장(국채시장, 머니마켓 등) 거래인 경우 LEI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LEI는 지정된 발급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발급기관으로는 인도 청산소(CCIL: The Clearing Corporation of India Ltd, www.ccilindia.com)가 있다. 발급받은 LEI는 유효기일이 있어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가 발생된다.

### Q4. 개인의 해외송금 시 TCS(Tax Collected at Source) 부과 여부

2020년 2월 발표된 예산안에서 처음 언급되고 2020년 10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된 내용은, LRS(Liberalized Remittance Scheme)에 해당하는 해외송금인 경우로서 회계연도 기준 누적 금액 700,000루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TCS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주재원들의 해외송금은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 발생 소득의 해외송금으로 분류되어 LRS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TCS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Q5. 해외송금 시 USD 송금과 KRW 송금의 차이

결론부터 말해서 큰 차이는 없다. USD 송금과 KRW의 송금의 차이는 USD에서 KRW로 환전되는 시점이 서로 달라진다는 점이며, 서로 다른 시점의 USD/KRW 환율의 차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USD 송금의 경우 INR을 대가로 USD를 매입하여 송금하므로 송금 시점에는 USD/INR 환율이 적용되며, 한국에서 USD를 수취하여 KRW로 환전할 때 USD/KRW 환율이 적용된다. 한편 KRW 송금의 경우 INR을 대가로 USD를 매입한 후 다시 USD를 대가로 KRW를 매입하여 송금하므로 송금 시점에 USD/INR 환율과 USD/KRW 환율의 조합으로 KRW/INR 환율이 결정되어 적용된다. 즉 USD/KRW 환율의 적용 시점이 송금 시점에 결정되는지 자금 수취 시점에 결정되는지의 차이가 발생된다.

송금 한도에 있어서는 USD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송금한도가 없이 증빙서류의 금액범위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KRW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일일 USD 20,000 상당액 이상으로 송금할 수 없다. USD 송금은 인도 외환시장 장중에 송금이 가능하며 KRW 송금은 인도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인도 시간 오전 중에만 송금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해외 송금을 수취하는데 있어서 일일 USD 50,000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취 은행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지침서식 제 4-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수확인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은행 공통 양식으로 Fax 또는 스캔 방식에 의한 E-mail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 Q6. 서명권 변경 서류

##### ① 법인 서명권자 변경 서류

- Request Letter (구 서명권자의 서명 및 법인 스탬프)
- 이사회 의사록 (서명권자 변경 안건 결의)
- 서명 카드 (은행 양식, 신규 서명권자 서명 및 법인 스탬프)
- 신규 서명권자 사진 1매
- 서명권자 본인 확인 및 주소 증빙 서류 (KYC documents of authorized signatory)

##### ② 연락사무소 서명권자 변경 서류

- 위임장(Power of Attorney) 또는 이사회 결의서 (법인인감증명 날인 후 공증)
- Notarized company registered stamp certificate - 법인인감증명서(공증)
- Signature Card (New Signatory)
- One photograph (New Signatory)
- Copy of Passport/Visa/Address proof\* of new Authorized signatory (사본에 본인 서명)

#### Q7. 소득세 신고(ITR)를 위해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

##### ① TDS Certificate (Form 16A, 회계연도 기준 이자소득 40,000루피 이상인 경우 발급)

##### ② Interest Statement 또는 Account Statement (Saving a/c의 경우)

인도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기예금/정기적금의 누적 이자소득이 40,000루피 이상인 경우에 10%의 원천징수(TDS: Tax Deducted at Source)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이 아닌 총 이자금액이 세금 납부 대상이다. 은행에서 TDS가 적용된 경우에는 TDS 확인서가 분기별로 발급된다.



## 3-4 노무

### 3-4-1. 노동법제 개관

#### 3-4-1-1. 노동법

인도의 노동입법은 사회경제적 정의를 지향하며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관계는 노동과 경영진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높은 실업률과 싸우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법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노동관련 법률의 단순화, 강화 및 합리화에 집중하고 있다.

급여, 근무 시간, 징계 규정 및 고충처리 해소 절차, 해고 통지 기간, 휴가, 보험 제공, 연금, 무료 및 기타 고용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법 위반은 엄격히 관리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노동법에 따른 형사소송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직원들은 관련 노동법하에서 최소한의 통지기간과 근무 조건을 가질 권리가 있고, 법률은 직원의 부당한 해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데, 산업분쟁법은 정리해고의 경우 특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용주의 해고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 필요를 규정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로 대규모 산업 및 노동 관련 법률은 이러한 지침의 이행을 지향해 왔다.

공장법, 근로자 국가보험법, 산업분쟁법 등은 공정하고 인간적인 근무 조건, 건강 보호 및 업무 중 지속되는 상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저임금법 및 임금체불법은 임금체불을 규제한다. 보너스법은 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

인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이 근로자(workmen)인지 아닌지(non-workman)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인도 산업분쟁법 제2(s)조는 근로자를 “육체, 비숙련, 숙련, 기술, 운영, 사무 또는 감독사무”를 위해 고용된 자로서, (1) 경영, 관리직; (2) 월급여 10,000 루피 이상의 감독직; (3) 경영자 또는 위임자로서의 경영행위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 규정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고용계약서 및 인사매뉴얼에 기재된 상세 업무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 Industrial Dispute Act, 1947. Section 2 [(s) “workman” means any person (including an apprentice) employed in any industry to do any manual, unskilled, skilled, technical, operational, clerical or supervisory work for hire or reward, whether the terms of employment be express or implied, and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eding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an industrial dispute, includes any such person who has been dismissed, discharged or retrenched in connection with, or as a consequence of, that dispute, or whose dismissal, discharge or retrenchment has led to that dispute, but does not include any such person—

(i) who is subject to the Air Force Act, 1950 (45 of 1950), or the Army Act, 1950 (46 of 1950), or the Navy Act, 1957 (62 of 1957); or (ii) who is employed in the police service or as an officer or other employee of a prison; or

(iii) who is employed mainly in a managerial or administrative capacity; or (iv) who, being employed in a supervisory capacity, draws wages exceeding 59[ten thousand rupees] per mensem or exercises, either by the nature of the duties attached to the office or by reason of the powers vested in him, functions mainly of a managerial nature.]

직원이 근로자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인도 산업분쟁법 등 법률이 업무변경, 해고절차, 노동분쟁 진정 및 제소절차 등 사안에서 근로자의 보호법익을 별도로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직원(non-workman)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각 주법인 상점 및 상업시설법이 적용되며, 고용계약서 및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인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해야 할 요소로서, 해당 사업장이 공장, 농장, 광산인지, 일반 상점 및 상업시설인지 여부이다. 각종 사회보장제도, 근로자 해고절차 등 적용규정이 달라지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3-4-1-2. 2020-21년 인도 노동법제 개편

인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오던 노동법제 개편과 관련하여 신법이 모두 2020년 하반기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일개 법률 조항이 개정된 수준이 아니라, 현행 29개의 연방 노동관련 법률이 4개로 통합되어 체계 자체가 크게 변화하였다.

인도 법률체계를 보면 연방법으로 이해되는 중앙법률과 각 주의 주법이 있다. 헌법에 따라, 중앙법이 적용되는 분야, 주법이 적용되는 분야, 그리고 중앙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분야가 있는데, 노동분야가 바로 중앙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의 노무사건 가지고도 검토해야 할 법률 수가 매우 많고 복잡했다.

이 중, 이번에 중앙노동법 29개가 임금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법 등 4개의 법률로 통합된 것이다.

그간 인도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이러한 노동법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노사간 이해가 얹혀 있어서 시간이 걸리다가, 2020년 - 2021년에 걸쳐 모두 의회를 통과하였고, 시행령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발효일이 곧 공표될 예정이다. 다만, 본 책자에는 신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발효 후에는 인도 중앙 노동법은 4개 법률만 참고하면 되며, 각 주법들은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노동 관련 주법은 각 주별로 상점 및 상업시설법(Shops and Establishment Act), 각 중앙법의 주별 하위 법령(Rules) 및 시행령 등이 있으며, 중앙법과 함께 적용되는 법으로서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래 표와 같이, 임금 관련 4개의 법률이 하나의 임금법으로, 연금, 보험, 복리후생 관련 9개 법률이 하나의 사회보장법으로, 공장법 등 각종 산업 안전 관련 13개 법률이 하나의 산업안전보건근로조건법으로, 산법분쟁법 및 노동조합법 등 3개의 법률이 하나의 노사관계법으로 총 29개의 법률이 4개의 법률로 통합, 개정되었다.



### <노동법제 개편>

#### 임금법 (The Code on Wages, 2019)

1. 동일임금법 (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
2. 최저임금법 (The Minimum Wages Act, 1948)
3. 임금지급법 (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4. 상여금지급법 (The Payment of Bonus Act, 1965)

#### 사회보장법 (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1. 근로자연금기금법 (The 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2. 근로자국가보험법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3. 퇴직금지급법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4. 출산지원법 (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5. 근로자보상법 (The Employee's Compensation Act, 1923)
6. 고용관리(의무공석통지)법 (The Employment Exchanges (Compulsory Notification of Vacancies) Act, 1959)
7. 영화산업근로자복지기금법 (The Cine-Workers Welfare Fund Act, 1981)
8. 건설근로자복지조세법 (The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ers' Welfare Cess Act, 1996)
9. 비조직근로자사회보장법 (The Unorganised Workers' Social Security Act, 2008)

#### 산업안전보건법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1. 공장법 (The Factories Act, 1948)
2. 계약노동(규제 및 폐지)법 (The Contract Labour (Regulation and Abolition) Act, 1970)
3. 주간이주노동자(고용규제 및 근로환경)법 (The Inter-State Migrant Workmen (Regulation of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Service) Act, 1979)
4. 농장근로법 (The Plantations Labour Act, 1951)
5. 광산법 (The Mines Act, 1952)
6. 저널리스트 및 신문기자(근로환경)법 (The Working Journalists and other Newspaper Employees (Conditions of Service) & Misc. Provisions Act, 1955)
7. 저널리스트(임금율고정)법 (The Working Journalists (Fixation of Rates of Wages) Act, 1958)
8. 운수근로자법 (The Motor Transport Workers Act, 1961)
9. 담배산업근로자법 (The Beedi and Cigar Workers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1966)
10. 판매촉진근로자법 (The Sales Promotion Employees (Conditions of Service) Act, 1976)
11. 영화산업근로자법 (The Cine-Workers and Cinema Theatre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Act, 1981)
12. 항만근로자(안전, 보건, 복지)법 (The Dock Workers (Safety, Health and Welfare) Act, 1986)
13. 건설근로자(고용규제 및 근로환경)법 (The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 Conditions of Service) Act, 1996)

#### 노사관계법 (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1. 산업분쟁법 (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2. 산업고용(복무규정)법 (The 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
3. 노동조합법 (The Trade Unions Act, 1926)

법률이 29개에서 4개로 통합되어, 기존 각각의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의 정의규정도 통합되었고, 법률마다 확인해야했던 각종 등록, 신고사항이 간소화 된 장점이 있다. 기존에 배제되었던,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도 사회보장 보호 법익에 들어오면서 형평성도 제고되었고, 노동청 조사관 및 조정관의 역할이 규정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노사분쟁해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률적용 요건인 직원수 규정도 각 사안별로 완화되었으며, 각종 전자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신고절차가 도입되면서 기술활용도도 향상된 장점도 있다.

새로운 노동법제가 발효하면, 임금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직원의 임금체계가 변경되어야 한다. 근무일, 휴일 등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내 인사규정 등을 개정해 놓아야 하며, 새롭게 작성될 사내 인사규정에 개정된 임금, 공제, 보상금 등 모든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파견업체와의 계약이 있는 경우, 신법 규정에 따라 원청사로서의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부분이 있는 지 참고하여, 계약서를 검토하여 파견 고용 계약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게 새롭게 적용되거나 변경 적용되는 사항을 적절히 관리하여, 법률준수 (compliance)를 위한 사내 노무정책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회사 재정적으로도 이번 개정법상 임금 등 노무비가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노무비 변경에 따른 손익계정을 정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 3-4-2. 채용계약

인도는 단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근로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 온전히 당사자들 간의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 관계의 성격 등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원과 계약을 맺기 전 우리 기업에 맞는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따라야 할 채용, 면접, 심사 및 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임명 절차에 관한 자체적인 정책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채용 정책은 개인 사생활, 평등권 등 지원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많은 기업들은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등을 진행하여, 이력서, 경력, 학력 등의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고용계약을 진행하기 전 신원조회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원의 고용은 신원확인 및 학력, 경력사항의 정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지원자의 개인정보 조사 동의여부를 명확하게 문서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인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2000) 및 정보기술(개인정보절차) 규정(Information Technology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sensitive personal data and information) Rules, 2011)은 취업 지원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사용, 공개를 위해서는 해당 지원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헌법상 권리로서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1), 신원조사 및 채용면접시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위 정보기술규정은 채용지원절차시 고용주가 (1) 지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2)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3) 개인정보 수집인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2)

(\*1) The Constitution of India, 1950, Article 15. (1) The State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any citizen on grounds only of religion, race, caste, sex, place of birth or any of them. Article 16. (2) No citizen shall, on grounds only of religion, race, caste, sex, descent, place of birth, residence or any of them, be ineligible for, or discriminated against in respect of, any employment or office under the State.

(\*2)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Sensitive Personal Data Or Information) Rules, 2011, Rule 5. Collection of information. - (3) While collecting information directly from the person concerned, the body corporate or any person on its behalf shall take such steps as are, in the circumstances, reasonable to ensure that the person concerned is having the knowledge of -

- (a)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is being collected;
- (b)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is being collected;
- (c) the intended recipients of the information; and
- (d) the name and address of -

- (i) the agency that is collecting the information; and
- (ii) the agency that will retain the information.

따라서, 채용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 일자리에 대한 지원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 전 질의와 배경 조사를 할 경우에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보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후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 3-4-2-1.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 계약은 기업과 직원 사이에 자유롭게 그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 정하여진 법률 규제는 없다. 인도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을 관리하는 일반 규정은 고용 계약에도 적용된다. 구두상 계약도 유효하지만, 실무상 고용 관계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 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계약의 조건이 법 조항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법률에 정의된 최소 작업 조건을 준수하고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고용법(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 등 특정 법률은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주에게 고용의 특정 조건과 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해당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 기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일시적일 수도 있고, 정규직과 같이 영구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업무 범위 및 근무 장소, 수습 기간, 확인 절차, 근무 시간, 휴직 자격, 급여 및 기타 법적 혜택 자격, 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 계약의 조항의 복잡성과 확장성은 직원 수준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은 공통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인사, 노무 정책 또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근로 계약의 조건과 병행하여 적용한다. 또한 제조업, 금융업, 의약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정형화된 근로계약서 형태로 대규모 고용이 진행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고용계약은 먼저 수습기간을 가지고, 동 기간 동안 직원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식 채용 절차를 밟게 된다. 인도내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회사의 정직원인지 여부, 산업분쟁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주법상의 노동법적 보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근로 또는 고용 계약의 실질은 계약의 조건과 실제 업무 범위 및 직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전 이러한 고용 관계의 실질을 특정하여 이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3-4-2-2. 근로계약의 종료

고용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건의 발생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 ① 합의된 기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 ②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 ③ 상호 계약을 해지하여 상호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 ④ 계약서에 합의된 대로 일방 당사자가 해지하는 경우;

산업분쟁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 1-3개월의 통지기간 또는 해고통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아닌 직원의 고용 관계 해지에 대해서는 주법 규정과 고용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이러한 직원의 해지의 경우, 통지 대신에 최소 1개월의 서면 통지 또는 1개월치 임금지불이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예고 없이 직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해고는 조사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업은 해고 원인에 대한 통지, 직원의 항변 절차 기회 제공,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기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해고는 불법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각 근무연도에 대한 15일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보상금과 1-3개월의 통지(기업 직원 수에 따라 다름) 또는 그 대신 급여에 해당하는 법정 중복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직원의 위법행위로 해고된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할 의무가 없다. 고용주의 재산에 어떠한 손해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직원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상의 범위까지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다. 직원의 고용이 심각한 위법행위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해고된 직원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 기업은 해고된 직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기업과 직원 간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을 상호 정산하여 문서를 통해 합의함으로써(Full and Final Settlement Letter) 직원은 더이상 기업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에게 기업의 민감한 정보에 관하여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최종 정산금을 받기 전에 노트북, 출입 카드, 문서 등 모든 기업 소유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 3-4-3. 임금 및 보험

#### 3-4-3-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Minimum Wages Act, 1948)에서는 특정고용에서 최저 임금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임금은 특정 주의 최소임금규칙에 따라 주정부 고시를 통해 국가가 규정한다.

최저임금액은 정확하게 모두가 평등한 통일된 하나의 숫자로 나오지는 않는다. 산업분야별, 직업별, 비숙련, 반숙련, 숙련 근로자인지 여부, 각 주별로 최저임금 수치가 다르다. 예를 들어 델리 보통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하여 비숙련 월 17,494루피, 숙련 감독직 월 23,082 루피 등 17,000 루피에서 23,000루피 사이로 이해하면 되지만, 정확한 액수는 최근 업데이트된 정부 고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숙련되거나 숙련되지 않았거나 비숙련된 일, 육체 또는 사무직의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해당 정부가 정하거나 개정하는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① 해당 정부가 정하는 기본급과 특별 수당;
- ② 기본급, 그리고 양도의 현금가치가 인정된 경우;
- ③ 기본급을 포함한 일체의 포괄적인 임금;

고용주는 그 고용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그 고용에 종사하는 직원의 최소 임금률 이상의 비율로 어떠한 공제도 없이 지불해야 한다. 동법 상 근로시간, 최저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조건들을 위반하는 경우 10,000루피의 벌금 또는 5년의 구금형이 가능하다.

#### 3-4-3-2. 임금 지급

통합 노동법제에서의 가장 큰 변경사항 중의 하나는 '임금(wages)'의 정의가 바뀐 점이다.

임금은 기본급, 보상수당, 유지수당 등 따로 제외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택수당 및 교통수당 등이 임금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개의 통합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모두 이 정의 규정에 적용받는다.

현행법 상에서 퇴직금, 상여금 등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칭할 때 기본급+수당을 적용하는 법률도 있었고, 더 많은 항목을 포함해서 임금이라고 적용하는 법률도 있어 계산금액이 모두 달랐으나, 앞으로는 계산방식에서의 임금이라 함은 새로운 정의에 따른 임금이라고 통일화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임금의 정의 규정에는 총 임금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물보수(remuneration in kind)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지만, 임금법에서 보수지급 방법으로 현금, 은행송금, 수표 등 현금보수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입법적 불비가 있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향후 새롭게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으로 특정되는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 상여금, 감축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15일치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등으로 금액이 계산되는 기준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산정 금액이 높아지면, 결국 각종 지급액 산정 결과가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

현행 인도 임금지급법(Payment of Wages act, 1936)은 임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무단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도 임금지급법상 임금은 현금으로 표시되거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고용 조건이 충족되었든, 고용 또는 그러한 고용에서 수행된 일과 관련하여 고용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는 모든 보수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① 당사자 또는 법원 명령 간의 보상 또는 합의 하에 지불해야 하는 보상;
- ② 시간외 근무, 휴일 또는 휴가 기간과 관련하여 고용된 사람이 받을 권리가 있는 보수;

- ③ 고용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추가 보수(보너스 등).
- ④ 고용인의 고용 종료의 사유에 의해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 계약 또는 금융상품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해야 할 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금액;
- ⑤ 법률 등에 따라 권리를 갖게 되는 금액.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고용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상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거나, 당사자들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보너스;
- ② 주정부의 일반 또는 특별 명령에 의한 임금 계산에서 제외된 모든 편의 제공 또는 서비스의 가치;
- ③ 고용주가 연금에 지급한 부담금과 그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기여금;
- ④ 여행수당 또는 여행할당권의 가치;
- ⑤ 고용인의 고용 성격상 수반되는 특수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고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 ⑥ 고용의 해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지급액.

### 3-4-3-3. 보너스

보너스(법정상여금)는 흔히 얘기하는 보너스인 “performance / incentive” 보너스가 아니라,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법정보너스를 의미한다.

보너스는 회사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다. 보너스를 주는 기본 목표는 조직이 벌어들인 이익을 직원과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현행 보너스 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65)은 인도 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 이익 또는 생산 또는 생산성에 근거하여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명 이상의 고용인이 고용된 모든 사업장과 21,000루피 미만의 보수를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30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보너스법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보너스법은 8.33%(최소)에서 20%(최대) 사이의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 8.33%의 보너스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업종 및 단체에서 지급한다. 어느 회계연도에도 지급할 수 있는 생산성 연계 보너스를 포함한 최대 보너스는 법 제31A조에 따라 직원의 급여/임금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3-4-3-4. 근로자 국가보험

인도 근로자국가보험법(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은 Section 2(12)(\*)1에 따라 지역별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계절성 공장에 적용되며, 중앙 정부는 Section 1(5)(\*)2에 따라 특정 주 및 연방직할지(UTs)에서 상점, 호텔, 레스토랑, 영화관, 신문사 등의 근로자에게 적용 범위를 확대 하였다. (\*)3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장 또는 시설은 관련 법률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1 The Employee' State Insurance Act, 1948, Section 2. Definitions. -In this Act, unless there is anything repugnant in the subject or context, - (12) “factory” means any premises including the precincts thereof whereon ten or more persons are employed or were employed on any day of the preceding twelve months, and in any part of which a manufacturing process is being carried on or is ordinarily so carried on, but does not include a mine subject to the operation of the Mines Act, 1952 (35 of 1952) or a railway running shed;]

(\*)2 1. Short title, extent, commencement and application. - (5) The appropriate Government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Corporation and [where the appropriate Government is a State Government,



with the approval of the Central Government], after giving [one month's] notice of its intention of so doing by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extend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any of them, to any other establishment or class of establishments, industrial, commercial, agricultural or otherwise: Provided that where the provisions of this Act have been brought into force in any part of a State, the said provisions shall stand extended to any such establishment or class of establishments within that part if the provisions have already been extended to similar establishment or class of establishments in another part of that State.

(\*3) <https://www.esic.in/web/esic/coverage>

보험금 분담 체계는 주로 인도 전역의 시행 지역에서 피보험자와 그 고용주로부터 적은 임금이지만 특정 비율의 급여로 인상된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일일 176루피 이하의 하루 평균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기여금의 지급을 면제받지만, 이 제도 하에서 모든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분담율은 다음과 같다.

- ① 직원 분담율: 임금의 0.75%:
- ② 고용주 분담율: 임금의 3.25%.\*

\* <https://www.esic.gov.in/contribution>

직원과 고용주가 기여한 기금은 근로자보험 펀드로 알려진 공통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 제도 하에서 수혜자에게 의료 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 그 가족 구성원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해당 기업의 행정비용과 기타 비용도 이 펀드에서 충당된다.

### 3-4-3-5. 연금

인도법상 연금은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으로서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될 수 있다. 2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금의 12%(특정 경우에는 10%)의 균등분담금(기본임금, 수당, 유지수당 있는 경우)은 고용주와 직원(직접 또는 도급업자를 통해 고용한 경우)이 지불해야 한다. 직원에게 제공되는 자발적 제공 기금(VPF) 옵션(고용인이 동일한 금액을 기부할 의무는 없음)도 가능하다.

고용주는 법정금을 매월 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직원들은 고용주가 고용 기간 내내 균등하게 분담하는 금융 지원제도(주택 구입, 결혼/교육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은 제외)의 형태로 사회 보장의 혜택을 누린다. 이 금액은 보통 퇴직하거나 사망 시 지불된다. 그 밖의 혜택으로는 직원연금제도 및 직원 예금연계 보험제도 등이 있다.

앞으로 발효될 사회보장법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보험은 10인이상의 사업장, 연금기금은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임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연금분담의무자나 분담액이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사회보장법 상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금기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고용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직원수 요건에 부합하여 보장범위가 적용된 경우 적용면제를 신청할 수 없고, 자발적인 보장 적용 이후 5년내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 한-인도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인도에서는 면제될 수 있다.

### 3-4-3-6. 퇴직금

퇴직금은 10인이상의 사업장에서 5년이상 근속 직원 및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정산되며, 예를들어 4년 근무 후 퇴직시는 퇴직금이 없고, 6년 근무 후 퇴직시는 15일치 임금 곱하기 근속년수인 6년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① 공장 (공장법에 따라 등록);
- ② 회사 (회사법에 따라 등록);
- ③ 상점 (상점 및 상업시설법에 따라 등록);
- ④ 교육기관 (직원 10명 이상 고용);
- ⑤ 기타 등록된 사업체.

퇴직금 산정은 근속 연도의 지급(완료된 근무 연도의 15일치 급여)을 기준으로 한다.

### 3-4-3-7. 휴가수당

휴가수당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임금 정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진다. 신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퇴직시 지급되던 휴가수당을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매 20업무일 당 하루의 휴가일은 신법도 동일하지만, 240일 이상 근무 규정이 180일 이상의 근무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적용대상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사항으로는 일시해고, 출산휴가, 연차 기간도 위 180일 근무일수 산정에 인정되지만, 유급휴가수당 일수 계산 산입에는 제외된다. 유급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고, 근로자의 업무기간이 해당연도 1월1일에 시작된 것으로 계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당연도 총 잔여일수의 1/4이상 근무했을 경우 유급휴가 대상자로 인정된다.

현행법인 공장법이 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이 공장법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통합되면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기존 주법인 상점 및 상업시설법 규정이 적용된다. 각 주법에서도 통상적으로 매20일 업무일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져며, 이는 신입이나 수습직원들도 모두 적용된다.

잔여연차 정산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공장법은 기본금+수당을 한달 업무일인 26으로 나눈 일일 임금 곱하기 잔여휴가일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기본금+수당이 아닌, 임금의 정의에 따른 임금을 26으로 나눈 1일 임금 곱하기 잔여휴가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 3-4-4. 근무시간/휴식/휴가

근로 조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인도 노동법은 매우 다양하다. 공장법 등의 중앙법과 동시에 기업 소재지 주의 개별 주법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산업고용상규칙법(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 Act, 1946)의 목적은 산업시설의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동법은 최근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모든 산업 사업장에 적용하며, 주에 따라 그 인원이 다를 수 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기준이 50인이다). 동법은 모든 부문에 대한 고정기간 고용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여러 근로 조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각 기업에 적용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분쟁법(Industrial Dispute Act, 1947) 또한 근로 조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분쟁은 직원과 고용주, 고용주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정의되며, 고용, 비고용, 고용 조건 또는 근로 조건과 관련이 있다.

산업분쟁은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이나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대표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서, 대개 노동조합, 초과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이며, 산업 활동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당사자들, 즉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서로 압박하게 된다.

공장법(Factories Act, 1948)은 공장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동법 또한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장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동법의 주요 목적은 공장의 근로 조건을 규제하고 고용주가 공장 근로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의 기본적인 최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 휴가, 휴일, 초과근무, 여성 및 아동 취업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① 일, 주 근무시간
- ② 주간휴일
- ③ 여성 근무시간, 식사시간 등
- ④ 최소 휴직일수, 유급휴직
- ⑤ 초과근무수당

아울러, 각 주는 상점 및 상업시설법(Shops and Establishment Act)을 제정하여 주요 근로 조건에 관한 법제의 틀을 만들고 있다. 동법의 목적은 고용의 허가 부문(예: 상점 및 시설)에서 직원 및 고용주에게 법적 의무와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 법률은 고용주 가족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급여가 있든 없든 사업장에서 고용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① 1일 및 1주 근무 시간
- ② 휴식 간격, 개폐 시간, 휴무일, 국경일 및 종교일, 초과근무에 대한 지침
- ③ 아동, 청년, 여성의 고용
- ④ 연차휴가, 출산휴가, 병가, 유급휴가 등에 대한 규정
- ⑤ 고용 및 서비스 종료에 대한 규칙

일반적으로, 동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30일 이내에 상점 및 상업시설 설립 등록을 해야 하지만 델리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등록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상점 등록과 설립에 관한 규칙은 주마다 다르다. 15일 내의 통지가 필요하며, 주정부는 영구적으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동법의 모든 조항 또는 모든 조항에서 면제할 수 있다.

### 3-4-4-1.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통상적으로 각 개별 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공장법 등 종양법 또한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소재지 주의 노동법 기타 관련 노동법을 확인하여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기업 내 업무 시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확정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8시간, 휴식시간 1 시간이다. 일요일에 하루 휴무일이 있고, 초과근무시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8시간, 주6일 초과근무 금지, 정상임금 2배의 초과근무 수당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따로 유사하게 근무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행 공장법 등은 일일 9시간, 주당 48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점심시간 불포함 매 5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 임금법 시행령(안) 제6조에 일일 8시간 근무 및 1시간의 중간 휴식시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도 일일 8시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제28조는 근로자의 5시간을 초과하는 연속 근무시간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소 30분간의 중간 휴식시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임금법에는 초과근무 시간 포함하여 1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각 주법을 통해 직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법에서도 최대 초과근무 포함 총 하루 12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공장법 및 주법의 상점 및 상업시설법은 명시적으로 휴식시간을 나누지 않고, 9시간으로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면 일일 최대 9.5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나, 통합 노동법제에서는 명확하게 임금법 기준 휴식 1시간 포함 9시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휴식 30분 포함 최대 8.5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 3-4-4-2. 초과근무 및 수당

대부분의 주법은 초과근무 및 수당에 관하여 특정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초과근무 및 수당 규정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기도 하고, 관리감독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직원에게만 적용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해당 소재지의 주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회사 전체의 초과근무 및 수당 정책, 특정 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 3-4-4-3. 휴가

휴가에 대한 노동법 또한 기본적으로 개별 주법에 따르고 있어, 소재지의 적용 법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통상 연차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는 최소 일수가 정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병가, 기타 휴가도 법정 최소일수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최소 휴가일수는 직원의 연속 근무일수와도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법 조항을 검토하여 전체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도입하고 개별적으로는 직원의 근속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휴가 일수를 전부 소진하지 않은 직원은 다음 연도에 최대 30일까지 이월하거나, 추후 그 일수만큼 급여를 계산하여 현금으로써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개별 주법에 따라 이러한 의무의 정도와 이행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기업은 이에 대한 관리 장부를 항상 작성하여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연도 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사용 가능한 지 여부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여성 직원에게 첫 두 자녀에 대하여는 각 총 26주간의 100% 유급 휴가가 주어져지며, 출산





8주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셋째아이 출산부터는 출산휴가기간이 출산 6주전부터해서 총 12주로 줄어든다. 남성 직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 휴가는 국가 수준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법률규정은 없지만, 많은 기업들이 내부 정책에 따라 약 15일에서 3개월의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관련하여서도 이를 의무화하는 현행 법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인도 중앙정부 공무원에게만 육아휴직이 주어지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도 재량으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 3-4-4-4. 사망직원 보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각기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다.

우선, 기업은 임금지급법(Payment of Wages Act, 1936)에 따라 직원이 사망한 날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지정된 수령인에게 지급하거나 지정된 관할 당국에 예치해야 한다.\* 또한, 인도는 공장법(Factories Act, 1948), 산업고용상근규칙법(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 등 여러 법률에서 사망을 포함한 고용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유급 휴가(EL)를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사망한 직원의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미사용 유급 휴가를 계산하여 수령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Payment of Wages Act, 1936, Section 25A. Payment of undisbursed wages in cases of death of employed person.-

(1) Subject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e Act, all amounts payable to an employed person as wages shall, if such amounts could not or cannot be paid on account of his death before payment or on account of his whereabouts not being known,-

- (a) be paid to the person nominated by him in this behalf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made under this Act; or
- (b) where no such nomination has been made or where for any reasons such amounts cannot be paid to the person so nominated, be deposited with the prescribed authority who shall deal with the amounts so deposited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

(2) Whe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1), all amounts payable to an employed person as wages-

- (a) are paid by the employer to the person nominated by the employed person, or
- (b) are deposited by the employer with the prescribed authority, the employer shall be discharged of his liability to pay those wages.]

직원이 사망한 경우, 기업은 퇴직금지급법(Payment of Gratuity Act, 1972)에 따라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 = (15일 × 마지막 급여 × 근속 연수) / 26일

단, 동법에 따라 현재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급 한도는 200만 루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중앙 정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Section 4. Payment of Gratuity

(1) Gratuity shall be payable to an employee on the termination of his employment after he has rendered continuous service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 (a) on his superannuation, or
- (b) on his retirement or resignation, or
- (c) on his death or disablement due to accident or disease:

Provided that the completion of continuous service of five years shall not be necessary where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of any employee is due to death or disablement:

(2) For every completed year of service or part thereof in excess of six months, the employer shall pay gratuity to an employee at the rate of fifteen days' wages based on the rate of wages last drawn by the employee concerned: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piece-rated employee, daily wages shall be computed on the

average of the total wages received by him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termination of his employment, and, for this purpose, the wages paid for any overtime work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Provided further that in the case of [an employee who is employed in a seasonal establishment and who is not so employed throughout the year], the employer shall pay the gratuity at the rate of seven days' wages for each season.  
 [Explanation. -- In the case of a monthly rated employee, the fifteen days' wages shall be calculated by dividing the monthly rate of wages last drawn by him by twenty-six and multiplying the quotient by fifteen.

(3) The amount of gratuity payable to an employee shall not exceed [such amount as may be notifi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5)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an employee receive better terms of gratuity under any award or agreement or contract with the employer.

또한, 기업은 근로자보상법(Employee's Compensation Act, 1923)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50%에 법에 명시된 연령 기반 계수를 곱한 금액 또는 120,000루피 중 더 큰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2,500루피를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업은 내부 정책 또는 고용 계약의 일부로서 추가 보상 또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Employees' Compensation Act, 1923, Section 4. Amount of compensation--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amount of compensation shall be as follows, namely:--

(a) where death results from the injury an amount equal to [fifty per cent.] of the monthly wages of the deceased [employee] multiplied by the relevant factor; or an amount of [one lakh and twenty thousand rupees], whichever is more;

Explanation I.--For the purposes of clause (a) and clause (b), "relevant factor", in relation to a [employee] means the factor specified in the second column of Schedule IV against the entry in the first column of that Schedule specifying the number of years which are the same as the completed years of the age of the [employee] on his last birth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n which the compensation fell due.

Provided that--(b) no half-monthly payment shall in any case exceed the amount, if any, by which half the amount of the monthly wages of the [employee] before the accident exceeds half the amount of such wages which he is earning after the accident.

(4) If the injury of the [employee] results his death, the employer shall, in addition to the compensation under sub-section (1), deposit with the Commissioner a sum of [two thousand and five hundred rupees] for payment of the same to the eldest surviving dependant of the [employee] towards the expenditure of the funeral of such [employee] or where the [employee] did not have a dependant or was not living with his dependant at the time of his death to the person who actually incurred such expenditure.



### 3-4-5. 취업규칙/징계/배상

#### 3-4-5-1. 내부 규정 작성 및 채택

회사 내 인사, 노무규정은 회사내의 인사 및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와의 고용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회사가 상시 그 규정을 수정하여 근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사, 노무 규정은 회사 내부의 규정으로서 역할을 하며 이사회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등 그 효력의 우선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로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채용 (수습기간, 채용 조건 등);
- ② 근무 조건 (업무 시간, 정보 사용 등);
- ③ 휴무;
- ④ 보수 및 기타 복리후생 (월급 및 초과 수당 등 기타 혜택);
- ⑤ 휴가 (연차 등);
- ⑥ 징계 정책;
- ⑦ 퇴직 (해고 등);
- ⑧ 행동 강령 등.

인도에서 근로, 고용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노동법으로서 다양한 중앙법 및 주법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초과근무 수당이나 법정 휴가일수 등 특정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해당 주법에 따라 인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3-4-5-2. 규정의 효력 및 수정

인사, 노무 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으로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고용 계약서 등이 이 규정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고용 계약보다 인사, 노무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고용 계약 시 정할 수 있다. 이는 내부 규정이 상시 수정되더라도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통합적인 인사, 노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의 수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정으로서 최고경영자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달 및 공개되어야 한다.

채용 및 해고 등 퇴직과 관련하여서는 주법과 중앙법이 모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해당 법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기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맞춤형 인사 규정을 작성하고 상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 이러한 인사, 노무 규정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4-6. 노동조합

인도 노동조합법(Trade Unions Act, 1926)은 노동조합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고용주간, 근로자와 근로자간, 고용주와 고용주간 관계를 규정하거나 기업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구성된 모든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1) 동법 제4조는 조합원 7인이상이 조합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한 최소 조합원 수로 사업장의 총 근로자의 최소 10% 또는 100인 중 적은 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1) The Trade Unions Act, 1926, Section 2. (h) “Trade Union” means any combination, whether temporary or permanent, forme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relations between workmen and employers or between workmen and workmen, or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rs, or for imposing restrictive conditions on the conduct of any trade or business, and includes any federation of two or more Trade Unions:  
Provided that this Act shall not affect— (i) any agreement between partners as to their own business; (ii) any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those employed by him as to such employment; or (iii) any agre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sale of the goodwill of a business or of instruction in any profession, trade or handicraft.

(\*2) The Trade Unions Act, 1926, Section 4. [(1)] Any seven or more members of a Trade Union may, by subscribing their names to the rules of the Trade Union and by otherwise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with respect to registration, apply for registration of the Trade Union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no Trade Union of workmen shall be registered unless at least ten per cent. or one hundred of the workmen, whichever is less, engaged or employed in the establishment or industry with which it is connected are the members of such Trade Union on the date of making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rovided further that no Trade Union of workmen shall be registered unless it has on the date of making application not less than seven persons as its members, who are workmen engaged or employed in the establishment or industry with which it is connected.] [(2)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under sub-section (1) for the registration of a Trade Union, such applica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come invalid merely by reason of the fact that, at any time after the date of the application, but b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 Union, some of the applicants, but not exceeding half of the total number of persons who made the application, have ceased to be members of the Trade Union or have given notice in writing to the Registrar dissociating themselves from the applications.]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등록은 노동조합의 ‘인정(recognition)’ 절차와 구별된다. 인정절차는 사측이 근로환경, 임금 등 사안에 관하여 근로자측의 대표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동 인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각 주마다 관련 규정을 담고 있으나, 중앙법인 노동조합법 자체에는 인정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정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집단교섭 거부는 인도 산업분쟁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된다.

인도 산업분쟁법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위원회(works committee)’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위원회는 노사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공통 관심 사항에 의견을 개진하여 이견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또한 2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redressal committee)’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산업분쟁법상 노동쟁의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 각 위원회는 모두 동수의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만 이루어진 사원협의회의와는 차이가 있다. 모든 근로자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사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측은 1개월 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에게 결정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이외에도 산업분쟁법에 기초한 각 주법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자라트주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동경영협의회(joint management council)’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Section 3. Works Committee.-(1) In the case of any industrial establishment in which one hundred or more workmen are employed or have been employed on any day in the preceding twelve months, the appropriate Government may by general or special order require the employer to constitute in the prescribed manner a Works Committee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and workmen engaged in the establishment so however tha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workmen on the Committee shall not be less than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the employer. The representatives of the workmen shall be chosen in the prescribed manner from among the workmen engaged in the establishment and in consultation with their trade union, if any, registered under the Indian Trade Unions Act, 1926 (16 of 1926).

(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Works Committee to promote measures for securing and preserving amity and good relations between the employer and workmen and, to that end, to comment upon matters of their common interest or concern and endeavour to compose any material difference of opinion in respect of such matters.

- (\*2) 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Section 9C. Setting up of Grievance Redressal Machinery.-(1) Every industrial establishment employing twenty or more workmen shall have one or more Grievance Redressal Committe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out of individual grievances.  
(5)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is section, the setting up of Grievance Redressal Committee shall not affect the right of the workman to raise industrial dispute on the same matter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인도 헌법은 모든 국민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등 조합 및 협회를 결성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 노동조합의 주요 권리는 아래와 같다 :

- ① 노동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여한 경우, 노조위원과 조합원은 범죄음모 관련 형사 절차에 면책을 부여한다;
- ② 노동조합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유지할 수 있고, 조합원의 시민적, 정치적 이익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은 규정된 방식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통합될 수 있다;
- ④ 등록 노동조합의 조합원간 합의를 해당 목적이 근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⑤ 조합원이 당사자로 있는 노동쟁의를 위해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고용계약 파기를 야기하거나, 타인의 고용활동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등록 노조, 노조위원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민사상 제소할 수 없다.
- ⑥ 노동조합은 산업체의 복지와 사회전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더 나은 근로조건 협상, 산업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인력채용과 선발을 지원하여 기업구조 및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4-7. 채용계약 해지 및 해고

#### 3-4-7-1. 해고 절차

현행 산업분쟁법에 따르면, 모든 산업부문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감축시, 고용자는 법률 적용규정에 따라 1개월 - 3개월 전 감축통보, 감축보상금 지급, 관계 정부부처 및 관청 신고 또는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요건은 노사관계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 승인필요 요건이 100인 이상 근로자에서 300인 이상 근로 산업체로 완화된 점이 주목된다.

법률이 따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workmen 또는 worker)의 범주가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 ‘상점 및 상업시설법’ 등 각 주법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해고(Ordinary dismissal)’와 ‘사유있는 해고(Dissmissal for cause)’ 등 두 가지 형태의 해고가 있다. 통상적으로 해고통지 기간은 고용계약서에서 따로 통지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한 1개월이다.

사유있는 해고는 징계 등의 경우 이루어지는 해고방법이며,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위법행위가 입증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주는 통지기간 없이 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산업분쟁법에서 고용주는 근로자 해고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해고행위는 무효이며, 해당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각 주법에도 합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고용주가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로 간주된다. 고용주는 해고 후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인도 산업분쟁법상 근로자(workmen)를 징계, 퇴직, 계약기간 만료 이외의 사유로 해고할 경우, (1)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후입선출(last in, first out)” 원칙 적용; (2) 240일 이상 근로자의 경우, 1개월전 통지 의무; (3) 관계 노동청에 신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직전 12개월간 100인 이상의 특정 근로사업장(공장 등)의 경우 3개월 전 통지 및 관계 노동청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3-4-7-2. 해고 보상금

고용주는 일반 직원 해고시 잔여 휴가보상금, 퇴직금, 기타 계약에 따른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징계에 의한 해고시에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인도 산업분쟁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지급금 외에도, 근속연수마다 15일치의 평균임금을 해고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 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Section 25F. Conditions precedent to retrenchment of workmen. -No workman employed in any industry who has been in continuous service for not less than one year under an employer shall be retrenched by that employer until-(b) the workman has been paid, at the time of retrenchment, compensation which shall be equivalent to fifteen days' average pay [for every completed year of continuous service] or any part thereof in excess of six months; and



## 3-5 법무

### 3-5-1. 법률 체계

#### 3-5-1-1. 인도 헌법

인도 헌법(Constitution of India, 1950)은 총 450개의 조항 및 12개 부속서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의 헌법 중 하나이다. 헌법은 인도 독립이후 1950년 1월 26일 제정의회에서 작성되고 채택되었으며, 인도 헌법 전문에 “우리 인도 국민은 인도를 사회주의국가 세속적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인도의 최고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Constitution of India, 1950, Preamble. “WE, THE PEOPLE OF INDIA, having solemnly resolved to constitute India into a [SOVEREIGN SOCIALIST SECULAR DEMOCRATIC REPUBLIC] and to secure to all its citizens: JUSTIC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IBERTY of thought, expression, belief, faith and worship; EQUALITY of status and of opportunity; and to promote among them all FRATERNITY assuring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and the [unity and integrity of the Nation]; IN OUR CONSTITUENT ASSEMBLY this twenty-sixth day of November, 1949, do HEREBY ADOPT, ENACT AND GIVE TO OURSELVES THIS CONSTITUTION

인도 헌법의 특징 중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외국 출처에서 도출해왔기 때문에, 범세계적인(cosmopolitan) 문서로서 언급되고 있다

- (1) 영국으로부터 계수한 양원제, 법치주의 및 의회 민주주의
- (2) 아일랜드의 국가정책 원칙
- (3) 미국의 기본권, 사법부 독립, 대통령의 기능
- (4) 캐나다의 연방법을 및 주 법률 목록
- (5) 호주의 연방 및 주법 공통 목록 및 통상의 자유
- (6) 구 소비에트연방의 기본의무

인도 헌법은 연방 헌법인 동시에 단일 헌법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도 단일국가도 아닌 준연방(quasi-federal) 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도는 28개의 주와 8개의 연방직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및 주의회를 통한 각각의 입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도 헌법은 중앙 차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의회(Lok Sabha)와 상원의회(Rajya Sabha)로 이루어져 있다

- (1) 하원의회(국민의 대표): 하원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당의 연합의 정부를 구성한다. 하원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 (2) 상원의회(주정부 대표): 상원의원은 주의회로부터 간접 선출된다.

각 주차원에서 주 입법부인 주의회가 있다. 모든 주는 하원의회와 유사한 주의회가 있으며, 일부주는 입법회의로 불리는 두개의 하원을 가지고도 있다. 현재 인도 총 28개의 주의회 중 7개 주에서 입법회의가 따로 있으며, 주의회가 입법회의보다 더 많은 입법권을 행사한다. 주의회 의원수는 각 주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달라진다.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인도 헌법에는 삼권분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뉘어지는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 전반에 걸쳐 고려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는 대통령 및 주지사의 행정명령 공표와 행정 위임 입법 등을 통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법부는 헌법 개정, 관할권 및 법원의 권한 개정, 판사 탄핵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사법부는 위헌 입법 및 행정명령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 3-5-1-2. 입법절차

인도의 의회제도는 중앙차원의 인도 의회에 의한 입법권한 및 주차원의 주 의회에 의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입법 권한이 부여된 입법분야는 인도 헌법에 나열되어 있다. 인도헌법 제7장은 중앙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분야, 주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분야, 중앙의회와 주의회가 모두 제정하는 법률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만약 중앙의회와 주의회간 법률에 충돌이 발생하면 중앙의회 입법권이 우선한다. 입법절차는 중앙의회 및 주의회 모두 유사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중앙의회 입법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입법 제안된 법안은 정부 관련 부처에 의해 초안이 준비되며, 해당 법안은 타 부처에 회람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회람되어, 필요에 따라 수정 의견 개진 및 수정이 이루어진다. 동 법안은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내각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후, 하원 또는 상원의회에 발의된다. 유일한 예외로서 재정적 성격의 입법은 하원을 통해서만 우선 발의된다.

하원의회 또는 상원의회는 법안이 발의되면 심의를 거쳐 통과하게 된다. 법안이 상하원 의회 중 한곳에서 발의되어 과반수 찬성에 의해 통과되면, 상하원 다른 한곳에서 발의, 심의 통과 절차를 다시 거친다. 예외적으로 재정관련 법안은 하원의회가 최종 입법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권고적 권한만을 지닌다. 주의회의 경우 입법회의는 양원의 역할을 담당한다기 보다는 자문역할만을 담당하며, 주의회 자체가 최종 입법 권한을 가진다.

법안이 양원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정된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정보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의회에 재고하도록 한 차례 반송할 수 있다. 만약 이후 대통령 권고사항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양원에 의해 다시 통과되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안은 의회 법률로서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된다. 대통령은 의회 입법과는 별개로 의원회기 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의회 회기가 열리면, 의회에 비준을 받아 법률로서 효력이 지속되며,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례의 효력이 중단된다. 각 주의 주지사도 대통령의 상기 절차와 마찬가지로 각 주의 조례에 대한 입법권을 지닌다.

### 3-5-1-3. 법률시스템

인도는 대륙법, 영미법, 형평법, 관습법, 종교법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 법률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주요 법원(source of law)은 아래와 같다.

- (1) 헌법 : 헌법은 최고 법원이다
- (2) 법률(성문법) : 의회에서 법률로서 문서로 제정된 법률 및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 정부 단계에서 입법된 규칙, 규정, 시행령 등 하위 위임법률
- (3) 관습법 : 특정 사안의 경우, 현행법과 도덕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 관습 및 종교적 관습
- (4) 법원 판결 : 대법원, 고등법원 등 상위 법원에 의한 선례적 가치를 지닌 사법적 판결, 판례

조약, 국제협정 등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비준되었을 경우 인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진다. 특정 사안의 경우 국제관습 및 국제법 원칙도 인도 현행법 및 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국내 비준없이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할 경우 국내법이 우선한다. 인도 사법부는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 계약법적 이슈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제법 원칙 및 영미법계 국가 등 외국의 사법적 판결도 법원천으로서 고려한다.





### 3-5-2. 회사 관련 법제 개요

#### 3-5-2-1.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인도의 회사법제는 그 기원이 영국 회사법이다. 1956년 처음 제정된 회사법은 1948년 영국 회사법을 계수한 것이었는데, 비즈니스가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의 시스템과 절차의 변화를 고려하여 회사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선진화된 회사법이 이해당사자들과의 오랜 숙고 끝에 2013년 전면개정, 통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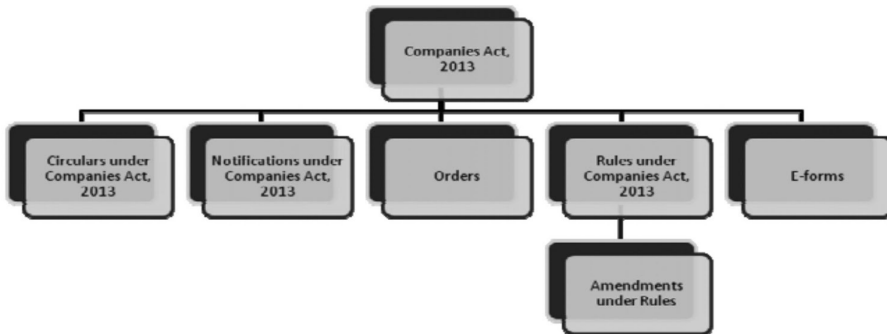
인도 회사법은 현행법 또는 선행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회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은 인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에 의해 관리되는 회사법 및 각종 비즈니스 관련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회사법은 법인설립부터 기업, 주주, 이사 등의 책임을 정하고, 그 정리 절차 등 회사의 모든 운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기업의 통합, 기능 및 운영의 전반적인 틀을 지배하는 인도에서 가장 포괄적인 법률이다.

정부 기관 및 독점 기업과는 별도로 인도의 주요 사업 조직의 형태는 공기업, 민간 및 1인 기업(OPC), 외국 기업, 외국 기업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점(Branch Office),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유한책임파트너십(LLP) 및 기타 형태의 기업이다.

동법은 회사의 주식회사, 증권, 주식 자본 및 채권, 인수, 경영 및 관리, 배당 및 지급, 회사의 회계, 감사인, 임원 및 이사 자격,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장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이사와 그 권한, 임명 및 경영자 인사, 감사 및 합병, 정리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기업부는 인도 정부 주요 부처로서, 주로 2013년 회사법 및 2008년 기타 관련 시행령,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기업 부문의 기능을 법에 따라 규제한다.

#### <인도 회사법 구성>



자료원 : 인도기업법무연수원(<https://www.icsi.edu/media/webmodules/CompanyLaw.pdf>)

### 3-5-2-2. 유한책임파트너십(LLP Act, 2008)

회사법은 주식회사를 주로 규율하는 반면, 유한책임파트너십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별도의 개별 법률인 유한책임파트너십법으로 규율한다. 회사 관련 법률로서 유한책임파트너십법(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8)은 유한책임파트너십(LLP)에 대하여 적용된다.

동법은 2008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식회사보다 다소 간소한 컴플라이언스 규제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파트너십법법은 유한책임파트너십(LLP)라는 새로운 실체의 개념을 도입했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형태이며 파트너와 분리된 법적 실체로 되어 있다.

낮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 파트너에게 제한된 책임의 이점을 제공하는 대체 기업 형태로서 일반 파트너십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내부 구조를 조직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파트너들의 책임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한책임파트너십은 회사와 파트너십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유한책임제휴, 주식회사, 파트너 및 이들의 관계, 기여, 금융공시, 제휴권 배분 및 이전, 청산 및 해산의 성격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구조와 운영의 유연성으로 인해, LLP는 중소기업과 벤처 캐피탈에 의한 투자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한책임파트너십 또한 기업부가 주요 담당 부처로서 동법에 따라 그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 3-5-2-3. 증권거래위원회법(SEBI Act, 1992)

증권거래위원회법(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Act, 1992)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이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는 인도 정부의 증권 감독 규제 기관이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 1992년 SEBI법에 따라 제정되어 인도 증권 시장을 규제하며, Mumbai에 본부를 두고 있다. 증권에 대한 투자자 자본의 보호로서 인도의 증권 시장 촉진, 개발 및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 거래소와 관련된 규칙과 법률을 관장한다. 1992년 인도 증권거래소법에 관련된 통합형 FDI 정책(2017년 발효)에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외국 기관 투자자’(FI)는 인도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1995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FII로 등록하는 인도 외부에 설립 또는 법인화된 기업을 의미한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벤처캐피탈 투자자(FVCI)’는 인도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O) 규정, 2000년 SEBI(FVCI) 규정에 등록되어 본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5-2-4. 외환관리법(FEMA, 1999)

인도는 인도 외환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과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 관련법을 통합하고 개정하기 위하여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을 시행하고 있다. 동법을 근간으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상시 고시(RBI Master Directions and Notifications) 등을 통하여 구체적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

외환관리법은 2000년 6월 1일에 발효되어, 외환 보존의 관점에서 무역과 지불을 용이하게 하고 질서 있는 외환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동법은 외환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법령에 따라 예금이 정한 규칙과 규정에 대한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외환관리법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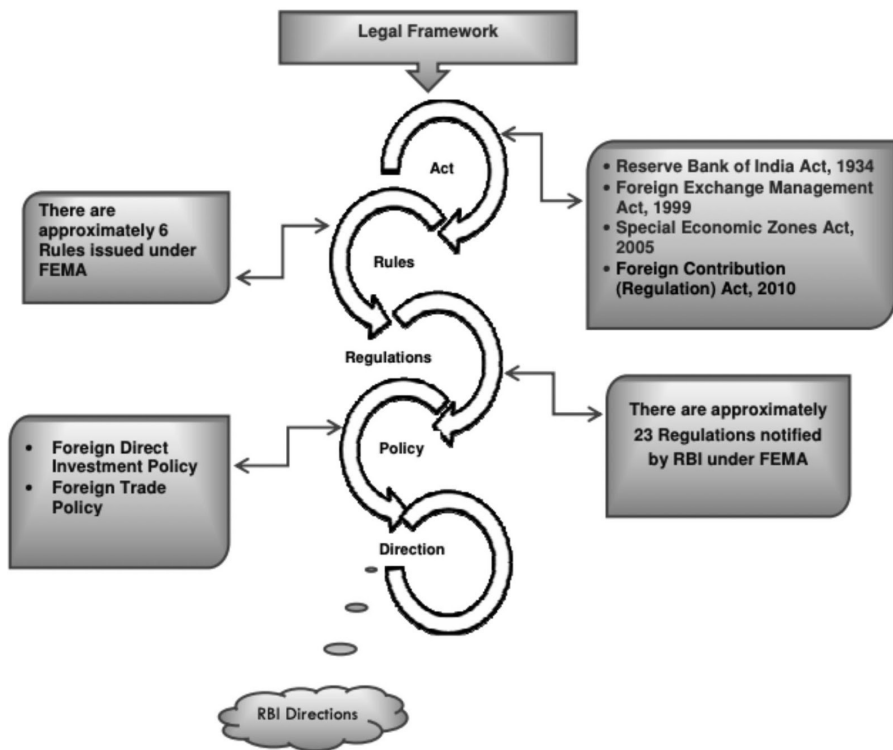
인도에 진출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금 또는 대여금 투자 시 반드시 동 외환관리법 규정을



속지하여야 하며, 연간 법률 준수 의무도 있으므로 동법에 대한 이해 및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인도 거주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외국법인의 인도내 모든 지점, 사무실 및 기관에도 적용된다. 동법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틀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환관리 체제를 가능하게 했다. 외환관리법은 인도 국내외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자금을 이전하거나 여행 목적으로 인도에서 외화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전매 거래와 송금을 포함하여 규제하며, 중앙 정부가 인도 이외의 모든 개인에게 지불하거나 인도 밖에서 받는 영수증, 전주 및 외국 안전 거래의 세 가지를 제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도중앙은행(RBI) 또는 정부의 특정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도 외환관리법 구성〉



자료원 : 인도기업법무연수원

### 3-5-2-5. 인도중앙은행법(RBI Act, 1934)

1934년 인도중앙은행법이 제정되어 인도중앙은행(RBI)을 설립하였다. 은행과 다른 관련 사항들을 감독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RBI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감독자 역할을 한다. 이는 국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리를 보호하며, 대중에게 긍정적인 은행 체계를 제공한다. RBI는 국가 소유로서 국가 통화의 발행자 역할을 한다.

주목적은 지정 일반 상업 및 협동 은행, 모든 인도 금융 기관, 지역 은행, 소규모 금융 은행, 지급 은행, 신용 정보 회사, 비은행 금융 회사 및 1차 거래자로 구성된 금융 부문을 통합 감독하는 것이다. 이밖에 인도중앙은행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다.

- (1) 인도은행법, 1934
- (2) 공공부채법, 1944/정부증권법, 2006
- (3) 정부증권규제법, 2007
- (4) 은행규제법, 1949
- (5) 외환관리법, 1999
- (6) 금융자산의 증권화 및 재건 및 보안이익법, 2002
- (7) 신용정보회사법, 2005
- (8) 지불 및 정산제도법, 2007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아래의 정부 승인 경로로서 인도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RBI의 승인이 필요하다.

- (1) 자동 경로(Automatic Route): 자동 경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나 인도 회사는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승인도 인도중앙은행이나 정부로부터 요구되지 않는다;
- (2) 정부 경로(Approval Route): 정부 경로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인도 기업은 투자를 위해 인도 정부 투자관련부처(FIPB), 경제부(DEA), 재무부 또는 산업정책촉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5-2-6.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

인도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지속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참여자가 수행하는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쟁 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나 협회, 개인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급, 유통, 보관, 획득 또는 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에 현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법은 어떤 기업이나 집단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적 지위란 관련 시장에서 기업이나 집단이 누리는 힘의 위치를 의미하며,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인 경쟁력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경쟁자나 소비자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인도의 관련 시장 내 경쟁에 현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러한 결합이 성립되면 무효가 된다.

중앙정부, 주정부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해당 정책이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경쟁위원회로부터 수렴할 수 있다. 동법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지시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항소를 심리, 처분하고 배상 청구에 대해 심판하기 위한 경쟁심판소, 중앙정부, 주정부, 위원회, 법령 기관, 지방 정부, 기업 또는 항소 재판소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람은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법은 인도 경쟁위원회(CCI)에게 경쟁법 관련 모든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경쟁적 관행과 행위와 같은 카르텔에 대한 소송은 경쟁위원회에 관할권이 있다.



### 3-5-2-7. 환경 관련 법제

인도환경부는 1985년에 설립되어 환경의 규제와 보존을 위한 국가의 행정 기관으로서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규제 이행 기반을 제공한다. 1970년대부터 여러 환경법이 제정되었다. 산업자원부와 오염관리위원회(CPCB)는 산업의 입법 및 행정 핵심부처인 중앙오염관리위원회와 주 오염관리위원회(SPCB)를 구성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녹색심판법, 2010
- (2) 공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 1981
- (3) 물(오염 방지 및 통제)법, 1974
- (4) 환경보호법, 1986
- (5)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1989; 개정 2016, 2022
- (6)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정, 2016; 개정 2022
- (7) 생의학 폐기물 관리 규정, 1998; 개정 2016, 2022
- (8) 건설 및 철거 폐기물 관리 규정, 2016 등

### 3-5-2-8.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86)

인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86)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하고 소비자 협의회와 기타 당국의 설립을 위한 조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소비자는 지급, 약속, 일부 지급, 일부만 지급된 대가를 위해 또는 이연 지급 시스템 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지급 또는 일부 지급 또는 일부 약속된 대가를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이외의 해당 상품의 사용자를 포함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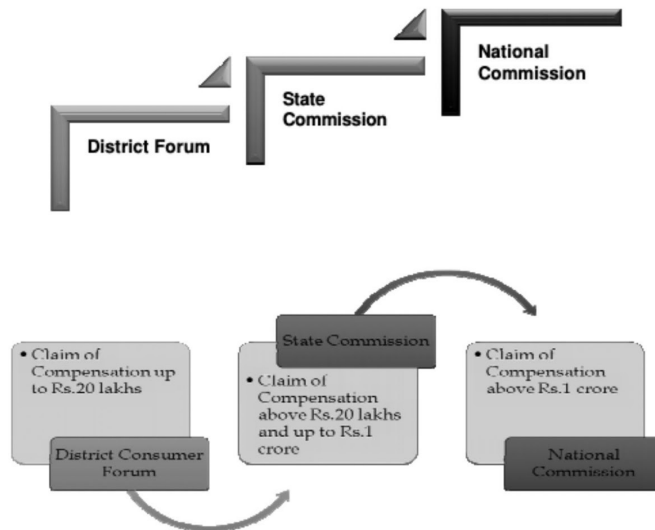
동법은 소비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가, 주 및 지역 단계에 3단계 준사법적 소비자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였다. 또한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해 중앙 및 주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 포럼은 상품, 서비스의 가치가 2백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청구된 경우, 보상금이 2 백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으며, 국가위원회는 1천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발을 접수할 수 있다. 지역 포럼, 주위원회 또는 국가위원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소하지 않는 한 고발을 인정할 수 없다. 지역 포럼, 주위원회 및 국가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재판소의 권한이 있다.

<인도 소비자분쟁 처리절차>

**REDRESSAL MACHINERY UNDER THE ACT**

The Act provides for a three-tier quasi-judicial redressal machinery at the District, State and National level for redressal of consumer disputes and grievances. The District Forum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complaints where the value of goods/services complained against and the compensation, if any claimed, does not exceed ₹20 lakhs, the State Commission for claims exceeding ₹20 lakhs but not exceeding Rs. 1 crore; an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laims exceeding Rs.1 crore.



자료원 : 인도기업법무연수원

**3-5-2-9. 산업(개발 및 규제)법(Industries(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

산업(개발 및 규제)법(Industries(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은 인도의 산업발전과 산업에 대한 개념적이고 법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동법은 중앙 규제 하에 많은 중요한 산업,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및 그 발전이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규율 되어야 하는 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도 국내 산업의 개발 및 규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 (1) 산업 정책 구현: 동법은 산업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 (2) 중요 산업의 규제 및 개발: 동법은 여러 중요 산업의 개발 및 규제를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 산업의 개발은 반드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
- (3) 새로운 산업 계획 및 개발: 건전하고 균형 있는 신규 사업의 계획과 향후 개발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인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 3-5-2-10. 관세법(Customs Act, 1962)

인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은 선박, 항공기, 물품, 승객 등의 다양한 범주의 입출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관세는 1962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간접 세금으로서, 관세법, 다른 세법과 마찬가지로 세금 부과와 징수가 주된 목적이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다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1) 수입 및 수출 규제
- (2) 국내 산업의 보호
- (3) 밀수 방지
- (4) 외환의 보전 및 증강 등
- (5) 외환보전을 위한 수입 제한
- (6) 대외무역법 및 외환규제법 등 외환을 취급하는 법률과 법률조항의 상호조율
- (7) 인도의 산업을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
- (8) 물품의 밀반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방지
- (9) 물품의 덤핑 방지

관세법 제12조는 관세법(1962년), 관세법(1975년) 또는 인도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기타 적용 법률에 명시된 비율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3-5-2-11. 자금세탁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2002)

자금세탁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2002)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자금세탁에서 파생된 재산의 물수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동법 및 관련 시행령은 200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금융회사, 금융기관, 중개업자에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금융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3-5-3. 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인도에서 우리기업이 인도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단순한 표준계약서에 서명한 정도로 여기는 우를 범할 수 있는데, 훗날 상호 분쟁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 적용하는 것이 계약서이다.

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상 모호한 단어 설정, 중요 조항 누락 등으로 인해 권리의무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는 문서가 계약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는 정형화된 문장의 모음이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의 목적, 분야, 이행방법, 권리와 의무,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상호간의 이해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떠한 종류의 계약이 되었든 아래 사항들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3-5-3-1. 계약의 목적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계약 문구의 구성, 범위, 필수 조항이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계약인 경우 기간, 장소, 로열티, 지식재산권 등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공급계약인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규모와 수준, 가격 및 지불조건, 손해배상, 거부 및 재배송, 분쟁해결수단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급계약인 경우 이행 방법 및 기간, 대금 및 지불조건, 손해배상, 불가항력, 분쟁해결수단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계약의 경우 언어, 이행지역, 지불통화 및 환율, 분쟁해결 관할권 및 준거법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3-5-3-2. 표준문구 및 필수조항

당사자, 목적, 정의, 기간, 이행 조건, 수정, 해지/종료, 배상, 중재/분쟁해결수단, 준거법,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등 모든 계약서에 들어가는 표준 조항 및 필수 조항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표준 문구라고 해도 우리 기업의 이익에 맞게 적절히 검토하여 수정해야 한다.

특히 계약 문구 작성시 당사자간 형평성에 맞는 동등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언제든지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 등의 불평등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문구 등은 문제가 있다. 분쟁해결 및 중재조항에서도, 중재인 지정, 중재지,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해야하며, 중재지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가까운 지역으로 설정하면, 훗날 중재에 임할 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나아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배상액의 범위와 액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추후 소송에 따른 추가비용까지도 배상액의 범위에 넣을 수도 있다.

영문으로 작성되는 계약서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서는 짧고, 명확하며,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수동태보다는 능동태로 작성해야 하며, 불필요한 단어나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단어는 삭제해야 한다. 또한 '해야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shall'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의미하는 'may'를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도 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서는 문장이 매우 길고 모호하며 표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 경우, 의문스러운 조항은 최대한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3-5-3-3. 출구전략

누구든, 어느 기업이든 계약 상대방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을 목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계약을 해지/종료해야 할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합작투자 계약의 경우 파트너 기업과의 지분 배분, 매각, 지분 이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분쟁 절차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3-5-3-4. 양해각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사자 쌍방이 상호 이해나 양해한 바를 메모나 각서 형식으로 기재하여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MOU와 관련하여 자주 대두되는 의문은 MOU에는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법적 책임이 있는 지 여부인데, 당사자가 정식 계약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MOU는 영미계약법상으로 청약(offer) 및 승낙(acceptance)과 함께 필요한 계약의 필수요건인 계약의 대가(consideration)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집행 가능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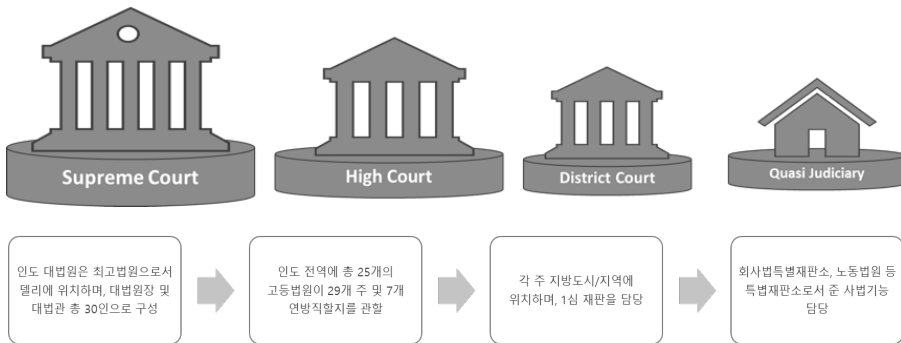
그럼에도 MOU의 법적 성격을 검토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모든 법률문서는 MOU라는 제목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그 효력 여부를 따지게 된다는 것이므로, 비록 명칭은 MOU로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나 작위, 부작위의 약속을 하고 있다면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기준이 아닌 정식 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거래가격의 책정, 구체적인 작위, 부작위 의무의 규정, 계약위반시의 구제수단 등을 기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MOU는 정식 계약 체결전에 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란 훗날 계약서 체결을 위한 중보적인 협상을 피할 수 있으나, MOU 작성단계부터 정확한 검토를 거쳐 작성해야 할 것이다.

### 3-5-4. 소송 요건

#### 3-5-4-1. 사법제도

##### <인도 사법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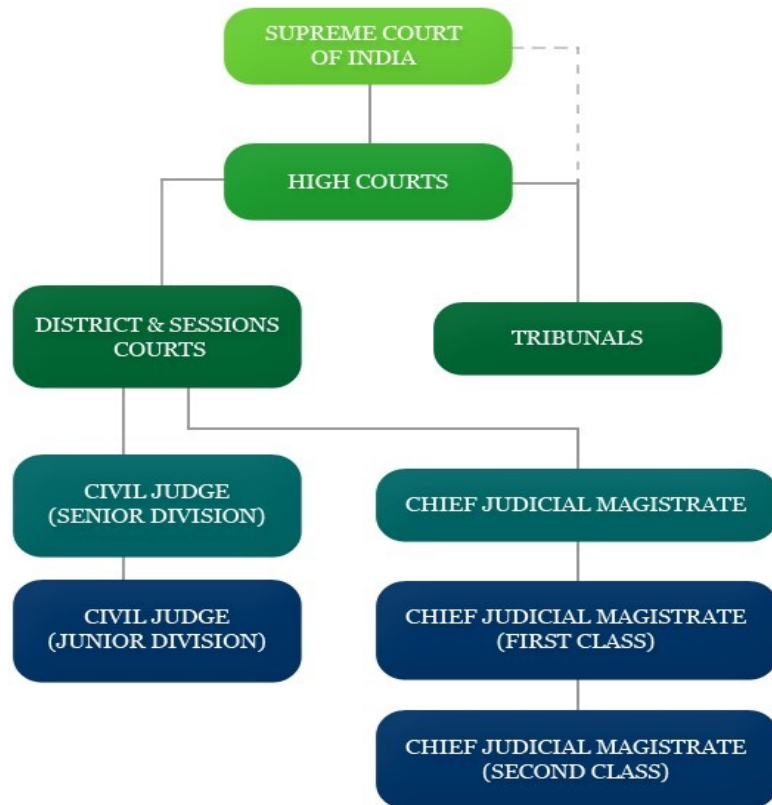


인도 법률체계는 중앙법과 주법이 혼재된 연방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소송 및 사법시스템은 미국과 같은 연방시스템이 아닌 단일법원 체계로, 한국과 더 유사하다. 즉, 주 관할권이 있고, 주의회가 있어서 분야에 따라 주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법률체계 자체를 보면 인도 스스로 연방법시스템과 단일법시스템이 혼재된 준연방제(quasi-federal)로서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제인 미국의 경우 주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관세, 이민, 주간통상, 연방범죄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연방법을 따르는 반면, 인도는 중앙법을 적용하는 분야, 주법을 적용하는 분야, 둘 모두를 적용하는 분야를 헌법에 각각 리스트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인도 법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초 1심법원부터 진행되며, 이후 고등법원으로 항소,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된다. 인도의 사법 및 준사법 제도는 각급 법원을 통한 사법제도, 증권거래위원회 등 준사법기관을 통한 준사법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주, 지역에 민사, 형사를 담당하는 1심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있으며, 28개 주 및 8개 연방직할지에 걸쳐 총 25개의 고등법원(High Court)이 있다. 인도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이 인도의 최고법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인도 헌법에 따라 1개의 대법원, 25개의 고등법원, 18,735개의 지방법원 및 하급법원, 그리고 특별재판소로 구성되는 단일법원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도 사법부(법원) 구성도>



자료원 : DAKSH 공식 홈페이지(<https://www.dakshindia.org/indian-courts/>)

민사법원은 'District Court', 형사법원은 'Session Court'라 불리며, 형사법원은 형량에 따라 각 치안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회사법특별재판소, 직접세항소법원, 간접세항소법원, 소비자포럼, 중앙 및 주 행정법원, 채무변제법원, 지적재산권항소법원, 환경재판소 등이 특별재판소로 있다.

인도 민형사 재판에서는 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적극주의(inquisitorial role)를 채택하여, 구두 및 문서상 증거를 접수하여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고, 판례 및 법률을 해석 적용한다. 인도에서는 아직 배심원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일부 파르시(Parsi) 공동체에서의 혼인관련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 제도를 예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도 사법부는 재판부의 성별 및 지역적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판사부족 및 여성판사 비율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인도 대법원 대법관 및 고등법원 판사는 인도 헌법 제124(2)조(\*1) 및 217조(\*2)에 따라 인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대통령은 대법관 및 고등법원 판사 임명을 위해 필요시 다른 대법관 및 고등법원 판사와 협의해야 한다.

대법원, 고등법원 이외 하급법원 판사 임명은 헌법 제233조 내지 제237조에 따라 진행되며, 지방법원 판사는 관할 고등법원의 권고에 따라 주지사가 지방법원 이하 하급법원 판사 출신으로 임명할 수 있다.(\*3)



- (\*1) Constitution of India, 1950. Section 124. Establishment and constitution of Supreme Court.-(1) There shall be a Supreme Court of India consisting of a Chief Justice of India and, until Parliament by law prescribes a larger number, of not more than seven other Judges. (2) Every Judge of the Supreme Cour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warrant under his hand and sea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24A] and shall hold office until he attains the age of sixty-five years: [Provided that]- (a) a Judge may, by writing under his hand addressed to the President, resign his office: (b) a Judge may be removed from his office in the manner provided in clause (4).
- (\*2) Constitution of India, 1950. Section 217. Appointment and conditions of the office of a Judge of a High Court.-(1) Every Judge of a High Cour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warrant under his hand and sea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24A], and [shall hold office, in the case of an additional or acting Judge, as provided in article 224, and in any other case, until he attains the age of [sixty-two years]].
- (\*3) Constitution of India, 1950. Section 233. Appointment of district judges.-(1) Appointments of persons to be, and the posting and promotion of, district judges in any State shall be made by the Governor of the State in consultation with the High Court exercising jurisdiction in relation to such State. (2) A person not already in the service of the Union or of the State shall only be eligible to be appointed a district judge if he has been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an advocate or a pleader and is recommended by the High Court for appointment.

### 3-5-4-2. 소송 준거법 및 관할권\*

\* 인도 법률가이드 (2023, 대한민국 법무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인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준거법 선택(choice of law) 및 관할권 선택 계약 조항을 인정하지만, 준거법 선택이 인도의 공공 이익(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한다. 따라서 필수인 인도 법률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인도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인 간에 인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도 공공의 이익으로서 확립된 인도 법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도 법률에 따라 인도에서 설립된 외국회사의 인도 자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인도 회사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인도법원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외국법이 일반적인 사실로서 인정되고, 전문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는 소송목적물에 관하여 특정 법원의 관할권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 인도 법원은 단순히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서만 관할권을 지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국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법원에 물적관할권이 존재하거나, 민사법원 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원 중 한 곳으로 관할권을 지정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인도 법원은 관할권이 외국법원으로만 지정되었을 경우, 인도 법률 및 인도 법원이 준거법 및 관할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인도 법원은 해당 관할권 선택 조항이 (1)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경우; (2) 소송 목적물과 관할지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3-5-4-3.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인도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 제13조 내지 제44A조는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인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인도 정부가 상호인정으로서 확인한 국가(reciprocating territories) 법원의 판결이 해당 국가의 최상위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인도에서 관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영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싱가포르 등 국가가 인도 정부의 상호인정 국가이며, 한국, 미국 등 국가는 아직 상호인정 국가가 아니다. 상호인정 국가가 아닌 외국 판결의 경우, 외국 법원의 판결 후 3 년내에 인도 국내 법원에서 집행을 위한 소송을 따로 진행하여야 한다.

\*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Section 13. A foreign judgment shall be conclusive as to any matter thereby directly adjudicated upon between the same parties or between parties under whom they or any of them claim litigating under the same title except--(a) where it has not been pronounc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 where it has not been given on the merits of the case; (c) where it appears on the face of the proceedings to be founded on an incorrect view of international law or a refusal to recognise the law of India in cases in which such law is applicable; (d) where the proceedings in which the judgment was obtained are opposed to natural justice; (e) where it has been obtained by fraud; (f) where it sustains a claim founded on a breach of any law in force in India.

외국 법원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판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에서도 효력이 있다.

- (1)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 (2) 소의 이익 없이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 (3) 해당 판결이 표면적으로 국제법을 잘못 인용하였거나, 적용하여야 할 인도법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 (4) 법원 절차가 정의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 (5) 판결이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 (6) 해당 판결이 인도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인도법은 외국에서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하여, 인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한다.



### 3-5-5. 소송 기간, 절차 및 비용

#### 3-5-5-1. 소송기간

인도 소멸시효법(Limitation Act, 1963)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소멸시효란 법적 권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생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 내지 입증 곤란의 구제,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보호가치의 부존재 등의 존재이유가 있다. 소송당사자는 소멸시효법에 따라 시효 기산을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

소송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다르다. 예를 들어, 계약불이행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불이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부동산 점유회복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12년이다. 시효기간은 동법 부속서에 사안별로 1년에서 12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소멸시효법은 다양한 민사소송 사안에 따라 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거나, 소송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새롭게 기한이 기산되는 등 예외 또한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법 외에도 특별법이나 절차법에도 항소심, 재심 신청 등을 위한 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기간 초과는 재판부에 충분한 사유를 입증하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나, 소멸시효법에 규정된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재판부에 양해를 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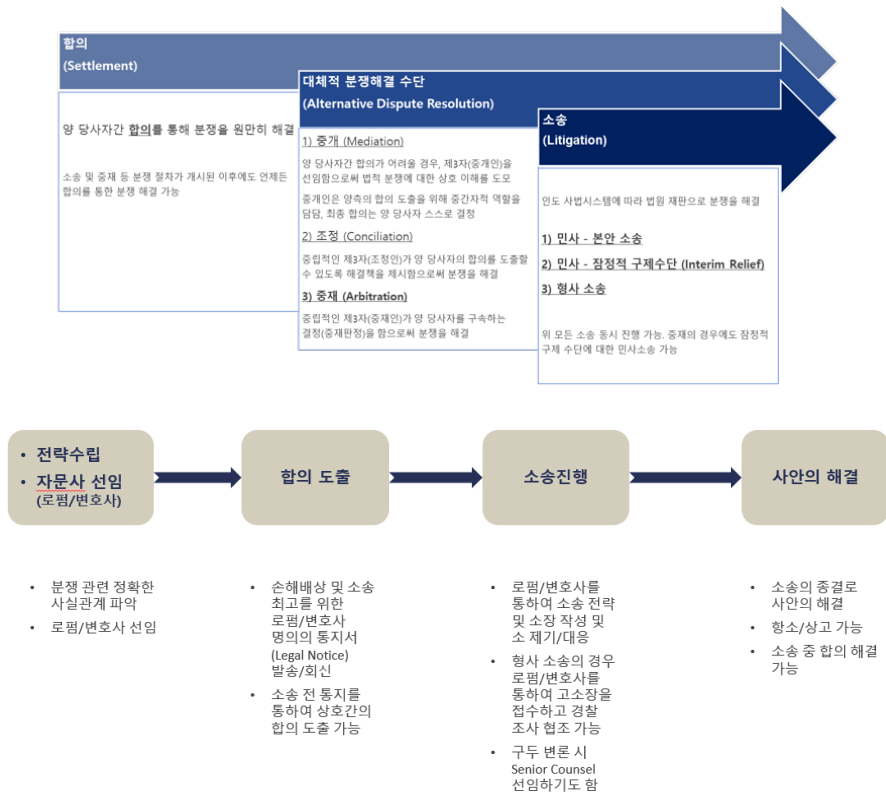
아울러, 소멸시효법은 민사소송 사건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인도 파산법(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2016)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기된 채무에 기초하여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청산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기간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3-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소송기간의 이점 때문에 중재제도를 활용하는데, 중재는 중재조정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년내에 중재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1년 반내에 중재를 완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절차 이후,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소송 또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소송 등을 따로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최소 2-5년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 3-5-5-2. 소송절차

인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소송 및 중재 등 분쟁절차가 개시되면 불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의 대립이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에 돌입하여야 할 것이다. 양 당사자간 계약서 또는 합의로서 중재, 조정, 중재 등 대체분쟁해결 수단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인도 분쟁해결 대응과정 및 절차>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 또는 재판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 상대방인 피고측은 소장을 전달받은 후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방당사자에 의한 심리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송절차상 소장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에게 법원 소환장을 발부하여 소송에 참석하게 한다.

인도 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과 적시의 심리일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증가하는 사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법원과 재판소가 확충되고 있지만, 수많은 소송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인도 사법부의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 정부와 의회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역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분쟁해결 수단 활용, 판사 임용 확대, 특별재판소 설치, 신속(패스트트랙) 재판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입법을 지속하고 있다.



### 3-5-5-3. 민사소송절차

인도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은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아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1)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기함으로써 개시된다;
- (2) 이후 피고에게 법원통지(summon)가 발부되며, 통지 접수 이후 피고는 변론을 희망할 경우 서면 답변서(written statement)를 통지 접수 12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소송이 일반 '상사' 사건의 경우, 120일의 기한 초과 제출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 기타 모든 민사소송의 경우 기한 내 답변서 미제출은 충분한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이 양해할 수 있다;
- (3) 서면 답변서가 접수되면, 양 당사자는 각종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후 법원이 소의 쟁점 및 결정 범위를 특정한다;
- (4) 쟁점사항이 특정되면, 민사소송법, 증거법 등에 따라 각종 증거조사, 증인신문, 반대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 (5) 이후 최종심리를 통해 재판부는 판결 또는 명령을 선고한다;
- (6) 재판의 판결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심 판결 이후 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 등 두 차례의 불복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절차 외에도, 인도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서면자료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s)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사사건의 경우에도 상기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일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짧은 기간동안 소송을 완료하기도 한다.

### 3-5-5-4. 잠정구제조치

소송 당사자는 본안 소송제기 전 또는 후 언제든지 잠정구제조치(interim relief)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구제조치는 가처분, 금지명령, 자산압류, 공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처분 명령은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특정 사건에 따라서는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도 가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잠정구제 신청은 본안소송 제기 시 함께 진행될 수 있다. 피고 측은 해당 잠정구제 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잠정구제 신청을 검토하여 명령을 선고한다. 잠정구제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 상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각종 기일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송당사자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다.

인도와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법원 판결도 인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도에서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외국 법원 판결을 인도에서 집행하기 위해 금지명령, 이행명령, 자산압류, 관재인선임, 담보설정 등의 형태로 잠정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도와 상호인정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서의 판결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소송 형식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3-5-5-5. 피해구제 및 집행

인도 민사소송법상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손해배상, 계약이행, 계약해제, 처분취소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인도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은 손해배상금 지급 지연 이자를 연 8% - 18%로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은 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판결 집행 방식은 판결의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동산 처분 매각, 동산 이전, 명령 등 다양하며, 매우 드문 경우지만 민사 구금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법원 판결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법정모독법(Contempt of Courts Act, 1971)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가 개시된다.

### 3-5-5-6. 항소

인도 민사소송법은 민사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판결외에는 항소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법원 판결에 대하여 따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 첫번째 항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고는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아닌 법률심에 기초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인도 헌법 제136조에 따라 고등법원 또는 특별재판소에서 결정된 판결 및 명령에 불복하여 상고가 필요하다는 특별승인(special leave)을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제136조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당 분쟁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만을 다룬다.\*

\* Constitution of India, 1950. Section 136. Special leave to appeal by the Supreme Court.-(1)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Chapter, the Suprem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grant special leave to appeal from any judgment, decree, determination, sentence or order in any cause or matter passed or made by any court or tribunal in the territory of India. (2) Nothing in clause (1) shall apply to any judgment, determination, sentence or order passed or made by any court or tribunal constituted by or under any law relating to the Armed Forces.

### 3-5-5-7. 소송비용

인도 법원은 패소측에 법률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부 재량사항이다. 그간 인도 법원은 패소측에 법률비용을 전가하는 판결을 일반적으로 내리지는 않아왔으나, 최근 경향을 보면 반복적인 계약위반 당사자에게는 본보기로서 법률비용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인도 변호사협회 규정은 재판 승소시 변호사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변호사 성공보수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변호사 비용 대납의 경우, 인도 변호사협회 규정은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인 고객에게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제3자에게 법률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 Supreme Court of India in the case of Bar Council of India v AK Balaji & Ors (Civil Appeal No. 7875-7879 of 2015, Judgment delivered on 13 March 2018).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지닌 관련 보험 정책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3-5-6. 소송 외 대체 분쟁해결 방안

#### 3-5-6-1. 중재제도 및 중재조정법

인도중재조정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은 중재 및 조정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사업상의 문제에 있어서 중재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중재 재판소에 의한 중재 절차의 수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법원의 역할을 최소화한다. 중재 재판소의 자율성은 그들이 관할권을 결정하고 중재 합의의 존재나 타당성에 관한 이의제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현행법은 국제무역법규(UNCITRAL)에 의해 제정된 모델법에 근거하며, 국내 중재뿐만 아니라 국제 상업 중재에 의거하여 인도 국내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대체분쟁해결(ADR) 프로세스는 절차상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일반 소송 진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인도의 민사소송은 특히 분쟁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재 및 조정은 오랜시간 소요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중재는 전문 중재자가 필요한 기술적 문제에서도 유용할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건설 등 산업 분야에서는 중재가 선호된다. 중재가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어려움은 남아 있다. 중재도 결국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중재 판정을 받은 후에도 일방 당사자가 법정에서 그 유효성을 다시 다투는 경우가 있다.

계약 당사자는 중재, 조정, 중재 등 소송 외 대체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을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인도 중재조정법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등 중재에 관한 국제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중재 판정 내용은 중대한 사기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도에서 집행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인도 모두 외국 중재판정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체결국이기에 때문에 인도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에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도내 중재기관으로서 인도 상공회의소(FICCI) 산하 인도 중재위원회(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법무부(Ministry of Law & Justice) 산하 국제대체분쟁해결센터(ICADR), 인도 상공인연합(IMC) 산하 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등이 기관중재로서 활용되고 있다.

#### 3-5-6-2. 중재협정 또는 계약서상 중재조항

인도 중재조정법 제7조는 집행가능한 공식적인 중재협정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협정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재협정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계약 또는 부속계약 내의 중재조항 형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Section 7. Arbitration agreement. (1) In this Part,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certai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2)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be in the form of an arbitration clause in a contract or in the form of a separate agreement. (3) An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4) An arbitration agreement is in writing if it is contained in (a) a document signed by the parties; (b) an exchange of letters, telex, telegrams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1 [including communication through electronic means] which provide a record of the agreement; or (c)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in which the existence of the agreement is alleged by one party and not denied by the other. (5) The reference in a contract to a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constitutes an arbitration agreement if the contract is in writing and the reference is such as to make that arbitration clause part of the contract.

### 3-5-6-3. 중재인 선임

만약 중재협정 또는 계약서상 중재조항에 중재인의 수와 선임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인의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중재인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당 분쟁 관할 법원에 1인 중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중재인 선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법원이 중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당사자간 중재협정이 없었다는 사실만이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최근 인도 대법원은 중재협약 또는 중재조항을 담고 있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라 인지세 도장이 없는 중재협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중재인이 선임되기 전에 중재인 선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해당 불복신청은 중재인 선임에 관하여 알았을 때부터 15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인 선임 불복 신청 사유는 중재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정당한 의심이 있거나, 중재인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된다.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지 않고,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중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한 대법관 또는 고등법원 판사를 중재인으로 선임하며, 분쟁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기도 한다. 만약 분쟁이 기술적이거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기술전문가를 중재인단 중 한명으로 선임하기도 한다.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해당 중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재인 패널중에서 중재인을 구성한다.

### 3-5-6-4. 중재절차

인도 중재조정법은 중재 당사자들에게 중재절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법 규정 및 민사소송절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으나, 해당 규정의 법적 원칙들은 중재절차를 결정하는 지침의 역할을 한다.

중재조정법은 법원의 최소한의 개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법원이 중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중재인 선임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하였을 경우)
- (2) 가처분 등 잠정구제조치
- (3)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 위임 종료
- (4) 중재인에 의해 결정된 잠정구제조치 명령에 대한 불복 항소
- (5) 중재판정 효력에 대한 심사

중재 당사자는 중재협정 또는 계약 조항을 통해 법원의 권한을 배제할 수는 없다

중재조정법 제17조는 중재인에게 민사법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처분, 자산압류, 담보설정, 관재인선임 등 잠정구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Section 17. Interim measures ordered by arbitral tribunal.  
 (1) A party may, during the arbitral proceedings, apply to the arbitral tribunal— (i) for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for a minor or person of unsound mind for the purposes of arbitral proceedings; or (ii) for an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in respect of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namely:— (a) the preservation, interim custody or sale of any goods which are the subject-matter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 securing the amount in dispute in the arbitration; (c) the detention, preservation or inspection of any property or thing which is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in arbitration, or as to which any question may arise therein and authorising for any of the aforesaid purposes any person to enter upon any land or building in the possession of any party, or authorising any samples to be taken, or any observation to be made, or experiment to be tried, which may be necessary or expedien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full information or evidence; (d) interim injunction or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e) such other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s may appear to the arbitral tribunal to be just and convenient, and the arbitral tribunal shall have the same power for making orders, as the court has for the purpose of, and in relation



to, any proceedings before it. (2) Subject to any orders passed in an appeal under section 37, any order issued by the arbitral tribunal under this section shall be deemed to be an order of the Court for all purposes and shall be enforceable under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5 of 1908), in the same manner as if it were an order of the Court.

2015년 인도 중재조정법 개정 이후,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 구성된 후 1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2개월의 기간은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추가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인도 중재조정법은 중재판정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중재판정부 중재인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은 중재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거나 중재판정 자체로 최종 해결되지 않는 한 중재판정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는 중재판정의 일시 및 중재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최종 중재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중간 또는 부분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5-6-5.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인도 중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중재판정은 인도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불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Section 34.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1) Recourse to a Court against an arbitral award may be made only by an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such awar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2) and sub-section (3). (2) An arbitral award may be set aside by the Court only if— (a)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establishes on the basis of the record of the arbitral tribunal that]— (i) a party was under some incapacity, or (ii)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or (iii)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or of the arbitral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or (iv) the arbitral award deals with a disput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only that part of the arbitral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not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set aside; or (v)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unless such agreement was in conflict with a provision of this Part from which the parties cannot derogate,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or (b) the Court finds that— (i)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or (ii) the arbitral award is in conflict with the public policy of India. (2A) An arbitral award arising out of arbitrations other th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may also be set aside by the Court, if the Court finds that the award is vitiated by patent illegality appearing on the face of the award: Provided that an award shall not be set aside merely on the ground of an erroneous application of the law or by reappraisal of evidence.

- (1) 중재 당사자가 무능력자였을 경우;
- (2) 준거법에 따라 중재협정 또는 중재조항이 무효일 경우;
- (3) 불복 신청자가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 중재진행 참석과 관련하여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 (4) 분쟁이 중재조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5) 중재판정부 구성이 중재조항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6) 소송 및 분쟁 목적물이 중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경우
- (7) 중재판정이 인도의 공공 정책(public policy)과 충돌하는 경우
- (8)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해당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재조정법 제37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으나, 제37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헌법 제136조에 따라 대법원에 특별승인 신청을 통해 상고할 수 있다.

### 3-5-6-6. 중재판정 효력 및 집행

인도내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국내 판정으로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절차만 따로 개시하면 된다. 뉴욕협약 및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제네바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 인도 법원이 중재조정법 규정에 따라 인도 내에서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국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인도 국내 중재에 대한 집행은 민사법원 판결 집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 자산매각, 담보설정 등 모든 형식이 가능하다.

중재조정법 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집행 조건과 관련하여, 뉴욕협약 체결국에서 이루어진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도 인도 민사법원 판결 집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법원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면, 외국 중재 판정도 인도 민사소송절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Section 48. Conditions for enforcement of foreign awards.

- (1) Enforcement of a foreign award may be refus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urt proof that- (a)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section 44 were,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m,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or (b) the party against whom the award is invoked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of the arbitral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or (c)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enforced; or (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authority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or (e)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 (2)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may also be refused if the Court finds that- (a) the subject-matter of the differenc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India; or (b)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India. (3) If an application for the setting aside or suspension of the award has been made to a competent authority referred to in clause (e) of sub-section (1) the Court may, if it considers it proper, adjourn the decision on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and may also, on the application of the party claiming enforcement of the award, order the other party to give suitable security.

### 3-5-6-7. 중재비용

인도 법원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중재비용을 패소측에 전가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중재비용을 패소측이 부담할 지 여부, 금액의 규모, 지급기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중재조정법 제31-A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승소측은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 합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다.\*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Section 31A. Regime for costs.-- (1) In relation to any arbitration proceeding or a proceeding under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pertaining to the arbitration,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5 of 1908), shall have the discretion to determine-- (a) whether costs are payable by one party to another; (b) the amount of such costs; and (c) when such costs are to be paid. (i)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Courts and witnesses;

- (ii) legal fees and expenses; (iii) any administration fees of the institution supervising the arbitration; and (iv) any other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arbitral or Court proceedings and the arbitral award. (2) If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decides to make an order as to payment of costs, (a) the general rule is that the unsuccessful party shall be ordered to pay the costs of the



successful party; or (b)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may make a different order for reasons to be recorded in writing. (3) In determining the costs,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shall have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 the conduct of all the parties; (b) whether a party has succeeded partly in the case; (c) whether the party had made a frivolous counterclaim leading to delay in the disposal of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d) whether any reasonable offer to settle the dispute is made by a party and refused by the other party. (4)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may make any order under this section including the order that a party shall pay— (a) a proportion of another party's costs; (b) a stated amount in respect of another party's costs; (c) costs from or until a certain date only; (d) costs incurred before proceedings have begun; (e) costs relating to particular steps taken in the proceedings; (f) costs relating only to a distinct part of the proceedings; and (g) interest on costs from or until a certain date. (5) An agreement which has the effect that a party is to pay the whole or part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in any event shall be only valid if such agreement is made after the dispute in question has arisen.

- (1) 중재인, 법원절차, 증인 관련 비용
- (2) 법률비용
- (3) 기관중재의 경우 행정비용
- (4) 중재, 법원절차 및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

인도에서 제3자가 소송 및 중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지불한 비용을 중재비용으로서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 3-5-6-8. 그 외 대체분쟁해결수단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체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중재, 조정, 중개 및 사법적 합의이다. 위에서 기술한 중재절차가 인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며, 최근 경향도 거의 모든 상사계약서에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에 의한 해결도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외의 대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조정 (conciliation)과 중개(mediation)가 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제시된 조정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중재판정과 유사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중개는 분쟁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조정인과는 달리 중개인은 일방의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으며, 다만 양측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중재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개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인도법상 당사자가 법원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대체분쟁해결수단을 활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인도 법원 역시 당사자에게 소송이 아닌 대체분쟁해결수단으로 진행하라고 명령할 권한도 없다. 다만, 법원은 해당 분쟁에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중재, 조정, 합의, 중개 등 대체분쟁해결수단을 통한 해결을 권고할 수는 있다.

따라서, 분쟁이 상사소송에 해당하고, 원고측이 잠정구제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최근 개정 움직임에 따라 양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중개(mediation)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개는 소송 전 단계의 절차로, 90일 동안 중개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 3-6 관세 및 통관

### 3-6-1. 무역관리 제도

#### 3-6-1-1. 수출입 정책

인도의 수출입 정책은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서,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출입은 자유이며, 예외적으로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 정책의 종류는 '자유(Free)', '제한(Restricted)', 'STE(State Trading Enterprises)', '금지(Prohibited)' 4가지이며, 인도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수시로 고시한다.

〈인도 수출입 정책〉

수출입 정책	설명
Free	자유로운 수출입 가능
Restricted	수출입 제한
STE	국영무역기업에 의한 수출입만 가능
Prohibited	수출입 금지

자료원 : DGFT(<https://www.dgft.gov.in/CP/>)

#### 3-6-1-2. IEC(Import Export Code)

IEC는 인도에서 수출하거나 인도로 수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사업자 식별 번호이다.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IEC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그러나 서비스 수출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외 무역 정책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EC가 필요하지 않다. IEC는 대외무역총국에서 발급하며, 신청인은 신청하기 전에 PAN,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유효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6-1-3.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

인도 정부는 수출확대와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위해 인도 상공부의 명의로 정기적으로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을 수립·발표하고 있다. 대외무역총국(DGFT)은 상공부의 부속 조직으로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이러한 대외무역정책을 수행한다. 대외무역정책은 약 5년 주기로 발표되며, 무역 관련 절차와 수출 진흥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3-6-2. 관세 실무

#### 3-6-2-1. 인도 수입세율 구조

인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통합부가세(IGST)가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추가 관세(Additional Duty of Customs),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AIDC), 건강부가세(Health Cess)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HS Code 8자리 기준으로 결정되고, 같은 HS Code라도 예외적으로 물품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 인도 수입물품 납부세액 >

$$\text{총 납부세액} = \text{관세} + \text{사회보장세(SWS)} + \text{IGST} + (\text{Health Cess}) + (\text{AIDC})$$

자료원 : CBIC(<https://www.cbic.gov.in/>)

##### (1) 관세

관세는 CIF기준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14조에 따라 산정하며, 인도 역시 WTO 체약국이므로 WTO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관세율은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체계(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Basic Customs Duty)을 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시를 통해 개별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는데, 이 고시관세율(Notification Customs Duty)이 기본관세율에 우선 적용한다.

##### (2)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10%를 사회보장세로 부과한다. 2018-19 예산안을 통해 기본관세에 가산되었던 교육세(Education Cess) 대신 신설되었다.

##### (3) IGST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사회보장세 + 기타 세금'에 IGST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IGST 세율은 품목에 따라 0%, 5%, 12%, 18%, 28%로 차등 부과한다. 납부한 IGST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4) 건강부가세(Health Cess)

HS Code 9018~9022에 속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부가세로 부과한다. 단, FTA 등에 따라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가 면제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건강부가세가 면제된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 (5)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AIDC,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

일부 농산품의 경우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이하 "농업세")를 부과한다. 농업세 세율은 품목마다 상이하며, 기본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업세가 면제된다.

### 3-6-2-2. 수입물품 납부세액의 확인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은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가 운영하는 관세·통관 관련 포털인 ICEGA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EGATE에서는 품목별 관세율, IGST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고시 및 양허 관세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관세율의 근거가 되는 인도 관세청 고시 문서번호를 사용자가 직접 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예상 수입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 통관대행업자(CHA)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 3-6-2-3. 관세 환급 제도

#### (1) 재수출 관세 환급 (Re-Export Drawback)

인도로 수입된 물품이 사용, 변형 및 개조되지 않은 상태로 2년 이내 (사용한 경우 18개월 이내)에 재수출될 경우 재수출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재수출을 위해서는 수하인(Consignee)의 수취포기각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를 토대로 세관의 재수출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해당기간 동안에 발생한 체화료, 보세창고 이용료를 모두 지불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 (2)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관세 환급 (Drawback)

인도 관세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서, AIR(All Industry Rates) 및 Brand Rate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AIR 방식은 수출가격(FOB)에 인도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품목별 고정 환급률을 적용하여 환급받는 방식이다. AIR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시 수입 원재료의 수입신고서와 관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Brand Rate는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100% 환급받기 위한 방법이며, 수입된 전체 원재료 중 수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을 해야 하며, 신청양식(DBK-I, II & III)을 제출하면 관할세관이 수입 원재료의 사용량과 재고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진다.

#### (3) 특정 상황의 수출 관세 환급

수출물품이 반환되어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 수출 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세관 담당관이 물품의 통관 명령을 내린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관세의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4) 특정 상황의 수입관세 환급

수입된 물품이 하자가 있거나 그 밖에 수입업자와 공급업자 간 합의한 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수입물품을 사용·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한다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세관 담당자가 수출 또는 폐기된 물품이 수입된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충분히 식별가능하여야 하며, 다른 환급방법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 3-6-2-4. 관세 감면 제도

## (1) 사전 승인 제도 (Advance Authorisation)

사전 승인 제도는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수입원재료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원재료(손모량 포함)이며, 수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모되는 포장재, 연료, 석유, 촉매제를 포함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물품은 생산과정에서 수입물품의 가격(CIF 가격 기준)의 15% 이상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발생(일부 물품 상이)되어야 한다.

사전승인 수입의 유효기간은 승인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며,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 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수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 관세, 추가 관세, 교육세, 반덤핑관세, IGST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사전 승인 제도 신청은 IEC 보유자가 관련 관할 지역 세관에 ANF 4A form에 따라 수입 원재료 수입 이전에 미리 온라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은 '실제 사용자 조건'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은 자는 사전승인 및 사전승인을 받은 수입물품을 수출의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 관세 면제 수입 승인 제도 (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관세 면제 승인 제도는 원재료 및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유류 및 촉매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사전 승인 제도와는 다르게 관세 면제 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만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표준 투입-산출 규범(SION, Standard Input-Output Norms)에 고시된 물품에 한하여 수출 이후에 발급된다.

관세 면제 수입 승인을 신청하는 물품은 수입물품 가격의 2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 면제 수입 승인은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lt; 사전승인 vs. DFIA 계획 &gt;

	사전승인	DFIA 계획
발행시간	수입 원자재가 수입되기 전에 발급. 관세 등 세금 납부 없이 수입 원재료를 수입	수출 완료 이후 발급. 발급된 DFIA 라이선스는 수입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사용
수출의무기간	원칙적으로 18개월	수출 이후 발급되므로 해당 X
최소 부가가치	15%	20%
양도여부	불가능	가능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면세 범위	기본관세, IGST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기본관세

자료원 : DGFT (<https://www.dgft.gov.in/CP/>)

(3) 수출 촉진 자본재 장려 제도 (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 촉진 자본재 장려 제도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율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본재는 CKD 또는 SKD 형태의 자본재를 포함하며, 자본재의 일부가 되는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및 스페어, 몰드, 다이 등과 초기 충전을 위한 촉매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본 설치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며, 18개월 동안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승인일로부터 6년 동안 감면받은 관세 등 세액의 6 배에 상당하는 수출 또는 지난 3년간 동일 및 유사 제품의 평균 수출실적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

(4)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 제도 (RoDTEP, 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 Products)

RoDTEP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간접세를 포함하여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이미 면제 또는 공제된 관세 및 세금에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체는 8자리 HS 코드에 따라 분류된 품목을 수출할 때 필요한 경우 수출 제품 단위당 가치 상한선과 함께 FOB 가치의 백분율로 통지된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의 형태는 전자적인 형태의 세금 크레딧(Duty Credit)으로 지급되며,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관세의 납부에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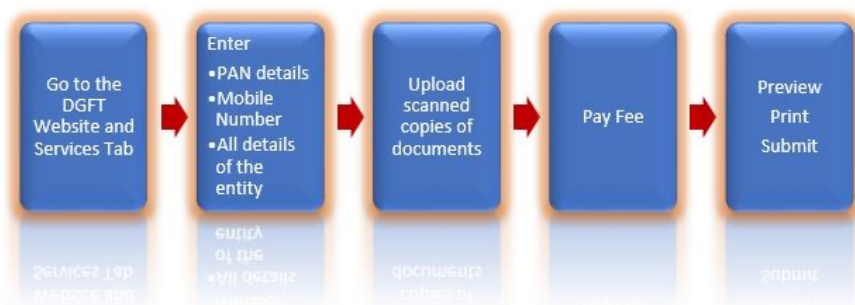
### 3-6-3. 통관 실무

#### 3-6-3-1. 수입 준비 단계

##### (1) IEC 발급

대외무역총국(DGFT)으로부터 IEC(Importer Exporter Code)를 발급받아야 한다. IEC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 서명의 디지털본, PAN(영구계좌번호, Permanent Account Number) 사본 및 취소 수표(Cancelled Cheque)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PAN을 발급받아야 한다.

##### <인도의 수입 준비 단계>



자료원 : CBIC(<https://www.cbic.gov.in/>)

##### (2) AD Code 등록

AD Code(Authorized Dealer Code)는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14자리 숫자 코드로서, 수출입통관을 하는 각 세관에 AD code를 등록하여야 한다.

##### <코드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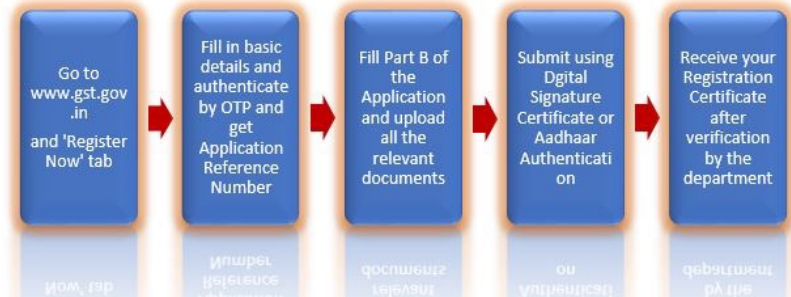


자료원 : CBIC(<https://www.cbic.gov.in/>)

### (3) GSTIN 발급

GSTIN은 GST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14자리 숫자 형식의 고유 번호이다. 수입신고 시에 신고서상에 GSTIN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입 전에 GSTIN을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 <GSTIN 발급 절차>



자료원 : CBIC(<https://www.cbic.gov.in/>)

### 3-6-3-2. 수입 전 단계

수입에 필요한 안전인증 등의 요건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인도는 품목에 따라 BIS(전기, 전자, 기계, 철강 등), CDSCO(화장품, 약물, 의료기기), FSSAI(식품), WPC(무선통신기기) 등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 등이 허용된다. 이러한 수입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불가하므로, 인도 진출 검토 단계에서 바이어 또는 인도 내 통관사(CHA) 등 컨설팅사를 통하여 수입 요건 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 구리 및 알루미늄, 석탄의 경우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에 수입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3-6-3-3. 수입통관 단계

수입통관 단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① 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 또는 통관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는 ICEGATE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신고서(Integrated Declaration)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안전인증과 같은 수입 요건 구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인도는 2021년 3월 29일부터 입항 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선박의 경우 화물 도착일 1일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 화물 도착일까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경과 후 3일 동안에 대하여 일당 5천 루피, 그 이후에는 일당 1만 루피의 신고 지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인도의 수입신고 기한>

통관지	수입신고 기한
항구	선박 도착일의 전날까지 (공휴일 포함) 단, 방글라데시, 몰디브,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발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 도착일까지 (공휴일 포함)
공항	항공기 도착일까지 (공휴일 포함)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또는 항공 화물 작업장(AFS)	운송수단 도착일의 전날까지 (공휴일 포함)
내륙 국경 세관 (Land Customs Station)	운송수단 도착일까지 (공휴일 포함)

자료원 : CBIC(<https://www.cbic.gov.in/>)

#### ② 1차 수입검사(First Check)

중고물품, 품목분류 불분명 품목, 최초 수입자, 기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검사 대상이며, 통상화물은 1차 수입검사를 생략한다.

#### ③ 검증/평가(Verification / Appraisal)

세관공무원이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수입 요건을 확인하며, CEPA적용 시, C/O 원본 제출을 요구한다.

#### ④ 관세 납부

수입신고 승인 시 ED시스템으로 관세액 및 신고지연가산세가 자동 책정되며, 수입신고 승인 후 12시간 이내 관세 미납 시 가산금을 부과한다.

#### ⑤ 2차 수입검사(Second Check)

수입요건 및 수입신고 항목에 대한 재확인 목적으로 현품 검사를 진행한다.

#### ⑥ 화물 반출

세관 심사 및 검사가 완료되면 OOC(Out Of Charge)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 3-6-4. 한-인도 CEPA 활용방안

#### 3-6-4-1. 의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규정하는 협정이나, 실제 내용은 FTA와 큰 차이가 없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CEPA 발효 이후 2년 차인 2011년 양국 교역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여 205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현재 2023년에는 246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인도와의 교역은 한국 총 교역액 중 1.94%로 12위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교역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제품 및 반도체, 금속 제품 등이다.

#### 3-6-4-2. 활용

한-인도 CEPA협정을 활용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관세 감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인도 CEPA협정 대상물품은 그렇지 않은 물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또는 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본세율의 변동이 빈번한 인도의 통관환경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한-인도 CEPA의 적용 절차는 '① HS Code 확인 → ② CEPA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③ 원산지 증명서 발급 → ④ 관련 서류 보관' 4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 (1) HS CODE 분류

한-인도 CEPA는 HS CODE별로 그 적용여부, 적용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한-인도 CEPA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

##### (2) CEPA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수출물품의 HS CODE 분류를 이후에는, 해당 HS CODE이 한-인도 CEPA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 HS CODE에 따른 한-인도 CEPA 적용 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인도 CEPA의 기본 전제는 협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서로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이라고 모두 한국산 물품이 될 순 없다. 한-인도 CEPA 상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따라 HS CODE 별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한-인도 CEP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등 수출신고 서류와 제조공정도 및 재료명세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4) EODES

한국과 인도 양 관세당국은 2023년 12월 22일부로 EODES를 운영하고 있다.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으로 한-인도 CEPA 협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제도이다.

기존 한-인도 CEPA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 세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였다. 이는 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 및 진위여부 확인까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화물보관료



등 비용 문제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이제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은 서로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 가능하며, 더 이상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 CEPA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5) 관련 서류 보관

한-인도 CEPA 협정의 각 당사자들은 CEPA 협정과 관련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수출자와 생산자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수입일부터 최소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3-6-4-3. CAROTAR 2020

CAROTAR 2020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CEPA 등 무역 협정의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요구한다.

CAROTAR 2020은 무역 협정에 따른 관세 양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특징으로는 Bill of Entry 등 원산지 관련 필수 정보 보관, 세관 담당자의 추가요청을 통한 검증기관의 원산지 검증 절차가 있다.

즉, 관할세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CEPA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출기한 내 요청 서류 미제출 시, 동 수입자의 향후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할 세관에 의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 3-6-5. 무역구제

#### 3-6-5-1. 무역구제 동향

무역구제란 특정 물품의 덤핑 수입 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 등을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는 이러한 반덤핑 관세 부과,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다수의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역구제조치 대상 물품은 화학 및 플라스틱,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 3-6-5-2. 무역구제 절차

인도 내 기업의 무역구제 조사요청서가 제출되면 무역구제총국 산하 해당기관이 사전 검토를 통해 조사개시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구제 조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연장되기도 한다.

#### 3-6-5-3. 對 한국 무역구제 조치

2024년 8월 기준, 현재 조사 중인 건 포함하여 한국에 대하여 반덤핑 19건, 세이프 가드 3건의 무역구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화학 11건, 플라스틱/고무 5건, 철강/금속 2건, 전기/전자 2건, 기계 1건, 기타 1건이다.

〈인도의 對韓 무역구제 조치 (2024년 8월 기준)〉

연번	분야	품목명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1	화학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2837.11	반덤핑	'23.3.31	'24.3.28
2	기계	합금강의 끌/공구 및 유압식 굴착기 (Alloy steel chisel/tool and hydraulic rock breaker in fully assembled condition)	8431.49.30. 8431.49.90	반덤핑	'22.9.30	'24.3.28
3	화학	4-tert-부틸페놀 (Para-Tertiary Butyl Phenol(PTBP))	2907.19.40	반덤핑	'22.12.21	'23.12.20
4	철강/금속	페로몰리브덴 (Ferro Molybdenum)	7202.70.00	세이프 가드	'22.9.30	'23.5.29
5	전기/전자	단일모드광섬유 (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re)	9001.10.00	반덤핑	'22.1.24	'23.5.5
6	화학	우르소데옥시콜산 (Ursodeoxycholic Acid)	2915, 2916, 2918, 2922, 2924, 2931, 2933, 2934, 2939, 2941, 2942	반덤핑	'22.1.24	'23.1.19





7	철강/금속	전기아연도금강판 (Electric galvanized steel)	7209, 7210, 7211, 7212, 7225, 7226	반덤핑	'21.6.28	'22.7.27
8	화학	건식 실리카 (Untreated Fumed Silica)	2811.22.00 2811.21.90 2839.19.00 3404.90.90	반덤핑	'20.9.22	'21.9.20
9	화학	차아황산나트륨 (Sodium Hydrosulphite)	2831.10.10 2832.10.20	반덤핑	'20.9.16	'21.9.14
10	화학	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PAN)	2917.35.00	반덤핑	'20.5.21	'21.5.19
11	전기/전자	오프셋 인쇄용 디지털판 (Digital Offset Printing Plates)	8442.50 3701.30.00 3704.00.90 3705.10.00 7606.11.90 7606.91.90 7606.92.90	반덤핑	'19.5.16	'20.5.15
12	플라스틱/ 고무	염화폴리비닐류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Whether or not further processed into compound)	3904.90.00 3904.21.90 3904.21.10 3904.22.10 3904.22.90	반덤핑	'19.3.28	'24.5.25
13	화학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 Di-Isocyanate)	2929.10.20	반덤핑	'16.10.5	'22.6.24
14	화학	에틸 헥사놀 (2-Ethyl Hexanol)	2905.16.20	반덤핑	'14.11.20	'21.3.8
15	화학	고순도 테레프탈산 (Purified Terephthalic Acid) (PTA)	2917.36.00	반덤핑	'13.10.8	'19.6.28 *일몰재심 조사개시 (24.5.2) *일몰재심 일시정지 (24.8.14)
16	화학	인산 (Phosphoric Acid)	2809.20.10	반덤핑	'08.11.12	'20.8.6
17	플라스틱/ 고무	액상 에폭시 수지 (Liquid Epoxy Resins)	3907.30	반덤핑	'24.6.29	-
18	플라스틱/ 고무	PVC 서스펜션 수지 (PVC Suspension Resins)	3904	반덤핑	'24.3.26	-
19	플라스틱/ 고무	PVC 페이스트 레진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3904.10.10	반덤핑	'23.9.30	-
20	화학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2910.30.00	반덤핑	'23.9.26	'24.8.14
21	기타	저회분 아금용 코크스 (Low Ash Metallurgical Coke; having ash content below 18%)	2704.00.10 /20/30/90	세이프 가드	'23.6.30	'24.4.29
22	플라스틱/ 고무	잔류 VCM이 2PPM 이상인 PVC 서스펜션 수지 (PVC suspension resins with residual VCM above 2PPM)	3904.10.20	세이프 가드	'22.9.16	'23.5.15

자료원 : DGTR 등 종합하여 KOTRA 뉴델리 무역관 정리

### 3-6-5-4. 수입 제한·금지 조치 현황

인도 정부는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인도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 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의 수입금지 물품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HS CODE 8 단위 상 총 118개 품목이며, 그 중 살아있는 동식물과 그 생산품에 대한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반면, 인도의 수입 제한물품은 살아있는 동식물과 그 생산품, 일부 섬유 및 무기 등으로 2024년 8월 기준 563개 품목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아 승인받은 물량만큼 수입이 가능하다.

인도의 수입 제한·금지품목은 DGFT사이트(<https://www.dgft.gov.om>)에서 상단 우측 배너에서 'Regulations' 중 'Import, Export and SCOMET Polic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6-6. FAQ

## Q1. HS 코드는 무엇인가?

관세, 무역통계, 운송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품목분류체계로 FTA에서 수출품목의 원산지 판정 및 협정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인도는 ITC Code 8단위, 한국은 HSK Code 10단위를사용(6단위까지는 세계공통기준) 한다.

## Q2. 한-인도 CEPA 관세혜택은 어떻게 확인하나?

India Trade Portal ([www.indiantradeportal.in](http://www.indiantradeportal.in))를 통해 기본관세율 및 협정 별 적용대상 여부와 협정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캡처된 화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니큐어의 기본세율은 20%, CEPA 적용시 세율은 0%이다.

< (예시)매니큐어 (3304.99-20) 협정별 관세율 >

Tariff	
Freely Importable GST & Other Levies	
(Tariff(s) is/are in "%" until/unless specified otherwise)	
33049920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Other: Other: Nail polish or lacquers	SPS-TBT
South Korea (as of 16-08-2023)	
Most Favoured Nation Tariff	20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17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45% RVC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0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CTSH + 35% RVC 🚩

자료원 : India Trade Portal

## Q3. 원산지결정기준은 무엇인가?

원산지결정기준이란 각 협정에서 품목별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으로, 협정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결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CEP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EPA 협정 대상 물품이 CEPA 협정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예시인 매니큐어(HS 3304.99-20)의 경우 CEPA 협정의 적용대상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35% RVC 이다. 이는 결합조건으로, 한국산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니큐어 제품이 역내 제조과정에서 HS CODE 6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35%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Q4. CEP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CEPA 협정상 적용대상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협정상 인정된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그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Q5.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인보이스, 수출서류뿐 아니라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Q6.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업자에게 전달해야 하나?**

EODES덕분에 양 관세당국은 전자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CEPA 적용을 위해서 수입신고 시 수입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수입국 세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등 예상치 못한 통관이슈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수입자에게 미리 전달해 놓는 것이 좋다.



## 3-7 인증제도

### 3-7-1. BIS 인증

#### 3-7-1-1. 개요

BIS 인증은 인도표준국법(BIS Act)에 의거하여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 인증으로 표준화 장려 및 품질관리를 통해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BIS 인증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인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정제품들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공익, 국민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다양한 사유로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품질관리명령(Quality Control Orders: QCO)을 발행함으로써 특정제품을 강제인증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러한 제품들은 BIS 라이선스 또는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발급받고 인도표준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강제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조자가 인증을 취득하고 라이선스를 제품에 부착하지 않으면 인도 내에서 수입·유통·판매·보관·전시할 수 없다.\*

\* 인도표준국법(BIS Act) 제15조 제1항

#### 3-7-1-2. 인증기관

인도표준국은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산하의 국가 품질관리기관으로 인도에서 제조·유통·판매·수입되는 상품의 표준화, 품질표시, 품질인증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인도표준국의 전신은 1947년 설립된 인도표준기관(Indian Standard Institution: ISI)으로 1952년 ISI 인증마크법(ISI Certification Marks Act)에 따라 처음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 1986년 인도표준국법(BIS Act)이 제정됨에 따라 인도표준기관 국가표준의 개발과 집행을 위한 국가 품질관리기관인 인도표준국으로 격상되었다.

현재 인도표준국은 뉴델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주요거점 도시 뉴델리(중부), 콜카타(동부), 뭄바이(서부), 첸나이(남부), 찬디가르(북부)에 5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를 두고 있고, 각 지역사무소는 다시 산하에 여러 지점을 두고 있다.

#### 〈인도표준국 조직도〉

BIS HQ (New Delhi)				
Central Regional Office (New Delhi)	East Regional Office (Kolkata)	West Regional Office (Mumbai)	South Regional Office (Chennai)	North Regional Office (Chandigarh)
Branch Office - Delhi I&I - Bhopal - Faridabad - Ghaziabad - Jaipur - Lucknow - Noida	Branch Office - Kolkata I&I - Bhubaneswar - Guwahati - Jamshedpur - Patna - Raipur	Branch Office - Mumbai I&I - Ahmedabad - Surat - Nagpur - Pune - Rajkot	Branch Office - Chennai - Bengaluru - Coimbatore - Hubli - Hyderabad - Kochi - Madurai - Vijayawada	Branch Office - Chandigarh - Mohali - Dehradun - Himachal Pradesh - Jammu Kashmir

자료원 : EY LLP 자체제작

### 3-7-1-3. 인증구분

BIS 인증은 제품, 제조공정, 시스템 및 서비스 등 관련 표준에 따라 다양하다. 이 중 제품에 대한 인증은 대상품목, 인증절차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Scheme I(ISI Standard Mark), Scheme II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가 인증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 BIS 인증마크 >



ISI Standard Mark



The Standard Mark for Registration

자료원 : 인도표준국 공식 홈페이지([www.bis.gov.in](http://www.bis.gov.in))

또한, 인도 표준국은 외국 제조업체들을 위한 외국제조업체 인증제도(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FMCS)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 인도표준국 뉴델리 본부에 위치한 외국제조업체 인증부서(Foreign Manufacturer Certification Department: FMCD)에서 인증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며, 인도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외국업체도 BIS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인도표준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3-7-1-4. Scheme I (ISI Standard Mark)

Scheme I은 'ISI 마킹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제조자가 인도표준국으로부터 자신의 제품이 관련 인도표준(Indian Standards)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BIS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자신의 제품에 ISI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Scheme I에 해당하는 품목은 철강, 화학, 비료, 전선, 전기, 신발 등 전 산업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인증대상 품목정보는 인도표준국 웹사이트(<https://www.bis.gov.in/>)의 "Products under Compulsory Certification"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인도표준국 웹사이트에 등재된 강제인증대상 품목 외에도 각 정부부처에서 품질관리명령 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제품별로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공문 발표시점으로 부터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Scheme I 인증은 인증대상이 되는 인도표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신청서 및 유첨 부록(Annexure) 제출
- (2) 신청서 접수확인 및 신청번호 발급
- (3) 신청서 및 제출자료 서면심사
- (4) 제조공장 현장실사를 담당할 심사관 배정 및 현장실사 일정협의
- (5) 제조공장 현장실사
- (6) 샘플 채취 및 인도표준국 또는 인도표준국 지정 실험실에서 샘플 테스트 실시
- (7) 최종 검토
- (8) BIS 라이선스 비용 지급 및 BIS 라이선스 발급



### 3-7-1-5. Scheme II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CRS)

Scheme II는 '의무등록제도(CRS)'라고도 하며, IT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을 진흥하고 인도 내외에서 제조된 불법 및 저품질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Scheme II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자제품, IT, 태양광, 화학 등으로 구체적인 인증대상 품목정보는 인도표준국 웹사이트(<https://www.bis.gov.in/>)의 "Products under Compulsory Certification"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heme II 인증대상 품목은 정부부처에서 품질관리명령 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수출 전 강제인증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Scheme II 인증은 제조공장 현장실사 과정이 없어 Scheme I 대비 비교적 간단한 인증제도이다. Scheme II 인증은 인증대상이 되는 인도표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신청서 및 유첨 부록(Annexure) 제출
- (2) 신청서 접수확인 및 신청번호 발급
- (3) 샘플을 인도표준국 또는 인도표준국 지정 실험실에 송부, 샘플 테스트 실시
- (4) 신청서 및 제출자료 서면심사
- (5) 최종 검토
- (6) BIS 라이선스 비용 지급 및 BIS 라이선스 발급

### 3-7-1-6. 필요서류

BIS 인증은 그 종류별로 요건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 및 정보가 요구된다.

#### (1) BIS 인증 신청서

- ① 회사의 사무실 주소와 인증을 신청할 제조시설의 주소
- ② 회사의 주요 경영진, 연락 담당자, 품질관리 책임자의 세부정보
- ③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상세정보 및 생산 관련 정보

#### (2) BIS 인증 신청서 부록(Annexure)으로 첨부되어야 할 사항

- ① 제조공정도
- ②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목록
- ③ 아웃소싱 관련 세부사항(제품의 제조작업 또는 테스트 중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 ④ 계측장비 관련 자료
- ⑤ 제조된 제품 테스트에 사용되는 계측장비 목록
- ⑥ 계측장비에 대한 검교정증명서 및 테스트 보고서
- ⑦ 제품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회사 내부 또는 제3자 업체의 것으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발행된 것)

(3) 인도 공인 대리인(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 AIR) 관련 서류\*

\* 해외 신청자가 인도에 소재한 연락 사무소나 지점이 없는 경우 위임장(Form VI)를 통해 인도 공인 대리인(AIR)을 지명하여야 한다. 인도 공인 대리인은 인도 거주자여야 하며, 해외 제조자를 대신하여 BIS 인증 및 관련법령에 대한 준수책임을 진다.

- ① 회사의 인도 공인 대리인 위임장
- ② 인도 공인 대리인의 세부 정보, 증명서, 동의서

(4) 기타 서류

- ① 회사의 사무소 및 제조시설의 이름 및 주소증명 (예: 사업자등록증)
- ② 회사 정관 또는 규정(요구되는 경우)
- ③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또는 공급 계약서(요구되는 경우)
- ④ 제품 브랜드 증명서(Brand Name Declaration Certificate) 또는 로트 증명서(Lot Offer Letter) (요구되는 경우)
- ⑤ 품질관리 책임자 임명장 및 품질관리 책임자의 교육증명서
- ⑥ 제조시설 도면
- ⑦ 제조시설 위치도
- ⑧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목록

(5) BIS 라이선스 부여 후 제출해야 할 서류

- ① BIS 라이선스 부여 동의서(Form IX)
- ② 보상계약서(Indemnity Bond) (Form X)
- ③ 은행 이행 보증(Performance Bank Guarantee) (Form XI)





### 3-7-2. CDSCO 인증

#### 3-7-2-1. 개요

CDSCO 인증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이다. 인도 내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 CDSCO)에 제품을 등록하여 CDSCO 인증을 받아야 한다. CDSCO 인증대상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다음과 같다.

#### < CDSCO 대상물품 >

의약품(Drug)(*1)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화장품(Cosmetic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의약품</li> <li>· 질병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물질</li> <li>· 알약캡슐 등을 포함한 모든 약품 구성요소</li> <li>·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물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 중앙정부에 의해 등록대상으로 통지된 의료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분사하거나,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클렌징, 미용, 매력 증진, 외모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제품과 모든 구성요소</li> </ul>

주: (\*1) 의약품 및 화장품 법(Drugs and Cosmetics Act) 제3조 제(b)항 (i)호 부터 (iii)호

(\*2) 의약품 및 화장품 법(Drugs and Cosmetics Act) 제3조 제(aaa)항

자료원: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 공식 홈페이지([www.cdsc.gov.in](http://www.cdsc.gov.in))

#### 3-7-2-2. 의약품에 대한 CDSCO 인증절차

의약품 및 화장품 법 및 규칙에 따라 신약(New Drug), 시험용 신약(Investigational New Drug), 후속신약(Subsequent New Drug), 고정용량복합제(Fixed Does Combination) 등은 CDSCO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에 대한 CDSCO 인증의 경우 종류별로 임상 시험 및 기타 테스트 등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신청서 제출 및 필요한 수수료 납부
- (2) 신청서 완결성에 대한 예비평가
- (3) 신청서 서류심사
- (4) (필요한 경우) 약효 동등성(Bioequivalence: BE) 및 임상시험(Clinical Trials: CT) 실시
- (5) BE 및 CT에 대해 전문위원회(SEC) 검토 후 확인서(NOC) 발급
- (6) 화학 및 제조관리(Chemistry & Manufacturing & Control: CMC) 데이터 검토
- (7) 인도 약전위원회(IPC) 테스트 후 확인서(NOC) 발급
- (8)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현장실사
- (9) 최종 승인

의약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필요정보, 필수서류, 신청양식이 매우 다양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된다. 그 중 신약 수입, 판매, 제조 등을 위한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서(Form 44)
- (2) 신청인 정보
- (3) 신청대상 신약 관련 세부정보

- (4) 수수료 납부 영수증
- (5) 동물 약리학(Animal Pharmacology) 정보
- (6) 동물 독성학(Animal toxicology) 정보
- (7) 인간 임상 약리학(Human/Clinical pharmacology) 정보
- (8) 치료탐색시험(Therapeutic exploratory trials) 정보
- (9) 치료확인시험(Therapeutic confirmatory trials) 정보
- (10) 특별 연구 내역
- (11) 타국가 규제정보
- (12) 처방정보
- (13) 시료 및 시험 프로토콜
- (14) 라벨 및 포장재 견본
- (15) 그 밖의 양식

### 3-7-2-3. 의료기기에 대한 CDSCO 인증절차

인도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CDSCO에 의료기기 등록하여 CDSCO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는 의료기기 규칙(Medical Devices Rules)에 따라 의료기기를 아래와 같이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각각 중앙 라이선스 당국(Central Licensing Authority: CLA) 또는 주 라이선스 당국(State Licensing Authority: SLA)에 등록하여야 한다.

의료기기가 의료기기 규칙에 따른 필수 등록 의료기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DSCO 등록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제조업체는 인도 약물관리총국(Drug Controller General of India: DCGI)으로부터 확인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의료기기 등급 구분〉

SLA	Class A- 저위험 의료기기 (예: 온도계, 혈압계 등) Class B- 중-저위험 의료기기 (예: 주사바늘, 캐놀라 등)
CLA	Class C- 중-고위험 의료기기 (예: 인공호흡기, 관절 임플란트 등) Class D- 고위험 의료기기(예: 심박조율기 등)

자료원 : EY LLP 자체제작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인도 약물관리총국(Drug Controller General of India: DCGI)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또는 제조공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기기 등록은 별도의 임상시험 및 제조공장 실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약 9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외국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의 경우, 인도에 수입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이 경우 인도에 도매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료기기 등록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과 수입허가 절차는 제품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SUGAM 포털([www.cdscoonline.gov.in](http://www.cdscoonline.gov.in))에 정보 입력
- (2) 인도 대리인 선임
- (3) 등록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상세정보 입력
- (4) 제조공정에 대한 상세정보 입력



- (5) 신청서 제출 및 신청 수수료 지불
- (6) DCGI 검토 및 검증, 필요한 경우 기술적 설명 제공
- (7) 최종 승인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허가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허가 시 필요서류〉

연번	의료기기 제조허가	의료기기 수입허가
1	커버레터	커버레터
2	신청서(Form MD-7)	신청서(Form MD-14)
3	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제조회사에 대한 상세정보	공인 대리인 상세정보
5	제조시설 소유·임대 관련 계약서	위임장
6	제조시설 마스터 파일	자유판매확인서(Free Sale Certificate)
7	품질관리 시스템	해외 제조사에 대한 세부정보
8	의료기기 마스터 파일	해외 제조시설 마스터 파일
9	그 밖의 서류	해외 제조시설 품질인증 서류
10		의료기기 마스터 파일
11		그 밖의 서류

자료원 : EY LLP 자체제작

#### 3-7-2-4. 화장품에 대한 CDSCO 인증절차

의약품 및 화장품 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을 인도에 수입되기 전에 사이즈, 제품군, 제조시설 등과 함께 CDSCO 등록을 하여야 한다. CDSCO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은 인도에 수입할 수 없다.

화장품 수입 인허가는 CDSCO SUGAM 포털([www.cdscoonline.gov.in](http://www.cdscoonline.gov.in))에서 인증신청을 진행하여 인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증 신청을 받으려는 제조자, 제조자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대리인, 인도수입자는 인증 신청서(COS-1)를 제출한 뒤, 등록인증서(COS-2) 등록인증서를 발급받아 CDSCO에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 CDSCO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화장품을 다른 수입자가 인도로 수입하는 경우 인증 신청서(COS-4)를 제출하여 CDSCO에 등록하여야 한다. 화장품에 대한 CDSCO 인증절차는 통상적으로 약 3-6개월이 소요되며, 일반적인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SUGAM 포털([www.cdscoonline.gov.in](http://www.cdscoonline.gov.in))에 사용자 등록
- (2) 신청인, 인증대상 제품, 제조자 정보 제출
- (3) 첨부서류 업로드
- (4) 인증 수수료 납부
- (5) 필요한 경우, 추가 테스트 실시
- (6) 최종 승인

화장품 CDSCO 인증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커버레터
- (2) 위임장
- (3) 성분분석표 및 성분함량표
- (4) 제품라벨
- (5) 제품 사용 설명서
- (6) 제조국의 제조면서
- (7) 자유판매확인서(Free Sale Certificate)
- (8) 동물실험 미시행 확인서
- (9) 중금속 등 함량표
- (10) 미생물 시험결과
- (11) 수수료 납부 영수증



### 3-7-3. FSSAI 인증

#### 3-7-3-1. 개요

인도의 식품 수입은 식품안전표준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에서 규제하고 있다. 인도의 식품 제조, 유통, 수입은 식품안전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와 인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 FSSR)에 의해 규제된다. 인도 식품 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은 식품수입업자만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 시 식품통관 시스템(Food Import Clearance System: FICS)을 통해 통관수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FSSAI 인증마크>



자료원: 인도 식품안전표준국 공식 홈페이지([www.fssai.gov.in/](http://www.fssai.gov.in/))

#### 3-7-3-2. 인증기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은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정부기관으로 인도 내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식품안전표준국은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및 수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준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 식품 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사업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형태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 주요 적용대상은 인도 국내식품 유통 등을 위한 식품 등록면허와 식품 수입면허로 구분된다.

#### 3-7-3-3. 식품등록 및 식품면허

인도 내 모든 식품사업자는 인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표준국에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의 등록하여야 한다. 연간 매출액이 120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영세 식품제조업자의 경우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운영규모가 확대되어 연간 매출액이 120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식품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면허는 다시 중앙정부 면허(Central FSSAI License)와 주정부면허(State FSSAI License)로 구분되며 연간 매출액이 2억 루피를 초과하는 식품사업운영자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중앙식품 면허를, 연간 매출액 2억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주정부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표준국은 식품안전규제시스템(Food Safety and Compliance System: FoSCoS, [www.foscoss.fssai.gov.in/](http://www.foscoss.fssai.gov.in/))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품등록 및 식품면허 신청은 식품안전규제시스템(FoSCoS) 온라인 포털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FoSCoS 온라인 포털 등록

- (2) 관할 주, 사업내용 선택
- (3) 신청정보 작성, 서류제출, 신청수수료 납부
- (4) 신청완료 및 신청식별번호 교부
- (5) 필요한 경우 작업장 조사 실시
- (6) 신청내역 및 조사보고서 검토
- (7) 등록증 또는 면허증 교부

### 3-7-3-4. 수입면허

인도에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수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수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총국에 등록하고 유효한 수출입 코드(Import Export Code: IEC)가 있어야 하고, 식품안전규제시스템(FoSCos) 온라인 포털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FoSCoS 온라인 포털 등록
- (2) 관할 주 및 사업내용으로 “수입업자” 선택
- (3) 신청정보 작성, 서류제출, 신청수수료 납부
- (4) 신청완료 및 신청식별번호 교부
- (5) 신청내역 검토
- (6) 등록증 또는 면허증 교부

### 3-7-3-5. 식품 수입 통관 수속

식품수입은 수입면허가 있고 유효한 수출입코드(ICE Code)가 있는 수입자만 진행 가능하다. 또한, 수입시점에 잔여 유통기한이 60% 미만인 식품은 통관할 수 없다.\* 수입식품은 매통관 때마다 식품통관 수속이 진행된다. 또한, 식품안전표준국에서 규정하는 라벨링 규칙을 준수하여 제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 인도 식품 기준 및 규격(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 제3조

식품이 수입될 경우 인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RMS)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고 식품통관 시스템(Food Import Clearance System: FICS)으로 연계되어 식품 수입통관 수속이 진행된다. 식품 수입통관 수속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식품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약 2주에서 10 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 (1)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제출
- (2) HS Code 및 RMS에 따라 분류
- (3)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FICS로 연계
- (4) 식품통관 시스템(FICS)에 필요서류 업로드
- (5) 안전도 확인
- (6) 안전도 적합판정이 난 경우 검사비용 지불
- (7) 육안검사 및 샘플 식별번호 생성
- (8) 샘플 채취 후 연구소에 전달하여 샘플 테스트 진행
- (9) 테스트 결과 적합 판정 시 확인서(No Objection Certificate: NOC) 발급
- (10) NOC를 활용하여 수입통관 진행

안전도 확인, 육안검사, 샘플 테스트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는 경우 부적합 확인서(Non-Conforming Report: NCR)이 발급되며 이 경우 수입자는 부적합 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부적합 사항을



보완 후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식품 통관 수속 과정에서 식품통관 시스템(FICS)에 업로드가 필요한 서류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성분분석표
- (2) 라벨 사본
- (3) 수입목적확인서
- (4) 수입신고서
- (5) 원산지 증명서
- (6) 수입면허증

## 3-8 물류

### 3-8-1. 물류시장

#### 3-8-1-1. 시장 규모

2022년 2,600억 달러 시장에서 2028년 4,300억 달러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가물류 비중이 높아서 계약물류(3PL) 시장은 255조원 규모로 낮은 수준이다. 인도의 국가 면적은 유럽연합(EU)의 크기가 비슷하여 육상운송 의존도\*가 90%로 매우 높다. 현재까지 인도는 생산과 소비가 내수 중심으로 물류 시장 또한 내수에 집중을 했다면, 중국의 대체 생산국가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화 전략으로 수출입 물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육상운송 의존도 인도 90%(육상 65%, 철송 25%), 미국 75%, 한국 77% 등

#### 3-8-1-2. 시장 전망

타국가 대비 1:2차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차이나 플러스원 국가 중 대표국가로 부상하고 있어 인도 내 물류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확대도 수요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태별로는 육송은 상대적 진입 장벽이 낮아, 수익성 또한 낮은 상황이다.

철송은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인프라 개혁의 수혜효과가 커지면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MMLP(Multi-Modal Logistics Park) 증대 계획의 일환으로 현대화·고속화가 대두되면서 철송이 물류효율성 개선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 3-8-1-3. 시장 특성

인도는 GDP·선진국 대비 14% 수준으로 물류비 비중이 높은 국가다. BRICs(11%), 유럽(10%), 한국·미국(8%)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주목한 인도 정부는 국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절감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무작정 물류선진화 작업에 속도를 낼수도 없는 상황이다. 물류 관련 정부부처 및 협력 기관의 인증 절차 중복, 상이하고 복잡한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불안정성이 시장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국가차원의 통합물류시스템이 오픈하였지만 아직까지 통관체계 및 관리 시스템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물류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제조사 자체 물류운영과 지역·도시별 영세 물류사의 난립 구조 또한 물류 선진화의 저해요소 중 하나다. 아직까지 디지털 보급률이 낮고, 관련 기술인력도 많지 않아 기술활용률이 낮고, 비표준화 인프라 개발에 따른 창고, 도로 활용수준도 떨어진다. 특히, 인도는 대형창고 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소형화 창고(300평) 미만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아(낮은 육류소비 등의 이유로) 콜드체인(저온) 시설 및 차량 또한 미비하다.





#### 3-8-1-4. 물류시장 변화

인도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국가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물류정책(National Logistics Policy) 발표를 통한 물류환경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고, 법·제도 단순화, 물류 정책기구 설치, 물류 관계된 정부·기관 시스템 통합 노력, 관련 플랫폼 개발 등 진행하고 있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 물류 인프라 구축 계획이 실현되어 진행 중에 있고,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7대 핵심 인프라 투자를 통한 고속화물철도, 국도·고속도로, 新항만, 지역별 공항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3-8-2. 물류환경

### 3-8-2-1. 인도 지역 구분

인도는 크게 4개 지역, 6대 도시로 구분할 수 있다. 4개 지역은 북부(수도 델리 및 NCR\*), 서부(뭄바이, 푸네), 동부(콜카타), 남부(첸나이, 벵갈루루)로 나뉜다.

\* NCR : National Capital Region으로 수도 델리 중심 하리아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총 3개 주를 통합하여 부름.

#### (1) 북부 지역

델리에 Maruti Suzuki, 우타르프라데시(노이다)에 한국계 제조회사, 하리아나(구르가온, 바왈 등)에 한국계·일본계 제조회사가 집중 포진해 있다. 수도와 인접한 지역으로 빠른 공급 등 이점이 있긴 하나,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시 중장거리 운송이 불가피하여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 (2) 서부 지역

뭄바이에는 해상 수출입 관련 기업\*과 금융기업, 푸네에는 유럽 및 한국계 자동차·설비 제조회사, 암다바드에는 식품 제조회사 등이 소재하고 있다.

\* 뭄바이 문드라 항구를 통한 해상 수출입 용이하여 물류 또한 활성화

#### (3) 남부 지역

타밀나두 주(첸나이, 스리시티 등)에는 자동차·전자제품·의류·화학 제조회사, 안드라프라데시(아난타푸르)에는 한국계 제조회사, 카르나타카(벵갈루루)에는 다국적기업 제조회사 및 IT기업이 진출해있다. 남부지역 또한 첸나이 항구와 인접하여 수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계 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 (4) 동부 지역

웨스트벵갈(콜카타) 중심으로 철강산업이 주로 발달해 있다. 인도의 북동부 지역과 인접국가인 네팔, 방글라데시를 타겟으로 한 수출입 물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 3-8-2-2. 인도 지역별 공항·항만 및 주요 통관지

항공 화물 수입의 경우 통관 서류는 포탈 및 시스템 통해 진행하고, 실물 통관은 도착지 내 공항 창고에서 통관을 진행한다.

## 〈인도 내 주요 공항 및 통관지〉

지역	도시	공항 및 통관지
북부	NCR (델리, 노이다, 구르가온 등)	델리 국제공항 (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서부	मुंबай	मुंबай 국제공항 (Chhatrapati Shivaji International Airport)
	पुणे	मुंबай 국제공항 (Chhatrapati Shivaji International Airport)
	अमदाबाद	अमदाबाद 국제공항 (Sardar Vallabhbhai Patel International Airport)
남부	चेन्नई	चेन्नई 국제공항 (Chennai International Airport)
	बेंगलूरु	बेंगलूरु 국제공항 (Kempegowda International Airport)
동부	कोलकाता	कोलकाता 국제공항 (Netaji Subhash Chandra Bose International Airport)

북부 NCR의 경우, 내륙으로 철송 이동한 후, 내륙컨테이너거점(ICD\*)로 화물을 이송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Free-time을 확보하고, 운송 Lead-time 또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 ICD : Inland Container Depot, 항만이나 공항이 아닌 내륙시설로 CY, 철도시설 등 고정시설을 갖추고, 이송된 컨테이너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며 통관 서비스 등을 제공

남부 벵갈루루에서는 첸나이 항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한 후, 육상운송을 하거나 보세운송을 통한 내륙컨테이너거점(ICD)로 이동한 후 통관을 진행한다.

< 인도 내 주요 항만 및 통관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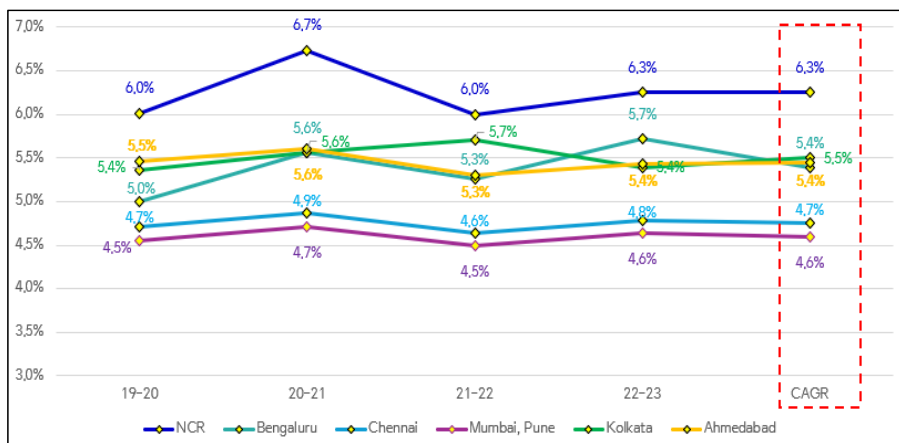
지역	도시	Port 및 통관지		
북부	NCR (델리, 노이다, 구르가온 등)	Delhi	하르야나주	우타르프라데시주
		Nhava Sheva, Mundra, Pipavav Port		
		통관지		
		ICD TKD	ICD TKD, Ghari	ICD TKD, ICD Dadri
서부	मुंबाई	Nhava Sheva		
	पुणे	Nhava Sheva		
	अमदाबाद	Mundra, Pipavav		
남부	चेन्नई	Chennai		
	बंगलूरु	Chennai (ICD Bengaluru)		

### 3-8-2-3. 인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

신규 진출을 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할 때, 인도 내 주요 도시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참고할 수 있다.

2019~2023년 기간 동안 지역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북부 NCR지역은 델리를 중심으로 6.3%, 서부 뭄바이, 푸네는 4.6%, 남부 첸나이는 4.7%를 기록했다. 이 밖에, 벵갈루루, 암다바드, 콜카타는 5.4~5.5%에 달했다.

< 주요 도시별 최저임금 인상률(2019~2023) >



자료원 : CJ DARCL



인도는 타국가 대비 낮은 임금 수준이나, 인력 이탈율이 높은 편이다. 사무실 및 공장 위치에 따라 인근 지역의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나, 타 기업과 경쟁이 심할 경우 타지역 인력을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기업은 공장·사무실 인근 숙식을 제공하거나 통근버스 및 교통수단 제공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기도 한다. 최근 해외자본을 통한 인도 내 대형 창고 오픈, 인도 물류 인프라 개발을 통한 거점 오픈 등으로 물류 환경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 3-8-3.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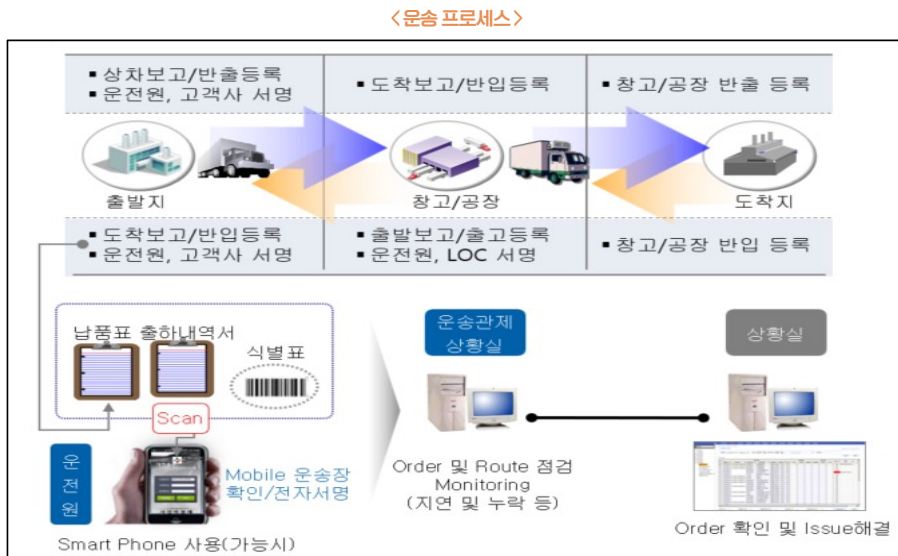
#### 3-8-3-1. 육상 운송 프로세스

육상 운송의 프로세스는 고객의 요청(Order)부터 시작한다. 기존·신규 고객의 요청을 받고, 상차 아이템의 특성, 부피(CBM), 중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을 수배한다. 이후 고객에 차량 정보(번호, 기사정보, 차량 Type) 등 먼저 공유한 후 고객사의 상차지로 차량을 보내면서 시작된다.

먼저 상차 아이템 List를 받고, 물량을 검수한 후 상차를 진행한다. 상차가 완료되면, 차량 출발 전 다시 한번 아이템을 검수한다. 요청지(Order List)와 Billing 및 운송 시 필요 서류 등 점검을 마치고, 운송을 진행한다.

운송 중 파손 등 방지를 위해 아이템 결박 및 이중 처리 등은 진행하긴 하지만, 운송 적하보험 또는 재고 보험이 필요하며, 이는 물류사 또는 고객사에서 계약 시 포함여부를 정한다. 운송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아이템 하차를 진행하고, Invoice 검증과 아이템 파손 및 수량 등 전체를 검수한다.

운송이 완료되면, Billing을 위한 Invoice 및 계약 요율 및 부가비용 등 계약서에 맞춰 정산을 완료하는데 까지가 운송 프로세스다.



자료원 : CJ DARCL



### 3-8-3-2. 육상 운송 차량 종류

육상 운송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객의 아이템 정보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 차량을 투입하게 된다. 이는 차량 종류별 운송 가능 물량 뿐 아니라 고객이 지급하는 물류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도는 전세계 최대 운송수단을 보유한 국가이나, 물류에서 사용되는 차량별 특징을 참고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육상 운송 차량 종류〉

구분	소형	중형	대형	특수
Type	픽업트럭 소형 Van	Single Axle Two Axle	Three Axle Multi-Axle	Flatbed 트럭 컨테이너 트럭
상차 중량	~3.5Tons	5~7.5Tons 7.5~12Tons	12~16Tons 최대 30Tons	최대 30Tons
Main 사용처	· 시내 운송 · 소형 업체 운송 · 택배 배송	· 일반화물 · 도시간 운송 · 중장거리 · Bulk 화물운송	· 건설자재 · 중량물 · 산업자재 · 대형화물	· 건설자재 · 중량물 · 산업자재 · 대형화물
특징	· 좁은 도로, 협소한 상·하차 장소에 적합함	· 운송 시 대형· 특수트럭 대비 기동성, 효율성 높음	· 단거리 자재 운송 시 적합함	· 중장거리 운송 가능함 · Flatbed는 철강, Project 등 · Container는 해상 수출입 운송 시 사용

자료원 : CJ DAR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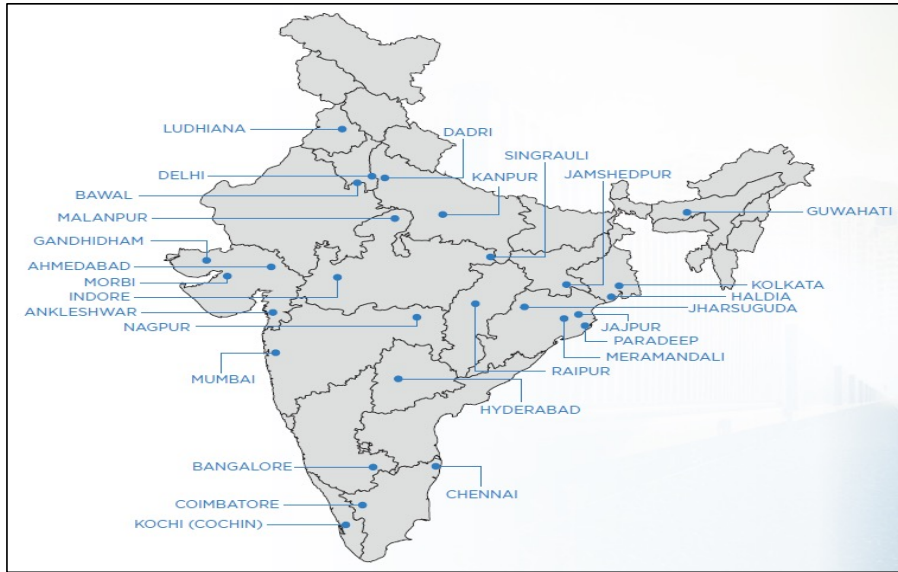
### 3-8-3-3. 철송 프로세스

인도의 철송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물류사를 통해 인도 철도청 또는 철송 운영 업체에 물량에 맞춰 화물 운송을 예약한다. 물류사를 통해 항만(Port) 또는 제조·생산지에서 육상 운송을 통해 물품을 이동한다. 화물 취급 철도역에서 화물을 적재한다. 철송을 통해 지정된 목적지 철도역까지 화물을 이동한다. 그리고 목적지 역에서 화물을 하역하고, 다시 육상 운송을 통해 물품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철송은 물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ESG 정책에 따라 기업별 탄소배출 절감, Green Logistics 실현을 위해 육송 대체제로 철송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석탄, 시멘트, 철강, 비료, 곡물 및 건설자재 등 중량화물의 경우 육송 대비 철송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최근 인도 정보에서 전용 화물 철도 회랑(Dedicated Freight Corridor, DFC)을 건설하고 있고, 컨테이너 2단 적재 철로 또한 개발하고 있어서 향후 육송 중심 시장이 줄어들고, 철송이 대체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주요 철도 거점〉



자료원 : CJ DARCL

### 3-8-3-4. 국경운송(Cross Border Transportation)

인도는 네팔, 방글라데시 등 인접 국가로 국경운송이 활발하다. 이에 육로와 Shipping 등 활용한 물류사업 또한 커지고 있다. 육상 운송으로 이동 시 날씨, 도로상태 등 고려해야 하지만 정시 도착과 수시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Shipping을 활용하면 최소 인도-방글라데시 구간을 육송 대비 약 1,200km를 단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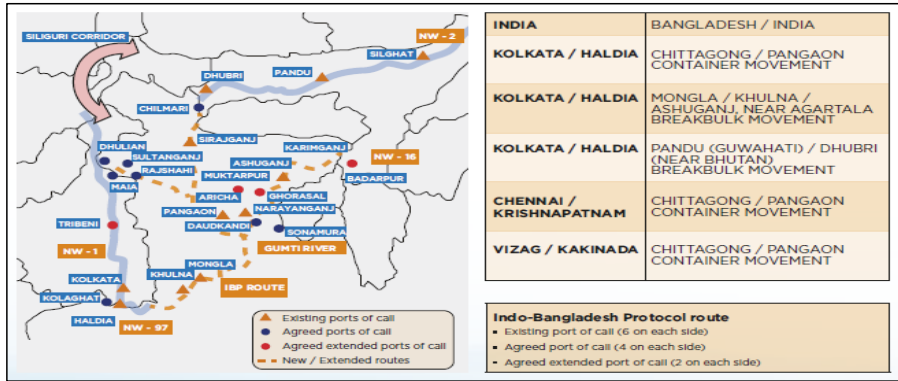
〈인도 국가 Shipping Route〉



자료원 : CJ DARCL



< 인도-방글라데시 고정 Shipping Route >



자료원 : CJ DARCL

## 3-8-4. 창고 보관

## 3-8-4-1. 인도 창고 등급별 특징

인도 내 창고 특징으로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물류 인프라 발전에 따라, 다양한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창고의 등급이 분류된다. Grade 'A' 창고는 주요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하며, 전자상거래, 제조업, 자동차, 이커머스 산업 등의 창고운영에 최적화된 현대적이고 첨단 시설을 갖춘 창고를 의미한다. Grade 'B' 창고는 물류 중심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로 Bulk형태를 보관하는 건설 및 건축자재산업, 자동차 부품 등의 맞춰진 창고운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Grade 'C' 창고는 최소한의 설비만 갖춘 창고로 저렴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주로 농업 및 농산물, 화학비료, 소규모 제조업, 로컬 유통/도매상들의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창고 등급별 특징〉

항목	Grade 'A'	Grade 'B'	Grade 'C'
위치	주요 도로, 항구, 공항 등 물류 중심지에 가까움	물류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나 접근성 양호	물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접근성 제한적
건축 연도	최근 건축된 현대식 창고 (10년 이내)	비교적 오래된 창고이나 여전히 사용 가능 (10년 ~ 20년)	오래된 창고로 현대적인 시설과 거리가 멀 (20년 초과)
구조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로 높은 내구성과 안전성 제공	일부 현대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보강 필요	구식 구조로 인해 내구성 및 안전성 문제 발생 가능
면적	100,000 Sqft >	50,000 ~ 100,000 sqft	< 50,000 SQFT
높이 (천장고)	> 10M	6M ~ 10M	≤ 6M
바닥 강도	6 Ton	3 Ton ~ 6 Ton	≤ 3 Ton
설비 (화재, 환기 등)	첨단 소방, 환기, 안전, 보안 시스템 완비	일부 시스템은 있으나 최신 시설과 거리가 있음	최소한의 설비만 갖추어져 있음
접근성 (도로 및 교통)	넓은 도로와 충분한 주차 공간 제공 (트럭 접근도로 넓이 : >12M)	접근 가능한 도로는 있으나 주차 공간이 제한적 (트럭 접근도로 넓이 : 12M ~ 6M)	좁은 도로와 불편한 주차 공간, 대형 트럭 진입 제한적 (트럭 접근도로 넓이 : ≤ 6M)
임대료	높은 임대료	중간 수준 임대료	낮은 임대료
활용도	대형 물류 기업 및 글로벌 기업 사용	중소 물류 기업 및 지역 업체 사용	소규모 또는 로컬 창고로 제한적 사용

자료원 : CJ DAR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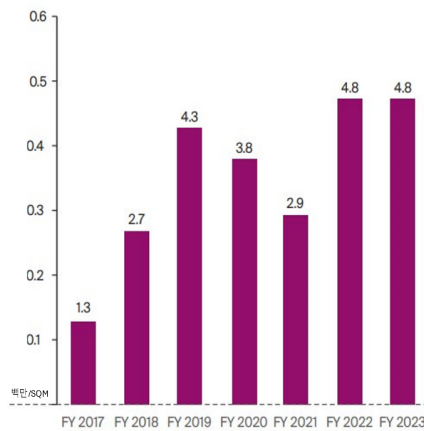


### 3-8-4-2. 창고 시장 및 주요 지역별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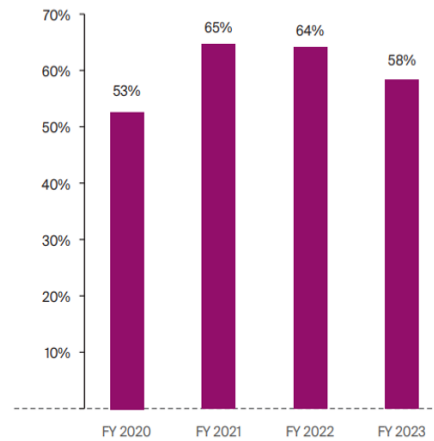
인도의 창고 시장은 급격한 경제 성장, 전자상거래 확대, 물류 네트워크 강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창고 수요와 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 각 도시별 특색에 따라 시장규모가 다르고 창고 단가에 차이가 있다. 임차단가 상승률은 연 평균 5% 이상이다.

창고 거래량(면적기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Grade 'A' 등급 창고의 거래량은 평균 60%로 급격히 성장하는 이커머스 및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장 수요가 높다.

〈인도시장 창고 거래량('1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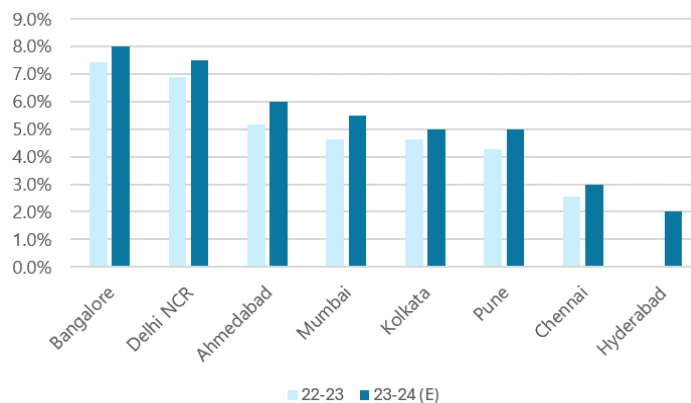
〈Grade 'A' 거래 비중('20~'23)〉



자료원 : Knightfrank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별로 임차단가상승률이 상이하다. 주요 도시(Tier 1) 중심으로 창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이테크(이커머스/IT) 도시인 벵갈루루와 최대인구 소비지역인 델리 NCR 지역은 특히 7~8%의 급격한 임차단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 도시별 임차단가 상승률('22~'24)〉



자료원 : Knightfrank

### 3-8-4-3. 창고 운영 프로세스



자료원 : CJ DARCL

#### 3-8-4-3-1. 입고관리

수입항에서 컨테이너 또는 현지 공장/업체에서 차량이 창고로 입하하면, ①도착보고(Gate Entry)를 진행한다. '도착보고' 시에는 차량 번호 또는 컨테이너 번호(Seal 번호 포함)를 확인하고, 운송장 서류에 기입된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입고 예정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②입고 및 검수(Good Receiving & Inspection)시에는 차량에서 제품 하차와 동시에 제품의 수량과 Damage여부를 확인하는 QC(Quality Check)를 진행한다. ③적치(Put-away) 단계에서는 SKU 또는 거래처 단위로 분류하여 Pallet Rack, Shelving Rack 또는 평치에 보관을 진행한다.

#### 3-8-4-3-2. 재고관리

적치된 제품은 출고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④재고실사를 통해 전산과 실물의 일치화를 진행한다. 단, 인도 시장의 법규 Legal Metrology Act, 2009와 그에 따른 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Rules, 2011에 따라, Packaged 제품에는 반드시 MRP(Maximum Retail Price)를 표기하여야 정식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가격이 인상될 시에는 반드시 제품의 'MRP라벨'을 교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3-8-4-3-3 출고관리

주문(Order) 수신 이후 제품이 보관된 장소에서 ⑤피킹을 진행한 후 피킹된 제품의 수량과 품질을 ⑥검수한다.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시 ⑦패킹을 진행한 후 ⑧GST Invoice를 신고하여 E-way Bill을 발행한다.

#### 〈GST Invoice 신고 프로세스〉

순번	프로세스	내용
1	Invoice 생성	공급업체/고객의 GSTIN, 상품설명, 수량, 세율, 금액등 포함
2	E-Way Bill 생성	50,000 루피 이상의 금액 및 특정거리 이동(타지역 이동)시 발행
3	GST Portal 신고	생성된 Invoice 데이터를 GST Portal에 신고 (월간/분기별로 GSTR-1 양식 제출)
4	세금납부	제품 출고 후 해당 월 또는 분기말에 매출세 신고 및 세금납부
4	서류관리	모든 GST Invoice와 E-way Bill은 최소 6년간 보관 필수

자료원 : CJ DARCL



#### 3-8-4-3-4 배송관리

먼저 배송 유형에는 제품의 수량과 출고처에 따라 FTL(Full Truck Load), LTL(Less than Truck Load), PTL(Partial Truck Load), Surface Express, CPU(Customer Pickup) 등 다양한 배송 유형이 있다.

FTL은 1개 화주 1개 거래처의 제품만 싣고 운송하는 배송 유형이며, LTL은 다화주 다거래처의 제품을 싣고 운송하는 배송유형으로 FTL보다 저렴하다. PTL 또한 다화주 다거래처의 제품을 싣고 운송하는 배송유형이지만 LTL보다 저렴하며, 그 대표적인 구분자는 '배송 Lead Time' 이다. 예를 들어 'LTL' 배송 유형은 차량에 물량이 가득 적재되어 있지 않아도 In-Time 배송을 위해 정시성 기반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PTL' 배송은 정시성 기반이 아닌 상차율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LTL보다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배송 Lead Time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Surface Express 유형은 한국의 '택배회사 운영 모델'과 유사하다.

## 3-8-4-4. 제품 유통 시 유의사항

## 3-8-4-4-1. Box 단위 배송구조

인도의 배송 단위는 한국의 PLT In-Out 구조와는 다르게 대부분 Box In-Out 구조이다. 이는 인도 시장의 유통구조의 발전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인도는 전통적인 유통 구조 하에서 대형 할인점(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형태)를 거치지 않고, IT혁신과 Covid-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유통구조로 급격하게 진화해왔다. 이의 영향을 받아, PLT 유통 Pool 구조가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납품 단위는 Box단위이다.

## 3-8-4-4-2. 기관 인증

인도 시장에서의 제품 유통을 위해서라면 각 산업군마다 필요로 하는 인증이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인도로 진출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산업군별 표준기관의 인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 〈산업군별 필요 인증〉

순번	산업군	필요한 인증	설명
1	전자 및 가전제품	BIS (ISI Mark)	Bureau of Indian Standards가 관리하는 인증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예: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CDSCO (Medical Device Rule)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의 관리하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위한 필수 인증.
3	식품 및 음료	FSSAI (FSSAI License)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가 발급하는 식품 안전 및 품질 인증. 모든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FSSAI 라이선스가 필수.
4	전기 제품	BIS (CRS Scheme)	특정 전기 제품에 대해 BIS의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에 따라 인증 필요. 예시: LED 조명, 휴대폰 충전기, 배터리 등.
5	화장품	CDSCO (Cosmetic Registration)	CDSCO에서 발급하는 화장품 등록 인증서로, 화장품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한 필수 등록 요건.
6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BIS & AIS (Automotive Industry Standard)	자동차 부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보장하는 인증. AIS는 자동차 산업 표준이며, BIS 인증도 필요할 수 있음.
7	건축 자재	BIS (ISI Mark)	철강, 시멘트, 페인트 등 건축 자재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기준을 보장하는 BIS 인증.
8	통신 장비	WPC (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	무선 통신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WPC의 승인 필요. 주파수 및 네트워크 관련 장비는 이 인증이 필수.
9	플라스틱 제품	BIS (ISI Mark)	플라스틱 파이프, 통, 용기 등 특정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BIS의 품질 인증 필요.
10	농업 및 비료	FCO (Fertilizer Control Order)	Fertilizer Control Order에 따라 비료 제품의 품질과 표준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11	방폭 장비	PESO (Petroleum and Explosives Safety Organization)	폭발물 및 위험 물질과 관련된 장비와 물질에 대한 PESO 인증. 안전성 검토를 거쳐 발급되며, 유통 전에 필수적임.

자료원 : CJ DAR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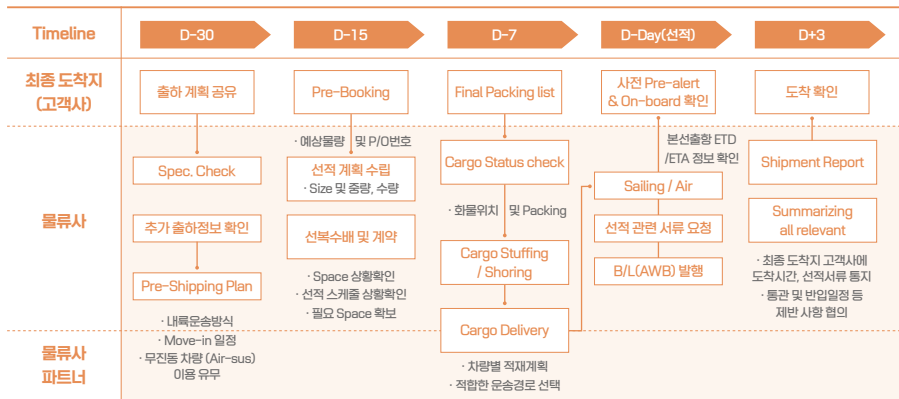
## 3-8-5. 해상 수입

## 3-8-5-1. 해상수입 프로세스

해상수입은 고객사(선적지)에서 출하 계획 수령부터 인도 물류사 간 물량 정보를 공유하고, 구간별 운송 Plan을 사전 협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최소 D-30 출하 계획을 공유 받고, D-15 사전 Booking을 통해 예상물량 등 공유한다. 이후 선적 계획을 수립한 후 최종 포장된 물품에 대한 List를 통해 운송이 시작된다. D-Day 선적 후 본선이 출항하면,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고객사에 공유하고, 지속 추적관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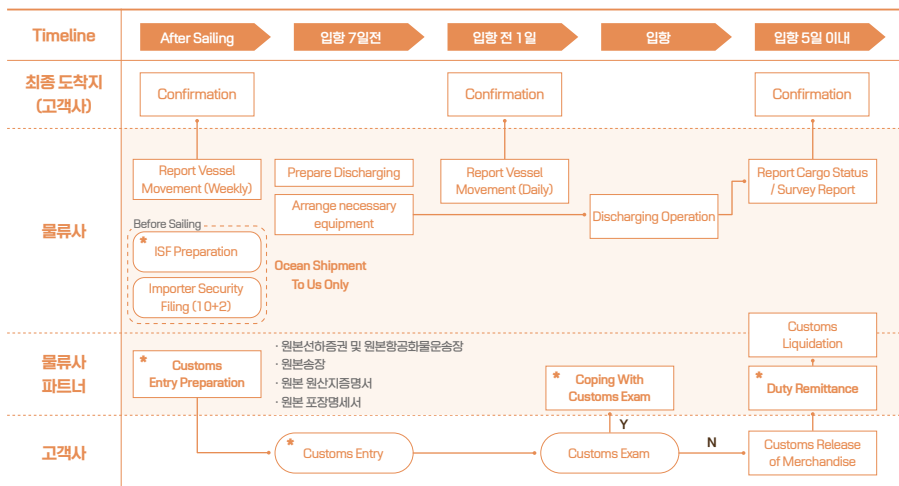
도착지에서는 Invoice의 Value 등 합리적 관세율 등 적용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정확한 HS Code Matching과 철저한 통관 준비 업무가 같이 진행된다.

〈선적지 프로세스〉



자료원 : CJ DARCL

〈도착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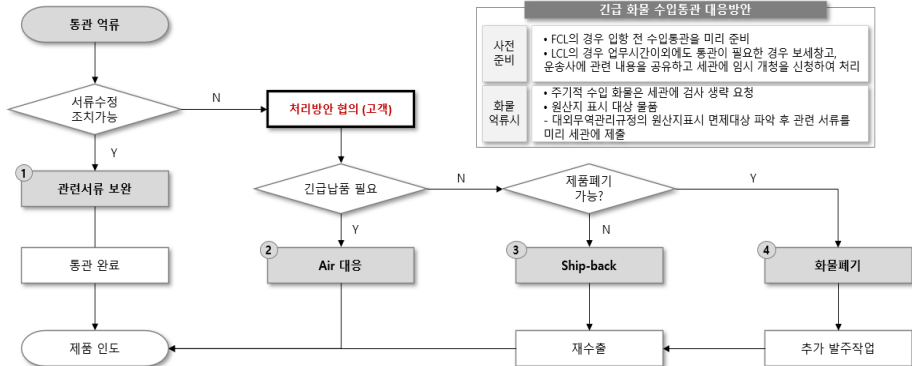
\* HS Classification Transaction Value

자료원 : CJ DARCL

### 3-8-5-2. 통관 역류시 대응

통관 역류 발생 시 서류 보완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수출/수입 고객과 협의를 통해 선적지(수출국)로 반송 조치가 필요하다.

#### <통관 역류 시 대응 프로세스>



자료원 : CJ DARCL

통관 중 발생할 수 있는 서류 작성 오류 사례를 정리하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대응 방안 또한 참고하는 것이 좋다.

#### <서류 작성 오류 및 대응방안>

오류 사례	대응 방안
B/L상의 Consignee가 실제 화주명과 불일치	▶ B/L과 화주명의 재확인 후 처리 예) 수입대행 같은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첨부하여 처리
B/L상의 총 중량과 포장개수가 적하목록과 불일치	▶ 포장 개수가 불일치 된 경우 → PACKING 누락 여부 파악 ▶ 누락 PACKING LIST 없을 경우 → 적하목록 중량 기준으로 PACKING LIST 정정하여 처리
Incoterms 인도조건이 B/L과 C/I 상 불일치	▶ B/L과 C/I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작업 시행 예) FOB 조건 수입인데 운임이 "O"인 경우
원산지증명서(C/O)의 협정에서 정한 양식 불일치	▶ FTA C/O의 경우 수리 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화물의 경우 수입 시 세금을 납부 후에 사후에 적용하는 방안 강구 (이 경우 원본제출 필요)
Return Cargo, No commercial value, Sample 등 특이한 문구가 있는 경우	▶ 재수입조건부 수입의 경우, 감면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무상 건은 고객사와 사전 협의하여 통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함.
관세 감면 건에 대한 세관과의 이견 발생	▶ 고가 장비의 경우 관세감면 물품 여부를 입항 전에 고객사로부터 안내 받아 미리 세관에 관련 감면 자료 검토를 요청 → 입항 시 지연이 없도록 서류처리

자료원 : CJ DARCL





### 3-8-5-3. 선적 서류 준비 및 포장

수입자의 구매 발주 접수와 동시에 수출자는 기본 선적 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작성하여 선정한 물류사에 송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수출자는 선적지 물류사와 서류 1차 검토를 하고, 도착지 물류사 및 수입자와 서류를 최종 검토한 후 선적일정과 도착일정 등 최종 확인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적합한 HS Code 사용, Packing Material 상세 기입,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제품 카탈로그 등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첫 수입 건과 기존 세관에 실물 검수 이력이 있는 물품 건에 대해서는 Packing List와 실물의 포장 박스 번호, 그리고 컨테이너 번호를 모두 매칭하여, 세관의 실물 검수 시 시간 단축 및 문제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해상운송비 절감, 수출지 물류사와 충분치 않은 준비로 인해 List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을 혼적하여 통관이 지연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충분한 소통 및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할 시 추가 비용과 시간, 그리고 향후 수입 통관 진행 시 방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필히 참고하여 이행하는 것이 좋다.

#### <통관 필요서류>

필요서류	필요서류 상세	해당 제품
1. 기본선적서류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원부자재, 신규·중고설비
2. 제품별 영문 카탈로그	설비 및 부자재별 사진 / 기본사양 / 용도 / 작동원리 등이 영문으로 작성된 카탈로그	원부자재 : 최초 1회 신규·중고 설비 : 수입 건별
3. 수입설비 리스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AERB(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등 HS-Code 별 요구됨	원부자재, 신규·중고설비
4. 원산지 증명서	한·인도 CEPA, 베트남 ASEAN 등 원산지 증명서	원부자재, 신규설비 (수입 건별)

자료원 : CJ DARCL

### 3-8-5-4. 수입 통관 프로세스

선적지의 수출자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또는 FTA 혜택 관련 인증서류 및 선적 서류를 준비하여 선적지 물류사를 통해 검토를 받는다.

수출 선적 서류를 도착지 물류사를 통해 세관 시스템에 Bill of Entry를 등록하기 전, 적용 관세 및 관세율을 수입자와 점검하여 최종 확정 짓는다. 이를 위해 선적서류 및 원산지 증명서 스캔본이 우선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Bill of Entry를 신고할 지 또는 최종 수정 후 신고할 지 정한다. 수입자가 최종 결정을 하면, 수입지 물류사는 세관 시스템에 Bill of Entry를 등록한다.

세관 시스템을 통해 담당 세관원이 배정되고, 제출한 BL, Invoice,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 업로드 된 파일을 토대로 수입 물품에 대한 매칭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세관원이 Ice gate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입자는 해당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소명이 완료되면 Bill of Entry Assessment의 최종 검증 및 평가 단계로 넘어가고, 소명이 불충분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최종 검증 단계가 완료되면 시스템을 통해 Final Bill of Entry를 받게 된다. 인도의 경우, 세관원이 배정된 후 이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되므로 언제든지 원본을 세관에 제출할 수 있게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세관 시스템에서 Bill of Entry를 발급받으면, 국영은행을 통해 관세 납부를 진행한다. 만약 국영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수입지 물류사를 통해 납부 후 정산도 가능하다.

세관 시스템을 통해 Examination Order를 발급받으면, 이를 통해 세관의 실물 검수 또는 무검사 통관이 정해진다. 이 과정이 종료되면 Out of Charge를 통해 화물을 반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품목별 통관 필요서류>

구분	신규설비	중고설비	기타(원·부재료)
선적 전 확인사항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CEPA, ASEAN 세제 혜택 확인 원산지 증명서 준비 (통관 전 원본 必) 포장상태 확인 (검수 시 신규설비 증빙)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중고는 세제 혜택 無) Invoice Value 증빙 - 최초 구매 Invoice, 감가잔존가 증빙서류, 중고시장 내 판매되는 견적서 등 - 포장상태 확인 (포장불량 시 검수 지연)	HS Code 및 관세율 확인 CEPA, ASEAN 세제 혜택 확인 원산지 증명서 준비 (통관 전 원본 必) 해당 실물의 샘플 준비 시 시간 단축 관세 적용기준 사전 확인
통관 시 진행사항	서류 Package 확인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Catalog, 설비 증빙자료, 선적서류 등 통관 2~5일 평균 소요됨 최종 통관지 확인 - Port 통관 시 추가 물류비 발생 - 북부지역 경우 ICD 지정 시 비용 등 절감 가능	서류 Package 확인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Catalog, 설비 증빙자료, 선적서류, Chartered Engineered Certificate 등 통관 6~10일 평균 소요됨 (외부기관) - Invoice Value 책정에 따른 세액 변동 가능 최종 통관지 확인 - Port 통관 시 추가 물류비 발생 - 북부지역 경우 ICD 지정 시 비용 등 절감 가능	서류 Package 확인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Catalog, 설비 증빙자료, 선적서류 등 통관 1~3일 평균 소요됨 최종 통관지 확인 - Port 통관 시 추가 물류비 발생 - 북부지역 경우 ICD 지정 시 비용 등 절감 가능

자료원 : CJ DARCL

### 3-8-5-5. 수입 통관 소요시간

한국궤 인도 도착은 해상운송 약 40일, 항공운송 약 2~5일 소요된다. 단, 신규 건에 대한 수입 운송의 경우 도착지 통관 추가 등록을 위해 4~5일 추가 소요된다.



## 3-8-5-6. 수입 통관 시 등록 서류

수입자는 아래와 같이 통관을 위한 등록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통관 시 등록 서류〉

필요서류	비고
1. PAN Card of Authorized Signatory self-attested(승인권자 서명한 팬카드)	
2. Residence proof of Authorized Signatory (Passport, Visa, FRRO, Pan Card Aadhaar card if any)	서명자의 주소 증빙
3. Complete set of IEC Code duly sign & stamp.(서명본, 날인본 Set)	
4. Company PAN Card(회사 Pan Card)	
5. Memorandum of Article (각서, In digital case EMOA(Memorandum Of Article), EAOA(Article Of Association))	회계사 확인 양식 (Digital Soft copy)
6. GATT Declaration(관세일반 무역협정 신고서)	
7. GST Certificate Number(GST등록번호)	
8. ITR(Income Tax Return) for 2 years : 최근 2년 소득세 내역	신설법인인 회계사로부터 매출 미발생 증빙 Letter 대체
9. Bank Statement for 6 months : 최근 6개월 은행 거래내역	
10. Address proof (회사 주소증명서, Any of 전기세고지서, 전화비 고지서, 수도고지서, 임대계약서 등)	
11. Bank AD Code(Authorized Dealer Code) : 딜러고유번호	Bank Letter Head 必

자료원 : CJ DARCL

## 3-8-5-7. 관계사 거래여부 확인

수입자는 아래와 같이 수출자와 관계사 여부 등 확인해야 한다. 상호 관계사가 아니면, 수입통관지 등록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관계사간 거래는 Special Value Branch(SVB)라는 세관 부서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 경우 최대 1년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Provisional Duty Bond(PD Bond)를 임시 등록하여 통관을 진행한다. 이는 최초 신청 시 약 2주가 소요되며, SVB를 신청하기 전 임시로 Lead-time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꼭 60일 내 SVB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가 5%의 과세가 이뤄진다.

위 2가지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는 물류사 또는 통관업체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초기부터 잡아 나가는 것이 좋다.

### 3-8-5-8. HS Code 및 관세 사전 검토

인도 수입통관은 HS Code 적용이 세관 및 세관원별로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요구하는 서류도 다양하다. 수입예정제품(설비 및 원부자재 등)의 수출국 HS Code를 기준으로 인도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가능여부와 필요서류, 필요인증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제품별 수출국 HS Code와 함께 제품 영문 Catalog를 통해, 동일한 HS Code로 수입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 필요인증 등을 확인한다. 공정 내 설비의 경우 준비가 어렵지만, 원부자재인 경우에는 실물 샘플을 통해 인도세관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AERB(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인증 등이 있으며, 계획과 달리 이러한 인증을 취득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어 해당제품 수입지연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 초기단계에서 사전검토는 향후 인도 비즈니스 전략수립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확정된 HS Code를 기준으로 특혜관세 수혜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인도 CEPA, 인도-ASEAN FTA(동남아), 인도-호주(EC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이 있다. 이는 향후 원부자재의 공급 전략에 큰 차이를 준다.

추가적으로 확정된 HS Code를 기준으로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역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인도에서 인정하는 HS Code와 수출국의 HS Code 기준이 상이하여, 인도에서 원산지증명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 <인도 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한-인도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2009-08-07	2010-01-01
SAPTA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1993-04-11	1993-04-11
인도-스리랑카 FTA	스리랑카	1998-12-28	2000-03-01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아프가니스탄	2003-03-06	2003-05-13
SAFTA (Agreement on South Asian Free Trade Area)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04-01-04	2006-01-01
인도-MERCOSUR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005-03-19	2009-06-01
인도-칠레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칠레	2006-03-08	2009-01-13



인도-부탄 FTA	부탄	2006-07-28	2006-07-29
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대한민국, 라오스, 스리랑카	2005-11-02	2006-09-01
인도-싱가포르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싱가포르	2007-12-20	2007-12-20
인도-아세안 CECA (India-ASEAN CECA)	아세안	2009-08-13	2010-01-01
인도-네팔 무역협정 (India-Nepal Treaty of Trade)	네팔	2009-10-27	2009-10-27
인도-핀란드 AEC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핀란드	2010-03-26	2010-03-26
SAARC (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10-04-29	2010-04-29
인도-말레이시아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말레이시아	2010-10-27	2011-07-01
인도-일본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일본	2011-02-16	2011-07-01
인도-모리셔스 CECP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greement)	모리셔스	2021-02-22	2021-04-01
인도-UAE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UAE	2022-02-18	2022-05-01
인도-호주 ECT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	호주	2022-04-02	2022-12-29
인도-유럽자유무역연합 TEPA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24-03-10	발효 전

자료원 : KOTRA 국가정보

### 3-8-5-8. 통관 완료 후 운송

위 절차를 통해 통관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물품을 최종 도착지까지 운반해야 프로세스가 완료된다.

인도 내 주요 대도시는 트럭(상용차량)의 도시 내 진입을 통제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델리 공항과 인근 ICD 또한 해당 지역으로 포함된다. 도시별 통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물류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델리의 경우 오전 7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총 11시간 도시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AQI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디젤 차량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델리 NCR의 경우 최종 도착지에서 야간 입고를 통해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아울러 인도는 GST제도에 따라 E-Way Bill 발행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ID를 사전 발급받아서 원활한 진행을 해야 한다.

E-Way Bill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자의 GST Number, 최종도착지 주소, Invoice Number 및 가치(금액), 운송목적, 해당 운송 송장 번호, 차량 번호 및 HSN Code 등 기입해야 한다.

E-way Bill 온라인 포털 주소는 아래와 같다.

\* E-way Bill 온라인 포털 주소: <https://ewaybillgst.gov.in/login.aspx>



### 3-8-6. 물류 컨설팅 서비스

#### 3-8-6-1. 물류 컨설팅 목적

물류 컨설팅의 목적은 인도에 기존 진출해서 있거나 혹은 앞으로 진출을 예정하고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단순 비용 절감의 목적이 아닌 운영 효율화, 물류 창고 및 위치 최적화, 임·출고되는 물품의 차량 상차율 관리, 제조·생산을 위한 재료 수급·공급 원활화 등을 통해 고객의 KPI 달성 전략을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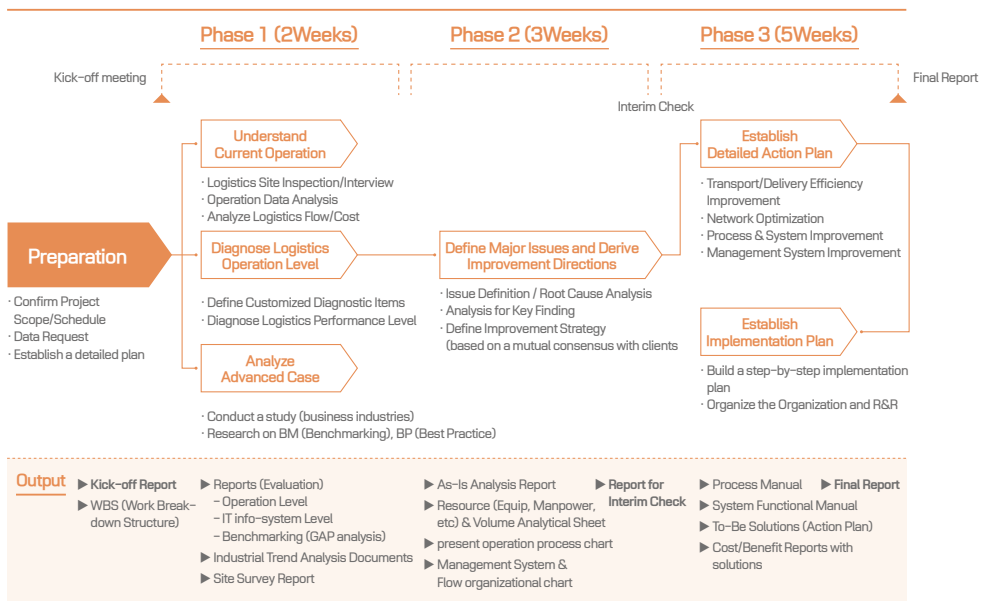
또한 주문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재고를 실시간으로 시스템화 관리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생산·판매량이 증가되었을 때 비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

#### 3-8-6-2. 물류 컨설팅 방법

통상적으로 인도 내 물류사들이 제안하는 물류 컨설팅은 총 3단계에 거쳐서 약 10주간 진행된다. 1 단계는 운영 현황 분석으로 사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범위와 고객의 데이터 및 요구사항을 취합한다. 이후 현 운영 파악을 위한 담당자 인터뷰, 데이터 분석, 물류비 원가 분석 등 진행한다. 이후 동일 산업군을 기준으로 추가 진단을 한다.

2단계는 주요 이슈사항, 개선 포인트 도출 정의를 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다. 마지막 3단계는 운송/거점/인력/프로세스/관리시스템 등 심도 깊은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고객의 최종 확인 과정을 통해 실제 적용해보는 것이다.

#### <물류 컨설팅 일정(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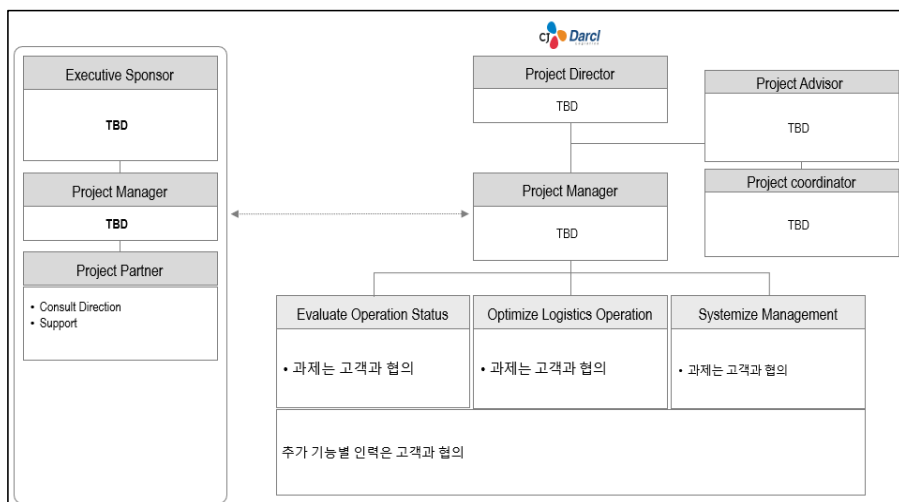
자료원 : CJ Darcl

### 3-8-6-3. 물류 컨설팅 조직 구성

10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컨설팅 완료를 지어야 하므로 고객과 물류컨설팅사 간에 조직 구성은 필수다.

컨설팅의 방향과 지원, 사이트 방문 및 담당자 인터뷰, 데이터 제공 등을 위해 고객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고, 물류사는 각 기능별 담당자 분배를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인도 현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컨설팅은 인도 현지인이 진행하더라도 고객 소통 및 지원은 한국인 인력이 전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류 컨설팅 기본 조직도 (예시)>



자료원 : CJ DarcI

### 3-8-6-3. 물류 컨설팅 보안 유지 및 비용

초반에 기본적인 원칙을 세팅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의 보안서약서, 양사간 MOU 및 컨설팅 계약 체결을 통한 보안 유지가 1순위다.

데이터 유출 방지, 프로젝트 참여 인력의 컴퓨터 및 통신장비 제어, 향후 일정 기간동안 컨설팅을 진행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언급자체를 금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출이 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계약서 상 보상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인도에서 물류 컨설팅 비용은 참여 인력에 대한 비용, 시스템 사용, 경비 일체를 포함하고 있으나, 물류사별 비용이 상이하므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 3-9 지식재산권

### 3-9-1. 개관

#### 3-9-1-1.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이란 지적 창작물, 즉 발명, 예술분야 창작물, 사업과 상거래에 사용되는 기호, 명칭, 이미지 등 국가 및 주 경제에 기여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하는 무형자산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지식재산권은 위와 같은 지식자산을 법령 등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도 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회사 및 개인이 법령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용신안(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물품의 형상, 구조 따위에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하는 것)'을 따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고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 (1) Trademarks (상표)
- (2) Copyrights (저작권)
- (3) Patents (특허)
- (4) Designs (디자인)
- (5)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

#### 3-9-1-2.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세계화 및 선진화된 기술이 매우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의 보호는 기업의 발명품, 브랜드 및 해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지식자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상품 및 제품의 발명가 및 창작자의 창의성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새로운 창작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체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1) 수익창출의 수단: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나, 지식재산권은 이를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시킨다.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통하여 로열티와 함께 전체적인 시장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 (2) 수출기업의 사업기회: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성은 지식재산권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의 로고나 디자인 등 지식자산을 활용하여 인도를 포함한 해외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현지 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적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3) 제3자 침해로부터의 보호: 고유한 아이디어 또는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복제 또는 침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지식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모든 회사가 소유한 지식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의 요구와 상황을 평가한 후 해당 지식재산권을 어떠한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4) 비즈니스의 성장: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꾸준한 성장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진출 초기 단계에서 해당 부문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보호는 발명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타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3-9-1-3. 인도 지식재산권의 최근 출원동향\*

\* 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_Annual report 2022-23 을 참조하여 작성

최근 특허, 디자인 및 상표 관리국(GCPDTM)의 관리 하에 있는 인도 IP오피스에 따르면, IP오피스에 각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출원이 수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각종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5.94%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의 출원 증가 추세는 지난 5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에도 관찰되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최근 5년간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최근 5년 지식재산권 출원동향>

Trends in last five years with respect to filing of IP applications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Patent	50,659	56,267	58,503	66,440	82,811
Design	12,585	14,290	14,241	22,699	22,698
Trade mark	323,798	334,805	431,213	447,805	466,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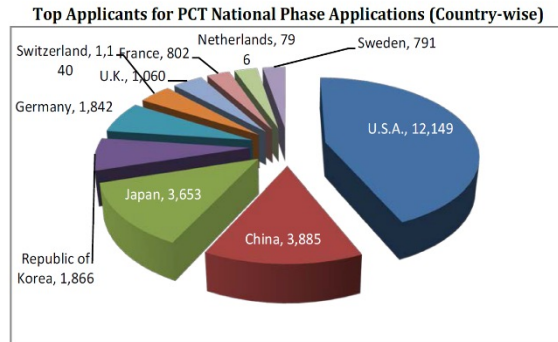
Trends in last five years with respect to filing of IP applications:

Application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Patent	50659	56267	58503	66440	<b>82811</b>
Design	12585	14290	14241	22699	<b>22698</b>
Trade mark	323798	334805	431213	447805	<b>466580</b>

지식재산권 중, 특허출원을 보면, 외국기업 출원기준으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개별 회사로는 삼성전자가 퀄컴(미국)에 이어 외국출원 중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 〈외국인 인도 특허출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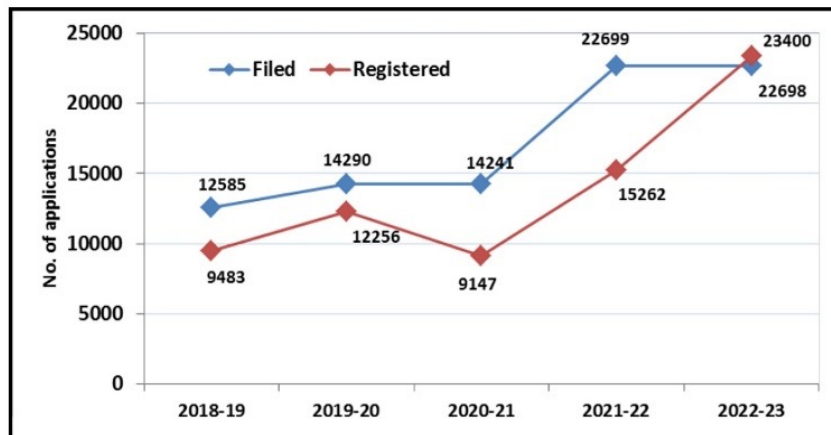


### Top 10 Foreign Resident Applic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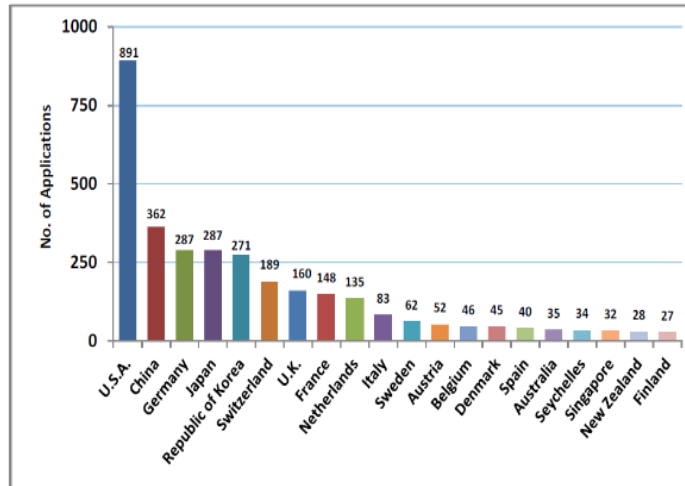
Sl. No.	Name of Organisation	Number of Applications
1	QUALCOMM INCORPORATED	3482
2	SAMSUNG ELECTRONICS CO., LTD.	979
3	HUAWEI TECHNOLOGIES CO., LTD.	936
4	APPLE INC.	575
5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PUBL)	434
6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428
7	NOKIA TECHNOLOGIES OY	359
8	LG ELECTRONICS INC.	326
9	LG ENERGY SOLUTION, LTD.	288
10	BEIJING XIAOMI MOBILE SOFTWARE CO., LTD.	237

디자인 출원도 전반적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2022년부터 인도 자국내에서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디자인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5번째로 디자인을 많이 출원하고 있으며, 외국기업 출원으로는 삼성전자가 첫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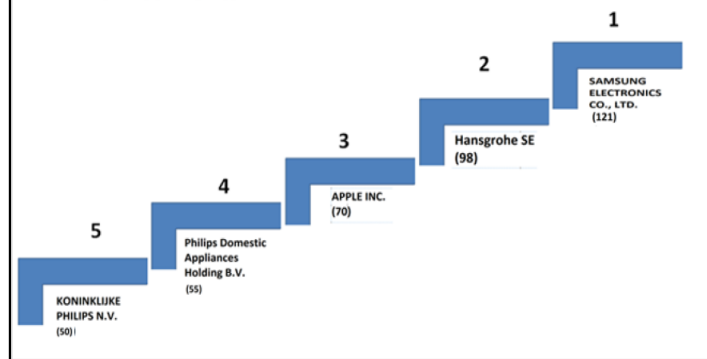
### 〈인도 디자인 출원 동향〉



Top 20 Country/Region Wise Applications filed by Foreign Applicants



Top Five (5) Foreign Applic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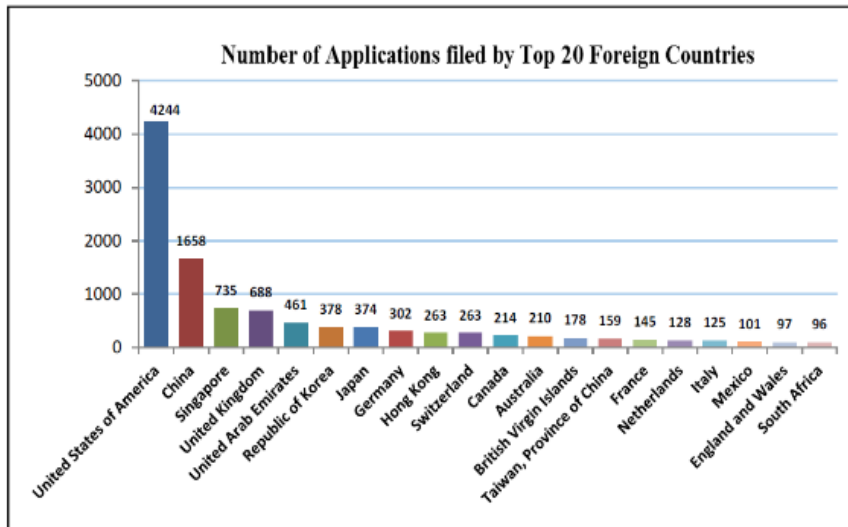


상표는 지식재산 중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고, 크고 작은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식재산이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2020-2021년부터 인도내에서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인도에서의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국출원으로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UAE 다음으로 한국이 6번째로 많은 상표출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도 상표출원 동향 >

Trend of Trademark Applications Filed from 2018-19 to 2022-23

	Indian Applicants	Foreign Applicants	Total
2018-19	310,116	13,682	323,798
2019-20	320,940	13,865	334,805
2020-21	418,594	12,619	431,213
2021-22	434,084	13,721	447,805
2022-23	453,325	13,255	466,580



#### 3-9-1-4. 지식재산 관련 규정

인도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1)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 이하 '저작권법')
- (2)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9, 이하 '상표법')
- (3) 특허법(The Patent Act, 1970, 이하 '특허법')
- (4)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이하 '디자인법')
- (5) 반도체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법, 2000(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s Act, 2000)
- (6)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이하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 또는 '지리적표시법')
- (7) 식물, 품종 및 농민 권리 보호법(The Protection of Plants and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 2001)
- (8) 생물 다양성 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 3-9-1-5. 지식재산 유관기관

##### (1) 산업정책진흥국(DPIIT)

인도 중앙정부는 1995년 상공부 내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을 설립하여 인도 경제의 점진적 시장 개방을 주도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산업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산업정책진흥국의 주요 역할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의 지원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의 촉진이다.

산업정책진흥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및 상품의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상품의 홍보 및 보호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감독하는 주무 관청으로 기능하며,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한 정책 이행도 함께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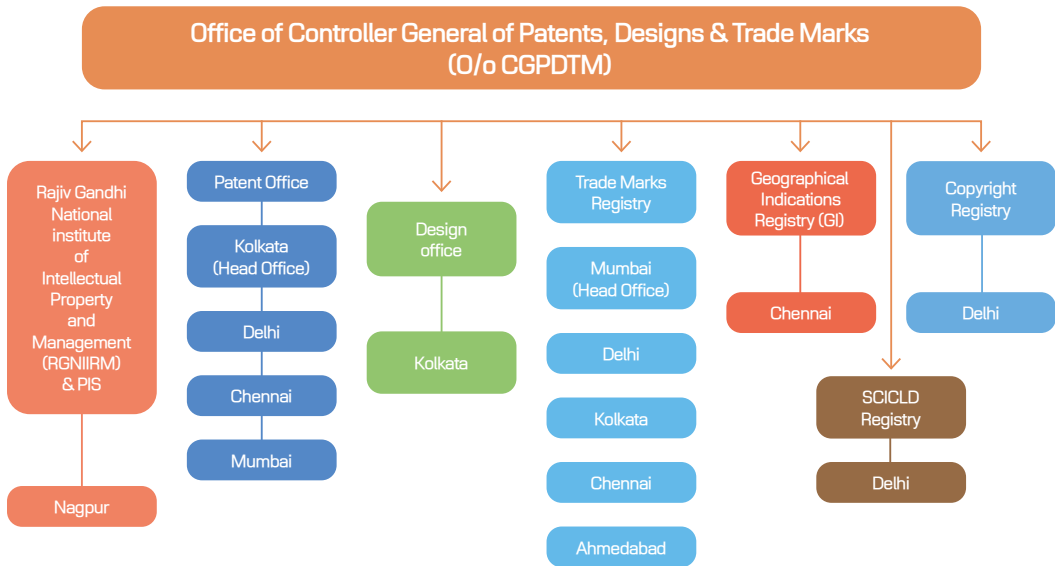
##### (2) 특허청(CGPDTM)

특허·디자인·상표 등 위 산업정책진흥국 산하의 인도의 지식재산권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특허(및 디자인, 상표 관리)청(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이하 'CGPDTM')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행정 집행 중앙부서로서, 인도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상품지리적 표시등록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관장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부에 자문을 제공한다.

콜카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첸나이, 뉴델리, 뭄바이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다. 디자인등록사무소(The Design Office)는 콜카타 특허청 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등록사무소(The Geographical Indications Registry)는 첸나이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 특허정보시스템 사무소(The Offices of The Patent Information System: PIS) 및 인도 지식재산권 관리기구(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NIIPM)는 나그푸르에 위치한다.



### < CGPDTM 조직도 >



자료원: <http://www.ipindia.gov.in/about-us.htm>

#### (3)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BIC)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이하 'CBIC')는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산하의 기관이다. 한국의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도의 CBIC는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간접세를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세관(Customs)은 CBIC의 하부 기관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인도의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라 중앙 정부는 상표, 저작권,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 (4) 경제범죄 수사과(EOW)

경제 범죄 수사과(Economic Offence Wing, 이하 'EOW')는 위조, 불법복제 및 사이버 범죄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특정 영역과 범죄를 담당한다.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수사과 기소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경찰에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 수사관은 상표권 침해 물품, 허위 거래 표시(False Trade Description), 모조 의류, 가방, 시계, 전자제품, 영화 관련 침해 물품 등 일체를 관할 구역 내에서 압수할 수 있다.

#### (5) 지식재산권팀(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 CIPAM)

지식재산권팀(Cell for IPR Promotion & Management, 이하 'CIPAM')은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산하 전문 기관으로 CIPAM은 정부의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치를 보장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사법, 경찰 및 세관 등의 기관이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효과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3-9-2. 상표

### 3-9-2-1. 개관

인도에서 상표는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상표권을 다루는 최초의 법률은 1940년 상표법으로, 상표권의 등록과 법적으로 보호 기구를 마련했다. 1940년 상표법은 1958년 상표 및 상품표기법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다시 1999년 상표법(The Trademarks Act, 1999)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법은 2017년 상표 규칙과 함께 현재 상표권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1999년 상표법은 2010년 상표법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인도에서는 TRIP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의무가 요구되며, 인도는 상품과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는 고유 분류인 니스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를 따른다.

상표권 등록을 통하여, 상표의 소유자가 상표법에 근거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상표를 사용한다거나 (기호@사용)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구제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도록 한다. 또한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와 구제청구에 대해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인도 시장 진출 시 자사의 상표출원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실시료(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며, 라이선스를 통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해당 상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표의 인지도를 높여 판매량 증가로 이어져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표의 추가 라이선싱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 3-9-2-2. 정의 및 보호범위

상표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회사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의 것과 식별될 수 있도록, 문자, 이름, 브랜드, 장치, 라벨, 서명, 포장, 숫자 또는 색채의 조합 등의 표장 또는 시각적 기호를 의미한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법에 의한 상표권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강력한 보호가 가능하지만,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의 사용으로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인도의 상표법은 서비스표와 입체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며, 관련 제품이 특정 표준을 준수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표장' 및 단체의 회원이 특정 단체가 정한 품질 수준 및 기타 요구사항 등으로 자신을 식별하도록 하는 '단체표장'\*의 등록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 Intellectual\_Property\_Law\_in\_India.pdf (nishithdesai.com), [http://www.nishithdesai.com/fileadmin/user\\_upload/pdfs/Research%20Papers/Intellectual\\_Property\\_Law\\_in\\_India.pdf](http://www.nishithdesai.com/fileadmin/user_upload/pdfs/Research%20Papers/Intellectual_Property_Law_in_India.pdf)





### 3-9-2-3. 출원 및 등록

#### 3-9-2-3-1. 기간

상표법 제25조 (1)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보호 기간은 출원 후 10년이지만 등록된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0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 “25. Duration, renewal, removal and restoration of registration. – (1)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shall be for a period of ten years, but may be renew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ection 25 of the Trademarks Act, 1999”

#### 3-9-2-3-2. 요건

인도의 상표법은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상대적 거절사유’와 ‘절대적 거절사유’를 규정하여 상표가 권리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함으로써 상표권의 요건을 제도화하고 있다.

인도 상표법 제9조의 상표등록에 관한 절대적 거절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 ①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즉,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할 수 없는 것
- ② 거래상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치, 원산지, 해당 상품생산의 시기, 서비스 제공의 시기,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의 다른 특성을 의미하는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 ③ 현행 언어에 있어서 또는 선의의 확립된 거래 관행에 있어서 관습화 된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다만, 상표출원 일 전에 사용의 결과로서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이거나 주지 상표일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 ① 공중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 일 때
- ② 인도 국민의 계급 또는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 ③ 중상적 또는 외설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 ④ 그 사용이 상징 및 명칭(부정사용방지)법(Emblems and Names (Prevention of Improper Use) Act, 1950)에 의해 금지되고 있을 때

(3) 다음의 것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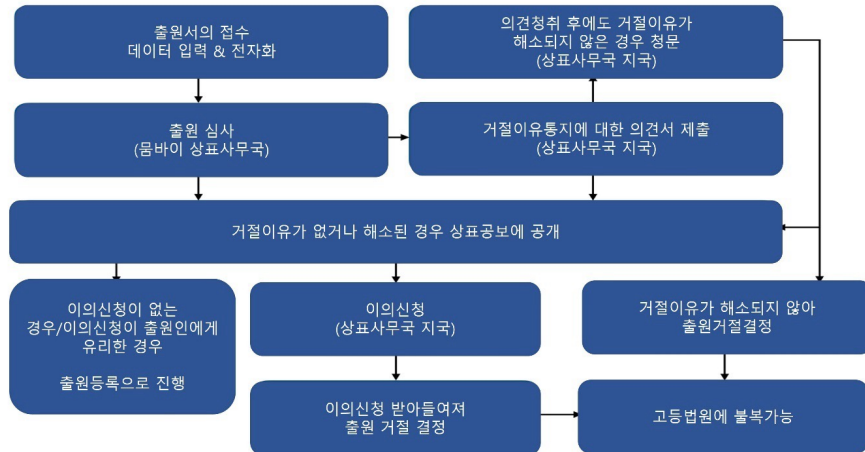
- ① 상품자체의 특성에서 유래된 상품의 형상
- ② 기술적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의 형상
- ③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그 밖에 상대적 거절사유로서 선행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선행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며, 선행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거절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행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고, 경합에 의하여 모두 사용되는 경우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 3-9-2-3-3. 절차

다음 흐름도는 상표 출원시의 심사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인도 지식재산권 A to Z, Kotra, 2020 참조)

#### <인도 상표 출원 심사절차 요약>



자료원: <https://ipindia.gov.in/workflow-chart.htm>

상표등록은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약 18 ~ 24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 행정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그 기간이 많이 단축되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라면 7개월 이내에도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실무적으로 상표출원 및 등록을 위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nnual Report, 2017-2018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CGPDTM),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Government of India [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IP\\_India\\_Annual\\_Report\\_2019\\_Eng.pdf](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IP_India_Annual_Report_2019_Eng.pdf)

#### (1) 인도 내 대리인 선정

인도에서 상표를 출원할 상표사무소(Trademark Registry)의 관할은 영업소의 소재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도 내 영업소가 없는 상표의 출원인은 대리인(agent) 또는 변호사(attorney)를 통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CGPDTM의 웹사이트에서 대리인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ipindia.gov.in/trade-mark-agents.htm>

#### (2) 조사

상표의 조사는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 등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상표의 적격성 및 가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즉, 상표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CGPDTM 웹사이트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

\* <https://www.tmrsearch.ipindia.gov.in/tmrpublicsearch/>

**(3) 출원**

조사 결과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가 고유한 것이라면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 니스 국제상품분류에 지정된 45개의 품목 류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단일 또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상표사무소에 제출하고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4) 심사**

출원 후 상표사무소는 해당 상표가 상표법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거절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1-2개월 내에 받아 볼 수 있다.

**(5) 공개**

공개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절차이다. 상표사무소가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 거절하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공개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의견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청문이 신청될 수 있다. 등록이 허용 되면 상표는 상표 공보에 공개되게 된다.

**(6) 이의신청**

상표가 상표 공보에 공개된 후에, 공개로써 피해를 입은 자(이해관계인)는 상표공보가 공중에게 공개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공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1개월 연장 가능)에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7) 등록 및 갱신**

공보에 공개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는 등록되고 상표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등록 만료 6개월 이전에 10년 기간으로 갱신 가능하므로 상표권이 장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3-9-2-4. 양도 및 이전**

상표권의 양도란 상표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도에서 상표권은 그 전부 또는 부분을 영업권과 함께 또는 영업권 없이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영업권 없는 이전은 심사관의 지시에 따른 일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

**3-9-2-5. 침해 시 대응방안****3-9-2-5-1. 침해행위**

상표의 등록은 침해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상표법 제29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등록상표는 등록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을 허가 받지 않은 자,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품등록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표장의 사용을 상품로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등록상표는 등록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을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업으로서 표장을 사용하여 그 표장이

다음의 이유로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등록상표와의 관련성을 가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침해로 된다.

즉, 인도에서 상표의 등록 소유자 또는 사용을 허락 받은자 이외의 사람이 등록 상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된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표의 평판을 해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동일, 유사성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으로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인도에 상표출원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기존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는 않는지, 또는 기존에 소유한 상표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9-2-5-2. 사법적 구제방안

제3자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 받은 경우, 우리 기업의 상표권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의 방안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 (1)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

##### ① 경고장 발송

본격적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Cease and Desist Notice(C&D)라 불리는 경고장을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침해 구제의 1단계 절차로서 가장 신속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며, 만약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계속한다면, 민사 또는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민사상 구제방법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을 때의 민사상의 구제책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금지명령(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적인 명령)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 ■ 영구적 금지명령

법원의 결정시에 침해 당사자 피고가 원고의 권리에 반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 ■ 임시적 금지명령

피고가 원고의 권리에 반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 ■ 법원의 안톤필러/수색 명령

신청자가 증거를 보존하고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자 소유구역에 들어가 검증, 수색 및 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법원은 또한 침해 라벨과 표장을 파기 또는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이익의 환수명령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손해배상과 이익의 환수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형사상 구제방법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형사고소 및 그에 따른 수사개시 또한 가능할 수 있다.

##### ■ 형사고소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법에 따라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구역 내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된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 ■ 법원의 명령 요청

만약 경찰조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대하여 별도로 위 조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 압수수색

상표법은 경찰수사 시 침해 범죄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해당 범죄 관련 물건 등을 수색 또는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 법원 결정에 따른 처벌

상표법에 따르면 침해자는 최소 6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과 최소 5만 루피 최대 20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법에는 누범 가중 처벌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에 의하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과 최소 10만 루피에서 최대 20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 (2)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만약 우리기업의 상표가 인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인도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향후 예상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에서의 상표권 등록이 필수적일 수 있으며, 인도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가 아니라면 완전하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① 경고장 발송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침해가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송부하여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 ② 사칭(Passing off) 소송

우리 기업의 상표권이 인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대신 사칭 소송으로서 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사칭 소송의 경우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의 일반 민사소송과는 요건이나 증명 등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1) 원고가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인지 여부 2) 비교되는 상표들이 혼동을 초래하는 유사성이 있는지 3) 해당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4) 상표권을 사용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침해 구제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 금지명령 등 다양한 가처분 결정이 가능하다.

##### ③ 형사 소송

민사적 구제 이외에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상표법이 아닌 인도 형법(Indian Penal Code)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절차가 경찰서에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사 개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

#### 3-9-2-5-3. 행정적 구제조치 안

##### (1) 상표정정/취소

‘등록된 상표의 출원인’ 또는 ‘피해를 입은자’는 상표 사무소 또는 고등법원에 상표의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등록부에 상표가 존재함에 따라 거래에 관한 이익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하며,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표와 관련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피해를 입은자’로서 적절한 사유를 들어 침해자가 이미 등록한 상표의 취소/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 (2) 세관의 단속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인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라 중앙 정부는 상표를 포함하여 저작권, 디자인 및 지리적표시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관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공고에 따르면 동 지식재산권 법령들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상품의 인도로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금지는 지식재산권 집행규칙(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에 명시된 조건 및 절차에 따르게 되며, 단속 기관은 세관이 된다.

\*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ppt-ipr-border-measures.pdf>

동 집행규칙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을 압수하거나 통관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위 권리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권리를 세관에 등록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물품이 세관에서 단속 대상이 되었을 때,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 또는 통관절차 중지 등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는 미리 등록하여 세관에서의 단속이 가능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3-9-2-6. 주요 사례

#### 3-9-2-6-1. 상표권 침해(인정) Starbucks v. Sardarbuksh\*

\* 참고: <https://blog.ipleaders.in/starbucks-v-sardarbuksh-all-you-need-to-know-about-the-trademark-dispute/> <https://intellectvidhya.com/famous-trademark-infringement-cases-in-india/>

##### < Starbucks v. Sardarbuksh >



##### (1) 사건배경

스타벅스(원고)는 2001년 인도에서 'STARBUCKS' 워드 마크와 해당 로고를 상표로 등록받았고, 사다르부크쉬(피고)는 2015년에 '사다르부크쉬 커피 앤 코'라는 이름으로 터번을 두른 지휘관의 얼굴에 측면에 원형의 검은색 띠로 둘러싸인 물결 모양의 선이 있는 형태의 로고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원고는 2017년에 피고에게 로고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단지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색상을 변경하고 운영을 하였으며, 피고와 원고는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에, 델리 고등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 테스트, 호감도 테스트 등 기만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제시했으며, 기만적 유사성은 고객이 보통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가정 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고객이 두 브랜드를 구별하면서 혼란을 느낀다면 기만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사다르부크쉬 커피 앤 코'에서 '사다르지-박쉬 커피 앤 코'로 상호를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명령은 피고의 개장하지 않은 총 20개 매장에 대해 집행되었으나, 법원은 이미 영업 중인 두 개 매장에 대해서는 "사다르박쉬 커피 앤 코"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하였다.

##### (3) 시사점

이 판결은 어떤 의미에서 상표 등록을 장려하는 판결이다. 왜냐하면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상표권자의 영업권을 방해하는 등 상표를 악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상표가 소비자가 해당 비즈니스를 구별하는 고유한 요소라는 점, 상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상표의 사용 기간 동안 획득하는 영업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3-9-2-6-2. 상표권 침해(불인정) Forest essential v. Forest Baby\*

\* 참고: <https://lawbeat.in/news-updates/trademark-infringement-delhi-high-court-denies-injunction-forest-essential-against-baby-forest>

## &lt; Forest essential v. Forest Baby &gt;



## (1) 사건 배경

원고(Forest Essentials)는 2000년 이후로 계속 인도 및 해외에서 150개 이상의 매장에서 'Forest Essentials'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연간 매출이 425Cr를 넘었고, 광고와 비즈니스 프로모션에 32Cr이상을 투자하였고, 제3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물품류에 대해 문자와 로고 모두에 'Forest Essentials'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Forest Essentials는 2006년부터 'Forest Essentials', 'Baby Essentials' 및 'Forest Essentials Baby'라는 표장으로 '엄마와 베이비 케어' 제품을 팔고 있었으며, 연 매출 약 15Cr에 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Baby Forest)를 상대로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표는 Forest Essentials이지 'Forest Essentials baby'가 아니며, 또한, 그들의 베이비 케어 제품의 포장에 쓰여진 'Baby'는 제품의 사용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Forest Essentials Baby' 등 표장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이 아니며, 주 표장인 'Forest Essentials'와 함께 단지 사용대상의 설명을 위해 사용된 표장으로 원고의 '베이비 케어' 제품은 'Forest Essentials'라는 표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Forest Essentials Baby'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또한, 현대적 흐름에서 상표의 혼동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독점성, 정밀한 소비자 테스트 및 글로벌 인지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유아용품의 경우 일반적인 구매자인 부모는 아기를 위한 제품을 고르는데 특별한 주의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혼동을 판단할 때에는 종합적인 맥락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3-9-3. 특허

인도의 특허 시스템은 특허법(Patents Act, 1970; Patents (Amendment) Act, 2005) 및 2005년 개정 특허법, 특허 규칙(Patents Rules, 2003; 2016 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인도 특허법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보호를 제공하는데, 특허보호란 발명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제조, 사용, 배포 또는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원 및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권을 소유한 특허권자는 특허법에 따라 강력하고 배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특허출원 등록의 중요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특허가 부여됨으로써 특허권자는 자신이 발명한 제품을 판매, 사용 제공하는 타인을 배제할 수 있게 되고 특허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경우,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특허권자는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권의 실시(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허여하여 실시료(로열티)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높일 수 있으므로 특허권 출원등록의 중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3-9-3-1. 정의 및 보호범위

특허는 특허권자의 발명을 자신의 동의 없이 제조, 사용, 판매, 수입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제한된 기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발명에 대한 법적 권리이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Patents, Office of CGPDTM, India, 2020 [https://ipindia.gov.in/writeraddata/Portal/Images/pdf/FinalFREQUENTLY\\_ASKED\\_QUESTIONS\\_-PATENT.pdf](https://ipindia.gov.in/writeraddata/Portal/Images/pdf/FinalFREQUENTLY_ASKED_QUESTIONS_-PATENT.pdf)

#### 3-9-3-2. 특허의 해외출원

인도에서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인도 영토 내에서만 그 특허권이 유효하게 된다. 특허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에서 출원을 하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도로 타 국가에서 조약 출원 또는 PCT 출원을 통하여(이하 등록절차에서 상술) 우선권 등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 startups\_IPRFacilitation\_22April2016.pdf (ipindia.gov.in)

#### 3-9-3-3. 요건

특허는 (a)해당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 또는 최초의 발명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b)해당발명의 진정한 발명자 또는 최초의 발명자로부터 해당출원을 할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c)사망직전에 해당출원을 할 권리가 있었던 자의 법정 대리인이 출원을 할 수 있다. 해당발명을 수입하거나 인도 외에서 전달 받은자는 '진정한 발명자 또는 최초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특허법상 특허 등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 (2)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이 있어야 한다.
-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4) 특허법 제3조 및 제4조에 언급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여야 하고, 신규성 및 비자명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특허법 제3조(발명이 아닌 것) 및 제4조(원자력에 관한 발명)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3-9-3-3-1. 신규성

신규성 또는 ‘새로운 발명’은 특허출원일 전에 어떠한 서류의 공개에 의해 예측되지 않았거나 인도 또는 다른 국가에 있어 사용되지 않은, 즉, 주체가 공용의 범위에 있지 않거나, 기술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발명 또는 기술을 말한다. 즉, 특허법에서의 신규성이란 발명이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3-9-3-3-2. 진보성

진보성은 현존하는 지식과 비교하여 기술적 진보나 경제적 의의 또는 두가지 모두를 가지는 지에 관한 발명의 특징이며, 그 발명이 비자명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발명의 비자명성임을 의미한다.

### 3-9-3-3-3.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이 특정 산업에서 고안될 수 있거나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발명은 실질적인 효용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산업에 적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9-3-3-4. 특허의 대상

특허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발명이 될 수 없어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 (1) 사소한 발명 또는 확립된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 (2) 해당 발명의 주된 또는 의도된 사용, 상업적 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에 심각한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3) 과학적 원리의 단순한 발견이나 추상적 이론의 공식화, 또는 자연에서 발생한 생명 물질이나 비생명물질의 발견
- (4) 알려진 물질의 이미 알려진 효능 또는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의 단순 발견,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특성 또는 용도의 단순한 발견, 위 알려진 과정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반응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기계 또는 장치
- (5)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혼합이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는 경우
- (6) 각 장치가 기존의 방법에 따라 서로 독립해서 기능하는 경우의 물질의 단순한 배치, 재배치 또는 복제
- (7) 농업 또는 원예에 관한 방법
- (8) 약용의, 외과적, 치유적, 진단, 예방적 방법 또는 기타 인간의 치료와 관련된 방법 또는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사한 치료법, 경제적 가치 또는 제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든 과정
- (9) 미생물을 제외한 동식물(종자, 품종, 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 동식물의 생산 또는 증식을 위한 생물학적 과정
- (10) 수학적 방법 또는 영업방식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알고리즘
- (11)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또는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을 포함한 미학적 창작물
- (12) 단순한 계획이나 규칙, 정신적 행위나 게임하는 방법
- (13) 정보의 표시
- (14) 집적회로의 배치
- (15) 사실상 전통적인 지식이거나 전통적으로 알려진 요소 또는 구성요소의 속성을 통합하거나 복제한 발명.

### 3-9-3-4. 출원 및 등록

#### 3-9-3-4-1.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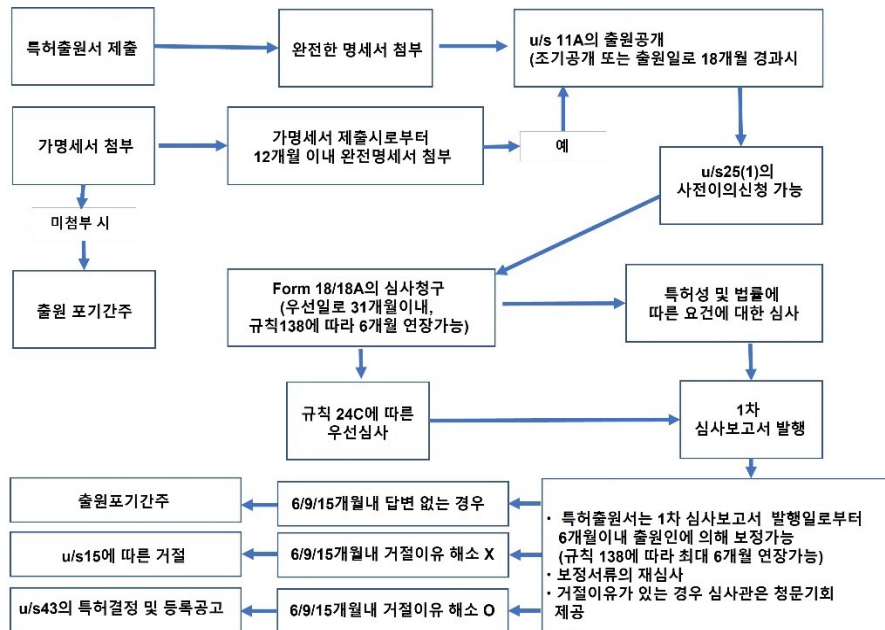
모든 부여된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된다.\*

\* “53. Term of patent.-(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term of every patent granted,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Patents (Amendment) Act, 2002, and the term of every patent which has not expired and has not ceased to have effect, on the date of such commencement, under this Act, shall be twenty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 3-9-3-4-2. 절차

다음은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낸 흐름도이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기존에는 통상 약 18-36개월까지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출원 등의 도입으로 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의 특허출원 절차>



자료원: [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FinalFREQUENTLY\\_ASKED\\_QUESTIONS\\_-PATENT.pdf](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FinalFREQUENTLY_ASKED_QUESTIONS_-PATENT.pdf)

출원 및 등록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특허 출원 및 등록은 특성상 절차가 매우 복잡하므로, 세부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CGPDTM에서 안내하는 매뉴얼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Manual\\_for\\_Patent\\_Office\\_Practice\\_and\\_Procedure\\_.pdf](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Manual_for_Patent_Office_Practice_and_Procedure_.pdf)



### (1) 인도 내 대리인 선정

인도에서 특허사무소(Patent Office)는 콜가타, 델리, 첸나이, 뭄바이 네 곳에서 가능하며, 특허 출원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관할권이 있는 특허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 출원과 관련된 관할은 출원자의 거주지, 주소 또는 사업장 또는 발명이 실제로 시작된 장소 또는 출원인이 인도에 사업장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 출원인이 제공한 인도 내 서비스 주소(송달주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도 내 사업장 또는 주소가 없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원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조사

동일한 발명이 이미 공시 또는 청구되었는지, 또는 기존에 존재하거나 만료된 특허의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 검색을 통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색도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 <https://iprsearch.ipindia.gov.in/publicsearch>

### (3) 출원

등록되는 것과 유사한 특허 또는 발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양식을 도면 및 기타 명세서와 함께 제출한다.

특허 출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가출원

가출원은 출원의 상세내용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에 가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명세서를 제출한 후에 12개월 이내에 완전명세서를 제출하면 가명세서의 발명에 대하여 해당 출원일을 인정해 준다. 다만, 가출원 이후 12개월 이내에 완전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명세서를 작성하면 발명자가 발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으며, 발명자는 해당 발명에 대한 시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완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12개월의 시간을 갖게 된다.

#### ② 일반 출원

조약 체결 국가에서 어떠한 우선순위도 주장되지 않거나 특허청에서 진행 중인 출원에 대한 언급 없이 특허청에 신청된 출원을 의미한다.

#### ③ 조약 출원

하나 이상의 협약국에 접수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을 의미한다. 출원인은 협약국에서 유사한 출원을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도 특허청에 신청해야 한다.

#### ④ PCT 국제 출원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PTctInfoApp?c=1001&contentID=info0111&catmenu=m08\\_01\\_01](https://www.kipo.go.kr/kpo/BoardApp/UPTctInfoApp?c=1001&contentID=info0111&catmenu=m08_01_01)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하여 인도에 신청된 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의하여 150개 국 이상에서 신청될 수 있는 국제 출원에 해당한다. 특허협력조약(PCT)은 150개 이상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 조약으로, PCT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조약에서 정한 일정한 공식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970년 개정 특허법 및 2016년 개정된 2003년 특허 규칙에 따라, PCT 국제 출원은 인도를 지칭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PCT 국내 단계 출원

인도를 지정하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출원자는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되는 날 중 이른 날까지 국내 단계 출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추가 특허

출원인은 특허가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특허를 획득한 기존 발명을 약간 수정 또는 개량하는 발명의 경우, 그 수정이 새로운 것에 해당한다면 추가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특허는 주 특허의 기간 중 추가특허에 대하여는 별도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추가 특허는 주 특허와 함께 만료된다.

⑦ 분할 출원

원출원으로부터 분할된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하는데, 출원의 청구범위가 두 개 이상의 발명을 포함할 때, 출원인은 스스로 또는 거절 이유의 충족 등의 이유로 출원을 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분할출원의 우선일은 원출원과 동일하다.

(4) 임시거절(절차적 이의제기)

특허청은 출원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임시 거절이유 통지(preliminary objection letter)를 발송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거절이유는 특허법의 발명의 정의, 명세서 작성 요건 및 청구와 관련되는 절차적인 경우가 많다.

(5) 공개

임시거절 이유가 충족되면, 출원은 공보에 공개되고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된 때 중 이른 때에 공중에 공개된다.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기술의 공개를 통하여 산업에서의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일반 공중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아울러 이러한 출원이 등록되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이에 대한 의견을 특허청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출원인은 이러한 공개일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

(6) 사전 이의신청

특허 공개일로부터 특허가 허여 되는 날 이전에 누구든지 특정 사유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심사 청구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출원인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스타트업 등을 위한 우선 심사의 청구도 가능하다. 인도의 특허 제도는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한 심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8) 1차 심사 보고서

특허 심사관은 1차 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위 보고서에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거절 이유가 제기될 수 있다.

(9) 1차 심사보고서에 대한 거절 사유 소명

출원인은 1차 심사보고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최대 6개월 연장 가능) 거절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야 한다. 보정된 문서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다른 거절이유가 나타나는 경우 심사관은 청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 거절 이유가 규정된 기간 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10) 특허 허여

출원인이 모든 거절 이유에 대하여 그 하자를 보완하는 경우 특허가 허여 된다.



#### (11) 사후 이의신청

특허 등록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9-3-5. 특허의 양도 및 이전

발명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을 사용하여 직접제품을 제조, 판매할 것인지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특정조건에 따라 특허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허가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본래의 특허권자로부터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되며, 특허권의 소유자에 의해서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허에서 특허권의 양도, 공유, 저당권, 라이선스 기타 권리의 설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가 그들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정하는 모든 조건을 기재한 서류형식으로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3-9-3-6. 침해 시 대응방안

특허법은 특허 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48조의 '특허권자의 권리'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 사용, 판매 청탁, 판매,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법특허의 경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사용, 판매 청탁, 판매,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3-9-3-6-1. 구제방법

###### ① 민사상 구제방법

특허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 금지 명령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와 더불어 침해를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압수, 수색, 폐기를 명령할 수도 있다.

###### ② 형사상 구제방법

특허법은 형사상 구제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참고 - 특허침해 물품 단속에 대한 제한>

인도 재무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집행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orted Goods) Enforcement Amendment Rules, 2018) 특허 침해 사건에 관한 세관의 단속을 제한하였다. 즉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관한 세관의 집행 등 조치 등은 여러 지식재산권 중 '특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세관은 특허 침해 관련 물품 등 통관 시에 검사 등 의무를 지지 않으며, 행정부의 직권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3-9-3-7. 주요사례

#### 3-9-3-7-1. 특허침해 영구 금지명령: Strix v. Maharaja

\* 참고: <https://www.foxmandal.in/News/maharaja-appliances-directed-to-pay-damages-for-infringing-patent-of-strix-ltd/>

##### < Strix v. Maharaja >



#### (1) 사건 배경

원고는(Strix)는 2005년 11월 11일에 인도에서 특허등록을 받았으며, 피고(maharaja)는 원고로부터 특허 받은 온도 조절 장치를 구매하였으나 나중에는 이러한 조절 장치가 설치된 주전자를 중국업체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원고는 2008년에 피고를 상대로 영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판매한 주전자 모델 중 하나가 소송 특허의 센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반소에서 특허가 1970년 특허법 조항에 따라 유효하지 않으며 무효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공한 제어 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른 공급업체를 찾아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전자가 '법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 받은' 중국 공급업체에서 수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특허무효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특허 발명의 필수적 특징을 숙지하고 “피고의 침해 제품에는 원고의 특허 제어 장치에 주장된 모든 특징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판결에서 “청구된 발명의 핵심을 살펴봐야 하며,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세부 사양에 얽매이거나 사소한 구두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법원은 피고의 제품이 소송 특허를 침해하는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판결하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및 원고의 소송 비용 등으로 81.4lakh 루피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 3-9-3-7-2. 막대한 손해배상금액 판결(April.2024): ERICSSON vs. Lava International Ltd.\*

\* 참고: <https://law.asia/patent-infringement-lawsuit-outcome/>

< ERICSSON vs. Lava International Ltd. >



#### (1) 사실관계

원고(Ericsson)는 피고(Lava International Ltd)가 자신의 표준 필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인도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고는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권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며, 원고는 FRAND 요율로 계산된 로열티를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적절히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델리 고등법원은 인도의 표준필수특허 로열티는 본 사건에서 칩셋 가격이 아니라 최종 장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INR 24억 4천만(미화 2,929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과 연 5%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인도에서 특허 또는 IP 관련 사건에서 지급된 가장 높은 손해 배상액이다. 로열티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인도 모바일 제조업체가 판매한 스마트폰의 순매출 가치의 1.05%로 책정되었으며, 원고는 소송 비용도 배상 받았다.

### 3-9-4. 디자인

인도에서의 산업디자인의 등록과 보호는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과 디자인 규칙(The Designs Rules, 2001)에 근거한다. 디자인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하며, 로카르노 분류에 따라 국제 분류 시스템의 도입을 제공한다. 등록된 디자인의 소유자는 제3자의 무단복제 및 모방으로부터 디자인을 보호하고 제품의 상업적 가치 및 시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디자인은 경쟁제품과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위조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디자인 즉, 제품의 모양과 느낌을 복제하여 시장 점유율을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도 시장에서 디자인 출원등록을 통하여 이러한 무단복제를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 3-9-4-1. 정의 및 보호범위

디자인이란 수공예적, 기계적·화학적인지 여부 또는 분리·결합의 여하,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또는 그 쌍방의 형태를 불문하고, 물품에 적용되는 선의 구도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이며, 제품에 관하여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Designs, Office of the CGPDTM,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http://www.ipindia.nic.in/faq-designs.htm>

다만 방식, 원리, 건축양식 또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기계 장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1958년 상표 및 상품법 제2조(1)(v)에 정의된 상표, 인도 형법(The Indian Penal Code, 1860) 제479조에 정의된 재산 표장 또는 저작권법 제2조(c)에 정의된 예술적 작품 또한 포함하지 않는다.

#### 3-9-4-2. 요건

새로운 디자인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의 물품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국가 또는 인도에서 공지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전에 알려진 디자인(주지디자인)이나 알려진 디자인들의 조합과 현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비방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된다. 다만, 저작권법상의 미술저작물은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9-4-3. 출원 및 등록

##### 3-9-4-3-1. 기간

디자인법 제11조에서 디자인의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존속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와 같은 최초의 기간은 10년의 기간이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한 경우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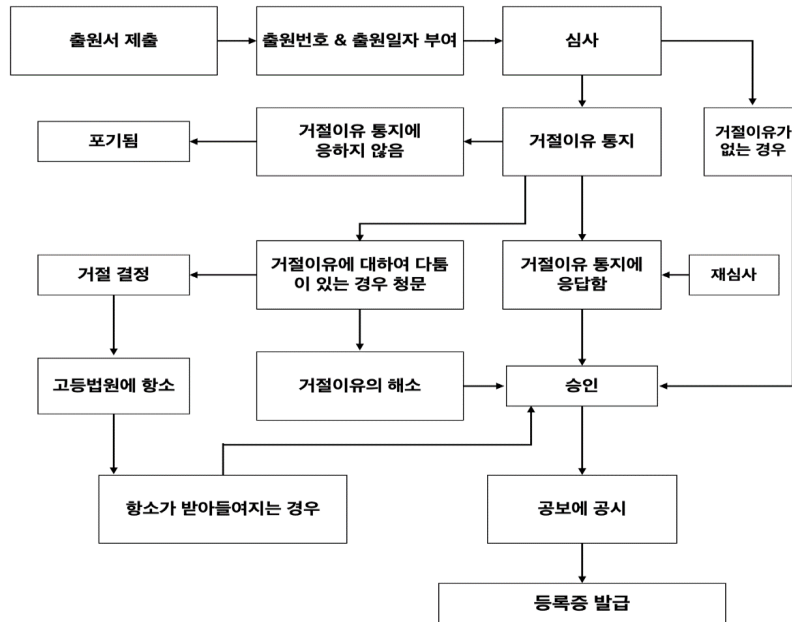




## 3-9-4-3-2. 절차

디자인의 등록절차는 다음 흐름도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자료원: <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images/pdf/design-registration.pdf>

구체적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인도 내 대리인 선정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표 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인도 내 대리인 선정이 필요하다. 디자인법 제43조에서는 특허법 제125조에서 정한 특허 대리인 등록부에 등록된 대리인들이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과정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인도 거주 대리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 (2) 조사

기존의 디자인 등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을 통하여 출원 및 등록 여부의 검색이 가능하다\*.

\* <https://search.ipindia.gov.in/designsearch>

## (3) 출원

출원서는 디자인 표지사항의 복사본 4부와 수수료와 함께 관할에 따라 콜카타, 델리, 뭄바이 및 첸나이에 위치한 특허사무소에 제출된다. 델리, 뭄바이, 첸나이에 제출된 출원은 추가적인 처리를 위하여 콜카타 특허사무소(본부)로 이관될 수 있다. 전자출원 역시 가능하다(\*1). 출원서 제출 후, 출원인에게 영수증이 발급되고 번호가 부여된다(\*2).

(\*1) <https://online.ipindia.gov.in/eDesign/UserRegistration/NewUser>

(\*2) [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POGuidelinesManuals/1\\_30\\_1\\_manual-designs-practice-and-procedure.pdf](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POGuidelinesManuals/1_30_1_manual-designs-practice-and-procedure.pdf)

#### (4)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출원 심사가 진행된다. 특허와 달리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출원 순서로 심사가 진행되며, 출원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출원인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출원인은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출원서를 제출한다. 그럼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추가 심사 보고서가 발행되거나 거절이유를 제거하기 위한 청문 기회가 제공된다. 거절이유가 충족되는 경우 또는 거절이유가 없을 시에는, 출원절차는 공보에 공시된 후에 승인을 위해 진행된다.

#### (5) 승인 또는 거절

디자인 출원은 모든 공식 요건이 갖추어 지고 거절이유가 충족된 경우 승인되며, 하자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된다. 또한 거절이유의 통지가 있고 출원인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6) 공개

등록된 디자인은 공개되고 공보에 공개된다.

#### (7) 등록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승인되고 등록증이 부여된다.

#### (8) 등록 취소

이해관계인은 등록 후 언제든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 디자인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신청서에는 신청인의 해당 디자인에 대한 이해관계와 사실관계의 상세 내용과 그 근거에 관한 사항, 구하는 구제방안이 기재되어야 한다. 쌍방은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이 정해지면, 청문 후 디자인 등록을 취소할 것인지 취소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디자인법에 따른 청장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3-9-4-4. 침해 시 대응방안

#### 3-9-4-4-1. 침해행위(불법복제 행위)

디자인의 불법복제(Piracy)란 등록된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디자인이 등록된 품목의 클래스에 속하는 제품에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적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디자인법은 제22조에서 아래의 행위를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1)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디자인권자의 허가 없이 판매를 목적으로 동 디자인 또는 모방디자인을 적용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행위
- (2) 디자인권자의 허가 없이 판매를 목적으로 동 디자인 또는 모방디자인을 적용 또는 적용하고자 동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
- (3) 등록된 디자인 또는 모방 디자인을 디자인권자의 허가 없이 제품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제품을 판매를 위하여 공개하거나 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 3-9-4-4-2. 구제방법

##### (1) 경고장 발송

디자인권 불법복제의 경우에도,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Cease and Desist Notice (C&D)로 불리는 경고장을 침해가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침해 구제 1단계 절차로서 가장 신속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며, 만약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계속한다면, 다음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민사상 구제방법

디자인법 제22조는 또한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잠정적 구제명령, 손해배상, 기타 침해품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불법복제 행위를 한 자가 다음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채무로 징수할 수 있는 25,000 루피(INR)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등록디자인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 또는 디자인 소유자가 위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그 위반의 반복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정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금지명령에 따라 금지할 수도 있다.

##### (3) 형사상 구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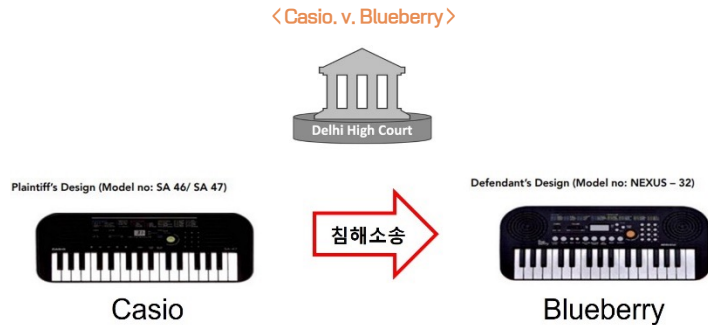
디자인법은 형사상 구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4) 세관의 단속

상표와 마찬가지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라 중앙 정부는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세부 사항은 1-2-5-3. 상표법, 침해시 대응방안의 '세관의 단속'내용과 같다.

### 3-9-4-5. 주요사례

#### 3-9-4-5-1.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 시기: Casio. v. Blueberry



##### (1) 사건 배경

원고(casio)는 악기 키보드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유명한 기업이며, 원고의 키보드 중 하나는 2009년 9월에 “전자 키보드”로 등록(등록번호 224547)되어 있었다. 이 디자인은 키보드의 각도 별 뷰에서의 형태와 구성에 신규성이 있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Blueberry)가 “Nexus32” 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하는 키보드에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 및 그 대리인들이 대상 디자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키보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피고의 Nexus32 키보드가 원고의 키보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는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디자인이 신규성이 부족하며, 시장에 여러 유사한 키보드 디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법원에 유사한 키보드 디자인이 존재한다는 입증을 위해 여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유사한 키보드 목록을 제출하였다.

#####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것이라면 디자인법 19조 제 1항 (b), (c)에 의거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공개는 디자인이 등록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송 대상 디자인의 신규성 또는 독창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일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2009년 이전 자료는 없어 원고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원고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임시 금지명령처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



### 3-9-5. 저작권

인도에서 저작권은 저작권법(The Copyrights Act, 1957, 2012년 개정) 및 저작권 규칙(The Copyright Rules, 2013)에 따라 저작물의 무단 사용 또는 복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인도에서 저작권 등록, 보호 등과 관련된 지원은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가 담당하고 있다.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극작가, 음악가, 건축가, 영화, 녹음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작자는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지식재산과 달리, 저작권의 취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형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저작권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copyright) 및 이에 기재된 항목들은 저작권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일단 유리한 증거(prima facie evidence,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단 충분하다고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저작물이 등록되면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들이 저작권 등록부에 공개된다.

대중은 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권 소유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무고한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저작권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저작권의 불법복제로 입을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일정 수준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도 시장 진출 시 저작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9-5-1. 정의 및 보호범위

저작권이란 문학, 극, 음악, 예술 작품의 창작자와 영화 제작자, 음향 기록물의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로, 복제권, 공중송신권, 작품의 각색 및 번역권 등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저자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창의성을 보호/보상하며,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극작가, 음악가, 건축가 및 음향 기록물 제작자, 영화 제작자 등의 노력과 작품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Copyright Office, Government of India <http://copyright.gov.in/frmfaq.aspx>

#### 3-9-5-2. 저작자의 특별한 권리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자의 특별한 권리(Author's special rights)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도 저작자에게 남아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자는 동 권리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이 왜곡되는 등으로 자신의 명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9-5-3.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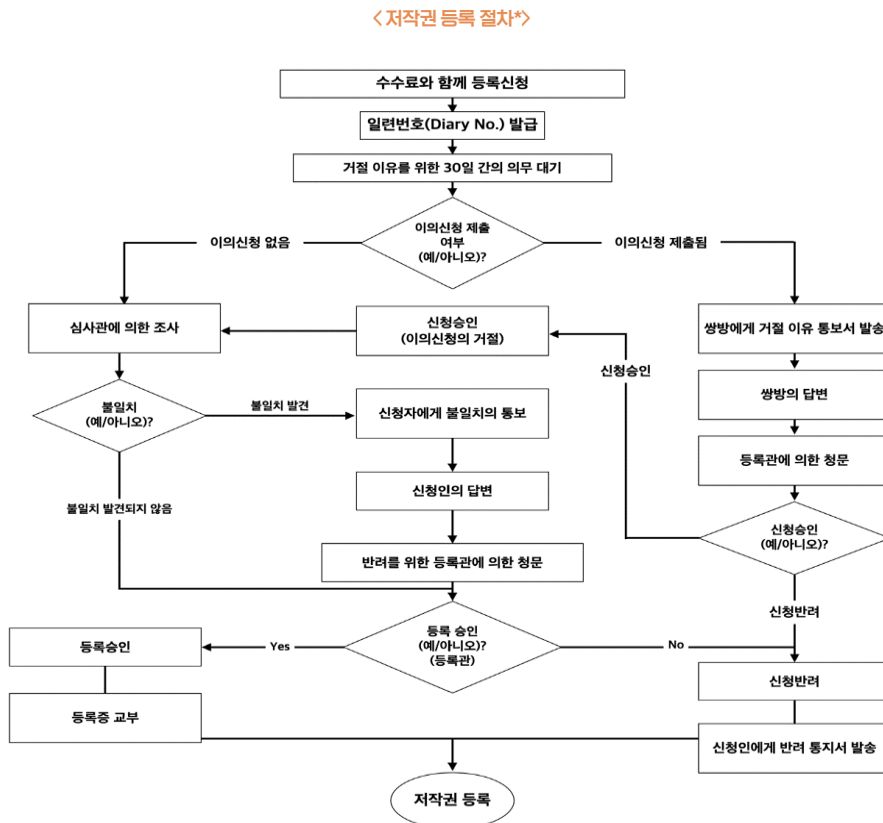
#### 3-9-5-3-1. 기간

저작물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저작권법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 사진, 영화, 사운드,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예술 작품 등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사후 6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자가 무명 또는 가명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표 후 60년 동안 보호받으며, 동 기간 만료 전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진 경우에는 저작자 사망 후 60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저작자가 2인 이상인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시부터 6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발행 후 60년 간 보호된다.

#### 3-9-5-3-2. 절차

저작권 등록 절차는 다음 흐름도에 나타나 있다.



자료원: <https://copyright.gov.in/frmWorkflow.aspx>



#### (1) 인도 내 대리인 선정

상표 출원 등과 마찬가지로 인도 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은 인도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접수

신청서는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에 직접 또는 저작권 등록 기관 웹 사이트의 전자 출원(e-filing) 모드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필요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은 등록이 접수되면 일련번호를 발급받게 되며, 이때부터 이의신청 및 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다른 저작물의 등록을 위해서는 각 다른 신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3) 심사

등록관은 등록번호(Diary No.)를 발급한다. 이후 거절 이유를 받기까지 30일간의 의무적 대기기간이 있다. 저작권 청구에 반대되는 이의신청 있을 경우, 1개월이 더 소요되며 저작권 등록관은 양 측 당사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준다. 소유권의 결정이 있은 후이거나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신청 건은 조사(scrutiny)로 나아가게 된다.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조사(scrutiny) 단계에서 신청에 문제되는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 (4) 등록

추가 문서 제출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관이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청자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기재사항의 사본을 교부 받으면 등록이 완료된다.

### 3-9-5-4. 저작권의 양도 및 이전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의 소유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이전할 때 발생한다.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체 기간 또는 일부 기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저작물의 잠재적 저작권 소유자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자는 허락의 범위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3-9-5-5. 침해 시 대응방안

#### 3-9-5-5-1. 침해행위

저작권의 침해는 일반적으로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51조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등록관(Registrar of Copyrights)에 의해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여된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 당국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된 배타적권리에 대한 행사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익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3-9-5-5-2. 구제방법

인도에서 저작권 침해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조차 없는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쉽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보호에 대한 기대가 특히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 법제 및 재판부 또한 저작물을 권리의 대상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므로, 다음 절차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를 기대하여 볼 수 있겠다.

#### (1) 경고장 발송

다른 지식재산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제조치 이전에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 (2) 민사상 구제방법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구제방법으로 다음의 절차가 있다.

##### ① 잠정적 금지명령

침해에 대한 입증에 이루어지고, 구제에 대한 이익의 균형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있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잠정적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 ② 금전 손해배상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기준으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금전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 ③ 조사·압수 명령(Anton Piller order)

동 명령으로서 저작권 침해 물품의 파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원고측 변호인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 침해 물품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행위와 관련된 공급자 및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압류 명령(Mareva injunction)

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법원의 최종 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침해자가 법원 판결의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압류 명령이 있을 수 있다.

##### ⑤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법원은 불법 웹사이트의 미러링 사이트에 등에 대하여 다시 금지 명령을 받지 않고도 기존 금지명령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동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자의 거주지 또는 침해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제기 기한은 침해일로부터 3년이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가 반복적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마지막 침해일로부터 3년의 제한 기간이 개시된다.

#### (3) 형사상 구제방법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형사법적인 수색 및 압류 또한 가능하다.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동법 제63조), 최소 5만 루피에서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2회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누범은 제63A조에 따라 최소 1년에서 3년까지의 금고 또는 10만 루피에서 20만 루피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제63B조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한 자 등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최소 7일에서 3년까지의 금고 또는 5만 루피에서 20만 루피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4) 세관의 단속

상표 및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라 중앙 정부는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며,\* 지식재산권 집행규칙에 따라





집행된다. 세부 사항은 1-2-5-3. 상표법, 침해시 대응방안의 '세관의 단속'내용과 같다.

\*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ppt-ipr-border-measures.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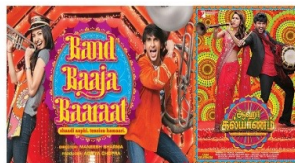
저작권법은 제53조에서 세관의 단속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권리자 또는 대리인은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세관에 침해 물품을 금지물품으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물품은 압수 및 몰수될 수 있다.

### 3-9-5-6. 주요사례

#### 3-9-5-6-1. 영화 저작권 침해 사례: Yash Raj Films VS. Sri Sai Ganesh Productions

< Yash Raj Films VS. Sri Sai Ganesh Productions >



침해소송



#### (1) 사실 관계

Yash Raj Films(YRF)는 이 사건의 원고이며, 2010년 12월 10일 인도 및 다른 국가에서 개봉한 볼리우드 영화 **Band Baja Baarat**의 제작사이다. 원고는 이 영화의 줄거리, 대사, 주제, 콘셉트, 플롯, 대본, 음악, 가사 및 캐릭터 스케치를 포함한 여러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1년 12월경, 원고는 피고 중 하나인 Sri Sai Ganesh Productions가 이 영화를 텔루구어로 리메이크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두 번에 걸쳐 피고에게 중지 및 중단 통지서를 보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 후 피고는 2013년 2월 **Jabardasth**라는 제목의 영화를 개봉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영화의 플롯, 주제, 캐릭터 스케치를 그대로 모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화의 플롯 전개 방식, 주제에 대한 처리 및 표현이 피고의 영화에서 노골적으로 복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영화와 피고의 영화가 주제, 콘셉트, 플롯, 캐릭터 스케치, 줄거리, 대본, 형식 및 표현 등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고 제출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영화를 본 관객들이 원고의 영화를 본 경우, 피고의 영화가 원고의 영화를 복제한 것이라는 명백한 인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영화가 하이데라바드에서 기획되고, 작성되고, 감독되었으며, 뉴델리에서는 영화 제작의 어떠한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4) 판결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1) 시네마토그래프 영화와 그 구성 요소에 저작권이 존재하는가? 2) 저작권법 제14조에서 ‘영화의 복제를 만듦’라는 표현은 단지 영화의 물리적 복제를 의미하는가? 3) 델리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있는가? 로 보았다.

법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시네마토그래프 영화는 그 구성 요소들 만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구성 요소”란 영화 제작에 포함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본과 대사는 문학 작품에 해당하며, 가사는 음악 작품에, 완성된 노래는 음반에, 포스터와 광고는 예술 작품에 해당한다. 각 구성 요소는 저작권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시네마토그래프 영화는 전체로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영화의 복제를 만듦”라는 표현은 단지 영화의 물리적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네마토그래프 영화의 아이디어, 표현 및 기타 무형적인 요소를 복제하여 다른 영화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의 영화가 델리에서 영화 제작의 어떤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델리에서도 개봉되었기 때문에 델리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델리 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 3-9-6. 유의사항

#### 3-9-6-1. 진출 시 유의할 점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의 사업 개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인도 시장에 진출 또는 투자하기 전에 유의할 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3-9-6-1-1. 시장 조사 및 분석

시장조사는 라이선싱, 기술이전 및 소송과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장조사를 통하여 주요 경쟁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경쟁자, 특정 기술이 적용되는 시장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시장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시장조사에는 고객, 제품, 경쟁업체 및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며, 침해의 위험을 파악 및 시장의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 광고 및 재무계획의 개발 및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

\* <https://www.origiin.com/market-research/>

##### 3-9-6-1-2. 합작투자자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일회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다른 회사에 속한 기술 또는 지식재산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협업에는 합작투자의 방법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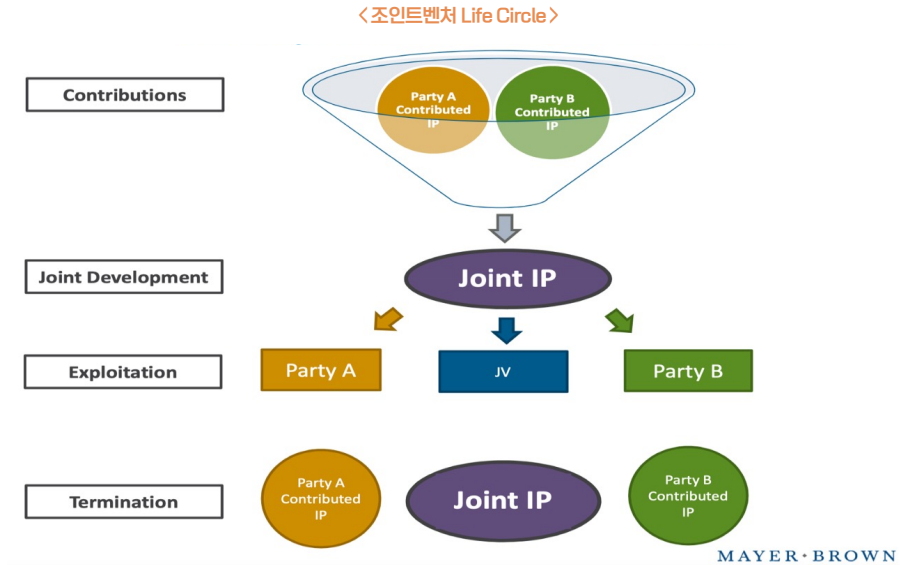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다수의 투자자가 특정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권 또는 자산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이다. 공동소유의 대상은 무형고정자산인 지식재산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영업권 등) 뿐만 아니라 주식 자본·채무·경영노하우·기술노하우·유형고정자산(기계·설비·투자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합작투자의 예로, 한 회사는 엔지니어링의 노하우를, 다른 회사는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인도 진출 시 인도 기업과 JV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계약서 조항이 미비 되어 우리의 기술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점에 주의를 요한다.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분쟁해결 등과 관련하여 주 계약 체결 전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게 된다. 협상 중 일정한 정보가 공유되며, 일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는 비밀유지약정 (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한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당사자는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사 및 가치평가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으며, 기타 수행계획의 작성이 필요하다.

합작투자의 단계는 다음 4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 (1) 계약 체결 이전(법적 문서 서명 전)
- (2) 계약 (계약서에 서명)
- (3) 공동 개발(계약조건에 따른 실행 의무)
- (4) 종료 (계약의무 종료)



자료원: <https://www.mayerbrown.com/-/media/files/perspectives-events/events/2017/01/protecting-intellectual-property-rights-in-joint-v/files/presentation-slides/fileattachment/170125-chi-webinar-joint-ventures-ip-slides.pdf>

합작투자 계약의 시작 단계부터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다음의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합작투자 계약에 간단하게 ‘각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도의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쪽 당사자가 중요한 발명품 또는 영업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후 제3자가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하게 해당 자산을 설명 및 명시하여야 한다.

모든 합작투자 계약에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발명 등을 설명하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중 또는 완료 후 제공되는 이러한 보고서는 수치를 기록한 표와 실험 목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의 발견 내용 설명 및 날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향후 발명의 기록 제공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명확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정한 방식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합작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인도 시장에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다만, 합작투자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대한 시장성 및 법적 쟁점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권리가 충분히 합작투자 계약 및 법인 설립 시 정관 및 주주간 계약서 등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3-9-6-1-3. 실사(Due-Diligence)

지식재산권은 영업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인수합병, 포트폴리오 투자와 같은 전략적 조치를 취하기 전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실사는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 평가 뿐만 아니라 경쟁 및 대체 상품, 경쟁 업체의 포트폴리오, 시장의 요구, 가격 등의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고유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게 된다.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을 고려하는 기업 및 기관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의 이전과 관련된 가치 및 위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련된 회사는 소송과정에서 각 단계에 따른 위험 및 예상되는 해당 수익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3-9-6-2. 지식재산 가치평가(Valuation)

\* 참고: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21 특허청, 발명진흥원)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지식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을 담보로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평가 지표로는 현재 구상하는 제품의 대상IP기술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술성 분석, 평가대상특허의 권리 범위 및 권리 안정성의 분석을 통해 특허 문서의 법적 강도와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권리성 분석, IP를 적용한 제품의 사업화를 전제로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매출의 수준을 파악하는 시장성 분석, 대상 IP 적용제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매출전망 등 사업전망 전반에 관하여 분석하는 사업성 분석 등이 있다.

사업성 분석은 대상 IP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및 시장성 분석에 기반하여 IP 사업화에 의한 수익창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는 1)IP비즈니스를 위한 IP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가격결정, 2)IP기반 대출 등 IP금융을 위한 IP담보금액 산출, 3) IP현물출자를 위한 IP가치산정, 4) IP 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5) 기타 IP를 독립된 재산권으로 획득, 활용, 처분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 3-10 CSR 및 ESG 경영

### 3-10-1. CSR 관련 준수사항

#### 3-10-1-1. 인도의CSR이란?

인도는 2013년 개정된 회사법(Companies Act, 2013)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 순이익, 또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 CSR 활동에 연간 수익의 2% 이상을 지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해당 규정에 따른 CSR 활동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세무나 노무와 관련된 이슈들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틀 안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적응하기에 보다 용이하다.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나 노동 기준법은 인도와 기본적인 구조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근로자 보호나 세무 신고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반면, CSR 제도는 한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CSR과 관련된 이슈 중 하나는 기업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기부금 요구이다. 한국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의 미등록 단체나 종교시설 등이 CSR 제도를 빌미로 기부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요구는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CSR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이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적절한 CSR 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CSR 지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기업은 추가적인 세무 비용이나 법적 부담을 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인도 회사법에 따른 CSR 지출은 반드시 정부가 인정하는 분야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분야는 주로 교육, 보건, 환경보호, 여성 권익 보호 등 공공 이익과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단순히 기부금 형식으로 미등록 단체나 특정 종교시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CSR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CSR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 지출한 기부금이 적절한 CSR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절한 CSR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 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실무자들은 인도의 CSR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CSR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CSR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잘못 이행할 경우, 기업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현지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CSR 활동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도에서 CSR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동시에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CSR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3-10-1-2. 인도 CSR규정의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

인도의 기업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규정은 2013년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제135조에 의해 처음으로 법적인 의무로 도입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CSR 활동을 수행하고 매년 순이익의 2% 이상을 지출해야 하며, CSR 활동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Compan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Rules, 2014에 명시되어 있다. CSR로 인정되는 활동은 회사법 부칙 7(Schedule 7)에 정의된 교육, 보건, 환경보호 등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들로 한정된다.

CSR 의무 제재조치의 변화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2014-2016)에서는 CSR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2단계(2016-2018)에는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통지와 특별 기구의 조직 및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가 개시되었다. 3단계(2019-2024)에 들어서는 CSR 의무 위반 시 회사 및 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CSR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경우 미지출 비용을 중앙정부 펀드에 강제 납입하거나 특별계좌로 이월해야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또한 CSR 활동을 집행하는 NGO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CSR 시행 기관과 기업의 내부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기업들에게 CSR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었다.

### 3-10-1-3. 회사법상 CSR 적용요건

인도에서 모든 기업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법 제135조는 CSR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순자산이 50억 루피 이상, 총매출이 100억 루피 이상, 또는 순이익이 5,000만 루피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CSR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 요건은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인도에서 CSR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인도 회사법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인도에 지사나 프로젝트 오피스를 두고 있는 외국 기업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기업들 또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인도 지사를 기준으로 CSR 의무 요건을 판단하며, 외국 본사에 CSR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 내 지사나 프로젝트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기업의 CSR 의무 이행과 관련된 재무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은 회사법 제198조에 따른 손익 계산을 통해 CSR 의무 지출액을 산정해야 한다. 손익 계산 시, CSR 관련 의무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는 포함되는 이익과 불포함 이익이 나뉜다. 포함되는 이익으로는 정부 보조금 등이 있으며, 불포함 이익으로는 주식 매각 프리미엄/이익, 자본의 이익, 부동산/고정 자산 매각 이익 등이 있다. 또한, 허용 공제 항목으로는 평상시 근무 외 수입, 보너스, 특별 세금, 대출 이자 등이 포함되며, 허용되지 않는 공제 항목으로는 자본의 손실, 자발적으로 지불한 손해 배상 등이 있는 등 세법상의 이익 산정 방식과 달리 회사법 제198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3-10-1-4. CSR강제업무 및 제재 조치

회사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주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CSR 정책 집행 및 공시 의무이며, 두 번째는 순이익의 2%를 CSR 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지출 의무이다.

CSR 정책 집행 및 공시 의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이사로 구성된 CSR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CSR 위원회는 CSR 정책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그에 따른 CSR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하며, 정책의 집행 과정을 상시 감독한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여 CSR 정책을 승인하고,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기업의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또한 이사회는 CSR 정책이 회사 내에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보장한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따르면, 직전 회계연도에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 총매출 100억 루피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 루피 이상인 기업은 사회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된 CSR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주식회사처럼 사회이사 임명이 필요 없는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로도 CSR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인도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Private Limited 비공개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3인이 아닌 2인 이상의 이사로도 CSR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사 내에서 기존의 이사들만으로도 CSR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CSR 위원회는 CSR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필요한 비용을 권고하며 CSR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CSR 시행령 제2항은 회사법 제135조에 따라 구성된 CSR 위원회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CSR 정책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시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국가에서도 입법례가 있으나, 지출 의무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인도 회사법제의 컴플라이언스가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크다. CSR 지출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제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고 의무 외에도 강제 납입 규정이 따라온다. 특히 CSR 지출 의무 불이행 시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만약 기업이 CSR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특정 중앙정부 펀드나 기타 지정된 펀드에 반드시 출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CSR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불이행 금액을 지정된 펀드에 납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PM 국민 구호 펀드, 기타 중앙정부 CSR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만약 CSR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기업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Unsp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count라는 별도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금액은 향후 3년간 기업이 CSR 정책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이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면 지정된 정부 펀드로 강제 출자된다. 이러한 규정은 CSR 지출의 강제성을 높이는 인도 법률의 독특한 부분이다. 즉, CSR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보고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펀드로 출자를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압박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CSR 공시의무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으로, 기업이 CSR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CSR 활동이 법적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에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제 제도가 2014년에 도입된 이후, 초기 몇 년 동안은 정부가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정부는 CSR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규정을 도입했다. 현재 인도의 CSR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제도는 크게 이사회 및 CSR 위원회의 공시 의무 위반과 CSR 지출 의무 위반으로 나뉜다.

이사회 및 CSR 위원회의 CSR 정책 집행 및 공시 의무 위반 시:

- 기업에 3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임원에게는 5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전의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어 금전적 제재로 변경되었다.

CSR 지출 의무 위반 시:

- 기업이 CSR 지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출해야 할 금액의 2배 또는 1,000만 루피 중 더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임원에게는 기업 벌금의 10% 또는 20만 루피 중 더 낮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원에 대한 구금 처벌은 삭제되었다.





이처럼 인도의 CSR 제도는 2016년 이후 벌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인도의 독특한 법적 환경에서 기업들이 CSR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3-10-2. CSR 프로그램 운영관리

### 3-10-2-1. CSR운영 주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은 그 수행 주체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CSR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특정 법적 형태를 갖춘 조직이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이사회가 반드시 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CSR 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CSR 사업은 다음과 같은 주체를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 (1) 해당 기업이 설립한 비영리 주식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업이 직접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통해 CSR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은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어야 한다.

#### (2) 중앙정부 또는 주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주식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중앙정부 또는 주 정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도 CSR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관리하는 법인이므로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CSR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3) 의회 또는 주 의회에 의해 설립된 법인

의회나 주 의회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CSR 사업의 적법한 수행 주체로 인정되며, 이러한 법인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4) 최소 3년 이상 유사 CSR 사업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 주식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최소 3년간 유사한 CSR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도 CSR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며,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CSR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CSR 사업 수행을 위한 주체는 비영리 법인의 형태로 제한되며, 기업은 반드시 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을 통해 CSR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CSR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공익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만 CSR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3-10-2-2. CSR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CSR 시행령 제7항은 기업의 CSR 지출이 CSR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국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CSR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해당 지출 범위에 속하나, 회사법 부칙 제7조에 명시된 법적 범위 밖의 활동에 대한 비용 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CSR 활동이 회사법에 규정된 특정한 사회적 기여 활동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그 외의 활동에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CSR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SCHEDULE VII (Section 135), Companies Act. Activities which may be included by companies in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ies Activities relating to:- 1 [(i) eradicating hunger, poverty and malnutrition, 2[promoting health care including preventive health] and sanitation 3[including contribution to the Swatch Bharat Kosh set-up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of sanitation] and making available safe drinking water: (ii) promoting education, including special education and employment enhancing vocation skills especially among children, women, elderly, and the differently abled and



livelihood enhancement projects: (ii) promoting gender equality, empowering women, setting up homes and hostels for women and orphans; setting up old age homes, day care centres and such other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and measures for reducing inequalities faced by socially and economically backward groups; (iv)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cological balance, protection of flora and fauna, animal welfare, agroforestry,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maintaining quality of soil, air and water 4 [including contribution to the Clean Ganga Fund set-up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rejuvenation of river Ganga]; (v) protection of national heritage, art and culture including restoration of buildings and sites of historical importance and works of art; setting up public libraries;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arts and handicrafts; (vi) measures for the benefit of armed forces veterans, war widows and their dependents; (vii) training to promote rural sports, nationally recognised sports, paralympic sports and Olympic sports; (viii) contribution to the Prime Minister's National Relief Fund 5[or Prime Minister's Citizen Assistance and Relief in Emergency Situations Fund (PM CARES Fund)] or any other fund set up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relief and welfare of the Scheduled Castes, the Scheduled Tribes, other backward classes, minorities and women; 6[(ix) (a) Contribution to incubators 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ield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edicine,

CSR의 정의는 회사법 부칙 제7조에 명시된 활동으로서, (i) 해당 조항에 정의된 '영역 및 대상'과 관련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나 (ii) 그 조항에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나 활동을 이사회 승인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CSR 지출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인도 정부는 기업들이 무분별한 CSR 활동 대신,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CSR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인도 회사법 (Companies Act, 2013) 상 CSR(기업의 Z책임) 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 및 환경에 기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상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1) 기아 및 빈곤 퇴치: 기아, 빈곤, 영양실조 퇴치와 관련된 예방적 건강 관리, 공중위생 증진 활동
- (2) 교육 지원: 아동, 여성, 노인 및 장애인 대상의 교육 및 생계 개선 프로젝트
- (3) 양성평등 및 여성 권리 증진: 여성 권리 증진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주택 및 복지 지원
- (4)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 보장: 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공기 및 수질 오염 방지 활동
- (5) 문화유산 및 예술 보호: 국가 유산, 공공 도서관, 예술품 보호 및 복원
- (6) 참전용사 및 가족 복지: 전쟁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의 복지 지원
- (7) 스포츠 지원: 스포츠 경기, 특히 국가 스포츠나 올림픽 지원
- (8) 구제기금 기여: 재해 및 위기에 대응하는 구제기금 기여
- (9) 기술 및 의료 프로젝트 R&D: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개발 및 의료 연구 프로젝트 참여
- (10) 농촌 개발: 농촌 지역 개발 프로젝트
- (11) 빈민 지역 개발: 빈민 지역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 (12) 재난 관리: 구조 및 재해 복구 활동

이러한 활동들은 법적으로 기업이 CSR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사회적, 환경적 기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다음의 활동들은 기업이 CSR로 지출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1)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이는 CSR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 복지는 CSR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간주된다.
- (2) 마라톤, 시상, 자선 기부, 광고, TV 프로그램 후원 등의 일회성 행사: 이러한 활동들은 CSR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여보다는 단기적 홍보에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이다.
- (3) 법률 준수 비용: 노동법 또는 기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CSR로 간주되지 않는다.
- (4) 직간접적 정당 후원: 정치적 활동 또는 정당에 대한 후원은 CSR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5) 현물출자 등 자사 제품 관련 활동: 현물 기부 등 자사의 상업적 활동과 연관된 CSR은 인정되지 않는다.
- (6) 인도 국외에서의 활동: 인도 외 지역에서 수행되는 CSR 활동은 CSR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기업이 CSR 활동을 통해 사회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CSR 활동은 단순한 직원 복지나 일회성 후원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장기적인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CSR 활동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인도의 독특한 법적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 3-10-2-3. CSR대상 항목으로 법률상 지정된 펀드 및 기관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상 CSR로 인정되는 기부처 또는 펀드에는 다음과 같은 정부 지정 펀드가 포함된다:

- (1) Swachh Bharat Kosh: 공중위생 증진과 관련된 기금으로, 인도의 대규모 위생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 (2) Clean Ganga Fund: 갠지스강의 정화와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펀드로,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 (3) Prime Minister's National Relief Fund (PMNRF): 재난 구호 및 재해 복구를 위한 국가 구제기금으로,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용된다.
- (4) National Sports Fund: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스포츠 훈련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 (5) National/State level disaster relief fund: 국가 및 주 차원의 재난 구호를 위한 기금.
- (6) 이 외에도 정부가 지정한 기타 사회적, 공공적 목적을 위한 펀드가 CSR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펀드에 기부함으로써 CSR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3-10-2-4. CSR지출액 세무 혜택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출은 인도에서 2013년 회사법(Companies Act, 2013)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법적 의무로 도입되었다. 이 회사법 제135조는 일정 순이익, 매출, 또는 순자산 가진 기업들이 매년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CSR 지출은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로 수행되지만, 세법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공제 혜택이 제한된다.

우선, 소득세법 제37조(1)는 기업이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만, CSR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14년 재정법에 삽입된 규정은 회사법 제135조에 따라 이루어진 CSR 활동에 대한 지출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CSR 활동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지출이 세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모든 CSR 지출이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경우에 CSR 활동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80G는 정부가 승인한 특정 기금이나 자선 기관에 기부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한다. 따라서 CSR 지출이 총리 국가 구호 기금(PM National Relief Fund), PM CARES 기금, 국가 방위 기금 등 정부가 승인한 자선 기금에 사용된다면, 이 기부 금액은 기업이 최대 50% 또는 1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공익성을 갖춘 기금에 기부할 경우, 기업이 세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35조는 과학 연구나 기술 개발을 위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제공한다. CSR 활동이 과학 연구를 촉진하거나, 승인된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가중 공제(100% 이상의 공제)가 가능하다. 과학 연구와 같은 분야에 지출하는 기업들은 이 조항을 활용해 CSR 지출을 세금 공제로 연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80GGA는 비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진 농촌 개발이나 과학 연구 관련 CSR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한다. 이 규정은 농촌 개발 프로젝트 또는 과학 연구에 투자할 때 기업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CSR 지출은 2013년 회사법에 따라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37조에서는 이 지출을 공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80G, 제35조, 제80GGA와 같은 다른 조항에서는 특정 유형의 CSR 활동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무상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일지라도 회사법 상 CSR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의 정부 부처 간의 공조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기업들이 CSR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CSR 활동을 정의하는 법률은 회사법에 근거하며, 이는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의 관할에 속한다. 반면에 세무 관련 규정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소관이므로, 두 부처 간의 정책적 일관성이 항상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회사법과 세법을 모두 검토하여 양쪽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나 CSR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상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회사법 상 CSR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문제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소득세법 제37조(1) 및 제35조에 따른 CSR 지출의 허용 가능성 혼란이 있었고, 관련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1) HCL Technologies Ltd. 대 ACIT (2023): HCL Technologies는 소득세법 제37조(1)에 따라 청구한 특정 비용이 사업 목적을 위한 지출임을 주장했다. 소득세 항소 재판소(ITAT)는 HCL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 (2)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대 DCIT (2022): TCS는 직원 복지와 관련된 비용의 공제 가능성을 주장했고, ITAT는 직원 복지 및 기술 개발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TCS의 입장을 지지했다.
- (3) ICICI 은행 Ltd. 대 CIT (2021): 마케팅 비용의 공제 가능성에 대해 ITAT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마케팅 비용은 소득세법 제37조(1)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4) Maruti Suzuki India Ltd. 대 CIT (2020): 연구 개발 비용과 관련하여, 소득세 항소 재판소는 제35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 개발 비용은 공제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례들은 사업 목적을 위한 비용이 명확히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CSR 지출은 회사법 상 의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37조(1)에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인도 회사법 제135조 및 별표7에 따른 CSR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모든 지정기금과 소득세법 제80G조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비율을 정리한 표이다.

CSR 활동/기금	회사법 제135조에 따른 CSR 인정 여부	소득세법 제80G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80G에 따른 공제 비율
Prime Minister's National Relief Fund (PMNRF)	인정됨	공제 가능	100%
PM CARES Fund	인정됨	공제 가능	100%
Swachh Bharat Kosh (위생 축진을 위한 중앙정부 기금)	인정됨	공제 가능	100%
Clean Ganga Fund (갠지스강 보전 및 정화를 위한 기금)	인정됨	공제 가능	100%
National Sports Fund	인정됨	공제 가능	100%
National Cultural Fund	인정됨	공제 가능	100%
Fu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인정됨	공제 가능	100%
National Children's Fund	인정됨	공제 가능	100%
National Illness Assistance Fund	인정됨	공제 가능	100%
National Trust for Welfare of Persons with Autism, Cerebral Palsy, etc.	인정됨	공제 가능	100%
National Foundation for Communal Harmony	인정됨	공제 가능	100%
Approved University/Educational Institution of National Eminence	인정됨	공제 가능	100%
Zila Saksharta Samiti (지역 내 공공교육 기금)	인정됨	공제 가능	100%
State Government Medical Relief Fund for the Poor	인정됨	공제 가능	100%
Public Universities/Research Institutions (IITs, DRDO, CSIR, ICAR 등 공공 자금 지원 연구 기관 및 대학)	인정됨	공제 가능	100%
Prime Minister's Drought Relief Fund	인정됨	공제 가능	50%



Jawaharlal Nehru Memorial Fund	인정됨	공제 가능	50%
Indira Gandhi Memorial Trust	인정됨	공제 가능	50%
Rajiv Gandhi Foundation	인정됨	공제 가능	50%

이 표는 **회사법**에 의해 인정된 CSR 활동 기금과, **소득세법 제80G조**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 및 그 공제 비율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CSR 기부금을 선택할 때 법적 및 세무적 혜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GST(상품 및 서비스세) 처리와 관련해 매입세액 공제(ITC)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2022년 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CSR 활동은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CGST 법 제17조(5)에서는 CSR 활동에 사용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해 ITC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CSR 지출은 기업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 촉진이 아닌 사회적 기여를 위한 법적 의무로 간주된다. 따라서 CSR 활동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발생하는 GST는 환급되지 않으며, 이는 CSR 지출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CSR 지출과 관련된 GST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은 CSR 활동에 대해 GST를 납부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 3-10-2-5. 유형별 CSR형태 비교

인도 회사법상 허용되는 CSR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업은 직접 CSR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NGO를 통해 수행하거나 정부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각 방식은 인도의 특유한 경제 및 사회적 맥락에서 장단점이 존재한다.

##### 1) 기업이 직접 CSR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인도에서 기업이 직접 CSR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특히 큰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CSR 활동은 기업이 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내 대규모 제조 기업들은 지역 사회에 학교를 짓거나, 의료 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객과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CSR 활동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요구와 복잡한 규제를 고려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이 CSR 활동을 직접 수행할 경우, 전문성과 자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 2) NGO를 통한 CSR 활동

인도에는 다양한 NGO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빈곤 퇴치, 교육, 환경 보호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SR 활동을 NGO와 협력하여 진행할 경우, 기업은 NGO의 전문성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NGO는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부 기관과도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NGO와 협력할 경우 기업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 CSR 활동의 방향과 결과에 대해 NGO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NGO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다.

## 3) 정부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

인도에서는 기업이 CSR 의무를 이행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Swachh Bharat Kosh나 PM CARES Fund가 있다. 이러한 기금은 공공 위생 증진, 빈곤 퇴치, 재난 복구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 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은 기업이 CSR 의무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며, 행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직접적 관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업이 기여하는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 프로젝트의 특성상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널리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인도는 여전히 빈곤, 교육 불평등, 환경 문제 등 사회적 과제가 많으며, 정부 혼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CSR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며,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인도 정부는 CSR 활동이 기업의 법적 의무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CSR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CSR 수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직접 수행할 경우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자원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NGO를 통한 협력은 전문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통제권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은 행정적 부담이 적지만, 기업의 직접적인 사회적 기여는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CSR 활동의 목적과 그 활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직접 수행, NGO와의 협력, 정부 기금 출연 중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 3-10-3. ESG 경영

#### 3-10-3-1. 인도법 상 ESG관련 규정

인도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준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법적 및 규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인도는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수의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환경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환경 법률로는 대표적으로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공기오염 방지법(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물오염 방지법(Wate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등이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사업 운영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EIA)를 의무화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Social) 측면에서는 인도 기업들이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제135조에 따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교육, 보건, 환경 보호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적 의무이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CSR 기여를 법적으로 강제한 나라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인도의 노동법 체계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동자 복지와 안전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이 기업 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와 관련된 규제 시스템은 단일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고, 여러 법률과 규정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 주요 관련 법률과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1) 1948년 공장법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복지, 건강 및 안전을 다루는 법으로, ESG의 사회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 (2) 1986년 환경 보호법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규정을 제공하며, ESG의 환경적 요소를 다룬다.

##### (3) 1981년 대기 오염(예방 및 통제)법

대기 오염 방지와 통제에 관한 법률로, ESG의 환경적 측면을 규제한다.

##### (4) 1974년 수질 오염(예방 및 통제)법

##### (5) 2016년 유해 폐기물(관리, 처리 및 국경 간 이동) 규칙

유해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시한다.

##### (6) 2013년 회사법

ESG의 사회 및 지배구조 측면을 다루는 주요 법률 중 하나다.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134조(3)(m): 이사회 보고서에 에너지 절약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제166조: 이사의 선의의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회사, 직원, 주주, 지역 사회 및 환경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 제135조: CSR 정책을 감독하는 CSR 위원회의 설치 및 CSR 비용 지출을 의무화한다.

(7) 2015년 증권 거래 위원회 (상장 의무 및 공시 요구 사항) 규정

상장 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ESG의 지배구조 측면을 강조한다.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17조(1)(b): 상장 기업의 이사회에서 독립 이사의 비율을 규정.
- 제18조: 감사 위원회의 독립성 요건을 설정.

(8) 2002년 자금세탁 방지법 및 1988년 부패 방지법

기업의 투명성과 반부패 정책을 통해 ESG의 지배구조 요소를 규제한다.

(9) 최저 임금법, 보너스법, 퇴직금법 등은 ESG의 사회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며, 노동자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다룬다.

ESG의 각 측면은 이러한 다양한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며, 각각의 규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한다.

### 3-10-3-2. 상장사 관련 규정

상장 기업에 대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의무는 인도 증권 거래 위원회(SEBI)의 규제에 따라 강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주요 규제 중 하나는 기업의 책임 및 지속 가능성 보고서(BRSR)를 제출하는 것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0개 상장 기업은 매년 BRSR을 작성해 연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기업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 수행한 활동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 폐기물 관리, 직원 복지 및 다양성과 같은 핵심 ESG 요소들이 포함된다. 특히 2023-24 회계연도부터는 상위 150개 기업이 BRSR의 하위 집합인 BRSR Core에 대한 외부 보증을 받아야 하며, 이 의무는 2026-27 회계연도까지 상위 1,000개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상장 기업들은 자신의 가치 사슬에 대해서도 ESG 공시를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협력사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ESG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시가총액 상위 250개 기업은 2024-25 회계연도부터 이 공시를 시작해야 한다.

ESG 등급을 제공하는 기관인 ERP(ESG Rating Providers)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등급 제공자들은 SEBI에 등록해야 하며, ESG 등급을 산출하는 과정과 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ESG 등급을 받을 때,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ESG 투자에 중점을 둔 투자신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투자신탁은 SEBI가 정한 여섯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자산의 최소 80%를 ESG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2024년 10월 1일부터는 자산의 최소 65%를 BRSR을 보고하고 보증받은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린 채권과 관련한 규제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그린 채권은 재생 가능 에너지, 청정 교통 등 환경적 이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으로, SEBI는 이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다. 그린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제3자의 검토를 받아 그린 워싱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 중앙은행은 그린 예치금을 위한 체계를 도입하여 환경적 프로젝트를 위한 예치금 자금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제3자의 보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법적 시스템은 ESG 기준을 점점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요구를 준수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와 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SG는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닌 법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도 내 기업들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 04 구조 조정

4-1. 사업양도

4-2. 주식의 양도

4-3. 회사의 청산

4-4. 휴면회사

## 04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은 효율성을 향상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주로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부문을 매각, 축소 및 통폐합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을 말한다.

### 4-1 사업양도

#### 4-1-1. 사업양도의 의미

기업은 해당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의 개별적 이전, 사업의 포괄적 양도 또는 지분의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양수자가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를 말한다.

인도소득세법은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Slump sale 규정을 갖고 있다.

#### 4-1-2. 인도소득세법 상 사업양도

소득세법은 사업양도(slump sale)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업을 그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자산과 부채의 개별금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이전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어떤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양도대가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무상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양도하는 대가로 유가증권 등 금전 이외의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사업양도의 정의가 확대하였다. 따라서, FY2020-21 이후 발생한 현물대가 수령, 채권의 포기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사업이전은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 (2) 독립된 사업의 이전

양도의 대상은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부문, 단위 또는 활동의 전체의 이전을 말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집합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양수 이후 양도자가 수행하던 사업활동을 중단 및 제약없이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종업원 및 관련 계약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 (3) 대가의 일괄수령

사업양도의 대가는 사업을 구성하는 개별자산과 부채에 개별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수행될 수 있는 사업전체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되어야 한다.

### 4-1-3. 소득세법 상 사업양도 과세체계

사업목적 상 보유하는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거래를 통한 판매, 개인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던 동산의 양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자산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된다. 한국과는 달리 법인/개인에 구분 없이 동일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은 양도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이 하기 표에 따른 장기양도자산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단기자산 양도소득, 이외의 경우 장기자산 양도소득으로 다시 구분된다. 동일한 자산이더라도 단기자산 양도소득 또는 장기자산 양도소득 분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장기자산 양도소득에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의 수행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경우 개별 자산의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양도거래 전체를 장기자산 양도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별 자산의 양도보다 사업양도의 세부담이 적다. 특히, 감가상각자산의 양도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기자산의 양도로 간주되므로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차이는 보다 크게 나타난다.

〈장·단기양도자산 구분기준〉

구분	장기양도자산 판단 기준
상장 유가증권	12개월 초과 보유
그 외의 자산	24개월 초과 보유
비상장채권, 전환사채	보유기간과 상관 없이 단기로 판단함

### 4-1-4. GST의 과세제외

세법 상 사업양도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는 GST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수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 4-2 주식의 양도

### 4-2-1. 주식양도거래의 소득세법 상 취급

구조조정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양도 거래가 활용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주식의 매매가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된다.

납세자는 12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분류를 선택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주식의 양도가 회사의 경영권의 이전을 동반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의 분류를 결정한다.

### 4-2-2. 주식양도에 적용되는 세율

주식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주식양도소득 세율〉

구분		양도소득세율
단기자산양도	상장주식	20%
	비상장주식	주주의 세율과 동일
장기자산양도	상장주식	12.5%
	비상장주식	12.5%

장기자산의 양도소득의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취득가액은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Indexation Benefit이라 한다. 과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낮은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도한 양도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도록 취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2024-2025 연방예산안에서 Indexation Benefit이 철폐되었다.

### 4-2-3. 주식양도의 GST상 취급

주식 등 유가증권은 GST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양도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 4-3 회사의 청산

청산은 회사의 존속을 중단하고 회사에 속한 자산을 회수하여 채권자와 소유주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이 개시되면 청산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인도 법률 상 청산의 방식은 크게 법원에 의한 청산, 자발적 청산 및 등록말소 제도가 있다. 이하에서는 인도사업의 철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발적 청산과 등록말소 제도를 살펴본다.

### 4-3-1. 자발적 청산

자발적 청산 (Voluntary Liquidation)은 도산법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2016)이 다루고 있는 제도이다. 자발적 청산은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회사가 스스로 청산 개시를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사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4-3-2. 자발적 청산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기업등록국 (Registrar of Companies)에 자발적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 (1) 이사회 결의

자발적 청산 개시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과반수 이상 이사의 서면동의 (Declaration of Solvency)가 있어야 한다.

- 변제할 채무가 없거나 회사에 속한 재산의 처분을 통해 모든 채무의 변제가 가능함
- 청산은 다른 누군가를 기망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님

#### (2) 감사보고서 등 구비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이사의 결의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직전 2개년 또는 회사의 존속 기간 중 짧은 기간에 대한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평가보고서

#### (3) 주주총회 결의 및 채권자 승인

이사회 결의 후 4주 이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발적 청산 개시 및 청산인 선임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후 7일 이내에 그러한 결의에 대한 회사 채권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3-3. 청산인

인도 도산위원회에 등록된 Insolvency professional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청산인은 선임 후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대한 확인, 잔여재산의 관리, 처분 및 배분 등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청산인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청산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을 대리하는 등 청산사무 집행에 부적임 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산사무를 지속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을 즉시 기업등록국에 보고해야 한다.

### 4-3-4. 청산사무계좌

청산인은 청산사무에 사용될 별도의 회사명의 계좌 (Corporate Liquidation Account)를 개설해야 한다. 동 계좌는 청산사무가 진행되는 동안 자산의 회수, 변제 등의 지급 및 청구되지 않은 잔여배당금과 이와 관련된 이자 등의 예치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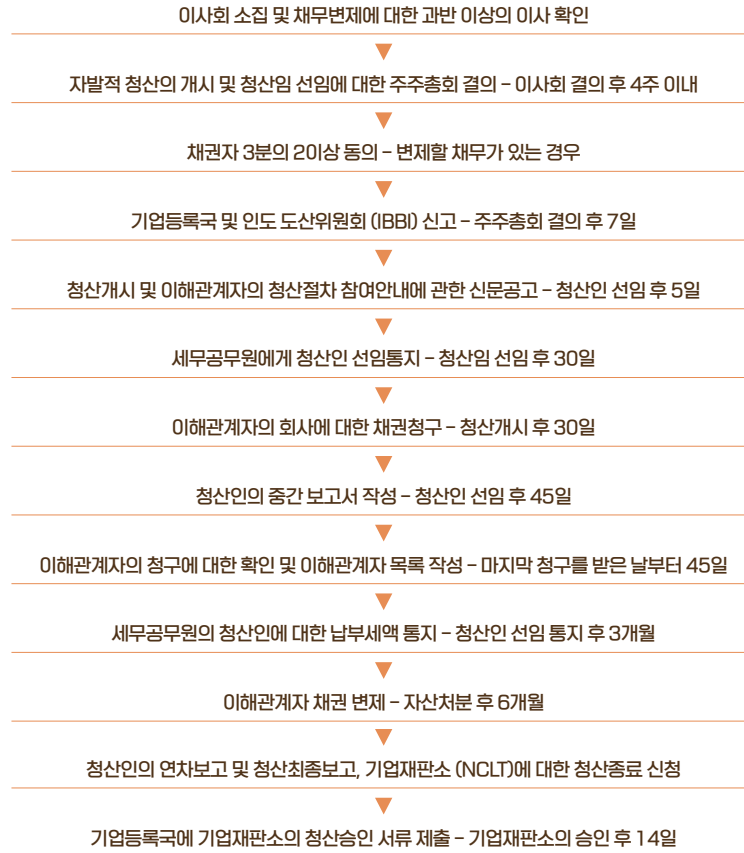




### 4-3-5. 자발적 청산 절차

복잡한 이해관계나 소송 등이 없는 경우, 자발적 청산의 완료에는 일반적으로 8~14개월이 소요된다.

#### 〈자발적 청산 절차〉



#### 4-3-6. 채권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순위

청산으로 배분되는 자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채권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순위>

순위	잔여재산 구분
1	재산의 환가비용 등 청산과 관련된 비용
2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다음의 채무 ■ 청산개시일 24개월 이전 발생된 근로자 (workmen)의 임금채권 ■ 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
3	청산개시일 12개월 이전 발생된 근로자 (workmen)이외의 자에 대한 임금채권
4	담보되지 않은 일반 금융채무
5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다음의 채무 ■ 청산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한 채무 ■ 담보권자의 채권 중 담보권 실행 후 잔여채권
6	이외 일반 채무
7	우선주주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8	일반주주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 4-3-7. 등록말소

인도회사법은 설립 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있는 권한을 기업등록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말소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는 자발적 청산에 비해 간소한 절차를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 상 Fast Trak Exit Mode라고 한다.

#### 4-3-8.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1) 설립 후 1년 이내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2) 직전 2개 년도 동안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휴면회사 지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4-3-9. 등록말소 신청 제한

등록말소 신청 3개월 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회사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1) 상호 변경, 등록 주소지 변경
- (2) 자산 또는 권리의 처분
- (3) 등록말소 신청을 위한 활동 또는 법률 상 의무사항 준수 이외 다른 사업활동
- (4) 법원을 통한 조정, 중재 등이 진행중인 경우
- (5) 회사법 또는 도산법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4-3-10. 등록말소 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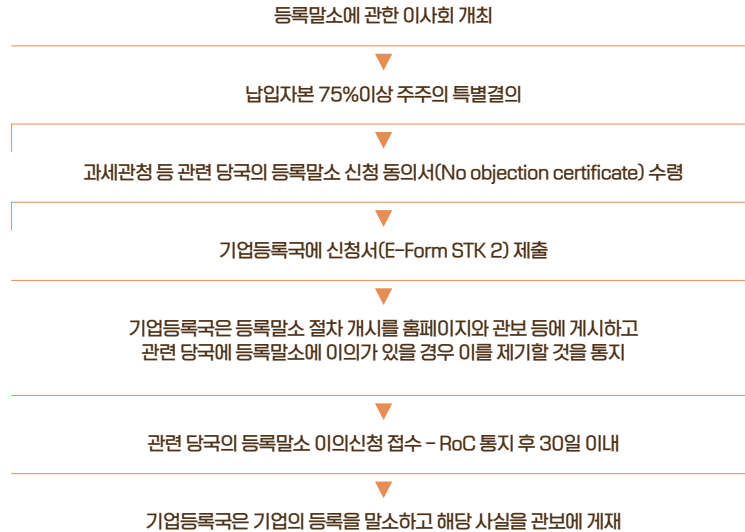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등록신청을 담당할 이사를 지명해야 하며 이사회 개최 이전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신청은 E-Form STK-2 양식과 채무 완납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약서 등 관련서류와 CA, CS 또는 CMA의 인증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방식으로 제출한다.

#### 4-3-11.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 절차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된다.

##### <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 절차 >



#### 4-3-12.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

회사의 등록말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등록말소 후 3년 이내(채권자, 회사의 임직원 등 당사자인 경우 20년 이내)에 기업재판소에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재판소는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 4-4 휴면회사

인도 회사법 제455조는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회사에게 휴면상태(Dormant Company)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사업재개를 예상하고 있는 경우에 휴면회사 지위 획득을 통하여 추후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 필수자산의 보유, 사업재개를 위한 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 4-4-1. 휴면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경우 휴면회사 상태를 신청할 수 있다.

- (1) 미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
- (2) 지식재산권 등 자산의 보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3)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 사업활동이 없는 비활성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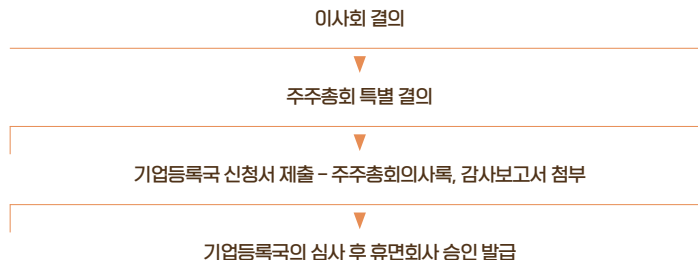
### 4-4-2. 휴면회사 신청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면회사 신청을 할 수 없다.

- (1) 소송 중에 있거나 관련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2) 담보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해야 할 채무를 보유한 경우
- (3) 회사의 경영 및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4) 인도 또는 인도 외 국가에 상장된 회사

### 4-4-3. 휴면회사 신청 절차

#### <휴면회사 신청 절차>



#### 4-4-4. 휴면회사의 이점

휴면회사 지위를 획득할 경우 활성화사에 비해 다음의 일부 법률 상 의무사항이 면제된다.

- (1) 현금흐름표를 작성 의무면제.
- (2) 연 2회의 이사회만이 요구됨 (활성회사의 경우 연 4회)
- (3) 감사인 의무 교체제도 적용 제외

#### 4-4-5. 활성화사 전환 및 해산명령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하려는 휴면회사는 Form MSC-4의 제출을 통해 활성화사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5년간 휴면회사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기업등록국은 해당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부록

A-1.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A-2. 합작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

A-3. 산업별 협회정보



## A-1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 A-1-1. 무역사기의 분류

무역사기는 국제 상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 행위를 포함한다. 무역 계약의 한 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태도 결제사기, 선적불량, 금품사기, 이메일사기, 서류위조, 불법체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역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의도적인 속임수라는 점이다. 사기꾼은 종종 세밀하게 계획된 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한 후 그 신뢰를 악용하여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득을 취한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와는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대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결제사기: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유형
- 선적불량: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으나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는 특히 선금금을 요구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며, 수출기업이 의도적으로 선적을 거부,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상품을 선적하는 유형
- 금품사기: 계약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변호사 선임 비용, 공증비용, 인증 취득 비용, 담당자 선물 명목 등으로 수수료 선 송금을 요구하여 금품을 편취
- 이메일사기: 무역업체 이메일을 해킹하여 장기간 피해업체의 수·발신 메일을 모니터링 한 뒤, 규모가 큰 거래 발생 시 '대금 지급계좌가 변경 되었다'는 허위 이메일을 발송하여 송금 유도
- 서류위조: 구매대금 입금영수증(송금증), 수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기업등록증 등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거래의 진실성을 속이는 경우. 이는 관세 회피, 상품 가치 조작, 상품 편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도됨
- 불법체류: 바이어로 위장하여 국내기업에 유리한 거래를 제안한 뒤, 제품 확인을 위한 한국 공장 방문 등의 구실로 비자 초청장을 요청, 한국 입국 후 잠적하는 유형
- 기타: 해외투자 사기, 상표 도용 사기,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를 통보하고 잠적하는 사기, 고의적으로 기업을 부도 처리하는 사기 등

무역사기는 국경을 넘는 활동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형별 주요 사기 수법을 숙지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A-1-2. 무역사기 대표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사기 유형은 다양하다. 하단에서는 최근 5년간 인도 소재 6개 무역관에서 접수한 4가지 유형의 무역사기 대표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A-1-2-1. 결제사기

제품 선적을 완료했으나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최초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던 바이어가 갑자기 영업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 구두로 지급기한 연장을 승인할 경우 계약서상 명기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부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현지 외환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결제사기 대표사례>

초고압전선에 사용되는 반도체성 테이프를 생산 및 수출하는 국내기업 L사는 2003년부터 인도거래처 S 사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2019년 현지기업 S사에 2019년 8월 14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총 \$99,230.12규모의 제품을 납품하였다. 바이어는 2019년 10월까지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 바이어는 2015년부터 한국기업과 지속적인 거래를 진행해왔던 기업이었으며, 그간 단 한차례의 미지급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기업이었다. 바이어 요청에 국내기업은 그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줬으나, 1년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구두를 통한 지급약속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바이어를 믿고 장기간 기다려왔던 국내기업은 대금회수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으나, 수출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였기에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내기업 L사는 다급한 마음으로 뉴델리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뉴델리무역관은 지속적으로 바이어와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접촉하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불을 촉구했으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인도 기업측에서 예정대로 대금지금을 완료하였고, 뉴델리무역관은 송금관련 증빙 사본을 전달받아 국내기업에게 송부하였다.

### A-1-2-2. 선적불량

상품 수입을 위해 해외기업에 대금 납부를 완료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불량품 또는 사용할 수 없는 품질의 상품을 보내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허위 물류기업 사이트를 구축해 제품이나 선적된 것처럼 꾸며 구매자를 안심시키거나, 허위 물류기업을 소개해 물류비용을 감추는 경우도 많다. 상품은 선적하지도 않고, 현지 세관을 핑계로 로비자금, 과태료,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로 감취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샘플 테스트 후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테스트용 상품은 진품으로, 실제선적하는 상품은 가짜 제품으로 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다.

< 선적불량 대표사례 1 >

설탕(Refined White Sugar)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기업 A사는 최근 설탕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있는 거래선 발굴을 추진하던 중 인도 콜카타 소재의 수출업체 B사를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메일 등 접촉을 통해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경쟁력있는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인도 현지 출장을 통해 공장방문(인도 B 기업 협력공장으로 소개)을 하고, B사의 사무실에서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대금지불 조건은 선적전 30% 송금, 나머지 70%는 선적후 선적서류 수령후의 조건으로 하여 국내 A사는 계약 체결후, 30%(US\$ 80,000)를 송금하였다. 그러나 인도 B사는 선수금을 받은 이후, 설탕을 담은 포대 디자인을 핑계로 선적을 계속 미루면서 계약서상의 선적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수개월째 선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A사는 다시 현지 출장을 와서 B사를 만나고자 했으나 인도 B사는 회사 간판도 내리고 국내기업을 피해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 선적불량 대표사례 2 >

한국 업체 I사는 2022년 5월, 인도 마하슈트라에 위치한 S사에 제품 제작을 문의하였고 진행 중이었다. 2016년에 한 번 거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래 조건을 100% 선지불로 하였고, \$15,000를 먼저 송금하였다. 이후 S사와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 A-1-2-3. 이메일사기

주로 거래기업 간 주고받는 이메일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 변경을 안내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형태가 많다. 계좌번호 변경 안내 외에도 송금증 위조 등으로 수입자에게도 연락을 취해 오랫동안 무역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변경된 계좌번호 안내 시 수취인은 기존 거래처명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서류 확인만을 통해서도 무역사기임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이메일 사기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라도 타깃이 될 수 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범죄인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의 한 종류로, 수법이 정교해 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무역사기와는 다르게 최소 3개국 이상을 경유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법공조가 요구되는 복잡한 사기 기법이다.

\* 작살을 의미하는 스피어(Spear)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의 피싱(phishing)이 결합한 용어로 이메일 사기에 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타깃형 공격 범죄

< 이메일사기 대표사례 1 >

한국기업 C사와 인도 바이어 D사는 최근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해오고 있던 관계였다. 2023년 4월, 바이어 D사는 추가 제품 구매를 위해 C사에게 연락했고 두 기업은 추가 구매에 대해 몇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후 최종 제품 구매를 위한 인보이스(US\$ 14,000) 등의 서류를 주고받았다. 며칠 뒤 KOTRA 몰바이 무역관 담당직원은 한국기업 C사로부터 구매대금 송금 확인 요청을 받게되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지만 바이어가 보낸 송금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확인 결과, 바이어 D사가 지출 처리한 인보이스는 해커가 보낸 위조서류임이 밝혀졌다. 해커는 두 기업의 이메일 교신내용을 지켜보다 결제대금 지급시기에 맞춰 바이어 D사에게 위조서류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한 바이어 D사는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다행히 송금이 완료되기 전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은행에서는 한-인도 기업간의 거래 대금을 제3국(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이상해 확인을 위해 송금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 <이메일사기 대표사례 2>

한국산 원충형 카스토퍼 등 도로교통 안전용품을 제조하는 국내기업 A사는 최근 인도 식품 대기업 Parle Agro Inc.로부터 인콰이어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록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암다바드 무역관에 문의하게 된다.

암다바드 무역관 확인 결과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 인콰이어리였다. 하기와 같이 이메일 서명을 사용하였는데 이메일의 도메인 부분이 parlaagro.com으로 실제 인도 대기업 도메인 parleagro.com 과 e와a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arle Agro Inc.사(뭄바이 본사소재) 에 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업체도 동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 확인 사항을 국내기업에게 적극 전달하였다.

#### <실제 이메일 서명 내역>

Sylvie Srivastava  
Marketing Manager  
Parle Agro Inc.  
401/402, Abhijit - 2, Above Standard Chartered Bank,  
Nr. Mithakhali Six Road, Navrangpura,  
Ahmedabad 380009  
Tel: 022 - 6734 8000  
Email: sylvie@parlaagro.com

#### A-1-2-4. 기타

지재권 도용, 일방적인 계약취소 및 독점 계약 체결 후 잠적하는 사례 등 유형이 다양하다.

#### <지재권 도용 대표사례>

국내기업 J사는 약 30년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40여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 원단 제조사이다. 코로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까지는 약 100만 달러 이상 인도에 수출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62만 달러의 대인도 수출을 달성하였다. 2022년 9월, 인도 거래 바이어 중 한 곳인 A사는 무단으로 국내기업의 상호, 상표권, 디자인권을 인도에서 등록하였다. 국내기업과 동일한 상호로 인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해당 상표권, 디자인권의 소유자라고 등록한 것이다. 해당 국내기업은 한국에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등록하였지만, 인도에서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A사는 국내기업의 다른 인도 거래처에게 국내기업이 A사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국내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인도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 A-1-3. 무역사기 예방전략

#### A-1-3-1. 위험 평가 및 관리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는 기업 내부적으로 사전 위험평가 및 관리 전략을 수립·운영하는 것이다. 기업이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잠재적인 사기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고자 할 때, 사기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A-1-3-1-1. 위험 평가 과정

- 정보 수집: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신뢰성과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 이 정보에는 업체의 재무 상태, 업계 평판, 이전 거래 이력 등이 포함됨.
- 위험 식별: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사기 위험 요소를 식별함. 예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할인율, 비현실적인 납품 조건, 업체의 본사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음.
- 위험 평가: 식별된 위험 요소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함. 이 평가는 거래의 잠재적 손실과 사기 발생 가능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관리 계획 수립: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함. 이 계획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 예를 들어 선금금 지급 시 보증서 요구, 거래 전 모든 서류의 진위 확인 등이 포함됨.

##### A-1-3-1-2. 위험 관리전략

- 계약서와 합의: 모든 거래 조건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 문서에 명시되어야 함.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형태로 담아야 하며, 모든 이상 조건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가 명시되어야 함.
- 신용 검증과 실사: 거래 당사자의 신용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수행함. 이는 특히 새로운 거래 파트너와의 첫 거래에서 중요함.
- 보험 및 보증: 사기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신용보험 또는 거래 보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이러한 서비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 보호막을 제공함.
- 교육 및 훈련: 직원들에게 무역사기의 유형과 예방 전략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사기의 징후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조직 내부에서의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함.

##### A-1-3-1-3. 무역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행동요령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필요함.

기관명	서비스명	내용
KOTRA (☎ 1600-7119)	무역투자상담	기업 실존여부 확인 등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	수출입보험	무역 관련 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바이어 신용정보 조사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해 해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 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 A-1-3-2. 무역사기 유형별 주의해야 할 사항

#### (1) 결제사기 / 선적불량

■ **거래 전 거래처의 실존 여부, 신용도 파악**은 필수임.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거래기업의 신용도 검증 필요

- 신용정보, 재무제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거래기업이 수출·수입 물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도 조사
- 웹사이트는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락처, 담당자 등 진위 검증 필요
-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경우에도 경영상황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신용조사 실시

· **과도하게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주의

- 일면식도 없는 바이어가 대량 주문, 선금 제안 등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급하게 추진할 시, 무역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 외상거래 진행 시엔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고, 기존 거래를 외상거래로 전환할 경우에도 바이어의 영업상황, 자금력 등 고려 필요

· **신흥국은 바이어 지급능력이 낮고 변수가 많아 무역보험 가입 권장**

- 거래량이 큰 경우, 물량을 나누어서 진행하거나 담보 요구, 선금 비율 조정 등 결제 미이행에 대비한 장치 마련 필요
- 첫 거래 시에는 신용장(L/C) 거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
- 외환법에 따라 결제 대금 송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외환법 등 관련 제도·계약 사항 등 확인

· **계약서 작성 시**에는 사고 발생을 대비한 중재조항 기입이 바람직

- 불량제품 선적, 물류 운송사고 발생 등을 대비한 조항 기입 필요

\* 샘플 수입을 통해 품질, 통관 등 문제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 담당자 변경이 잦은 경우,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미수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및 증빙 서류**는 사전에 **꼼꼼히 정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관리방안〉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1 국외기업 신용조사 개요

- 국외기업 기본정보, 대금결제 경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등 확인
- D&B 등 전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기관과 업무 제휴
- 연간 5만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2 이용절차 : 사이버영업점 활용



3 수수료

보고서 종류	기업규모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 미비	신용조사불가자 또는 장기소요(40일 초과)
요약보고서	중소·중견기업	33,000원	22,000원	면제
	대기업	66,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중소·중견기업	49,500원	33,000원	면제
	대기업	99,000원	33,000원	면제

신용평가보고서 샘플

제공 내역

- 국외기업 신용등급(A~F, G, R)
  - 무역보험공사 정상 지원 여부 확인 (G급과 R급은 무역보험 부분 제한등급으로 인수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후 수출진행 권장)
  - 신용평가 이력
  - 국외기업 및 동종업종 평균 신용등급 비교
- 국가 정보 및 국가등급, 국별인수방침
- 무역보험이용현황 및 보험사고여부
- 재무상태 및 주요 재무항목 추세정보 (단, 국외기업의 자료 미제출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위험
- 국외기업 등록정보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활용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개요**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 부보율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부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제도도해



2 단기수출보험 - 중소중견Plus+

- 개요**
-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무신용장위험, 신용장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가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 보상

계약사항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용요건	수출실적 US\$50백만 이하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포괄, 준포괄, 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 제외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	결제기간 180일 이내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청약 시 사전등록 (최대 50개) 수입자신용조사생략/신용R급, <u>고위험인수제한국</u> * 소재수입자, 신용장은행제외	
보상비율	100%	95% 이내
담보위험	(기본) 무신용장, 신용장 위험 (특약) 무역 Claim	(기본) 무신용장, 신용장 위험

\* 고위험인수제한국 : '23. 12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수단 10개국이며, 청약 및 승낙 시점 이후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음

계약사항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험별 책임금액	기본 위험 - 최대 US\$150만 클레임 위험 - 최대 US\$50천 최소책임금액 - US\$10천	기본 위험 - US\$450만 클레임 위험 - 담보 안 함 최소책임금액 - US\$10천
기타	수출통지 : 없음 국별인수방침 : 고위험인수제한국*에 한해 적용 보험계약기간 : 1년 단위 체결, 갱신 보험료 납부 : 연간 보험료 선납	

\* 고위험인수제한국 : '23. 12월 기준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수단 10개국이며, 청약 및 승낙 시점 이후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음

## (2) 금품사기

- 계약의 최종단계(전체 계약금액)보다는 **중간단계에서의 수수료 사기 등이 주목적**이므로 대금 지급조건이 유리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거래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정부 입찰 벤더 등록, 공증 수수료, 보증금 등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선납 100% 등 유리한 조건의 계약일지라도 거래 과정에서 수입 예치금, 정부 승인 절차 비용 등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철회한다며 재촉하거나 급하게 계약을 추진할 경우 주의
- **대규모의 정부 입찰, 비영리기관의 물품구입** 등 대규모의 거래·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필수
- 정부, 비영리기관을 사칭해 금품 갈취를 시도하므로 계약체결 전 기업정보 확인은 필수
-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을 사칭하기도 하므로 해당 국가에 등록 여부 등 확인
- 제품에 대한 문의 메일에 특정 제품명 대신 'Your product' 등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 무역사기 의심이 필요함. 다수의 대상에게 메일을 보내 사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특정 물품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미 서류를 진행했다라도, 상대방이 등록, 인증, 대리인 선임 등 명목으로 1,000달러 내외를 요구할 시, 송금하지 말고 확인 필요
- T/T를 통한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가짜 송금증을 보낸 후, 물건을 지정된 항공 운송사를 통해 빠르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이 빈번. 시급한 상황, 유리한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여 위조된 송금증이 은행 확인이 되기 전에 항공 물류비의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 사용

## (3) 이메일사기

- 갑자기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면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유도하는 것은 **이메일 무역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주의 필요
- 이메일로 계좌 정보를 변경할 경우 대금 송금 전에 반드시 유선, 화상통화 등 이메일이 아닌 수단을 통한 이중 확인 필요
- 해외기업 소재지와 대금 수취은행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주의 필요
- \* (예시) 몽골 소재 기업과 거래 중 대금은 홍콩 은행으로 송금 요청을 받을 경우

### 〈계약서 작성 시 TIP〉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거래조건이나 거래 정보 변경 시 양측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명문화하면 이메일사기를 통한 대금 오지급을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오지급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행동절차를 취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50:50 책임 분담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양사 모두가 거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수취계좌 변경 프로토콜'을 명기해 계좌 정보가 변경될 시 이메일 외 별도의 통신장비를 중복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해 놓으면 이메일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메일 해킹은 사기범이 수출자/수입자 메일을 해킹하거나, 수출자를 사칭한 위변조 메일 계정으로 수입자에게 거짓 입금계좌를 안내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범은 수출자와 해외바이어간 주고 받은 이메일을 해킹하여 상당 기간 서신내용을 주시하다가 결제가 진행되는 결정적 시점에 수출자를 가짜하여 거짓 계좌로 송금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
- 이메일 해킹을 통한 결제대금 편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 첫째, 결제계좌를 절대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 수립 및 바이어에게 공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이메일 하단에 해당 안내문구가 삽입되도록 설정

<예시: 결제계좌 불변경 안내문>

All payments according to this Sales Agreement shall be made to the designated account below:  
 Bank : XXX Branch, XXX Bank  
 Address : XXX, Gangnam-gu, Seoul, South Korea  
 SWIFT CODE : XXX  
 Account No. : 111-2222-33-444  
 Beneficiary : XXX Co. Ltd  
 Seller will never change its bank account details for payment.  
 Seller will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if Buyer transfers money into an incorrect account.

- 둘째, 결제계좌 변경 절차의 사전적 수립이 필요함. 결제계좌 등 계약상 중요사항 변경을 위해서는 서면요청 이외에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 추가적 방법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사전에 약정함. 일례로, 수출계약서에 결제계좌 변경은 공문요청 및 전화 확인의 2단계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할 수 있음.

<예시: 결제계좌 변경 프로토콜 조항>

To prevent trade frauds such as identity theft and email hacking by cyber criminals, the Seller's bank account for paym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hanged only by the following two-step verification:  
 (1) a written notice to the Buyer with the Seller's letterhead and authorized signature; and  
 (2) a telephone calling to the Buyer by the Seller confirming the written notice within twenty four hours.  
 Any notice of changing the Seller's bank account to the Buyer without satisfying the above two-factor authentication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 임직원 및 재무팀 등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 대상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회사 이메일을 통한 사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업무 담당자가 메일 변경 사항에 대해 일일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메일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하고, 최신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직원 대상 주기적인 교육 필요함.
- 첨부파일 내 악성코드를 통해 서버 침투가 가능하므로 첨부파일 열람을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즉시 삭제함.
- 회사 이메일계정 외에 상용메일을 사용할 경우, 특히 보안에 주의함. 회사 이메일 계정 사용 시에도 상용메일과의 연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신자 확인 시 메일의 앞부분만 보는 경우가 많아, 교묘하게 메일 주소를 수정하는 경우 사기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발신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

<주요 이메일 변조 수법>

원본 이메일	허위 이메일	변경글자
***@*u.um****.com	***@*u-um****.com	사용기호 변환: “.” → “-”
***@**owm****.com	***@**owsm****.com	글자 “s” 추가
****@***group.com	****@***gruop.com	글자 재배치: “ou” → “uo”
sales@***.com	sales@***.com	글자변경: “l”(소문자 L) → “I”(대문자 I)
***@*****daircraft.com	***@*****dajrcraft.com	글자변경: “air” → “ajr”
***@**.163.com	***@**.l63.com	숫자를 문자로 변경: “1”(숫자) → “l”(소문자 L)
***@**uffle.it	***@**ufle.it	글자삭제: “uffl” → “ufl”

-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함.** 이메일사기로 탈취한 대금은 중간지 은행을 경유해 최종 도착지로 입금되기 때문에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함.
- 상대 국가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대 거래기업에 협조 요청
- \* 최초 송금은행, 중간지 은행, 최종 수취은행까지 모든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필요
- \*\* 우리 기업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더라도 상대 국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지급정지 요청 후, 계좌 상세 내역이 포함된 송금확인증과 해커가 발송한 이메일 원문, 이메일 접속 아이피 등을 취합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이메일사기 신고 순서>



#### <이메일사기 온라인 신고 방법>



\*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신고하기>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4) 불법체류

-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신용도 확인이 필수임.** 위장취업, 난민 신청 등을 목적으로 방한을 시도하는 바이어 위장 사기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정보 확인 필수
- 바이어가 이미 입국해 불법체류를 할 경우, 소재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사전 주의 필요

※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번호: ☎ 1588-7191

(5) 서류위조

- 인보이스 등 **서류에 기재된 기업 정보**를 철저히 **검증**해 봐야 함. 기재된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장 주소 등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유명기업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려진 기업 일지라도 실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함.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현지 기업등록사이트 내용과 일치하고 재무제표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설립연도, 주소지 등이 다를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함.
- 문서를 확대해 **첨부된 이미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함.
- 위조·허위 문서는 포토샵 등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편집하는 경우가 많아 글꼴의 크기 및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정부 로고나 날인을 합성한 이미지 사용 시 대부분 픽셀이 일정하지 않으며, 서류 내 다른 자료 대비 눈에 띄게 선명할 수 있음.
- 각종 서류에 도장, 서명 등이 남발되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함.
- 비즈니스 경험보다는 **정부기관, 담당자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할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안내보단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것처럼 환심을 사는 경우 주의해야 함.
-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하기 힘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업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용어가 영어가 아닌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의 웹사이트가 영어로만 제작되어 있을 경우 피싱사이트로 의심해 볼 수 있음.

〈인보이스 체크리스트〉

- ① 실제 기업명과 주소가 인보이스에 적힌 기업명, 주소와 일치하는가?
- ② 전화번호가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국가·지역번호에 해당하는가?
- ③ 수취은행 소재지가 거래기업 소재지 국가로 되어 있는가?

< 영의도용 예방 체크리스트 및 예방방법 >

무역절차	구분	특징
(1단계) 최초접촉	1	거래경험이 없던 신규 수입자가 이메일을 통해 주문
	2	선진국의 우량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구매 담당자라고 주장
	3	수입자측 담당자 메일이 수입자의 공식 도메인과 미묘하게 다르거나 상용메일 (gmail, yahoo 등)을 사용
	4	수입자가 알려진 홈페이지가 조작하거나 부실
	5	현지국 등기소, 법원 등에 등록된 공식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음
(2단계) 주문상담	6	주문서상 회사 로고, 대표자명 등이 홈페이지 내용과 불일치
	7	수입자의 주업종과 상이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물품을 주문
(3단계) 조건협의	8	첫 거래임에도 선수금, 신용장 방식거래를 거절하고 외상거래를 고수하며, 수입자가 먼저 무역보험 이용을 권유
(4단계) 물품선적	9	수입자소재국과 물품 인도 국가가 상이 (소재국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이나, 물품인도를 요청하는 국가는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 등 개도국)
	10	선적서류상 바이어와 실제 물품을 수취하는 수하인이 상이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 첫거래로서, 바이어로부터 **이메일로만** 연락이 오는 경우  
이메일 도메인이 바이어 상용명과 미묘하게 유사, 또는 Gmail 계정 사용시 주의 필요!
- 바이어의 업종**이 귀사로부터 구매하려는 물품과 상이한 경우
- 바이어의 **소재국가**와 **물품의 인도지**가 다른 경우  
(특히, 아프리카 등 개도국으로 물품 인도를 요청)
- 첫거래**인데 **선하증권(B/L)상 수하인(Consignee)**을 **제3의 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 첫 거래임에도 **선수금**과 **결제방식**을 요구하며 **수출보험** 이용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상대 확인 방법**

- 현지실사, 샘플거래, **바이어 공식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한 확인, 바이어 송부 서류의 진위여부확인!
- 이메일 주소 또는 웹사이트 개설일 등 정보 조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whois.kisa.or.kr)  
수입자 입찰에 비해 개설일자가 최근인 경우 사기 가능성 높음
- KOTRA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 해외투자진출 상담 등

1. 진출검토

2. 회사설립

3. 회사운영

4. 구조조정

부록

- 인도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사이트 활용:  
- (기업등록국) [www.mca.gov.in/content/mca/global/en/home.html](http://www.mca.gov.in/content/mca/global/en/home.html)
-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기업의 경우 기업 정보 사이트 조회 또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자체적으로 진상파악이 어려울 경우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상담 신청' 또는 KOTRA의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KOTRA에 조사를 의뢰 가능함.

〈Scamadviser를 통한 사기업체 조회 화면〉



(6) 기타

-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기업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음**. 잘 모르는 기업이 투자를 원한다면 접근해 수수료 등 금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봐야 함.
- **구두계약보단 확실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구축한 거래처일지라도 구두계약 체결 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역의 정부 입찰프로젝트는 한국기업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기술, 가격 등의 상세정보를 파악한 후 최종 의뢰는 중국기업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두계약은 지양해야 함.

## A-1-4. 무역사기 발생시 핵심 행동 요령

### A-1-4-1. 무역사기 대응 핵심 행동요령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	
거래은행	· 한국은행 및 거래 상대 국가의 은행에도 지급정지 신청
경찰관서	· (PC) 경찰청 홈페이지 → 신고하기 → 사이버범죄 신고 · (경찰민원전화) ☎ 182 · (사이버범죄 신고 상담, 24시간 운영) ☎ 02-3150-2659 · 필요 증빙: 계좌 상세내역이 포함된 송금확인증, 해커가 발송한 이메일 원문, 이메일 접속 아이피 등

기관명	서비스명	내용
KOTRA (☎ 1600-7119)	무역투자상담	무역사기 상담, 기업실존여부 확인 등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	수출입보험	무역 관련 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바이어 신용정보 조사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02-2110-3665)	국제사건 법률자문	소송을 위한 법률자문
NICE신용정보 (☎ 02-2122-2445)	해외 미수채권 회수 서비스	미수금액 회수 지원
대한상사중재원 (☎ 02-551-2000)	중재제도	바이어와의 중재 지원

### A-1-4-2. 관련 웹사이트

연번	기관 / 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1	KOTRA(해외경제정보드림)	dream.kotra.or.kr
2	경찰청	www.police.go.kr
3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4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5	NICE신용정보	www.niceamc.co.kr
6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7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www.immigration.go.kr

## A-2 협력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

인도 시장은 그 규모와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진출 대상이다. 특히 합작투자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장에 진입하고, 법적·문화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작투자가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적절한 파트너 선정과 전략적 결정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다. 여기서는 인도에서 대표적인 합작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해 그 요인들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 A-2-1. 성공사례

#### A-2-1-1. 마루티스즈키(Maruti Suzuki)



### Way of Life!

마루티스즈키(Maruti Suzuki)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합작투자 사례로 손꼽힌다. 1981년, 인도 정부 소유의 Maruti Udyog Ltd와 일본의 스즈키(Suzuki)가 74% 대 26%의 지분 비율로 합작을 시작했다. 당시 인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외국 기술을 도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합작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다.

마루티스즈키는 인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춘 소형차 생산에 집중했으며, 800cc 엔진의 소형차 모델 "Maruti 800"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인도의 도로 환경과 연비 효율을 고려한 이 모델은 보급형 차량으로 자리잡았고, 많은 인도 소비자들에게 첫 자동차로 선택되었다.

1987년에 지분 비율은 60% 대 40%로 조정되었으며, 1992년에는 인도 경제의 자유화와 함께 지분 비율이 50% 대 50%로 재조정되었다. 하지만, 1997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인도 측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스즈키 측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소송이 제기되었다. 합작 파기의 위기까지 갔으나, 1998년 BJP 정부가 분쟁을 조정하여 대표이사가 조기 사임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이후 2007년, 인도 정부는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고, 현재 스즈키가 56.21%의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합작투자의 성공요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현지화 전략**: 인도의 도로와 경제 상황에 맞춘 소형차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을 출시
- ② **비용 절감**: 현지 생산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
- ③ **장기적 관점**: 초기 합작투자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 유지



#### A-2-1-2. 타타 스타벅스(Tata Starbucks)



스타벅스(Starbucks)는 2007년 인도 시장에 단독으로 진출하려 했으나, 소매업에 대한 규제와 인도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2012년, 인도 타타 그룹의 자회사인 **Tata Global Beverages**와 함께 50% 대 50%의 지분으로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했다.

이 합작회사는 “Starbucks, A Tata Alliance”라는 브랜드명으로 운영되었으며, 스타벅스는 타타 그룹의 신뢰성과 인도 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빠르게 확장했다. 타타 그룹은 이미 인도 전역에 강력한 유통망과 브랜드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인도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스타벅스는 인도의 다양한 문화적 기호를 반영하여 현지화된 메뉴를 도입했다. 인도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차(tea) 문화가 강했지만, 스타벅스는 커피와 함께 타타 그룹의 차 상품을 매장에서 함께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현지화된 접근법 덕분에 스타벅스는 2017년 기준 전국에 9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약 3,0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합작투자자의 성공원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타타 그룹의 인프라와 유통망을 적극 활용
- ② **현지화된 메뉴**: 인도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메뉴 구성으로 현지 적응
- ③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타타 그룹과의 협력으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브랜드 확장

## A-2-2. 실패사례

### A-2-2-1. 포드(Ford)와 마힌드라(Mahindra)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 포드(Ford)와 인도의 자동차 제조회사 마힌드라(Mahindra)는 2019년 합작투자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전기차와 SUV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생산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합작투자는 종료되었다.

양측은 공동으로 신차를 개발하려 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와 글로벌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전략적 목표를 다시 조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더 이상 협력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작투자는 취소되었다.

합작투자의 실패원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외부 변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족: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협력의 지속성을 저해
- ② 전략적 우선순위 차이: 두 회사의 장기적 목표가 일치하지 않음.

### A-2-2-2. 맥도날드(McDonald's)와 Connaught Plaza



맥도날드(McDonald's)는 1990년대 중반 Connaught Plaza Restaurants Pvt. Ltd.와 합작투자를 통해 인도 북부 및 동부 지역에 진출했다. 두 회사는 50% 대 50%의 지분으로 협력했으나, 운영권과 지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대표이사 선임 문제와 지분 매입 조건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법적 분쟁으로 번졌고, 2017년에는 델리 지역의 매장이 위생 라이선스 문제로 폐쇄되었다.

맥도날드는 결국 북부 및 동부 지역의 매장을 철수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직원이 실직하게 되었다. 또한, 맥도날드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합작투자의 실패원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파트너 간 신뢰 부족**: 대표이사 문제와 지분 매입에서의 갈등이 협력의 기반을 흔들었다.
- ② **법적 분쟁**: 파트너 간의 갈등이 장기적인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 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A-2-3. 시사점

인도에서의 합작투자는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합작투자를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 시장 분석과 신중한 파트너 선정,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마루티스즈키와 타타 스타벅스는 이러한 요소를 잘 결합하여 성공한 반면, 포드-마힌드라와 맥도날드-Connaught Plaza는 외부 변수와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로 남았다.

결론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합작투자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 A-3 산업별 협회정보

산업	협·단체명	웹사이트
자동차	Automobile Association of Southern India (AASI)	<a href="http://www.aasindia.org">http://www.aasindia.org</a>
	Federation of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FADA)	<a href="http://www.fadaindia.org/">http://www.fadaindia.org/</a>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 (SIAM)	<a href="http://www.siamindia.com">http://www.siamindia.com</a>
	Society of Manufacturers of Electric Vehicles (SMEV)	<a href="http://www.smev.in">http://www.smev.in</a>
	Automobile Association of Eastern India (AAEI)	<a href="http://www.uraaei.org/">http://www.uraaei.org/</a>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ARAI)	<a href="http://www.araiindia.com">http://www.araiindia.com</a>
	Indian Association of Bus Manufacturers (IABM)	<a href="http://www.iabmonline.org">http://www.iabmonline.org</a>
	Automobile Society India (ASI)	<a href="http://www.automobilesociety.ac.in">http://www.automobilesociety.ac.in</a>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dia (SAEINDIA)	<a href="http://www.saeindia.org">http://www.saeindia.org</a>
	Emission Controls Manufacturers Association (ECMA)	<a href="http://www.ecmaindia.in">http://www.ecmaindia.in</a>
	Indian Auto LPG Coalition (IAL)	<a href="http://www.iac.org.in">http://www.iac.org.in</a>
	Federation of All India Automobile Spare Parts Dealers' Association (FAIASPDA)	<a href="http://www.faiaspda.com/">http://www.faiaspda.com/</a>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ACMA)	<a href="https://www.acma.in/">https://www.acma.in/</a>

정보 기술	Association of Biotechnology Led Enterprises (ABLE)	<a href="http://www.ableindia.in">http://www.ableindia.in</a>
	All India Biotech Association	<a href="http://www.aibaonline.com/">http://www.aibaonline.com/</a>
	Biotech Research Society, India	<a href="http://www.brsi.in">http://www.brsi.in</a>
	Communication Multimedia and Infrastructure (CMAI)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cmai.asia/">http://www.cmai.asia/</a>
	Computer Society of India, Hyderabad Chapter	<a href="http://www.csihyderabad.org">http://www.csihyderabad.org</a>
	Indi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Computing Science (IARCS)	<a href="http://www.iarcs.org.in">http://www.iarcs.org.in</a>
	Indian Desalination Association	<a href="http://www.indaindia.org">http://www.indaindia.org</a>
	Hologram Manufacturers Association	<a href="http://www.homai.org">http://www.homai.org</a>
	Global ICT Standardization Forum for India (GISFI), India	<a href="http://www.gisfi.org">http://www.gisfi.org</a>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ers Association's (ITDA)	<a href="http://www.aitda.com/">http://www.aitda.com/</a>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of India (ISPAI)	<a href="http://www.ispai.in">http://www.ispai.in</a>
	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 (IAMAI)	<a href="http://www.iamai.in">http://www.iamai.in</a>
	All India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AIITA)	<a href="http://www.aiita.org/">http://www.aiita.org/</a>
	Confederation of Indian IT Associations (CIITA)	<a href="http://www.ciita.in">http://www.ciita.in</a>
	CIO Klub	<a href="http://www.cioklub.com/">http://www.cioklub.com/</a>
	Computer & Media Dealers' Association	<a href="http://www.cmdapune.org/">http://www.cmdapune.org/</a>
	CIO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greatcio.com/">http://www.greatcio.com/</a>
	Associ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s	<a href="http://www.aitp.org">http://www.aitp.org</a>
	Indian Laser Association	<a href="http://www.ila.org.in">http://www.ila.org.in</a>
	Indian Society of Remote Sensing (ISRS)	<a href="http://www.isrsindia.in">http://www.isrsindia.in</a>
	Software Testing Association (STA) - INDIA	<a href="http://www.associationforsoftwaretesting-india.blogspot.com">http://www.associationforsoftwaretesting-india.blogspot.com</a>
	Association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ndia (AITS)	<a href="http://www.itsindia.org/">http://www.itsindia.org/</a>
	AIDC Technologies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aimindia.co.in/">http://www.aimindia.co.in/</a>
	Telematics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telematicsassociation.in/">http://www.telematicsassociation.in/</a>

전자 및 전기 제품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RAMA)	<a href="http://rama.net.in/mission-site.html">http://rama.net.in/mission-site.html</a>
	All India Air Conditioning & Refrigerator Association (AIACRA)	<a href="http://www.aiacra.com/">http://www.aiacra.com/</a>
	Consumer Electronics and Appliances Manufacturers Association (CEAMA)	<a href="http://www.ceama.in/">http://www.ceama.in/</a>
	Control Panel & Switchgear Manufacturer's Association (COSMA)	<a href="http://www.cosmaindia.org">http://www.cosmaindia.org</a>
	Indian Electrical & 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IEEMA)	<a href="http://www.ieema.org">http://www.ieema.org</a>
	Electronic Security Association of India-ESAI	<a href="http://www.esai.in">http://www.esai.in</a>
	All India Radio & Electronics Association (AIREA)	<a href="http://www.airea.org/">http://www.airea.org/</a>
	Elcina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elcina.com/index.asp">http://www.elcina.com/index.asp</a>
	IPC India - Electronics Industries Association	<a href="http://www.ipcindia.org.in/html/default.htm">http://www.ipcindia.org.in/html/default.htm</a>
	India Electronics & Semiconductor Association (Formerly, India Semiconductor Association)	<a href="http://www.iesaonline.org/">http://www.iesaonline.org/</a>
	Indian Fan Manufacturers Association (IFMA)	<a href="http://www.indianfan.org">http://www.indianfan.org</a>
	Indi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ISHRAE)	<a href="http://www.ishrae.in">http://www.ishrae.in</a>
	Electric Lamp and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Elcoma)	<a href="http://www.elcomaindia.com">http://www.elcomaindia.com</a>
	Winding Wire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WWMAI)	<a href="http://www.wwmai.com/">http://www.wwmai.com/</a>
제약	Bulk Drug Manufacturers Association, India (BDMA)	<a href="http://www.bdmai.org">http://www.bdmai.org</a>
	Indian Drug Manufacturers Association (IDMA)	<a href="http://www.idma-assn.org">http://www.idma-assn.org</a>
	Confederation of Indian Pharmaceutical Industry (SSI)	<a href="http://www.cipi.in">http://www.cipi.in</a>
	Organiz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ers of India (OPPI)	<a href="http://www.indiaoppi.com">http://www.indiaoppi.com</a>
	Ayurvedic Drug Manufactures Association (ADMA)	<a href="http://www.admaindia.com">http://www.admaindia.com</a>

채굴, 금속 및 광물	Alloy Steel Producers Association of India (ASPA)	<a href="http://www.aspaofindia.weebly.com/">http://www.aspaofindia.weebly.com/</a>
	Aluminium Association of India (AAI)	<a href="http://www.aluminium-india.org">http://www.aluminium-india.org</a>
	Aluminium Caster's Association of India (ALUCAST)	<a href="http://www.alucast.co.in">http://www.alucast.co.in</a>
	Coal India Retired Officers Welfare Association (CIROWA)	<a href="http://www.cirowa.org/">http://www.cirowa.org/</a>
	Coal Mines Officers'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cmoai.in/">http://www.cmoai.in/</a>
	Coal Mines Officers' Housing Society	<a href="http://www.cmoahs.info">http://www.cmoahs.info</a>
	Coal India Degree Engineers Association	<a href="http://www.coalidea.blogspot.in/">http://www.coalidea.blogspot.in/</a>
	Coal Preparation Society of India	<a href="http://www.cpsi.org.in/">http://www.cpsi.org.in/</a>
	International Copper Promotion Council India (ICPCI)	<a href="http://www.copperindia.org/">http://www.copperindia.org/</a>
	Indian Ferro Alloys Producers' Association (IFAPA)	<a href="http://www.ifapaindia.org">http://www.ifapaindia.org</a>
	India Lead Zinc Development Association (ILZDA)	<a href="http://www.ilzda.com">http://www.ilzda.com</a>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India (MRSI)	<a href="http://www.mrsi.org.in">http://www.mrsi.org.in</a>
	Metal Finishers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mfai.org">http://www.mfai.org</a>
	Metal Recycling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mrai.org.in">http://www.mrai.org.in</a>
	Federation of Indian Mineral Industries	<a href="http://www.fedmin.com/">http://www.fedmin.com/</a>
	Powder Metallurgy Association of India (PMAI)	<a href="http://www.pmai.in/en/">http://www.pmai.in/en/</a>
	Solvent Extractors'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seaofindia.com">http://www.seaofindia.com</a>
	Sponge Iron Manufacturers Association (SIMA)	<a href="http://www.spongeironindia.in/">http://www.spongeironindia.in/</a>
	Steel Wir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SWMAI)	<a href="http://www.swmai.org/">http://www.swmai.org/</a>
	All India Weldedmesh Manufacturer's Association	<a href="http://www.weldedmesh.com/">http://www.weldedmesh.com/</a>

화학 및 화학 제품	Indian Paint Association (IPA)	<a href="http://www.ipaindia.org">http://www.ipaindia.org</a>
	Indian Small Scale Paint Association (ISSPA)	<a href="http://www.isspa.org/">http://www.isspa.org/</a>
	Indian Paint and Coating Association (IPCA)	<a href="http://www.ipcaonline.com">http://www.ipcaonline.com</a>
	Dyestuff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DMAI)	<a href="http://www.dmai.org/">http://www.dmai.org/</a>
	Indian Chemical Council (ICC)	<a href="http://www.indianchemicalcouncil.com/index.php">http://www.indianchemicalcouncil.com/index.php</a>
	Chemical & Alkali Merchants Association (CAMA)	<a href="http://www.camaindia.com">http://www.camaindia.com</a>
	Chemicals & Petrochemicals Manufacturers Association (CPMA)	<a href="http://www.cpmaindia.com/">http://www.cpmaindia.com/</a>
	Alkali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AMA)	<a href="http://www.ama-india.org/">http://www.ama-india.org/</a>
	Indian Speciality 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ISCMA)	<a href="http://www.iscma.in">http://www.iscma.in</a>
	Crop Care Federation of India (CCFI)	<a href="http://www.cropcarefed.in">http://www.cropcarefed.in</a>
	Fertilizer Association of India (FAI)	<a href="http://www.faidelhi.org/">http://www.faidelhi.org/</a>
	Indian Pest Control Association (IPCA)	<a href="http://www.ipca.org.in">http://www.ipca.org.in</a>
	Pesticides Manufacturers & Formulators Association of India (PMFAI)	<a href="http://www.pmfai.org">http://www.pmfai.org</a>
	Additive Manufacturing Society of India (AMSI)	<a href="http://www.amsi.org.in">http://www.amsi.org.in</a>
	Adhesives and Sealants Association (TASA)	<a href="http://www.tasaindia.org/">http://www.tasaindia.org/</a>
	All India Industrial Gases Manufacturers' Association (AIIGMA)	<a href="http://www.aiigma.org">http://www.aiigma.org</a>
	CHEMTECH Foundation	<a href="http://www.chemtech-online.com/">http://www.chemtech-online.com/</a>
	All India Glass Manufacturers Federation (AIGMF)	<a href="http://www.aigmf.com">http://www.aigmf.com</a>
	PLASTINDIA Foundation	<a href="http://www.plastindia.org">http://www.plastindia.org</a>
	Polyureth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PMA)	<a href="http://www.pmahome.org/">http://www.pmahome.org/</a>
	All India Printing Ink Manufacturers' Association (AIPIMA)	<a href="http://www.aipima.org">http://www.aipima.org</a>
	Indian Resins Manufacturers' Association (IRMA)	<a href="http://www.irmaonline.org/">http://www.irmaonline.org/</a>



섬유 직물 및 신발	Apparel Export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	<a href="http://www.aema.in">http://www.aema.in</a>
	Confederation of Indian Apparel Exporters	<a href="http://www.ciae.org/">http://www.ciae.org/</a>
	All India Carpet Manufacturers' Association (AICMA)	<a href="http://www.aicma.org.in/">http://www.aicma.org.in/</a>
	Cloth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CMAI)	<a href="http://www.cmai.in">http://www.cmai.in</a>
	Federation of Indian Coir Exporters Associations (FICEA)	<a href="http://www.ficea.in/about-us.php">http://www.ficea.in/about-us.php</a>
	Cotton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caionline.in/ps.asp">http://www.caionline.in/ps.asp</a>
	Indian Federation For Fashion Development (IFFD)	<a href="http://www.iffd.co.in/">http://www.iffd.co.in/</a>
	Indian Footwear Components Manufacturers Association (IFCOMA)	<a href="http://www.ifcoma.org">http://www.ifcoma.org</a>
	Indian Shoe Federation (ISF)	<a href="http://www.indianshoefederation.in">http://www.indianshoefederation.in</a>
	Intimate Apparel Association of India (IAAI)	<a href="http://www.iaai.co.in/">http://www.iaai.co.in/</a>
	Indian Jute Mills Association	<a href="http://www.jute-ijma.org">http://www.jute-ijma.org</a>
	Association of Man-Made Fibre Industry of India	<a href="http://www.viscoserayonindia.com/main.asp">http://www.viscoserayonindia.com/main.asp</a>
	Indian Technical Textile Association (ITTA)	<a href="http://www.ittaindia.org">http://www.ittaindia.org</a>
	Confederation of Indian Textile Industry (CITI)	<a href="http://www.citiindia.com/">http://www.citiindia.com/</a>
	Federation of All India Textile Manufacturers Associations	<a href="http://www.faitma.com">http://www.faitma.com</a>
	Textile Association (India)	<a href="http://www.textileassociationindia.org/home">http://www.textileassociationindia.org/home</a>
	Indian Woollen Mills' Federation (IWMF)	<a href="http://www.iwmfindia.com/aboutus.html">http://www.iwmfindia.com/aboutus.html</a>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All Indian Association of Plastic Industries	<a href="http://www.aipia.org/">http://www.aipia.org/</a>
	Organization of Plastic Processors of India	<a href="http://www.oppindia.org">http://www.oppindia.org</a>
	All India Federation of Plastics Industries (AIFPI)	<a href="http://www.aifpi.org">http://www.aifpi.org</a>
	All India Plast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AIPMA)	<a href="http://www.aipma.net">http://www.aipma.net</a>
	Indian Plastics Federation (IPF)	<a href="http://www.ipfindia.org/">http://www.ipfindia.org/</a>
	Indian Polyurethane Association	<a href="http://www.pu-india.org/">http://www.pu-india.org/</a>
	Federation of Safety Glass (FOSG)	<a href="http://www.fosg.in/">http://www.fosg.in/</a>

농업	Indian Society of Agribusiness Professionals (ISAP)	<a href="http://www.isapindia.org">http://www.isapindia.org</a>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Association - AERA (India)	<a href="http://www.aeraindia.in">http://www.aeraindia.in</a>
	All India Agricultural Students Association (AIASA)	<a href="http://www.aiasa.in">http://www.aiasa.in</a>
	Agriculture & Organic Farming Group (AOFG-India)	<a href="http://www.aofgindia.com">http://www.aofgindia.com</a>
	Agro Input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AIM)	<a href="http://www.aimassociationindia.com">http://www.aimassociationindia.com</a>
	Bio-Dynamic Association of India (BDAl)	<a href="http://www.biodynamics.in">http://www.biodynamics.in</a>
	All India Cottonseed Crushers Association (AICOSCA)	<a href="http://www.aicosca.com">http://www.aicosca.com</a>
	Association of Farmer Companies (AOFC India)	<a href="http://www.aofcindia.org">http://www.aofcindia.org</a>
	Consortium of Indian Farmers Associations (CIFA)	<a href="http://www.indianfarmers.org">http://www.indianfarmers.org</a>
	Federation of Farmers Associations	<a href="http://www.indianfarmers.org">http://www.indianfarmers.org</a>
	Medicinal and Aromatic Plants Association of India (MAPAI)	<a href="http://www.sites.google.com/site/mapaindiaorg">http://www.sites.google.com/site/mapaindiaorg</a>
	Indian Micro-Fertilizers Manufacturers Association (IMMA)	<a href="http://www.imma.co.in">http://www.imma.co.in</a>
	Nurserymen Association of India (INA)	<a href="http://www.indiannurserymen.com">http://www.indiannurserymen.com</a>
	All India Organic Farmers Society (AIOFS)	<a href="http://www.aiofsindia.com">http://www.aiofsindia.com</a>
	Organic Farming Association of India (OFAI)	<a href="http://www.ofai.org">http://www.ofai.org</a>
	Irrigation Association of India (IAI)	<a href="http://www.iaiindia.org">http://www.iaiindia.org</a>
	Indian Foundation Seed and Services Association (IFSSA)	<a href="http://www.ifssa.org.in">http://www.ifssa.org.in</a>
	Sugarcane Breeding Institute	<a href="http://www.sugarcane.res.in">http://www.sugarcane.res.in</a>
	Assam Tea Planters' Association (ATPA)	<a href="http://www.atpa.in">http://www.atpa.in</a>
	Vegetable Growers Association of India (VGAI)	<a href="http://vgai.org/index.html">http://vgai.org/index.html</a>
	Walnut & Other Nut Fruits Growers Association of India (WANGAI)	<a href="http://www.wangai.co.in">http://www.wangai.co.in</a>
항공 및 항공기	Aeronautical Society of India (AeSI)	<a href="http://www.aerosocietyindia.in">http://www.aerosocietyindia.in</a>
	Business Aircraft Operators Association (BAOA)	<a href="http://www.baoba.in">http://www.baoba.in</a>
	Federation of Indian Pilots (FIP)	<a href="http://www.fipindia.com">http://www.fipindia.com</a>

건설 및 자재	All India Brick & Tile Manufacturers Federation	<a href="http://www.brick-india.com">http://www.brick-india.com</a>
	Builders Association of India (BAI)	<a href="http://www.baionline.in">http://www.baionline.in</a>
	National Council for Cement & Building Materials (NCB)	<a href="http://www.ncbindia.com/">http://www.ncbindia.com/</a>
	Indian Green Building Council (IGBC)	<a href="http://www.igbc.in">http://www.igbc.in</a>
	Ce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CMA)	<a href="http://www.cmaindia.org">http://www.cmaindia.org</a>
	Ready Mixed Concrete Manufacturer's Association (RMCMA)	<a href="http://www.rmcmaindia.org/">http://www.rmcmaindia.org/</a>
	Asbestos Cement Products Manufacturers' Association (ACPMA)	<a href="http://www.acpma.com/">http://www.acpma.com/</a>
	Construction Chemicals Manufacturers' Association (CCMA)	<a href="http://www.ccmaindia.org/">http://www.ccmaindia.org/</a>
	Confederation of Construction Products and Services (CCPS)	<a href="http://www.ccpsindia.com/">http://www.ccpsindia.com/</a>
	Construction Federation of India (CFI)	<a href="http://www.cfiindia.com/">http://www.cfiindia.com/</a>
	Military Engineer Services (MES) Builders Association of India (MESBAI)	<a href="http://www.mesbai.in/">http://www.mesbai.in/</a>
에너지	Indian Biogas Association	<a href="http://www.biogas-india.com">http://www.biogas-india.com</a>
	Indian Captive Power Producers Association (ICPPA)	<a href="http://www.icppa.webs.com">http://www.icppa.webs.com</a>
	Solar Thermal Federation of India (STFI)	<a href="http://www.stfi.org.in">http://www.stfi.org.in</a>
	Hydrogen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hai.org.in/home.html">http://www.hai.org.in/home.html</a>
	Indian Association for Hydrogen Energy and Advanced Materials (IAHEAM)	<a href="http://www.iaheam.org">http://www.iaheam.org</a>
	Association of Power Producers (APP)	<a href="http://www.appindia.org.in">http://www.appindia.org.in</a>
	Independent Power Producers Association of India (IPPAI)	<a href="http://www.ippai.org/">http://www.ippai.org/</a>
	Indian Renewable Energy Federation (IREF)	<a href="http://www.iref.net.in">http://www.iref.net.in</a>
	National Solar Energy Federation of India (NSEFI)	<a href="http://www.nsefi.in/">http://www.nsefi.in/</a>
	Solar Energy Society of India (SESI)	<a href="http://www.sesi.in">http://www.sesi.in</a>
	Indian Wind Energy Association (INWEA)	<a href="http://www.inwea.org">http://www.inwea.org</a>
	Indian Wind Power Association (IWPA)	<a href="http://www.windpro.org">http://www.windpro.org</a>
	Indian Wind Turb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IWTMA)	<a href="http://www.indianwindpower.com">http://www.indianwindpower.com</a>

식품 및 음료 제품	All India Alcohol Based Industries Development Association (AABIDA)	<a href="http://www.aabida.org/">http://www.aabida.org/</a>
	Indian Beverage Association	<a href="http://www.in-beverage.org">http://www.in-beverage.org</a>
	Indian Bio Organic Tea Association	<a href="http://www.ibota.in/">http://www.ibota.in/</a>
	Indian Tea Association (ITA)	<a href="http://www.indiatea.org">http://www.indiatea.org</a>
	All India Bread Manufacturers' Association (AIBMA)	<a href="http://www.aibma.com">http://www.aibma.com</a>
	Federation of Indian Cashew Industry (FICI)	<a href="http://www.design.idreamzsolutions.net/fici/index.html">http://www.design.idreamzsolutions.net/fici/index.html</a>
	Federation of Biscuit Manufacturers of India	<a href="http://www.biscuitfederation.com/">http://www.biscuitfederation.com/</a>
	Indian Biscuits Manufacturers' Association (IBMA)	<a href="http://www.ibmabiscuits.in/">http://www.ibmabiscuits.in/</a>
	Indian Confectio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a href="http://www.icmaconfy.com/">http://www.icmaconfy.com/</a>
	Indian Dairy Association (IDA)	<a href="http://www.indairyasso.org">http://www.indairyasso.org</a>
	Association of Food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India) AFST(I)	<a href="http://www.afsti.in/afsti-home.html">http://www.afsti.in/afsti-home.html</a>
	Confederation of Indian Food Trade and Industry (CIFTI)	<a href="http://www.cifti.org/">http://www.cifti.org/</a>
	Forum of Indian Food Importers (FIFI)	<a href="http://www.fifi.in/">http://www.fifi.in/</a>
	All India Food Processors' Association (AIFPA)	<a href="http://www.aifpa.net/">http://www.aifpa.net/</a>
	Indian Ice Cream Manufacturers' Association (IICMA)	<a href="http://www.iicma.in/index.php">http://www.iicma.in/index.php</a>
	India Pepper And Spice Trade Association (IPSTA)	<a href="http://www.ipsta.com">http://www.ipsta.com</a>
	Probiotic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probioticindia.com">http://www.probioticindia.com</a>
	All India Rice Exporters' Association (AIREA)	<a href="http://www.airea.net">http://www.airea.net</a>
	Soyabean Processors Association of India (SOPA)	<a href="http://www.sopa.org/">http://www.sopa.org/</a>
	All India Wine Producers Association	<a href="http://www.allindiawine.com">http://www.allindiawine.com</a>
석유 및 가스	National Lubricating Grease Institute (NLGI) – India Chapter	<a href="http://www.nlgi-india.org/">http://www.nlgi-india.org/</a>
	Association of Oil and Gas Operators (AOGO)	<a href="http://www.aogo.in">http://www.aogo.in</a>
	Petroleum Federation of India (PetroFed)	<a href="http://www.petrofed.org">http://www.petrofed.org</a>
	Petroleum Conserv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PCRA)	<a href="http://www.pcra.org">http://www.pcra.org</a>

무역 및 운송	Air Cargo Agents Association of India (ACAAI)	<a href="http://www.acaai.in">http://www.acaai.in</a>
	Air Cargo Agents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acaai.in">http://www.acaai.in</a>
	Air Passengers Association of India (APAI)	<a href="http://www.air-passenger.com/">http://www.air-passenger.com/</a>
	Indian Commercial Pilot's Association (ICPA)	<a href="http://www.icpaindia.in/">http://www.icpaindia.in/</a>
	Container Shipping Lines Association (India) (CSLA)	<a href="http://www.bombaychamber.com/csla.aspx">http://www.bombaychamber.com/csla.aspx</a>
	Domestic Air Cargo Agents Association (DACAAI)	<a href="http://www.dacaai.com/">http://www.dacaai.com/</a>
	Association for Export Development (AED)	<a href="http://www.associationforexportdevelopment.com/">http://www.associationforexportdevelopment.com/</a>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in India	<a href="http://www.fffai.org">http://www.fffai.org</a>
	Indian Importers Association (IIA)	<a href="http://www.indianimportersassociation.com">http://www.indianimportersassociation.com</a>
	Federation of Indian Airlines (FIA)	<a href="http://www.fiaindia.in">http://www.fiaindia.in</a>
	All-India Liquid Bulk Importers & Exporters Association	<a href="http://www.aibleonline.com">http://www.aibleonline.com</a>
	Indian Merchants' Chamber	<a href="http://www.imcnet.org/">http://www.imcnet.org/</a>
	Association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 of India (AMTOI)	<a href="http://www.amtoi.org">http://www.amtoi.org</a>
	Organic Trade Association of India (OTA)	<a href="http://www.otaindia.org/">http://www.otaindia.org/</a>
	Indian Federation of Road Safety (IFROS)	<a href="http://www.ifros.org">http://www.ifros.org</a>
	Indian Road Transport & Development Association (IRTDA)	<a href="http://www.irtda.in/">http://www.irtda.in/</a>
	Ship Recycling Industries Association (India)	<a href="http://www.sriaindia.com/home/">http://www.sriaindia.com/home/</a>
	Indian National Shipowners' Association (INSA)	<a href="http://www.insa.in">http://www.insa.in</a>
	Maritime Association of Shipowners Shipmanagers and Agents (MASSA)	<a href="http://www.massa.org.in/">http://www.massa.org.in/</a>
	Western India Shippers Association (WISA)	<a href="http://www.wisaindia.org">http://www.wisaindia.org</a>
	Shipyards Association of India (SAI)	<a href="http://www.saindia.net.in/">http://www.saindia.net.in/</a>
	Indian Spice & Foodstuff Exporters' Association (ISFEA)	<a href="http://www.isfea.in/home/">http://www.isfea.in/home/</a>
	All India Spices Exporters Forum (AISEF)	<a href="http://www.aisef.org">http://www.aisef.org</a>
	Association of State Road Transport Undertakings (ASRTU)	<a href="http://www.asrtu.org">http://www.asrtu.org</a>
	Confederation of All India Traders	<a href="http://www.cait.in/">http://www.cait.in/</a>
	All India Transporters Welfare Association (AITWA)	<a href="http://www.aitwa.org">http://www.aitwa.org</a>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of India (CFTUI)	<a href="http://www.cftui.org/">http://www.cftui.org/</a>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India Chapter)	<a href="http://www.indiairf.com/">http://www.indiairf.com/</a>

중소기업	Adityapur Small Industries Association	<a href="http://www.helloasia.co.in">http://www.helloasia.co.in</a>
	All India Association of Industries	<a href="http://www.aiaiindia.com/">http://www.aiaiindia.com/</a>
	All India MSME Association (AIMA MSME)	<a href="http://www.aima-msme.in">http://www.aima-msme.in</a>
	Bhavnagar District Small Industries Association (BDSIA)	<a href="http://www.bdsia.com">http://www.bdsia.com</a>
정보 통신 기술(ICT)	Association of Unified Telecom Service Providers of India (AUSPI)	<a href="http://www.auspi.in/">http://www.auspi.in/</a>
	Indian Telecommunication Services Association (ITSA)	<a href="http://www.itsaportal.in">http://www.itsaportal.in</a>
	Association of Competitive Telecom Operators (ACTO)	<a href="http://www.acto.in/">http://www.acto.in/</a>
공학 및 엔지니어링	Association of Consulting Civil Engineers (India)	<a href="http://www.accehq.net">http://www.accehq.net</a>
	All India Federation of diploma Engineers	<a href="http://www.aifode.org">http://www.aifode.org</a>
	AIR & Doordarshan Engineers Association	<a href="http://www.airddengineers.org">http://www.airddengineers.org</a>
	Association of Radio & Television Engineering Employees (ARTEE)	<a href="http://www.arteeindia.org/">http://www.arteeindia.org/</a>
	Association of Engineers Kerala	<a href="http://www.associationofengineers.com">http://www.associationofengineers.com</a>
	Broadcast Engineering Society, India (BES)	<a href="http://www.besindia.com">http://www.besindia.com</a>
	Indian Dairy Engineers Association	<a href="http://www.dairyidea.com">http://www.dairyidea.com</a>
	Department of Telecom Engineering Officers Association (DOTEQA)	<a href="http://www.doteqa.com/">http://www.doteqa.com/</a>
	Indian Association of Structural Engineers	<a href="http://www.iastructe.co.in/">http://www.iastructe.co.in/</a>
	Indian Society of Engineers	<a href="http://www.indiasocietyofengineers.org">http://www.indiasocietyofengineers.org</a>
	Indian Society of Lighting Engineers (ISLE)	<a href="http://www.isleind.org">http://www.isleind.org</a>
	Indi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ISME)	<a href="http://www.ismeindia.com">http://www.ismeindia.com</a>
	Karnataka Engineer's Association	<a href="http://www.kggea.com">http://www.kggea.com</a>
	Safety Engineers Association	<a href="http://www.seaindia.org">http://www.seaindia.org</a>
	Systems Society of India (SSI)	<a href="http://www.sysi.org">http://www.sysi.org</a>
	Indian Railway Service of Engineers Officers Association (IRSEOQA)	<a href="http://www.irseoqa.org.in/">http://www.irseoqa.org.in/</a>
	Association of Computer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s (ACEEE)	<a href="http://www.theaceee.org/">http://www.theaceee.org/</a>
	All India Mining Personnel Association (Association of mining engineers of coal industry)	<a href="http://www.aimpa1971.wix.com/dhn">http://www.aimpa1971.wix.com/dhn</a>
	Mining Engineers' Association of India (MEAI)	<a href="http://www.meai1957.com">http://www.meai1957.com</a>
	Indian Society of Structural Engineers (ISSE)	<a href="http://www.isse.org.in">http://www.isse.org.in</a>

해양	Indian Marine Federation	<a href="http://www.indianmarinefederation.org">http://www.indianmarinefederation.org</a>
	Indian Maritime Foundation (IMF)	<a href="http://www.indianmaritimfoundation.org">http://www.indianmaritimfoundation.org</a>
	Society of Indian Marine Artists (SIMA)	<a href="http://www.indianmaritimfoundation.org/sima.html">http://www.indianmaritimfoundation.org/sima.html</a>
	Marine Biological Association of India (MBAI)	<a href="http://www.mbai.org.in">http://www.mbai.org.in</a>
	Western Indian Ocean Marine Science Association (WIOMSA)	<a href="http://www.wiomsa.org">http://www.wiomsa.org</a>
세라믹, 화강암 및 돌	Indian Ceramic Society (ICS)	<a href="http://www.indianceramicsociety.org/">http://www.indianceramicsociety.org/</a>
	Indian Council of Ceramic Tiles & Sanitaryware (ICCTAS)	<a href="http://www.icctas.com">http://www.icctas.com</a>
	Concrete Tiles Manufacturers Association (CTMA)	<a href="http://www.concretetile.hypermart.net/">http://www.concretetile.hypermart.net/</a>
	All India Granites & Stone Association (AIGSA)	<a href="http://www.stonaaigsa.com">http://www.stonaaigsa.com</a>
	Monu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IMMA)	<a href="http://www.immaindia.com">http://www.immaindia.com</a>
홈 & 퍼스널케어	Association of Beauty Therapy and Cosmetology (ABTC) India	<a href="http://www.abtcindia.com">http://www.abtcindia.com</a>
	Fragrance & Flavour Association of India (FAFAI)	<a href="http://www.fafai.org">http://www.fafai.org</a>
	All Handicrafts & Home Furnishing Development Association (AHHDA)	<a href="http://www.ahhda.org">http://www.ahhda.org</a>
	Indian Home & Personal Care Industry Association (IHPCIA)	<a href="http://www.ihpcia.org/">http://www.ihpcia.org/</a>
	All India Pott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a href="http://www.aipma.4t.com/">http://www.aipma.4t.com/</a>
	Indian Soap & Toiletries Makers Association (ISTMA)	<a href="http://www.istma.internetindia.com/">http://www.istma.internetindia.com/</a>
	Indian Spa and Wellness Association - ISWA	<a href="http://www.iswa.co.in">http://www.iswa.co.in</a>
	Spa & Wellness Association of India (SWAI)	<a href="http://www.spaandwellnessassociation.com">http://www.spaandwellnessassociation.com</a>
	UPVC Windows & Doors Manufacturers Association (UWDMA)	<a href="http://www.uwdmaindia.org/">http://www.uwdmaindia.org/</a>
	Indian Water Me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a href="http://www.indianwater.com">http://www.indianwater.com</a>
	Yoga Federation of India	<a href="http://www.yogafederationofindia.com/">http://www.yogafederationofindia.com/</a>
소매	Retailers Association of India (RAI)	<a href="http://www.rai.net.in/">http://www.rai.net.in/</a>
	Shopping Centres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scai.in">http://www.scai.in</a>

부동산	All India Real Estate Agents Association (AIREAA)	<a href="http://www.aireaa.co">http://www.aireaa.co</a>
	Confederation of Real Estate Developers Associations of India	<a href="http://www.credai.org/">http://www.credai.org/</a>
	Estate Agents Welfare Association of India (EAWAI)	<a href="http://www.eawai.com">http://www.eawai.com</a>
	Estate Agents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estateagentindia.com">http://www.estateagentindia.com</a>
	Bangalore Realtors Association of India (BRAI)	<a href="http://www.brai.in">http://www.brai.in</a>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 India (NAR-INDIA)	<a href="http://www.narindia.com/">http://www.narindia.com/</a>
기계 도구 및 장비	Indian Textile Accessories & Machi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a href="http://www.itamma.org">http://www.itamma.org</a>
	Agricultural Machi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AMMA)	<a href="http://www.ammaindia.in">http://www.ammaindia.in</a>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ACMA)	<a href="http://www.acma.in/">http://www.acma.in/</a>
	All India Ball Bearing Merchants Association (AIBBMA)	<a href="http://www.aibbma.in">http://www.aibbma.in</a>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ACM) India	<a href="http://www.india.acm.org/">http://www.india.acm.org/</a>
	Indian Construction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CEMA)	<a href="http://www.i-cema.in/">http://www.i-cema.in/</a>
	Indian Cutting Tool Manufacturers Association	<a href="http://www.ictma.co.in">http://www.ictma.co.in</a>
	Indian Diesel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IDEMA)	<a href="http://www.idema.org.in/">http://www.idema.org.in/</a>
	All India Distillers' Association (AIDA)	<a href="http://www.aidaindia.org/">http://www.aidaindia.org/</a>
	All India Electric Motor Manufacturers Association (AIEMMA)	<a href="http://www.aiemma.co.in">http://www.aiemma.co.in</a>
	Agro & Food Processing Equipment & Technology Providers Association of India (AFTPAI)	<a href="http://www.aftpai.org/">http://www.aftpai.org/</a>
	All India Broadcast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Association (AIBMDA)	<a href="http://www.aibmda.in">http://www.aibmda.in</a>
	Association of Resource Companies for the Hospitality Industry of India (ARCHII)	<a href="http://www.archii.org/">http://www.archii.org/</a>
	Cable TV Equipment Traders & Manufacturers Association (CTMA)	<a href="http://www.ctmaindia.com/">http://www.ctmaindia.com/</a>
	Hotel & Restaurant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HOTREMAI)	<a href="http://www.hotremai.org/">http://www.hotremai.org/</a>
	Association of Indian Forging Industry (AIFI)	<a href="http://www.indianforging.org;">http://www.indianforging.org;</a> <a href="http://www.indianforging.com/index.aspx">www.indianforging.com/index.aspx</a>
	Foundry Cluster Development Association (FCDA)	<a href="http://www.fcda.in">http://www.fcda.in</a>
	Institute of Indian Foundrymen (IIF)	<a href="http://www.indianfoundry.org/">http://www.indianfoundry.org/</a>
	All India Induction Furnaces Association (AIIFA)	<a href="http://www.aiifa.org/">http://www.aiifa.org/</a>
	Steel Furnace Association of India (SFAI)	<a href="http://www.steelfurnaceindia.com/">http://www.steelfurnaceindia.com/</a>



자문 및 컨설팅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a href="https://www.cii.in/">https://www.cii.in/</a>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a href="https://www.ficci.in/">https://www.ficci.in/</a>
	The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a href="https://www.assochem.org/">https://www.assochem.org/</a>

KOTRA 자료 24-090

## 2025년 인도 비즈니스가이드

발 행 처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KOTRA, 무역협회

발 행 일 2024년 12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 (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 의 처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91-11-4230-6306)

I S B N 979-11-402-1055-8 (93320)  
979-11-402-1056-5 (95320)(PDF)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무역협회와 분야별 저자에게 있습니다.





ISBN : 979-11-402-1055-8 (93320)

ISBN : 979-11-402-1056-5 (95320)(PDF)

# 2025년 인도 비즈니스 가이드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 I T A**